

2021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의안 번호	
----------	--

제안연월일 : 2021년 12월 21일
제안자 : 운영위원장

행정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부당한 행정처리를 시정하고,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코자 함

1 관련 법 규

- 「지방자치법」 제41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2 감 사 개 요

- 감사기간 : 2021. 11. 2.(화) ~ 11. 15.(월) <14일간>
※ 제303회 정례회 : 2021. 11. 1.(월) ~ 12. 22.(수) <52일간>
- 감사주체 : 서울특별시의회(각 상임위원회별)
- 감사대상 기관
 - 서울특별시,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합의제 행정기관,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등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각 교육지원청, 산하기관

□ 주요 감사대상 업무

- 2020. 11월 ~ 2021. 10월까지 추진한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기간 중 외부기관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및 조치결과 등

□ 감사 착안사항

- 사업진행의 적법성, 적시성, 공정성 등
- 사업계획의 효율성, 능률성, 효과성 등
- 시민불편사항 발굴·처리실태 및 각종 제도개선 실적 등

3 감사대상기관

□ 감사대상 선정 기관 : 236개 기관

- 감사위원회(상임위원회)별 현황

구 분	계	운 영	행정자치	기획경제	환 경 수자원	문화체육 관광	보건복지	도시안전 건설	도시계획 관리	교 통	교 육
계	236	3	17	21	27	13	61	43	5	4	42
위원회의 의결	160	3	13	11	27	6	7	42	5	4	42
본회의 의결	76	-	4	10	-	7	54	1	-	-	-

- 감사위원회(상임위원회)별 의결 선정기관(160), 본회의 의결 선정기관(76)

위원회명	위원회의결 선정기관(160)	본회의의결 선정기관(76)
운영위원회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특별시장 비서실 ○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실 ○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행정자치위원회 (1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상기획관 ○ 스마트도시정책관 ○ 민생사법경찰단 ○ 미래청년기획단 ○ 행정국 ○ 재무국 ○ 평생교육국 ○ 시민협력국 ○ 인권담당관 ○ 인재개발원 ○ 감사위원회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 자치경찰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디지털재단 ○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 서울장학재단 ○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기획경제위원회 (2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조정실 ○ 경제정책실 ○ 노동공정상생정책관 ○ 남북협력추진단 ○ 1인가구 특별대책추진단 ○ 서울시립대학교 ○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 ○ 서울특별시립과학관 ○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 서울농수산물시장관리(주) ○ 서울농수산물도매시장정산(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연구원 ○ 서울산업진흥원 ○ 서울신용보증재단 ○ 서울특별시 동부기술교육원 ○ 서울특별시 중부기술교육원 ○ 서울특별시 북부기술교육원 ○ 서울특별시 남부기술교육원 ○ 서울노동권익센터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 서울특별시 협동조합지원센터
환경수자원위원회 (2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환경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환경본부 - 차량정비센터 포함 ○ 푸른도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푸른도시국 - 동부공원녹지사업소 - 중부공원녹지사업소 - 서부공원녹지사업소 - 서울대공원 - 서울식물원 	

위원회명	위원회의결 선정기관(160)	본회의의결 선정기관(7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수도사업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수도사업본부 - 서울물연구원 - 수도사업소(8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부수도사업소 • 서부수도사업소 • 동부수도사업소 • 북부수도사업소 • 강서수도사업소 • 남부수도사업소 • 강남수도사업소 • 강동수도사업소 - 아리수정수센터(6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암아리수정수센터 • 구의아리수정수센터 • 독도아리수정수센터 •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 암사아리수정수센터 • 강북아리수정수센터 - 수도자재관리센터 ○ 한강사업본부 ○ 서울에너지공사	
문화체육관광 위 원 회 (1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변인 ○ 시민소통기획관 ○ 문화본부 ○ 관광체육국(서울시체육회 포함) ○ 서울역사박물관 ○ 서울시립미술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 재단법인 120 다산콜재단 ○ 재단법인 서울관광재단 ○ 재단법인 미디어재단티비에스
보 건 복 지 위 원 회 (6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지정책실 ○ 여성가족정책실 ○ 시민건강국 ○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 서울특별시 서북병원 ○ 서울특별시 은평병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가족정책실 소관(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 여성능력개발원, 동부여성발전센터, 서울여성공예센터 더아리움, 서울특별시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 여성긴급전화1366 서울센터, 십대여성건강센터, 서울상상나라, 시립꿈나무마을 초록꿈터, 시립꿈나무마을 파란꿈터,

위원회명	위원회의결 선정기관(160)	본회의의결 선정기관(76)
		<p>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 서울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 제1호 노원·도봉권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서울글로벌센터(외국인주민 생활지원 사업)</p> <p>○ 복지정책실 소관(2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복지재단,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 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 시립강북노인종합복지관,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 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 시립중계노인전문요양원, 서울시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 서남 어르신돌봄종사자 지원센터, 서울시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남부장래인복지관, 서울공동리체육센터, 서대문농아인복지관, 커리어플러스센터, 변동코이노니아 장애인보호작업시설, 서울시동남보조기기센터, 서울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브릿지종합지원센터, 양평심터, 비전트레이닝센터, 따스한채움터, 돈의동쪽방상담소, 서울역쪽방상담소, 영등포쪽방상담소 <p>○ 시민건강국 소관 (1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 보라매병원, 동부병원, 북부병원, 서남병원, 장애인치과병원, 백암정신병원,

위원회명	위원회의결 선정기관(160)	본회의의결 선정기관(76)
		<p>축령정신병원, 고양정신병원, 시립은혜로운집, 서울시자살예방센터,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p>
<p>도시안전건설 위원회 (4 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총괄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사업소(6개소) 포함 ○ 소방재난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학교 - 서울종합방재센터 - 특수구조단 - 소방서(24개소) ○ 물순환안전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재생센터(2개소) 포함 ○ 시설국 ○ 기술심사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질시험소 포함 ○ 서울물재생시설공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기술연구원
<p>도시계획관리 위원회 (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정책실 ○ 도시계획국 ○ 균형발전본부 ○ 공공개발기획단 ○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p>교통 위원회 (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교통실 ○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 서울교통공사 ○ 서울시설공단 	
<p>교육 위원회 (4 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특별시교육청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 서울특별시교육청 과학전시관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연수원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교육원 ○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보건진흥원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체육관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관리본부 	

위원회명	위원회의결 선정기관(160)	본회의의결 선정기관(7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학습관(4개소) ○ 서울특별시교육청 도서관(17개소) ○ 서울특별시교육지원청(11개소) ○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 	

4

감사위원회 편성

위원회명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위원	사무보조직원
운영위원회 (13)	김정태	권영희 박순규	김경우, 김호평, 송야량, 송재혁, 이호대, 정재웅, 정진술, 최영주, 추승우, 여명	김선희, 박남기, 박태현, 김민호, 박순중, 김우영, 박수형, 진, 임재빈, 김미경, 김운미, 노문호, 이소민
행정자치위원회 (12)	이현찬	채유미 한기영	김용석, 김재형, 김정태, 임종국, 이상훈, 이세열, 장인홍, 최정순, 김소양	한태식, 김태한, 우명섭, 김덕, 최석훈, 김정찬, 김민정, 문숙, 김고은, 지종대, 박재, 선람, 강태영, 송경희, 고은하, 이 복상균, 이정수
기획경제위원회 (13)	채인묵	강동길 이태성	권영희, 김광수, 김인제, 김혜련, 서윤기, 이병도, 이준형, 최선, 여명, 김달호	강상원, 주우철, 이재남, 김성만, 이시우, 최범준, 김우, 박은현, 노혜미, 김태훈, 김준, 오이 이순미, 노가빈, 송나, 성찬, 최정아, 이지혜, 송선영
화주자원위원회 (13)	김정환	송명화 송정빈	강대호, 김기대, 김기덕, 김상훈, 봉양순, 송재혁, 신정호, 오현정, 유정희, 이광성	이재효, 신종선, 박귀수, 피재황, 배성진, 조창훈, 유시범, 리, 김경미, 전예담, 조혜주, 방우경, 한상임, 서효정, 이슬기, 김상훈, 강규이, 정주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2)	황규복	김태호 오한아	경만선, 김춘례, 노승재, 안광석, 유용, 신원철, 최영주, 이종환, 김소영	김경욱, 김상원, 강현, 오주석, 이지영, 김임창, 김민, 박이원, 심형준, 김한진, 권이슬, 이 박은비, 한홍수희
보건복지위원회 (9)	이영실	김화숙 박기재	김경영, 김경우, 김제리, 이정인, 조상호, 권수정	이문성, 윤혜숙, 한영근, 김승근, 박혜원, 심선영, 강봄이, 이정화, 허아름, 류민서, 우현재, 도미화, 장일진, 박서영, 이윤지, 양성욱, 진정한
도시안전건설위원회 (13)	성흠제	문장길 홍성룡	김창원, 김태수, 박기열, 박상구, 박순규, 정재웅, 정진술, 최웅식, 홍성룡, 김진수	이상근, 김성수, 진현우, 박남권, 심현보, 권혁일, 정민선, 김성연, 이태웅, 김유신, 박기은, 공혜주, 임태정, 박희석, 박정연
도시계획위원회 (13)	김희걸	전석기 노식래	고병국, 김경, 김종무, 김호평, 문병훈, 오중석, 이경선, 임만균, 장상기, 이성배	조정래, 차동윤, 오정균, 이원희, 안현숙, 노태학, 임경숙, 최정희, 윤영신, 김승운, 최지명, 김 유새롬, 김동규
교통위원회 (11)	우형찬	이광호 이은주	김호진, 송도호, 송야량, 이승미, 정지권, 정진철, 추승우, 성중기	장훈, 정은화, 조성준, 이재석, 박준영, 온순현, 이성엽, 안진주, 김유라, 유은아, 이두미, 은영, 김광수, 임상결, 최혜민, 김 주완
교육위원회 (13)	최기찬	김용연 전병주	권순선, 김수규, 김상진, 김생환, 문영민, 양민규, 이동현, 이호대, 황인구, 이석주	김창범, 홍승룡, 이준석, 이현식, 윤성일, 정진국, 이가영, 한수, 최원종, 김지수, 김성우, 채기, 고수민, 이경희, 조지훈, 최 양옥수, 이지희, 박세경

5

감사 일정 및 장소

위원회명	감사 일정		대상 기관	감사 장소	비고
	월 일	시간			
운영위원회	11.15.(월)	1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특별시청 비서실 ○ 서울특별시 정부부시장실 ○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운영위원회 회의실	
행정자치위원회	11. 2.(화)	1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국 - 자원봉사센터 포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11. 3.(수)	1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생교육국 - 서울장학재단 포함 - 평생교육진흥원 포함 		
	11. 4.(목)	10:00	○ 자료정리		
	11. 5.(금)	1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재개발원 ○ 비상기획관 		
	11. 8.(월)	1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도시정책관 - 서울디지털재단 포함 		
	11. 9.(화)	1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국 - 자원봉사센터 포함 ○ 재무국 		
	11.10.(수)	10:00	○ 자료정리		
	11.11.(목)	1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협력국 ○ 자치경찰위원회 ○ 민생사법경찰단 		
	11.12.(금)	1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 인권담당관 ○ 감사위원회 ○ 미래청년기획단 		
11.15.(월)	10:00	○ 종합감사			
기획경제위원회	11. 2.(화)	10:00	○ 기획조정실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	
	11. 3.(수)	1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정책실 ○ 서울특별시 농업기술센터 ○ 서울시립과학관 		
	11. 4.(목)	1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공정·상생정책관 ○ 서울노동권익센터 ○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 서울시 협동조합지원센터 		
	11. 5.(금)	10:00	○ 자료정리		
	11. 8.(월)	1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립대학교 ○ 서울연구원 		

위원회명	감사 일정		대상 기관	감사 장소	비고
	월 일	시간			
	11. 9.(화)	10:00	○ 남북협력추진단 ○ 서울산업진흥원		
	11.10.(수)	10:00	○ 서울시 농수산물식품공사 ○ 서울농수산물시장관리(주) ○ 서울농수산물도매시장정산(주) ○ 1인가구 특별대책추진단		
	11.11.(목)	10:00	○ 서울특별시 동부기술교육원 ○ 서울특별시 중부기술교육원 ○ 서울특별시 북부기술교육원 ○ 서울특별시 남부기술교육원	서울특별시 남부기술교육원	
	11.12.(금)	10:00	○ 서울신용보증재단 ○ 종합감사 - 기획조정실,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	
	11.15.(월)	10:00	○ 종합감사 - 기획조정실, 경제정책실		
환경수자원 위원회	11. 2.(화) 11. 3.(수)	10:00	○ 기후환경본부 - 기후환경본부 - 차량정비센터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실 및 현장	
	11. 4.(수)	10:00	○ 상수도사업본부 - 상수도사업본부 - 서울물연구원 - 수도사업소(8개소) - 아리수정수센터(6개소) - 수도자재관리센터		
	11. 5.(목)	10:00	자료정리		
	11. 8.(월)	10:00	○ 상수도사업본부 ○ 한강사업본부		
	11. 9.(화)	10:00	○ 자료정리		
	11.10.(수)	10:00	○ 서울에너지공사		
	11.11.(목) 11.12 (금)	10:00	○ 푸른도시국 - 푸른도시국 - 녹지사업소(3개소) - 서울대공원, 서울식물원		
	11.15.(월)		○ 자료정리 및 보충감사		

위원회명	감사 일정		대상 기관	감사 장소	비고
	월 일	시간			
문화체육관광 위원회	11. 2.(화)	10:00	○ (재)미디어재단티비스(TBS)	문화체육관광 위원회 회의실	
			○ 대 변 인		
	11. 3.(수)	10:00	○ 시민소통기획관		
			○ (재)120다산콜재단		
	11. 4.(목)	10:00	○ 서울역사박물관		
			○ 서울시립미술관		
			○ 대 변 인		
	11. 5.(금)		○ 자료정리		
	11. 8.(월)	10:00	○ (재)세종문화회관		
			○ (재)서울시립교향악단		
	11. 9.(화)	10:00	○ 관광체육국		
			○ (재)서울관광재단		
	11.10.(수)	10:00	○ 자료정리		
11.11.(목)	10:00	○ (재)서울문화재단			
		○ (재)서울디자인재단			
		○ 대 변 인			
11.12.(금)	10:00	○ 문화본부			
11.15.(월)		○ 자료정리			
보건복지 위원회	11. 2.(화)	10:00	○ 서울시복지재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11. 3.(수)	10:00	○ 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			
		○ 시립강북노인종합복지관			
		○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			
		○ 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			
		○ 시립중계노인전문요양원			
		○ 서울시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			
		○ 서남 어르신돌봄종사자 지원센터			
		○ 서울시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 남부장애인복지관			

위원회명	감사 일정		대상 기관	감사 장소	비고
	월 일	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곰두리체육센터 ○ 서대문농아인복지관 ○ 커리어플러스센터 ○ 서울시동남보조기기센터 ○ 서울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 번동코이노니아 장애인보호작업시설 		
	11. 4.(목)		○ 감사결과 중간평가 및 자료정리		
	11. 5.(금)		○ 감사결과 중간평가 및 자료정리		
	11. 8.(월)	1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능력개발원 ○ 동부여성발전센터 ○ 서울여성공예센터 더아리움 ○ 서울특별시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 ○ 여성긴급전화1366 서울센터 ○ 십대여성건강센터 ○ 서울상상나라 ○ 시립꿈나무마을 초록꿈터 ○ 시립꿈나무마을 파란꿈터 ○ 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 ○ 서울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 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 ○ 제1호 노원·도봉권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 서울글로벌센터(외국인주민 생활지원 사업) ○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 서울시어르신들봄중사자종합지원센터 		
	11.9.(화)	1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가족정책실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 서울여성공예센터 더아리움 		
	11.10.(수)		○ 감사결과 중간평가 및 자료정리		
	11.11.(목)	1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의료원 ○ 어린이병원 ○ 은평병원 		

위원회명	감사 일정		대상 기관	감사 장소	비고
	월 일	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북병원 ○ 보라매병원 ○ 동부병원 ○ 북부병원 ○ 서남병원 ○ 장애인치과병원 ○ 백암정신병원 ○ 축령정신병원 ○ 고양정신병원 ○ 시립은혜로운집 ○ 서울시자살예방센터 ○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 서울시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 		
	11.12.(금)	1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건강국 ○ 보건환경연구원 ○ 공공보건의료재단 		
	11.15.(월)	1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지정책실 ○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 브릿지종합지원센터 ○ 양평쉼터 ○ 비전트레이닝센터 ○ 따스한채움터 ○ 돈의동쪽방상담소 ○ 서울역쪽방상담소 ○ 영등포쪽방상담소 ○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 서울시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 ○ 남부장애인복지관 ○ 서울여성공예센터 더아리움 ○ 시민건강국 ○ 보건환경연구원 		

위원회명	감사 일정		대상 기관	감사 장소	비고
	월 일	시간			
			○ 공공보건의료재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11. 2.(화)	10:00	○ 안전총괄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실	
	11. 3.(수)	09:30	○ 안전총괄실	현장확인감사 및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실	
	11. 4.(목)	10:00	○ 소방재난본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실	
	11. 5.(금)	-	○ 감사자료 검토	-	
	11. 8.(월)	10:00	○ 물순환안전국 및 서울물재생시설공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실	
	11.9.(화)	14:00	○ 물순환안전국 및 서울물재생시설공단	현장확인감사 및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실	
	11.10.(수)	10:00	○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실	
	11.11.(목)	09:30	○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	현장확인감사 및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실	
	11.12.(금)	10:00	○ 기술심사담당관 ○ 서울기술연구원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실	
	11.15.(월)	-	○ 감사결과 정리	-	
도시계획관리위원회	11. 2.(화)	10:00	○ 주택정책실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실	
	11. 3.(수)	10:00	○ 주택정책실		
		14:00	○ 공공개발기획단		
	11. 4.(목)	10:00	○ 도시계획국		
	11. 5.(금)		○ 감사자료 정리		
	11. 8.(월)	10:00	○ 균형발전본부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실	
	11. 9.(화)	10:00	○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회의실	
	11.10.(수)		○ 감사자료 정리		

위원회명	감사 일정		대상 기관	감사 장소	비고
	월 일	시간			
	11.11.(목)		○ 감사자료 정리		
	11.12.(금)	10:00	○ 주택정책실 ○ 도시계획국 ○ 균형발전본부 ○ 공공개발기획단 ○ 서울주택도시공사	도시 계획 관리 위원회 회의실	종합 확인점검
교 위 원 통 회	11. 2.(화)	10:00	○ 도시교통실	교 통 위 원 회 회 의 실	
	11. 3.(수)	10:00			
	11. 4.(목)	10:00			
	11. 8.(월)	10:00	○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11. 9.(화)	10:00	○ 서울교통공사 - 9호선운영부문 - 서울메트로환경(주) -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		
	11.10.(수)	10:00	-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 - 김포골드라인운영(주) - 서해철도(주) <포함>		
	11.11.(목)	10:00	○ 서울시설공단		
	11.15.(금)		○ 감사결과 정리		
교 위 원 육 회	11. 2.(화)	10:00	○ 서울시특별시교육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11개소)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지원청(11개소)소관 사무]	교 육 위 원 회 회 의 실	
	11. 3.(수)	10:00			
	11. 4.(목)	10:00	○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속기관 (교육정책국, 과학전시관 교육연수원, 유아교육진흥원 소관 사무)		
	11. 5.(금)	10:00			
	11. 8.(월)	10:00	○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속기관, 평생학습관, 도서관 [평생진로교육국, 학생교육원, 학교보건진흥원, 학생체육관, 평생학습관(4), 도서관(17) 소관 사무]		
	11. 9.(화)	10:00			
	11.10.(수)	10:00	○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속기관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 (교육행정국, 교육시설관리본부, 학교안전공제회 소관 사무)		
	11.11.(목)	10:00			
	11.12.(금)	10:00			

6

감사결과 (총괄표)

구분	계	시정·처리 요구사항	건의사항	기타 (자료제출 등)
계	3,161	1,701	568	892
운영위원회	62	38	6	18
행정자치위원회	373	227	63	83
기획경제위원회	653	293	80	280
환경수자원위원회	282	109	89	84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72	167	69	36
보건복지위원회	369	142	33	194
도시안전건설위원회	211	162	24	25
도시계획관리위원회	252	129	47	76
교통위원회	341	269	20	52
교육위원회	346	165	137	44

7 위원회별 세부감사결과

시정·처리요구 사항 ----- 1,701건

■ 운영위원회 ----- 38건

□ 시장 비서실·정무부시장실 : 24건

1. 서울시 인사와 관련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고위공무원인 정책 수석이 SH공사 사장 후보자와 사적으로 만난 것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이므로 시정 바람
2. 시정 질문 시 10일 내에 답변을 제출해야 함에도 특별한 사유도 없이 제출하지 않고 답변을 하지 않거나 기한을 도과한 경우가 다수 존재함. 답변 기한을 철저히 준수하기 바람
3. 인허가 비위로 퇴직한 사람을 정책특보로 재채용한 것은 부적절한 인사임. 서울시를 바로 세우려면 시장 측근부터 바로 세우는 것이 필요
4. 50+재단 신입 이사장 선임과정에서 자격 기준에 대한 증빙 서류 제출이 미비했음.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를 속히 제출하기 바라고, 서울시 산하 기관장 임명에 있어서 사전 검증을 철저히 하기 바람
5. 의원의 자료제출 요구 시 10일 이내에 요구된 자료를 제출해야 함에도 집행부에 불리한 자료에 대하여는 제출 기한을 위반하여 늦게 제출하고 있음. 제출지연은 조례위반 사항으로 조사해 주기 바람
6. 서울시장은 시민을 위한 자리이므로 민원인들이 시장과의 면담을 원할 때 비서실에서 만남을 주선하여 민원인들이 이해·설득될 수 있는 시간을 마련 하기 바람. 또 시장실에서 민원인들의 시장실 방문 내역에 대하여 기록 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 의원이 시장과 민원인의 면담을 요청하였음에도 응답하지 않고 있는 사안에 대하여도 조치 바람

7. 서울형혁신교육지구 내년 예산이 절반 삭감됨. 수년간 진행해오던 사업에 대해 갑자기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행정의 예측 가능성, 안정성에 부합하지 않음. 일단 협약한 내용은 협약한 대로 진행하고, 예산을 줄이고자 할 때는 점차적으로 사업 관련자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면서 진행하기 바람
8. 5단계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하여 올해 초 문제제기가 된 부분을 고쳐나가면서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는데 내년 예산이 전액 삭감됨. 의원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것이 아니라 방법이나 절차에 관해 지적을 한 사업들을 없애버릴 것이 아니라 바로 가게 만들기 바람
9. SH공사 5대 혁신안 중 '부당이익 환수 및 부당이익의 최대 5배까지 벌금 부과'가 있는데,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벌금은 법률로만 부과할 수 있으므로 시정 바람
10. 서울시 조직포에서 시장 비서실 명단을 찾을 수 없음.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11. 서울시 코로나19 관련 위중증 환자 관리, 단계적 일상 회복 대비 등에 관하여 비서실에서 상세히 파악하기 바람
12. 5분 발언에 대한 조치결과가 보고되지 않음. 의원 지적·건의 사항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바람
13. 주요 언론 발표 내용에 대하여 시의회에 사전 설명 및 공유를 해야 함에도 대변인실에서 시의회와 사전 소통이나 정보 공유 없이 일방적으로 보도 자료를 발표함. 또 인용을 하려면 전체를 인용하고, 그 취지를 파악하여 조심스럽게 사실에 입각하여 해야 함에도 의원들의 발언들을 왜곡·편집하여 인용하였음.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시의회와 사전 소통 및 정보 공유를 하기 바람
14. 서울시바로세우기에서 제기된 문제와 관련하여 서울시 공무원들에게도 책임이 있음. 잘못된 것을 알고도 눈치 보느라 직언하지 못할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소신 있게 책임 행정을 구현하기 바람

15. 청년주택을 적절하지 않은 곳에 지어 입주자 및 지역 주민들의 일조권, 조망권 등이 침해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반환경적이고 지역사회와 청년에게 이롭지 않은 청년주택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지역에는 청년주택이 들어설 수 없다는 것을 서울시가 명확히 밝히기 바람
16. 대변인이 의원들의 발언을 왜곡·편집하여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정확한 팩트 체크 없이 언론 인터뷰에서 무책임한 발언을 하는 등 의회와의 분란을 일으키고 있음. 시장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신중하게 수행하기 바람
17.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 기한이 지나 보고받지 않은 사안을 보고했다고 자료로 제출하였는데, 허위문서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여 보고하기 바람. 자료 제출 책임자는 제출 시 내용의 정확성을 확인할 것
18. TBS 예산 삭감과 관련하여 TBS가 재정다각화에 대한 노력이 없어 재정 독립이 어렵다는 판단 하에 삭감한 것이라면 적자를 내고 있는 다른 공기업에도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여야 했음. 예산 기초를 공정하게 적용하기 바람
19. 서울시에 부정적인 언론보도를 한 언론사에 대하여 광고 중단을 통보한 것은 부적절함. 정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시정 바람
20.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언론사에서 작성한 기사에 대해 서울시에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청구를 신청함. 언론중재위원회의 평가를 보고 허위 자료 제출 여부에 관해 책임을 묻도록 하겠음
21. 서울런 사업 예산 50억은 콘텐츠 예산이고 홍보 예산은 없었음에도 홍보 예산으로 사용한 것은 법적 절차에 맞지 않음. 의회의 의결 이후에 집행부에서 가지고 온 예산서에는 예산이 나누어져 있었는데, 의회에서 심의한 것과 다르게 자료를 정리한 것은 허위공문서작성에 해당하므로 확인 바람
22.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는 지역사회 안에 촘촘한 관계망을 만들기 위해서 시작된 것임. 찾동 총괄부서의 책임자가 사업 관련 회의 중에 도시 사람들은 이웃 주민들에게 관심이 없는데 마을공동체를 한다고 하느냐는 내용의 발언을 한 것은 찾동의 취지와는 상반되는 부적절한 발언이므로 시정 바람
23. 베란다 태양광 사업과 관련하여 8년에 536억이 허투루 쓰였다는 보도가

많았는데, 8년 동안 베란다 태양광 사업에 사용된 예산과 안심위치 사업으로 스마트 위치를 단시간에 나누어주는 예산이 비슷함. 베란다 태양광 사업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됨

24. 300회 임시회 진행 중 서울시 고위직 공무원 전보 인사 발표가 있었는데, 상임위원회 업무보고 시 현 부서장과 전보 발령된 부서장이 함께 출석하여 업무보고를 하게 되어 현안 질의가 곤란한 상황이 되었음. 서울시의 일방적인 발표로 비롯된 것이므로 의회와의 소통 필요

□ 시의회사무처 : 14건

1. 화상회의시스템 상임위원회 모의테스트 중 회의 준비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집행부와의 접속도 제대로 되지 않았음. 시스템 구축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는데 연말까지 확실하게 구축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기 바람
2. 의회에서 생산하는 여러 저작물의 이용에 관하여 어떠한 표시도 되어 있지 않는데,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위해 공공누리 표시 등 사용 기준에 대한 명확한 표시가 필요함
3. 시민권익담당관이 신설된 지 5년이 되었는데 격상되기 이전의 민원관리팀과 차별성 있는 신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음. 의정모니터 사업뿐만 아니라 더 적극적인 의정 지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4. 입법·법률고문제도가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인사권 독립과 관련해서도 고문단으로부터 객관적인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검토 바람
5. 예산정책담당관 '서울시 예산·재정 분석' 보고서 중 마을공동체 사업과 관련하여 오류가 있었음. 보고서는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활용하는 자료이고, 잘못된 내용을 기초로 언론 보도가 되고 과장이 커질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외부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는 등 정확한 분석이 이루어지도록 꼼꼼히 검토하기 바람
6. 예산정책담당관 간행물인 '예산과 정책'에 서울시 정책을 홍보하는 서울시 과장들의 기고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음. 전문가들의 서울시 정책에 대한 분석이나 비교, 정책적 제언 등의 내용이 더 많아지도록 검토 바람

7. 수당 담당자의 누락, 수당 신고에 대한 안내 미흡 등으로 의회수당, 가족수당이 적기에 지급되지 못하고 나중에 소급하여 지급된 경우가 다수 존재하므로 개선하기 바람
8. 내년 시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하여 대비가 늦어 인력의 공백이 우려됨. 안정적인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입법이 완비될 때까지 한시적 인사교류를 검토하는 등 최대한 빨리 인사 관련 논의를 하고 보고 바람
9. 시의회 리모델링과 관련하여 법령과 조례에 따라 시의회 공간의 규모가 정해져 있으므로 정당하게 시의회의 권리를 집행부에 주장하여 예산 편성 전 11월 말까지 공간을 확정하기 바람
10.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속 의원이 상임위원회의 3배, 소관부서는 10배임에도 직원 수가 적음. 의원들이 원활한 의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결산 심의 시 한시적으로라도 인원을 증원해주기 바람
11. 내년 정책지원관 도입과 관련하여 현재 입법지원관들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가 없었음. 시의회 내부 협의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 서울시와 협의한 내용들을 지원관들에게 즉각 공개하기 바람. 입법지원관에 대한 처우 및 배치, 업무분장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하고, 과도기적 상황에서 의원들에 대한 의정 활동 지원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조속히 조치를 취해주기 바람
12. 신규 임기제·별정직 공무원 임용 시 고용보험 임의 가입에 대한 안내가 제대로 되지 않았음. 임용계약 시 서류에 고용보험 임의 가입 신청서를 포함하기 바람
13. 지난 회기 때 고용보험 미가입 문제 지적 이후 조치 결과 보고를 받지 못했음. 관련 자료를 모두 보고하기 바람
14. 인사권 독립과 관련하여 유동적인 상황에서 의원들에게 보고·공유하지도 않고 일반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의회 잔류·전출 수요 조사를 한 것은 성급하고 잘못된 조치였음. 임기제·개방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혁신TF 초창기 이후에는 논의가 되지 않고 있는데 임기제·개방직 직제의 안정화 문제도 해결하기 바람

□ 비상기획관 : 4건

1. 민방위교육 내용 중 안보교육에 평화 지향 내용뿐만 아니라 감염병 위기와 기후 변화 위기대응 등의 교육도 필요하다고 보여짐. 민방위 교육에 감염병, 기후변화 위기 대응 등의 교육 내용을 포함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2. 예비군 육성지원 보조금 중 일부가 예비군 훈련장 흡연실 설치를 지원하고 있음. 예비군 훈련자도 감소하고 비흡연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전년도보다 흡연실 지원금액은('20년 10동 지원 1억4천만원/ '21년 8동에 1억6천만원 사용)늘어남. 보조금 사용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 필요.
3. 비상기획관 초과근무시간이 3년 연속으로 다른 실국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압도적으로 많음. 코로나 상황에서 외부훈련이 없는 점을 감안하면 너무 비상식적으로 보이니 개선하기 바람.
4. 현재 보유한 방독면은 25만개로 보유목표 65만개 확보를 위해 40만개 방독면이 필요하며, 매년 24천개를 구입한다고 할 때 약 18년 동안 구매해야 하는데, 방독면 보유 목표량 달성의 문제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함.

□ 스마트도시정책관(서울디지털재단 포함) : 44건

1. 시민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열린 데이터광장 시스템 활용도 제고 필요.
2. 스마트서울 포털 용어들이 지나치게 어려움.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변경 필요.
3. 시민들의 공공와이파이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기 바람, 유지보수 등을 민간업체에게 맡길 경우 관리가 미흡할 때는 통신사에게 패널티를 부과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후 민간통신사와 계약하기 바람.
4. IE 11 서비스가 곧 종료됨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보안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
5. 디지털재단의 어디나지원장 교육장 임대료 지출이 교육 인원 대비 과도함. 향후 계획 수립 시, 무상임대가 가능한 교육장을 적극 활용할 것.

6. 디지털재단의 사업현황을 살펴보면, 재단은 디지털격차해소 및 디지털리터러시 교육 등 주로 교육 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 사업 계획은 평생교육국과 차별성이 있다고 말하지만 평생교육국의 '디지털 문해교육'과 인생이모작지원과의 스마트폰 및 컴퓨터 교육과 차별성이 없고, 중복적인 사업이라고 보여짐. 사업의 중복으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할 것.
7. 최근에 사이버위협이 점점 지능화되면서 증가하는 추세로 스마트도시정책관이 사이버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이버보안 담당공무원 인력 증원을 통해 효과적인 예방책을 마련하기 바람.
8.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은 공직자로서 가져야 할 정치중립 의무와 건전한 상식을 가지고 재단을 이끌어가야 함에도 외부 언론사 인터뷰 자료들과 이력을 살펴보면, 이사장으로서의 전문성이 부족해 보임, 또한, 업무추진비로 소속 직원 외는 경조사비를 사용할 수 없음에도 이를 위반해 집행하였는바, 위반해 집행한 업무추진비는 당장 환수조치하고, 앞으로는 업무추진비 사용에 주의를 기울이기 바람.
9. 25개 자치구에 설치된 CCTV 중 8년 이상 된 노후율이 높은 자치구들이 있음. 노후된 CCTV로 인해 관재하는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재센터가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노후 된 CCTV 교체 지원계획을 마련하여 제출하기 바람.
10. 재물조사는 재단이 보유 중인 재산의 상태를 파악하는 재단의 기본업무임에도 매년 용역을 맡기는 것은 디지털재단이라는 이름을 무색하게 만드는 안일한 태도이며, 재단의 용역문제는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나오는 지적사항임에도 시정하겠다는 답변만 있을 뿐 개선이 안 되고 있으므로 스스로 연구하기 위해 설립한 재단인 만큼 기본적인 업무는 스스로 해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기 바람.
11.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직원 채용공고 광고료를 홍보비에서 집행하는 행태의 개선 지적에 대해 시정한다고 해놓고 매년 반복됨. 올해도 다시 임원모집공고 광고료를 홍보예산으로 집행하였음. 의회의 개선 지적을 소귀에 경 읽기 식으로 반복 무시하는 것에 대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함. 똑같은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명확한 예산집행기준을 마련하여 보고하기 바람.
12. 4년 동안 총 20여명이 퇴사함. 21년에만 11명(30%)이 퇴사한 것은 조직 내부에 문제가 있는 것임. 직원의 30%가 퇴사하면 조직이 제대로 돌아갈 리 없음. 직장

내 괴롭힘, 근무 환경 문제 등 직원이 퇴사하는 이유를 면밀히 점검하고 조직 분위기를 쇠신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하기 바람.

13. 스마트도시정책관은 스마트도시를 지향하기 위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계획을 제때에 수립해야 함에도 올해 수립해야 할 스마트도시 기본계획을 11월인 현재까지 수립하지 못하고 있음. 앞으로는 기본계획 수립이 늦어지는 경우가 없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
14. 빅데이터 통합저장소 1단계 구축사업은 당초 예정된 기간보다 2년이 더 걸려 구축되었음에도 기존 사업계획과 다르게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음. 향후 예산편성 단계부터 철저히 사업단계별 계획수립을 세워서 사업을 진행할 것.
15. 빅데이터 통합저장소는 구축이 목적이 아니라 데이터 활용이 목적임에도 데이터 활용방안 계획이 부족함. 빅데이터 저장소 1단계 구축 데이터 활용방안 마련과 2단계 사업에 대한 신중한 계획 필요.
16. 서울시 CCTV 안전센터에서 자치구의 영상을 열람, 저장, 제공하는 것은 개인 정보법 위반사항임. 그러나 개인정보를 공익에 맞게 사용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관련 업무협약을 맺는 등 시민의 안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17. 알뜰폰 등 무제한 요금제를 사용하지 않는 시민들에게는 공공와이파이 사업이 필요함. 처음 취지에 맞는 사업을 진행해 주기 바람. 데이터취약계층에 맞는 지속적인 사업을 진행해 주기 바람.
18. 메타버스를 문화, 관광 영역에서 사용하는 것은 이로울 것으로 보이나 다른 분야에 적용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는 것으로 보임. 메타버스를 많은 분야에서 도입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로 보임.
19. 서울디지털재단에서 RPA지원단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을 RPA지원단으로 선발함. 디지털재단이사장은 이에대한 명확한 업무과약을 하고 조치하기 바람.
20. 스마트도시 정책의제를 정할 때 어떤 프로세스로 정하든 철저적인 단계를 통해 안정적으로 진행해야함. 메타버스 사업이 정말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인지 철저적 검토를 명확히하기 바람.
21. 디지털재단의 메타버스 사업관련 위원회의 추천 위원들이 전문성이 적거나 개인의 이권과 관련된 사람들이 있어 보임. 메타버스 사업이 정말 시민들에게 효과가 있도록 정책 구상과 집행을 할 필요가 있음.
22. 디지털배움터 사업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디지털 역량을 자택 근처에서 쉽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25개 자치구의 총 인구수와 노령인구(55세 이상)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치구별 교육장이 배치되었음. 자치구별 총인구수와 노령인구를 고려하여 자치구별 교육장 배치 개선이 필요함.

23. 서울디지털재단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홈페이지에 경영목표, 운영계획, 예산, 인력, 성과, 실적 등을 반드시 공개하도록 하고 있지만 재단 홈페이지 내 경영공시 자료 확인이 어렵거나 내용이 제한적이니 관련 조치 필요함.
24. 법적 논란으로 공공와이파이(까치온) 시범사업을 민·관협력방식으로 변경하는 경우 통신사에 회선 사용료를 지급해야 하므로, 공공와이파이 이용률이 적은 지역의 AP는 철거하거나 장소를 이전해 공공와이파이 이용률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함. 공공와이파이 사업의 당초 취지인 저소득층과 정보소외계층 통신기본권 보장을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25. 성북구의 무선 CCTV 설치 사례를 검토하여 유선연결이 어려운 하천이나 산 등에 비용절감과 효과성이 높은 무선 CCTV 활용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26. 서울시 데이터기반의 과학적 행정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직원들의 데이터 활용역량 강화가 중요함에도 직원들의 직무교육이 많이 부족함. 직원들의 데이터 활용역량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교육을 확대하기 바람.
27. 2021년 전직원 정보보안 교육 이수율이 전년 대비 저조함. 또한 보안자격증을 취득한 인력이 11명으로 부족함. 전직원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개선 계획을 마련하기 바람.
28. 공공와이파이 데이터 사용량을 확인한 결과, 버스, 실내에 설치된 공공와이파이 보다 1차사업으로 설치된 실외 공공와이파이 총 데이터 사용량이 적음. 유지 관리 비용을 감안하여 사용량이 많은 지역으로 설치대상 조정이 필요함.
29. 1차사업 평가결과 실제 데이터 사용량이 당초 사업목표 대비 크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음. 1차사업 추진시 하천, 공원, 광장, 주요거리 등에 설치할 경우 광범위한 장소에 공공와이파이를 촘촘하게 설치하지 않는 이상 사업의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고 지적하였음에도 철저한 사업 계획 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이며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바람. 스마트도시정책관의 책임 있는 해명과 조치가 요구되며, 실패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바람.

30. 서울디지털재단은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결과에서 2년 연속 최하등급을 득함. 여러 가지 평가지표 중 가장 낮은 점수가 경영시스템인데, 조직, 인사관리 등을 중점적으로 개선해 주길 바람.
31. 서울디지털재단 요구자료가 오지 않고 제출한 일부 자료도 임의로 변경 제출함.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태도가 불성실함. 요청한 자료를 정확히 제출하기 바람.
32. 서울디지털재단이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직전에 조직을 개편하고 사업을 진행했던 사업본부장이 디지털재단 감사팀의 팀장을 하고 있는 것은 맞지 않음. 사업을 했던 총괄본부장이 스스로의 사업을 감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33.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 취임이후 언론보도자료 13건의 보도내용을 보면 사업의 효과에 대한 홍보가 아닌 이사장 개인의 치적을 홍보하고 있음. 사진과 내용이 이사장 중심으로 되어있는데 정치활동을 하는 것으로 보임. 조치바람.
34. 서울디지털재단 용역발주현황을 보면 특정업체가 계속해서 용역을 수주하고 있고 비교견적 업체가 모두 동일함. 이러한 일들이 제발하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람. 또한 서울디지털재단은 불필요한 용역은 지양해 주기 바람.
35. 서울디지털재단의 직원 내부만족도가 최근 3년간 서울시 최하위임. 새롭게 취임한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은 2021년도 내부만족도 결과는 기존과는 다르도록 조치해 주기 바람.
36. 서울디지털재단 직원들이 출장을 1년에 백번 이상 가며 2년 반 동안 월급 외 소득이 3천 6백만원을 받은 직원이 있고 출장도 미신고로 가는 경우가 많음. 직원들 근태관리를 철저히 해주기 바람.
37.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이 사무관리비를 개인적 친분이 있는 기자의 경조사비로 사용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는 것임. 잘못된 부분은 사과하고 환수조치하기 바람.
38. 2021년 9월 임시회 때 세계스마트시티기구 사무총장 임명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고 명확하게 사실로 드러남. 임명된 사무총장의 세계스마트시티기구 관련 경력이 없고 오세훈 시장 측근의 아내임. 조치하기 바람.
39. 세계스마트시티기구의 회비 징수율이 너무 저조함. 회비를 내지 않는 회원은 자격이 없으며 2021년 회비 징수율 80%에 도달하지 않을시 세계스마트시티기구를 운영할 필요가 없음.
40. 서울시 보안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인터넷 망분리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없어보임. 업무의 불편함으로 인해 보안을 소홀히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서울시 보안 강화를 통해 통신직의 정체를 해소할 수 있을것으로 보임.

41. 서울시의 새로운 공간인 메타버스를 2023년까지 구현하기 위해 용역을 했으나 내용이 너무 없음. 위드코로나 시대 전환시 수요 급감 가능성 있으며 2030년까지 700억 넘는 예산을 투입함에도 지방재정법에 따른 타당성조사, 투자심사를 받지 않음.
42. 디지털재단 채용공고가 지나치게 구체적이며 디지털재단의 직원 수가 적음에도 이사장 비서가 있음. 채용공고를 현 시대에 맞게 작성해 주기바람.
43. 에스플렉스센터는 첨단 IT건물로 사이버안전센터, 클라우드센터 등 서울시의 핵심 ICT 인프라가 집중된 건물에서 안전불감증, 소통 부재 등으로 교통전산시스템 등이 셧다운 되는 사고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음, 이는 에스플렉스센터 건물의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스마트도시정책관의 책임으로 스마트도시정책관은 재발방지를 위한 책임 있는 조치와 서울시 중요시스템 보안 및 보호를 위한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다시는 시스템이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44. 정보통신공사 사업자들의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가 증가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여 제도에 문제가 있다면 개선하여 업체들이 과도한 제약을 받아 피해를 보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민생사법경찰단 : 6건

1. 사무관리비 불용률이 높고 4분기 집행률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2. 수사업무가 6개월에서 1년 만에 숙달되기가 어려운데 근무자의 재직 기간이 짧으므로 구청 파견을 장려하는 등 장기 근무 대책 제도 개선이 필요함.
3. 민생사법경찰단의 보호장구가 2019년과 동일함. 현원 87명이 사용하기에는 수량이 부족해보이며 수사관들의 안전을 위해 보호장구 확충 등 적절한 방안을 마련해줄 것.
4.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책임자와 접근권한자의 인사이동시에 담당자 변경 조치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함.
5. 수사실적 감소와 인력감소가 연관되어 있음. 자치구 인력 증원 필요함.
6. 홍보 예산이 계속 감소해왔고 '21년도에는 범죄신고포상금 지급 실적도 없는 등 홍보 노력이 부족하다고 보이므로 시민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 방안을 마련해야 함.

□ 미래청년기획단 : 21건

1. 현금성 지원이 대폭 늘고 청년들의 건강한 생태계를 지원하던 공간 지원 사업이나 활동 청년활동 예산은 대폭 삭감된 것을 시정할 것.
2. 청년들과 협치하지 않고 정책의 주체로 생각하지 않으며 일방적으로 현금서비스 수혜자로만 보는 현 오세훈 시장과 집행부의 태도는 매우 부적절. 또한 해당 부분에 대해 미래청년기획단장이 청년들의 이야기에 공감하지 못한다는 것은 미래청년기획단장으로서 부적절하니 개선할 것.
3. 서울시가 내년부터 도입하는 이사비 40만원 지원 관련 내용은 청년자율예산 논의과정에서 청년들이 제안했던 내용임. 담당부서에서 현실성을 문제 삼아 폐기됐던 것인데 오세훈 시장의 공약인 것처럼 되살아난 것과 관련 존중받아야 할 지식재산권이 존중받지 못하는 점은 부적절. 폐기되었던 정책을 다시 복원 되도록 노력하였을지라도 통보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소통이 되지 않은 것으로 이를 개선할 것.
4. 청년활동지원센터장이 면접심사위원을 센터장의 지인들로 구성하고 선정과정에서 인사채용이 투명해야 하기 때문에 제척회피기피 서류에 서명을 했음에도 아는 사람으로 채용하는 것은 잘못된 절차임. 지도감독의 책임이 있는 미래청년기획단의 조치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하기 바람.
5. 내년도 사업과 예산을 편성할 때는 집행부가 편성한 예산안을 의회가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 등을 거쳐 법령 기준에 따른 심의 끝에 적법한 예산이 편성되는 것임에도, 최근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청년이 바라는 일상지원' 3대 시리즈 정책에 대해 미래청년기획단은 내년도 사업과 예산에 대해 의회에 관련 설명, 또는 사전에 업무보고 등을 통해 계획을 발표한 바 없음. 그럼에도 언론에 구체적이고 확정적으로, 시리즈 보도로 기획하여 발표함으로써 시민들에게 확정된 사업과 예산으로 오해하도록 만들고, 이를 통해 집행부는 서울시의회의 예산안 심의와 관련하여 의회를 경시하고 압박하는 등 시의회의 심의·의결권 침해한 이번 행태에 시정조치 하기 바람.
6. 서울청년센터 서초 오랑 운영 관련하여 민간위탁 동의안에 의결된 위탁기간을 단축하거나. 공사기간 지연 등 중요사항에 대해 위배하면서 의회의 동의나 보고 없이 진행하였고, 청년관련 유사 사업과 차별 없는 프로그램 운영, 홈페이지관리, 홍보 미흡 등의 문제점이 있는데도 미래청년기획단은 제대로 된 관리 감독을

하지 않았음.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보고하기 바람.

7. 서울전입 청년 1인가구 웰컴박스 지원 사업 관련하여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할 우려가 있고, 전입 인원 대비 지급 인원이 턱없이 적어 웰컴박스를 받지 못하는 청년에 대한 차별이며, 구성품 역시 13명의 청년모임보다 시민투포나 다수의 청년에게 물어 기획하는 더 바람직해 보임. 홍보방식에 대한 자료가 부족함. 향후 정책인지도 제고와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보고하기 바람.
8. 청년교통비 지원 관련하여 유사 광역알뜰교통카드와 중복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데 예산 사전협의 과정 없이 먼저 언론보도를 내는 것은 의회 예산 의결이 나고 사업성 판단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 앞뒤가 전도된 일이 발생하는데 성급하고 독단적인 사업 추진으로 예산 의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의회의 의결권 침해 소지가 있으며, 사업의 신뢰성에도 문제가 있음. 즉흥적인 사업추진은 많은 문제를 가져오므로 정책을 면밀히 계획하고 설계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바람.
9. 수년간 거쳐 청년과의 소통으로 만들어진 청년자율예산은 삭감하고, 영테크 등 공약실현을 위한 사업위주로 대폭 증액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하며 사업의 성과를 철저히 검토하여 청년이 희망하는 청년서울을 만들겠다는 약속에 부합하는 예산 편성을 하기 바람.
10. 청년정책조정위원장 관련하여 해프닝이 있었는데 걱정한 것인지 속고하고 예산 편성에 관여하는 직책인데 신뢰도가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청년정책조정위원장의 자격 관련하여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기 바람.
11. 직장 내 괴롭힘, 부당 노동 행위 등의 이슈와 상황이 위탁기관의 위상과 평판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시시비비를 가지고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
12. 위탁체 변경, 감사, 고용승계 등의 복합적 문제를 기관 내부에만 맡겨두고 스스로 해결하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미래청년기획단에서 적극적으로 판단하여 부당한 사례가 있다면 바로 잡아주기 바람.
13. 청년인재활동 백서 사업을 진행하기로 되어있는데 백서를 만들만큼의 실적이 안될 것으로 보이고 제대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음. 청년인재활동 백서 제작 후 제출하기 바람.

14. 올해 예산으로 설치·운영 예정이던 ‘청년 쿵 비즈니스센터(광진)’를 당초 구(區) 운영방식에서 시(市)직접사업으로 변경하였음. 청년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사업의 진행과 안정성이 중요함에도 사업 계획변경이 올해가 다 되어서야 변경하게 됨. 미래청년기획단은 사업 계획시 보다 세세하고 꼼꼼하게 사업을 구상하고, 의회와 꾸준한 논의를 통해 사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해 나가야 할 것이며, 동 센터 설치와 관련하여 또다시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고 사업을 꼭 성공시키기 바람.
15. 청년들의 결혼관은 해도 좋지만 안해도 좋은 제도라는 인식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저출산에 대한 심각성은 느끼고 있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결혼이나 출산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음. 청년들의 생각이나 인식도에 대한 분석을 통해 청년에게 맞춤형 정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다시 검토해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의회에 보고해주기 바람.
16. 서울시는 내년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44조원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나, 청년 분야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과 비교했을 때 50% 삭감한 예산으로 편성하였고, 특히 청년자율예산 사업 47%, 청년공간 관련 예산 총 47%(특히 지역별 서울청년센터 설치 운영 62%), 청년마음건강 지원 사업 43% 등 청년들이 직접 논의하고 의제를 만들어 참여할 수 있는 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음. 그에 비해 시 전체 예산 중 선심성, 현금성 사업 예산은 증가하였는 바, 대중교통요금 지원, 온라인 바우처 구입 지원 등 ‘획기적 청년 지원 사업’으로 편성한 금액은 모두 9,813억원으로 올해 예산 4,977억원에 비해 49.3% 증가했음. 청년들에게 교통비 10만원, 전자책 보라고 10만원씩 주면서 서울시 미래 정책에 대한 희망, 나아가 우리나라의 정책과 제도를 혁신적이고 창의적으로 개척해나가는 청년들의 미래와 기회를 앗아간 것임. 사탕발림으로 청년과 시민을 기만하는 지금과 같은 예산 편성과 정책 추진을 당장 멈추고, 진정으로 청년이 원하는 정책과 제도 마련을 위해 새로운 계획안을 만들어야 할 것임.
17.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사업을 들여다보니 청년시민회의와 청년거버넌스의 두 기능이 겹침. 청년들의 요구사항은 다양한 통로로 받아들여져야 하며, 자치구의 거버넌스 활동들이 청년시민회의와 유기적으로 연관 정책과 연결되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각각 분리되어 있으니 개선이 필요함.
18. 청년활동지원센터 직원 채용시 센터장과 같이 근무했던 직원을 채용한 사례가 있는데 센터장이 인사위원회에 참여했던 사례가 다수 발견된 제척사유 위반임.

19. 미래청년기획단에서 민간위탁기관과 소통 하지 않고, 민간위탁기관 소속 노조와도 소통을 하지 않고 있음. 결국 미래청년기획단의 관리 감독 소홀로 인해 많은 청년들이 피해를 입고 있으니 적극 조치바람.
20. 청년활동지원센터 직원채용시 심사위원들이 대부분 아동, 청소년 분야에서 근무 하던 사람들이며 신입센터장의 지인들로 구성된 것으로 보임. 공정한 절차에 의해 직원채용이 이루어져야 함. 규정 위반사항에 대해서 조사 후 보고바람.
21. 부당노동행위 의혹 외에 직장내 괴롭힘이 발생한 것은 매우 유감으로 생각함. 사실로 드러날 경우 법인과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미래청년기획단에서 조치바람.

□ 행정국(서울시 자원봉사센터 포함) : 46건

1. 행정국의 관리감독 소홀로 4년 동안 23회에 걸쳐 2천 5백만 원이 넘는 예산을 부적절하게 편성, 청구, 집행함. 회계운영 부분을 정기적으로 감사했으나 회계상 부적절하게 사용된 부분을 한 번도 적발하지 못한 것은 형식적 감사였다고 할 것임.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행정국장이 책임지고 관리감독하기 바람.
2. 무늬는 시청어린이집인데 일반 지역의 사설 어린이집보다 못한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음. '재단'의 이름만 보고 시청어린이집 위탁 계약이 체결된 듯 보임. 재단의 이름과 걸맞지 않는 하청에 하청, 위탁에 재위탁 형태로 운영이 이루어지면서 시청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는 시청 공무원과 주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고 있음. 이런 식으로 운영될 바에는 전향적인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어 보임.
3. 생활치료소 도시락 1일 폐기량을 제대로 산출하지 않고 센터별로 일괄적으로 5~7% 도시락 추가 주문하여 도시락을 과도하게 폐기,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었음. 생활치료소 센터별 도시락 1일 폐기량을 제대로 집계하여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해주기 바람.
4. 행정국은 한솔어린이보육재단과 민간위탁을 맺고 서울시청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으나, 재단은 원장과의 위임계약을 맺고 재위탁을 주고 있는 것은 법적 고발 대상인 불법으로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해야함.
5. 행정의 규모가 커지고 시민의 요구도 많아지고 있는 변화의 시대에서 전문성을 발휘하도록 하는 임기제공무원을 오세훈시장 취임 이후 189명을 채용했음에도 전임시장 지우기 일환으로 생각하고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공무원 조직의 근간을 흔드는 일임. 현재 발표한 오세훈 시장의 임기제 공무원 개선계획을

시정하기 바람.

6. 속초연수원 증축 전면 재검토 관련하여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속초 연수원 증축은 선택지에서 제외하고, 새로운 장소에 대한 선호도 조사를 한 것은 속초 연수원 증축을 반대하거나 호감도가 낮다는 편의적 해석을 할 가능성 있는 조사를 실시한 것이고, 올해 5월 125억 증액 관련 투자 심사에서 속초연수원 증축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해 놓고, 전면 재검토를 한다는 것은 의회와 절차를 무시하고 행정을 맘대로 뒤엎는 것으로 직원들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검토하여 보고바람.
7. 자치구에서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을 신청 시, 사업 타당성, 사업별 우선 순위의 적정성이 검토되어야하며, 특히 자치구의 사업선정과정에 예산부서의 검토, 서울시 사업관련부서의 의견조회 절차와, 사전 행정절차 이행 및 사업물량·단가 적정성 여부 등 중요사항 검토를 위한 사전 점검기준(체크리스트) 마련 등 사전검증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하여 특별조정교부금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8. 행정국 소관 18개 위원 중 2개 위원회는 위원회 구성조차 않고 있어, 위원회의 기능 공백이 우려됨. 그중 분쟁조정위원회의 경우 자치구간 분쟁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고 조정하기 위해 필요한 위원회임. 위원회는 행정의 민주성·공정성의 확보, 전문지식의 활용, 이해 조정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각종 법령과 조례 등에 근거하여 설치·운영하도록 되어 있음. 설치되지 않은 위원회 설치를 검토하기 바람.
9. 업무택시 이용에 대해 행정감사 때마다 지적되고 있음. 접근이 용이한 부서에서만 이용하고 실제 현장출장이 잦은 사업부서는 사용이 저조하거나 거의 없음. 관용차가 많은 행정국의 경우는 오히려 업무택시 이용률이 매년 1,2위로 높음. 이용 실적에 근거해서 예산배정도 되기 때문에 업무택시 이용이 각 실국별로 고루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절차간소화, 홍보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10. 코로나 19로 인해 서울시청의 모든 출입문을 통제하고 있음에도, 의원회관 1층 연금매점 커피숍의 경우 이용자들이 넘쳐나는데, 코로나 19 방역수칙이 적용되지 않고 있음. 위드코로나를 시행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감염확산의 우려가 아직도 지속되고 있으므로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될 것임. 이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강구하기 바람.
11. 임기제 공무원 관련 작년 행정감사 때는 부정적인 의견 없었고 더 추진하겠다고

하였는데 올해는 없는 것이 좋은 것처럼 말함. 왜 이렇게 달라진 것인지 업무보고서 14페이지를 보면 “온정주의”와 “평가의 관대화”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임기제 공무원을 동등한 공무원으로 보지 않고 온정을 베푸는 대상으로 여기는 표현으로 자칫 일반공무원은 내부인이고 임기제 공무원은 외부인이라는 느낌을 주어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표현은 지양하기 바람. 업무보고서 15페이지 연장 기준을 강화하여 s등급 5회 이상 나오는 직원에 한하는데 지금까지 s등급 5회 이상이 거의 없다는 것은 앞으로 연장될 가능성이 그만큼 낮다는 것임. 해당제도에 속한 사람들만 가지고 볼 것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 다양한 인력이 늘어나는데 본질적으로 어떻게 새로운 제도로써 정립할 것인가 전반적인 제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합리적인 인사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검토와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검토와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12. 조례, 규칙, 훈령 관련 정비 필요성 있음. 행정국 소관 조례의 인용법령 등의 정비 필요. 행정국 소관 47개 조례 중 6개 조례에서 띄어쓰기, 인용법령 등 오류가 발견됨. 행정국 소관 전체 법령 표기 오류 등 올바르게 정비하기 바람.
13. 찾동 경상보조금 집행내역 감액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률 저조함. 특히 집행률이 많이 저조한 자치구의 원인을 파악하고 일상회복 시기에 맞게 보완하기 바람.
14. 주민자치회 사업은 협치적 성격이 있으므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서울시의 다른 부서인 지역공동체과와도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평가라는 미명하에 상황이 진행되고 있음.
15. 2021년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계획이 별도 수립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평가를 진행하고 예산 교부 집행 중지하는 것은 일의 선후가 맞지 않음. 일의 선후를 따져 예상 가능한 범위 안에서 행정을 진행할 것.
16. 주민자치회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들에서 준비나 실행의지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시장이 부임했고, 시장의 생각이 기존 사업 진행방향과 다를 수는 있으나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행정 범위 안에서 취사선택 되어야 할 것임.
17. 코로나 분포와 관련하여 특히 집중·포화되는 지역구의 지역 주민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특히 외국인 환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외국인 근로자들의 지역 간 이동으로 코로나 확산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조속한 대책 수립이 필요해 보이며 행정국에서도 지원책들을 마련해주기 바람.

18. 생활치료센터 도시락 만족도가 1차에 비하여 2차에 많이 하락됨. 2차 만족도 조사에서 폭염이 만족도 조사에서 영향을 많이 미쳤으나 3차 만족도 조사는 시기상 폭염의 조건을 벗어날 것이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또한 아동, 특정 재료 알레르기 보유자 등을 고려하여 메뉴 선택권을 늘릴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 주기 바람.
19. 지난 10년간 서울시 일반직 공무원 5급 이하가 48.6% 증가한 반면 임기제 공무원은 전체 45.1% 증가함. 마치 일반직 공무원은 늘어나지 않았는데 임기제 공무원만 증가한 것처럼 말하는 것은 잘못됨. 또한 전체공무원 중 임기제 공무원의 비율이 10%에서 16%로 증가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님.
20. 2008년도에 개정된 비정규직 보호법을 보면 2년이상 근무한 자는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함. 지금 서울시의 임기제공무원 관련 제도는 법과 제도를 역행하고 있는 것임. 시장이 바뀌니 인사계획 방향이 갑자기 바뀌는 것은 서울시가 인사운영을 허술하게 하는 것임.
21. 2017년 10월부터 현재까지 한솔재단이 시청어린이집 수탁을 하며 3명의 직장어린이집 원장에게 이를 재위탁함. 이는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 15조 위반사항인 제3자위탁 금지에 해당함. 그럼에도 행정국은 적극조치하지 않음.
22. 국외훈련 대상국가가 영어권국가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운영되고 있음. 다변화에 따른 대응방안과 비영어권 국가로 확대·개선 대책 마련 필요.
23. 생활치료센터 근무기록지에 허위 사인이 난무하고, 근로자들의 수령금액을 맞추기 위해 법정공제가 아닌 기타지원공제 항목을 만들어 급여가 엉터리로 지급되고 있으며, 도시락이 입소인원 대비 많은 개수가 주문되어 손도 못 대고 버려지는 예산낭비 사례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으므로 종합적인 점검과 보완 대책을 마련할 것.
24. 코로나 19에 따른 업무 피로도와 과로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5년동안 31명으로 그쳤으며, 올해는 0건임. 활용이 저조한 휴식(휴식처방전)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며 공무원이 휴식에 필요한 제도가 무엇인지 새로운 방향의 사업계획을 세우기 바람.
25. 공무원의 당직과 비상근무 제도를 두고 있으며, 그에 대한 보상적 형태로써 수당과 대체휴무를 두고 있음. 당직(숙직+일직)의 경우에는 당직 후 수당과 대체휴무를 부여하고 있고, 비상휴일 근무의 경우에는 수당과 대체휴무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운영하고 있는바, 보상체계가 비합리적으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26. 서울시는 출산휴가자, 휴직자,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에 대한 업무공백을 최소화 하고, 행정의 연속성 확보 및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대체인력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인력뱅크 재구성 후 인력풀 보완이 되지 않아 대체이력이 필요한 실국에서는 있으나마나 한 제도로 인식되어 실효적이지 못하다는 의견이 많은바, 대체인력뱅크의 내실있고 효율적인 운영 방안 마련이 필요함.
27. 주민자치회 간사, 지원관, 공무원, 구청이 있는데 업무가 중복이 되다 보니 충돌이 되는 부분이 있음. 간사와 지원관 충돌이 있고, 급여차이도 있어 갈등이 있으니 구조적인 부분을 검토하여 시정하기 바람.
28. 서울형주민자치회의 시행, 막대한 인건비가 투입되는 중간지원조직이 생겨난 이후, 과연 그 이전보다 눈에 띄게 주민자치가 활성화 되었는지에 대해 반드시 정확한 사업평가와 분석이 필요함.
29. 주민자치 '교육 사업'의 경우, 중간지원조직 출신 분들이 각 자치구 교육사업에 강사로 참여하며, 강사비도 품앗이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듦. 주민자치는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사업을 하는 것. 같은 내용의 같은 강사가 천편일률적인 교육을 모든 자치구에 적용하고 진행하는 것은 자치가 아님. 자치행정과에서는 자치단장들이 근무시간에 다른 자치구 교육 사업에 참여하며 강사비를 받아간 것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함.
30. 시민들이 주민자치라고 하는 것이 전보다 더 활성화되고 내 삶에 가까운지 실제 적으로 느끼지 못하는 상황에서 주민자치회 관련 예산이 주민자치사업단 소속 인력과 특정 단체 인력 배분리기로 전락하고 눈먼 돈이 된 데는 서울시가 그동안 무책임과 무관심으로 일관한 결과임.
31. 주민이 중심이 되어 운영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진정한 자치이며 서울시가 보다 개선된 주민이 중심이 되는 주민자치회 운영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32. 행정국장, 한솔재단 대표는 시청어린이집 관리감독의 의무가 있는 관계자이지 외부인이 아님. 코로나를 핑계로 감사를 받은 시청어린이집 방문을 하지않는 것은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임.
33. 시청어린이집의 이직률이 높은 이유는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가 좋지 않기 때문임. 경찰청 등의 타 직장어린이집에 비해 처우가 열악함. 내년 시청어린이집 예산에 처우개선관련 사항을 반영하기 바람.

34. 요구 자료 중 자원봉사센터장만 출장관련 자료가 없음. 외부활동을 하면서 출장 신고를 하지 않거나 근무시간내 한 것은 소명자료를 제출하기 바라며 업무와 관련 없는 지나친 외부활동으로 자제하기 바람.
35. 퇴직공무원 일자리 사업과 관련하여 퇴직공무원들은 연금의 수혜대상자이니 시민들에게 해당 일자리를 돌려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계속해서 질의했으나 조치사항도 없고 아무도 기억하질 못함. 조치해 주기바람.
36. 속초연수원 증축을 업무보고에 누락하고 내년 예산에도 반영하지 않아 행정국장 임의대로 백지화함. 속초연수원 증축이 필요함을 주장하여 통과시켰지만 결국 집행하지 않아 의회와 절차를 무시하고 있음.
37. 행정국 용역계약을 보면 한 업체와 계약을 맺으면서 타 견적 업체가 모두 같음. 방역 용역계약을 체결하지만 타 견적 업체는 의류, 패션, 잡화 업체임. 회사 대표가 다른 업체 2곳을 만들어 계속해서 같은 용역들을 받고 있음.
38. 최근 3년간 공무원 징계내역을 보면 징계가 매우 약함. 금품수수, 성비위임에도 감봉 등은 적절한 처벌이 아님. 공직자로서 힘든 부분은 있겠지만 행정국에서 이러한 징계사건 경감을 위한 노력을 해주기 바람.
39. 행정국장은 시청직장어린이집 관리 감독의 책임 있는 내부인이니 이에 대한 책임감 있는 태도를 보여주기 바람.
40. 공무국외훈련 성과보고서 평가위원의 관리 감독이 안되고 있음. 평가위원 명단, 경력, 지급된 금액 등 어떠한 자료도 없음. 자료제출기간을 일주일 주었음에도 자료가 없다는 것은 잘못된 것임. 국외훈련은 전액 예산 삭감해야함.
41. 일상적 단계회복에 들어갔지만 확진자가 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만의 방역체계가 필요하며 관련 계획을 세우기 바람.
42.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서울시민의 신청률이 전국 최저이며, 대상자 중 14만 6천명이 미신청함. 아무리 신청주의라고 하지만 안이하게 대처하지 말고 최대한 모든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의신청의 인용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정부와 적극적인 협의를 하기 바람.
43. 서울시 정보공개율은 전국 최하위였으나, 정보공개정책과를 신설하고 개방형으로 과장을 임명한 후 정보공개율은 압도적인 최우수였음. 작년 8월 정보공개정책과 장을 개방직제에서 일반직제로 바꾸면서 정보공개율이 압도적인 최우수에서 보통으로 내려옴. 오세훈 시장이 취임 후 첫 조치가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심의

위원회를 구성해 시민이 위원회 명단을 공개 요구했지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권고에서도 명단 공개를 거부함. 서울시 정보공개 정책이 퇴행하지 않도록 명단을 공개하기 바람.

44. 오세훈 시장의 임기제 공무원 인사운영 개선계획은 공직사회의 전문성 강화 및 효율화하는 시대적 추세에 역행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후속조치를 취해야 함.
45. 엄밀한 전력거래소 기본정산금(DR) 추계 제도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함.
46. 자원봉사센터 서울동행과 평생교육국 서울런 멘토단 사업의 목적과 내용이 비슷하고 중복이 되는바, 사업의 차별성을 확실하게 두어 추진해야 할 것임.

□ 재무국 : 12건

1. 압구정동 390번지는 사유지이나 국방부에서 무단으로 시설을 설치하고 임대를 주어 수익을 내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해주시기 바라며 서울시 재산관리 총괄관으로서 재무국의 사유재산 사용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함.
2. 2022년도 서울시 지방세 세입예산 편성 규모가 금년 대비 15%를 초과하는 3조 원 규모에 달하는 것은, 부동산 관련 취득세 등에 의존하고 있는 지방세 성격으로 볼 때, 부동산 경기를 지나치게 낙관하는 것인지, 아니면 오세훈 시장 공약사업 재원 마련을 위해 무리하게 많은 세입예산을 편성한 것은 아닌지 우려를 표하며, 세수추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3. 10대 의회 출범이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개선사항을 요구해 오고 있는데 개선된 것은 출연금 규모가 일부 조정된 것 외에는 발전이 없음. ①한국지방세 연구원의 지방출자출연법 상의 재단법인화를 통한 정상화 방안 마련, ②특별회 계로 전액 전출되면서도 연구원 출연 재원에도 적용되고 있는 '재산세 도시지역 분'의 이중지출 문제 개선, ③출연금 산출방법을 예산규모에 따라 산출하는 방식으로의 개선, ④시도지사협의회에서 연구원을 지도·감독하는 방안, ⑤지방세 제도발전을 위해 출연금 일부금액을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는 방안 등 지속적인 개선을 바라고, 관철될 때까지 행안부와 타지자체와도 협의하기 바람. 상기 언급한 것에 대해 현재까지 검토된 사항을 예산심사 시까지 제출하기 바람.
4. 지난 9월 오세훈 서울시장의 '서울비전 2030' 발표 시 48조원의 재원 마련 방안의

하나로 '서울시는 원치 않았는데 정부가 공시지가를 인상해 주는 바람에 지난 3년간 재산세가 배로 늘었다'고 주장한 사실과 관련하여, 재산세는 최종 자치구 세입으로 들어가는 자치구 재원으로써 서울시 사업에는 전혀 사용할 수 없으며 지난 3년간 재산세 세입 증가율은 30% 내외 수준에 그침. 오세훈 시장은 현실과 사실 면에서 모두 오류가 있다고 할 수 있음. 서울시 세입을 책임지고 있는 추후라도 정정 보도자료를 내던지 내부적으로라도 진언을 하시기 바람.

5. 서울시 공유재산 운영에 전문적인 자문을 하고 있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안전 통과율이 96%에 달함. 재산의 취득이나 처분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회 심의 전에 심의회에서 사전절차를 위반한 사례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심의 하여 사업부서에서 법정 절차를 준수할 수 있도록 엄격히 관리 바람.
6. 감사원이 작년 6월 SH공사에 대하여 실시한 감사결과를 올해 4월 시 감사위원회를 통해 통보 받은 바 있으며, 위탁 사유재산 처리 부적정 사례 및 사유지 위탁 관리 업무 철저 등의 주의를 받았음. 세입결손으로 인한 서울시 운영의 방해가 안 되도록 철저히 하기 바람.
7. 서울시 마을세무사 추천을 한국세무사고시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가 안되고 상담을 1건도 하지 않은 마을세무사가 전체의 50%임 서울시 마을세무사라는 경력을 영업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닌지 관리감독 바람.
8.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취소되었으나 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건들이 있음. 이는 의회의 의결권을 무시하는 것으로 조속히 조치하시기 바람.
9. 서울시 재산의 감정평가를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서 선정해 주고 있는 업체와 계약을 맺고 있음. 서울시가 비용을 지불함에도 감정평가사협회가 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협회 또한 단체이기 때문에 특정 업체에 몰아줄 우려가 있음.
10.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개정안을 9월 302회에 제출했다가 11월 303회에 제출함. 이에 대해서 재무국장, 세제과장, 재무과장이 모르고 있음. 2022년 예산을 심의 해야할 시기에 조례안을 뒤늦게 제출하여 충분히 심의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11.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을 편의적으로 제출하고 있음. 소관실국 위원회 중 외부 위원에게 지급한 수당내역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누락하였으며 법적근거가 없는 위원회에 매년 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근거 마련 후 별도로 보고바람.
12. 조례를 통해 감면되고 있는 세액 규모가 82억 원에 달하고 있어, 조세 감면을

통한 간접지원보다는 재정지출을 통한 직접지원이 사업 효과성 면에서 우월할 수 있으니 효과성에 대한 연구를 통해 지방세 감면 규모를 점진적으로 줄여가야 할 것임.

□ 평생교육국(서울장학재단, 평생교육진흥원 포함) : 28건

1. 서울런(교육플랫폼 사업)은 교육부의 K-에듀사업과 중복되기 때문에 해당 예산을 서울 시민의 안전, 행복 등 다른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평생교육법상 정규교육과정에 해당되는 교과목을 서울런에서 제공하는 것은 부당하며, 사교육 콘텐츠를 서울런에 탑재하는 것은 부적절함.
2. 청소년미디어센터는 현재 위치도 좋으며, 내부시설도 깔끔한 상태임. 이전하는 부분은 더욱 신중하게 검토하기 바람.
3. 서울런 사업의 KT-사교육업간 계약은 학생이 1번만 접속해서 강의 1개를 들어도 전액을 지불해야 하며, 일정 인원수 미만 수강 시 최소 지불금액 보장한다는 최소보장액이라는 계약 내용은 세금으로 사교육업체의 이익을 적극 보장하는 독소조항이며, 서울형 화천대유임.
4. 서울런 사업은 홍보비가 편성되지 않았으나, 대중교통과 각종 매체와 언론에서는 연일 홍보 중으로 서울시는 사업 대부분의 예산을 사교육업체에 몰아주고, 학생들에게 알릴 방법이 없어 정작 필요한 홍보비는 다른 사업의 예산 15억 8천 7백 만원을 쓰는 등 편법으로 예산을 집행함.
5. 서울런 멘토단의 성범죄 경력조회 미실시하고 있어 온라인 성범죄에 안일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청소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즉각 시행하고 적극적인 예방책과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주기 바람.
6. 청소년시설 이용프로그램, 회원정보 등록 시스템(통합정보시스템)의 점검결과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경우에도 60~70프로 오류가 있어 수기로 등록하고 있음. 조속한 개선 및 고도화를 통해 실효성 있고 완전한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람.
7. 평생진흥원은 작년에 비해 예산 불용액 많음. 코로나19로 인해 불용액 많다는 변명하기 전에 서울시와 평생교육국과 비교해 봐도 월등히 높음. 서울시 2.6%, 평생 0.4%, 진흥원 10.6%임. 예산규모가 얼마 되지도 않은데 이렇게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예산원칙, 재정관리 원칙에 입각해서 예산을 수립·집행하지 않는다

는 것임. 결산 결과 등을 면밀히 분석해서 예산을 수립하고,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건전한 재정을 관리하기 바람.

8. 서울런 온라인 콘텐츠 지원이 학력격차 해소를 목표로 하는 점에 대한 성과 평가 측정방식을 마련하기 바람.
9. 신청하는 학생 대부분이 멘토로 선정되며 아동학대금지교육, 성희롱예방교육 등 하루정도 교육하고 투입하고 있는데, 멘토로서 사전준비가 된 것인지 확인하기는 어려움. 멘토 활동비가 아르바이트로서 가치가 크지 않고, 멘토로서의 경력 활용가치를 제외하고는 멘토들이 활동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멘토단 운영의 과학적, 교육학적 틀을 사전준비를 하지 않고 진행했기 때문에 멘토의 이탈 등 운영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므로, 사업의 효과성 평가를 위하여 명확하고 객관적인 멘토단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10. 평생교육국, 교육청, 자치구에서 문해교육을 각각 추진하면서 분절적으로 문해교육이 실시되고 있음. 기관별 특성이 있다면 특성을 살려 중복 없이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각자의 차별성이 없다면 서울시가 주체가 되어 통합적·효율적으로 운영할 것.
11. 평생교육진흥원 주요업무보고서 p10 서울자율시민대학으로 기재한 것과 관련하여 명칭 혼동하지 말고 정체성을 분명히 할 것.
12. 학교 급식 명칭과 관련하여 '17년도 조례명에도 '친환경 학교급식'으로 변경되었으며 또한 보편적 복지로 자리잡은 바 공식자료에도 "친환경 학교급식"이라는 공식명칭 사용 바람.
13. 서울형혁신교육지구 관련하여 시-시교육청-자치구가 예산을 공동으로 분담하기로 협약했는데, 협의 없이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것은 협약 위배일 뿐만 아니라 신의 없는 행위임.
14. KT와 서울시의 계약 내용이 적절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KT와 서울시가 수의계약을 할 시 KT가 2차 업체와 맺은 계약내용 전체가 제출되어야 할 것임. 본질적인 내용은 사교육업체들이 KT와 어떤 계약을 했는지 확인해봐야 사업의 적절성 및 예산 집행의 적절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임.
15. 서울런 수의계약 관련 특례 적용이 너무 과도하게 적용된 것은 아닌지, 1회 유찰 수의계약이 적절했던 것인지 행안부의 유권해석 받아서 제출할 것.
16. 교육경비 보조사업 관련하여 교육청에서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사업을 담기보다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굵직한 사업 위주로 서울시가 명확한 정책방향을 세워 주도적으로 교육청과 협의하여 추진하기 바람.

17. 청소년 특화시설 관련하여 매년 지적받고 있음에도 개선이 안되고 있으며, 일부 법인들이 문어발식으로 위탁을 받아 운영을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하기 바람.
18. 학력격차없는 온라인 콘텐츠 지원 사업은 불법사업임. 평생교육진흥법상 평생교육은 정규과정을 제외한 것을 말하고 있지만, 해당 사업의 사업계획지시서에는 교과과정이 포함되어 있음. 따라서 평생교육이라 할 수 없으며 이는 불법임.
19. 서울런 사업은 사회보장사업으로 사회보장기본법 26조에 따라 매년 4월 30일까지 보건복지부에 이를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함에도 받지않고 40억이상 사업은 투심을 받아야 함에도 받지 않은 법령 위반 사업임.
20. 서울런 사업은 평생교육법, 평생교육에관한 조례, 지방재정법, 사회보장기본법 위반사업으로 철회되어야 하며 다시 재검토 할 것을 요구함.
21. 동네배움터가 현재 17개 자치구에서만 참여하고 있어, 25개 자치구 확대 추진이 필요함. 자치구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철저히 해주기 바람, 동네배움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기 바람.
22. 서울장학재단은 대학진로장학금을 서울희망장학금의 수혜자를 대상으로 주고 있어 중복지원의 우려가 있으므로 일반 대학생에게도 대학진로장학금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
23. 평생교육진흥원 원장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있어서 부적정이 나오지 않도록 평소에 철저히 관리하기 바람.
24. 어린이집의 식재료 공급체계인 도농상생급식은 학교급식과 비교할 때 산지생산비율, 잔류농약, 식자재의 질 등에서 현격한 격차가 있음. 서울시가 영유아 급식을 무책임하게 방치했다고 보여지며, 공공급식의 비용 절감, 안정성 확보, 공공책임성 강화를 위해 학교급식·유치원급식과 함께 영유아 급식도 친환경유통센터에서 통합 운영하는 방안 검토 필요.
25. 학교급식단가의 현실화를 위해 교육청과 급식단가 협의·결정 시 영양(교)사, 학부모 등 현장의 목소리 반영 필요.
26. 서울시 청소년 쉼터 최대 수용인원은 220여명이고 3개월 이상 머무를 수 있는 인원은 90명으로 매우 부족함. 가출팸 구성 뒤 생활비 마련을 위해 성매매, 원조

교제 등의 문제가 심각하지만 집에 가는 것이 두려워 신고를 못하고 있음. 가출 청소년들이 갈곳이 없어 더 심각한 문제가 야기됨, 쉼터의 확대필요.

27. 예체능에 맞는 장학금과 관심이 적은분야와 미래인재분야 등에 서울 장학금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28. 평생교육진흥원 근태관련 요구자료에 일자별, 초과근무사유 등이 없다고 제출 하였음. 이는 의회의 자료요구권을 무시하는 것임 자료를 소명하여 일자별, 사유별 제출 하기 바람.

□ 시민협력국 : 30건

1. 채무 증가에 지대한 원인이라고 단정하기에는 굉장히 작은 금액임에도 오세훈 시장이 지속적으로 서울시의 재정 악화, 채무 증가가 마치 시민단체의 민간위탁, 보조금 사업인 것처럼 왜곡하는 것은 부적절함.
2. 민간위탁 선정 절차가 까다로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증되지 않은 기관들을 선정했다면 관련 공무원에게도 책임이 있음. 잘못된 일이 있다면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은 맞지만 해당 민간위탁기관을 지도 감독하는 공무원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
3. 시민협력국은 조례 이행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거나 폭력적으로 삭감해 사업수행이 원활하지 못하도록 하여 직무유기 및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함.
4. 의회 의결을 받지 않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사업에 대해 사업의 공백과 중요성을 고려하여 다음 회기 시 의결을 조건으로 추경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일에 국장이 시급성과 긴급성이 의심되는 회의 참석을 이유로 이석한 것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향후 이러한 무책임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바람.
5. 자율신설기구인 서울민주주의위원회를 서울혁신기획관과 함께 시민협력국으로 개편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뿐만 아니라, 서울민주주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는 「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의 개정 또는 폐지가 선행되어야 하나, 그대로 남아있어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해 보임.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 개정 계획과 소관 조례 및 규칙 중 오류 사례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전수조사 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6. 최근 평가담당관에서 4년 만에 배포한 보도자료 내용이 마을공동체사업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내용임. 보통 시정 홍보 또는 긍정적인 내용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평가담당관에서 이렇게 부정적인 평가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사안으로 시장의 브리핑을 뒷받침하기 위해 다분히 의도를 가지고 진행한 것으로 보임.
7. 민간위탁, 민간보조금 사업 관련 대규모 불공정과 특혜 비효율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서울시 공무원은 공범자 또는 동조자라고 봐야하는 것인지. 조례와 지침에 위배된 내용도 명시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평가하며 그 과정에 함께한 공무원들의 이야기는 제외한 채 한 쪽에만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반성과 양심이 없고 뻔뻔한 행동임. 지침 위반 등을 지도·감독을 해야 할 사람은 마을 공동체 혼자 아니며 방치한 사람 또한 잘못이며 책임을 묻는다면 한쪽만이 아닌 방치한 사람들도 똑같이 책임을 져야할 것임.
8. TV 조선 취재기자(최00 기자)가 심의위원회 위원과 전화통화 중 마을공동체 관련 서울시의 취재사주가 있어 탐사보도를 취재한다는 내용의 녹취록이 있음. 기자의 질문 내용을 살펴보면 이미 서울시에서 미리 답변을 제공 받은 듯한 느낌이 들고, 서울시 측의 취재 요청이 있었다고 보여짐. 기초실장이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취재 요청이 들어온 것과 기초실장이 모르는 범위 내(대변인 등)에서 취재 요청이 있을 수도 있었을텐데 모른다는 답변만 하는 것은 부적절함.
9. 서울형주민자치회에서 주민총회를 개최하고, 동단위 시민참여예산까지 결정했는데 최종적으로 예산이 삭감됨. 이는 행정에 일관성과 신뢰성이 없다고 보임. 2022년 시민숙의예산 편성 관련 합리적인 행정이 이루어지려면 시민참여예산의 시스템과 전개과정이 어떠한지 분석, 평가,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개선안을 만들고 공감대를 형성해야 할 것. 평가나 대안의 모색도 없이 예산을 단칼에 삭감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할 수 있음. 시민협력국 차원에서 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고할 것.
10. 자치구 지원 사업을 축소하거나 사업방향을 전환하기 전에 자치구와 소통하고, 그에 기반하여 진행해야하는데 서울시가 예산을 가지고 일거에 삭감해버리는 것은 폭력적이라는 의견이 많음. 시민이 주인이라는 것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고민이 필요한데, 이러한 고민 없이 사업을 축소하는 것은 맞지 않음. 향후 자치구 지원 사업의 추진방향을 전환하기 전에 자치구와 충분히 소통하고 추진하기 바람.
11. 시민들이 잘못 알고 있거나, 행정에 대해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함. 시민협력국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언론 보도를 통해 시민들이 사업 내용을 잘못 인식하지 않도록 해명자료 배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바람.

12. 행정직 공무원이 시장의 말 한마디에 옳고 그름이 바뀌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공무원으로서 맡은 자리에 책임을 져야함. 시의회는 서울시에 대한 감사, 지적 등을 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책임은 시장에게 있는 것이지 시민에게 있는 것이 아님.
13. 민간위탁 지침 변경 시 중요한 내용이 변경될 경우 민간위탁기관의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함. '21.10월에 변경된 민간위탁 지침의 경우 기존의 협약에 따라 사무를 수행하고 있는 위탁기관에 적용되는데, 개별 위탁내용에 중대한 변화를 발생시킬 수 밖에 없는 내용임. 이처럼 가이드라인에 중요한 변경이 있다면 그것이 왜 필요한지 설명하고, 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개정하는 것이 필요함.
14. 평가담당관 마을공동체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수탁단체 명이 잘못 표기된 곳이 있으니 시정바람.
15. 사단법인이 수탁을 받고 있는데, 사단법인이 행정사무를 수탁 받을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 평가해야 함, 상근 직원의 수로 평가하는 것은 너무 편협적임. 상근직 숫자가 아니라 이사진의 주요경력이나 관련 업무역량, 앞서 한 사업의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평가에 대해 신뢰할 수 있을 것임. 정책을 평가한다고 하면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완성도 있는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함.
16.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에서 추진한 교육사업, 연구용역 대부분이 수탁기관에서 직접 추진하지 않고 위탁 형태로 사업을 추진, 민간위탁금으로 민간보조사업 성격의 공모사업을 추진함. 이는 예산편성 지침에 위반됨. 또한, 특정연도에 해외연수 비용과 횡수가 과다하고, 홍보예산 발주 내역 확인 결과 수의계약 기준에 맞지 않게 계약을 체결한바 있음. 법인카드 및 교통카드 발급 관련해서도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됨. 관련부서에서는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가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17. 지금까지 사업평가는 요식행위로 보여짐. 위탁운영이 법과 규칙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사업 평가 등을 통해 개선될 수 있도록 바로 잡아주기 바람.

18.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재위탁 협약을 앞두고 있는데, 센터의 가장 큰 문제는 인력운용 및 인건비 비중이 과다하다는 문제가 있음. 시민의 세금을 쓰는 민간위탁기관인 만큼 신규 위탁기관은 승인된 정원 내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신중히 관리감독하기 바람.
19.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자치구 마을자치센터 간에 강사 품앗이가 이루어진 정황이 있음. 강사료를 받는 것에 규정상 제한이 없다하더라도, 센터 기능 중에 교육 기능이 있으므로 강사료를 받는 것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임. 지금까지 해왔던 위탁 운영에 대해 다시 평가하고,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기 바람.
20. 서울형 주민자치회 활동 사업의 경우 사업비는 하나도 집행되지 않았는데, 인건비는 100% 집행됨. 인건비가 과다한 구조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된 것임. 민간위탁이 과연 필요한 사업인지 냉정한 판단과 위탁 운영의 구조(인건비와 사업비간 불균형)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함.
21. 300회 임시회에 제출한 민간위탁기관 운영기간은 3년으로 보고하고 실제 모집 공고는 1년 1개월로 단축했음에도 의회의 재동의를 받지 않음. 민간위탁 주요 내용인 운영기간을 축소하는 것에 대해 경미하다고 판단한 것은 집행부의 자의적인 판단임. 민간위탁 업무추진 시 주요사항이 변경될 경우 시의회에 사전 동의를 받고 업무를 추진하기 바람.
22. 시민협력국에서는 10년간 민간위탁기관 정정공고가 없었으나 시장이 바뀌니 서울마을종합센터 민간위탁기관 사업의 정정공고가 발생함. 특정단체를 겨냥한 모집공고를 정정한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향후 정정공고 추진 시 신중을 기하기 바람.
23. 서울혁신센터 센터장 취임후 민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고 올해 직원들이 서울혁신파크에서 코로나상황에서 술파티를 벌이는 등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음. 센터장이 각별히 신경 써주기 바람.
24. 서울혁신센터장은 1급, 실장은 2급으로 초과근무수당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2급 실장에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불법임. 별도의 규정을 만들어서 적용하는 것은 자의적인 기준이며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25. 서울혁신센터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휴가가 건강휴가, 여름휴가, 보상휴가, 개인휴가, 활력휴가 등 다른 민간위탁기관에 없는 휴가들이 있음. 자체적인 기준을 만들어 과도한 휴가를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26. 서울혁신파크 입주단체의 탈락사유를 공개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음. 2021년 입주단체 선정에 따른 서류 및 대면 심사 시 심사위원으로 서울 혁신센터 내부 직원이 40%이상 차지하고 있어 공정성 확보가 미흡한데 이에 대해 개선해 주기 바람.

27. 새로운 서울시장이 당선되고 서울혁신파크 입주단체의 입주 기간이 3년 이내로 갑자기 변경되어 기존 입주단체들은 갈 곳이 없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런 부분을 감안해 추진하시기 바람.
28. ‘서울 바로 세우기’에서 밝힌 10년간 1조라는 금액은 서울시 전체 민간위탁, 보조사업 중 많은 비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ATM, 1조를 강조해서 협치와 시민단체 참여를 부정하였으며 정확한 근거가 없는 자의적 추계에 의해 문제를 호도함.
29. ‘서울 바로 세우기’에서 밝힌 검증되지 않은 기관에 공공시설들을 위탁하였다고 언급한 것은 시민협력국 소관 민간위탁센터 총 9개 시설 중 일부인 3개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해 전체 민간위탁사업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침소봉대함. 정당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 위탁을 맡겨놓고 수탁법인 자체를 검증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시민 단체 활동 및 성과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하기 바람.
30. ‘서울 바로 세우기’에서 밝힌 과도한 예산집행에 비해 성과평가는 매우 미흡함의 근거자료인 종합성과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2020년 청년허브 83.97점, 청년활동지원센터 80.74점으로 모두 양호한 점수를 획득한 것으로 미흡하다고 평가하는 것은 잘못이며, 정산보고서도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사례는 민간위탁기관의 1~2개의 잘못으로 전체가 문제있다고 호도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함.

□ 인권담당관 : 8건

1. 실질적 개선을 통해 인권무료 법률상담 변호사가 제대로 변호를 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해당 내용이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지 않도록 개선 바람.
2. 인권정책회의는 조례상 매년 개최해야 하는데 4년 동안 예산편성만 하고 한 번도 개최된 적이 없음. 이는 조례 위반이며, 매번 예산을 불용시키는 것은 예산편성 원칙에도 위배됨. 향후 철저히 준비하여 개최하기 바람.
3. 인권정책보고서 제작방식 다양화 등 인권정책 홍보방안 검토 바람.
4. 인권무료법률상담 사후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음. 변호사에 대한 관리뿐 아니라 상담을 받는 사람의 신변보호를 철저히 하기바람.
5. 공공기관 인권경영 지도점검(‘21.6월 기준) 결과를 보면 1점 만점에 평균 0.27점으로 매우 낮으며 교육실적은 대부분이 0점으로 나타남. 이에, 국가인권위원회 ’

인권경영 매뉴얼' 및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기준 등에 부합하고, 서울특별시가 인권경영을 선도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지도점검에 적극적인 노력 바람.

6. 인권 지표 향상을 위한 인권프로그램을 재정비하여 의회에 보고해주기 바람.
7. 인권침해 사건에서 억울한 사례가 없도록 원인분석하여 제도를 개선하기 바람.
8. 인권침해는 소수자인 동시에 편견의 대상으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합의를 위한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며, 역할을 수행하는 직원들의 자부심이 과도해서 독소로 빠질 우려가 있으니 방지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 인재개발원 : 2건

1. 인재개발원은 격무부서가 아님에도 초과근무시간이 매우 높음. 인재개발원 교육 대부분이 온라인으로 이뤄지고 있고 사무실의 1/3이 재택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이렇게 초과근무가 많은 것은 이해가 되지 않음. 근무량조절 및 개선이 필요함.
2. 공무원들에 대한 일반적 인식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시장은 옳지 못하다 생각 하며, 앞으로 감시를 통해 시정을 요청할 것임. 또한 개방직제에 대한 채용방법에 대해 행정국이 아닌 인재개발원에서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어 법률적 검토와 자체적인 연구개발도 촉구함.

□ 감사위원회 : 10건

1. 감사의 목적이 사업의 비리나 비위를 제거하고, 비효율적인 행정을 개선하는 것에 목적이 있음. 이에 2015년 서울시는 감사관에서 감사위원회로 개편하였음.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은 감사기구의 장을 개방형 임기제로 임명하도록 규정함. 법률이 자체감사기구의 장을 개방형 임기제로 임용하도록 규정한 이유는 자치단체장으로부터 독립적인 업무수행을 하기 위한 취지임. 그러나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장이 서울시 내부인사라는 점, 감사위원장이 감사경력이 적다는 점 등으로 인해 전문성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고, 최근 감사위원회의 감사는 타겟팅 감사, 시민단체감사, 前 시장사업 감사 등으로 '시장으로부터의 독립성'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음. 감사위원회는 정치적 도구로 전락하는 것을 멈추고, 시민을 위한 사업이 효율성과 효과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점검하는 객관적인 역할에 충실하시기 바람.

2. 오세훈 시장의 핵심 사업인 서울런은 사교육업체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최소 보장액'을 규정했고, 서울런의 홍보비 편법집행과 서울런 멘토단을 성범죄 경력 조회조차도 하지 않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으니 감사해주기 바람.
3.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받은 후 사업이 취소되거나, 보류된 사업이나 변경계획을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는 건에 20건에 달하고 있음.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를 위반하는 사항이나, 이에 대한 관리 및 제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감사위원회는 이러한 사업에 대해 방조 또는 방임하고 있어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통해 경종을 울리기 바람.
4. 전대입구 1번 출구와 같이 서울시 지하철역사 옆 신축건물과 통로를 연결할 때 연결통로 협약서를 맺는데, 협약서 이행이 잘 되고 있는지 감사가 필요함.
5. 서울시 민간위탁은 법인과 위탁계약을 맺고 사무를 위임과 위탁함에도 청년활동 지원센터와 같이 센터장에게 직원 채용 및 관리를 맡기는 것은 잘못된 행위로 이런 사례가 있는지 감사해주기 바람.
6. 오세훈 시장 언론브리핑(2021.09.13.)이 정당성을 가지려면 단체들에게 문제가 있었음에도 서울시 공무원들이 제때 감사하지 못한 점에 대해 시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할 것임.
7. 감사위원장의 공무국외훈련 이후 배치 부서가 업무와 적합성이 없는 것으로 보임. 공무국외훈련 결과보고서도 부실한 것으로 보이는데 감사를 하기 이전에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음.
8. 감사위원회의 재심의 인용률(이용+일부인용)이 27.2%에 달함. 감사결과가 부당 또는 위법할 경우에 재심의를 신청하도록 하고 있는데, 인용률 또는 일부인용률이 높다는 것은 감사결과가 부당하거나, 위법한 경우로 감사결과가 부적정했다는 것을 반증함. 또한 법령은 강행규정으로 재심의신청 접수 후 6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최근 3년간 재심의 처리기한 초과는 31.6%로 법률을 준수하여 감사에 임하여 주기 바람.
9. 감사위원회는 서울시 청렴도 향상을 위해 청백-e시스템을 도입하였지만, 당초 도입취지와는 달리 경보발생 미처리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음. 감사위원장은 시스템 도입자체에만 너무 안심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반성할 필요가 있으며, 각 실국별 경보발생 소명내역의 적정여부를 꼼꼼히 살펴 직무관련성이 없는 사항을 제대로 감독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10. 공익감사단 참여가 매우 저조하며 이에대한 활용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 11건

1. 시민인지도 조사의 대상을 서울시 자체 온라인 패널들로 하는 것은 하나하나한 인지도 조사가 아니었는지?
2.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시민들의 제보 또는 의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홍보가 중요함. 위원회 홍보 관련 예산 확보가 필요해보이며 시정모니터 단과 유사한 업무가 있다면 연계하여 업무 수행하는 것도 고려해주시기 바람.
3. 홍보물 리플렛과 지하철 홍보가 인지도 기여에 저조하게 나왔던 것 같은데 매년 홍보책자를 제작하고 있음. 조사하는 기관이나 방법에 따라서 위원회를 알게 된 계기가 다르게 나올 수도 있는데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 방법과 인지도 측정 방법을 재검토하기 바람.
4. 수의계약 시 한 업체에서 2개의 견적을 받아 처리해 왔는데, 앞으로 공개견적시스템을 활용하여 계약을 진행해 주기 바람.
5.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핵심사무는 시민의 고충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주민감사·시민감사 및 위원회 활동 중 포착된 위법사항에 대한 감사 기능임. 그러나 주민감사 및 시민감사 처리 건수가 적다고 보여 지는데 옴부즈만위원회가 민원 업무에 밀려 주요 기능인 감사 업무를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 감사 업무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6. 감사 결과 처분사항이 솜방망이 처분으로 너무 약하다고 보여 지는데 봐주기식 처분이 되지 않게 시민의 입장에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기 바람.
7. 최근 몇 년간 예산편성시 사무관리비의 종이류 구매비용이 편성액보다 몇배 이상 많았는데, 연말에 사무관리비 집행 잔액으로 사무종이를 구매하고 이를 다른 곳에 사용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됨. 제대로 예산편성하고 올바르게 집행하기 바람.
8.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회는 팀장들의 초과근무시간이 주무관들에 비해 많고, 다른 실국 대비 상대적으로 매우 높음. 업무량이 많은 것인지 관리감독이 안되는 것인지 철저히 관리 감독하기 바람.
9. 온라인 시민감사 청구시스템을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홍보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접근하기 쉽도록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10. 시민감사옴부즈만들의 신분 보장을 위해 제도 정비를 적극 시행하기 바람.
11. 위원회 조사·감시 결과를 각 해당 기관에 통보할 때, 의회에도 자료 공유 검토해 주기 바람.

□ 자치경찰위원회 : 5건

1. 자치경찰 유관 사무 기관 확대 및 협력 사업 발굴 요청(청소년 육성회 등)
2.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의 독립적인 홈페이지가 필요. 다른 광역단체들은 만들어 운영하고 있으면서 서울시는 아직 실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매우 뒤처지는 것으로 보임. 수도 서울답게 선진적으로 운영해 주기바람.
3. 파견경찰 수당·복지 지급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4. 경찰청·경찰서에서 하고 있는 교통시설에 대한 심의제도에 관해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5. 확성기 등을 이용하여 과도한 소음을 내는 홍보차량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① 기획조정실 : 64건

1. 금년 3월에 실시한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보고에 우수하다고 평가를 받은 사업이 5개월 후에 실시한 평가담당관 평가에서는 사업추진 방식, 수탁 기관의 선정과정 등으로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는 것은 서울시 차원의 평가 전체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림.
2. 평가 종류의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인 평가 기조에 일관성이 유지하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람.
3.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사업 수요, 그간의 실적, 효과성 등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예산이 과학적으로 편성되어야 하나 특정사업에 대한 시장의 편견이나 선입견이 사업 편성 여부와 규모를 결정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
4.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해 요구한 사항 그대로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료가 누락되거나 부실 제출 됨. 시에서 요구내용을 임의로 축소하거나 취지를 왜곡해 부실한 자료를 제출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기 바람.
5. 공무원 시정논문 사업에 수상 논문에 사후관리가 미흡하므로 관리 계획을 수립, 추진해 개선하길 바람.
6. 지난 10년간 민간위탁 사업평가 과정을 운영하며 위탁사업 선정에 엄중을 가했는데, 지금 와서 유독 특정 분야만 사업선정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임.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기 바람.
7. 서울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직원 내부만족도가 매년 낮은 수준임. 개선계획이 반영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전반적 경영문화를 개선하기 바람.

8. 서울시 산하 투자출연기관의 사회적 책임평가 강화에 고졸생 취업비율 상승 및 장애인 의무고용률 달성 제시되어 있으나, 반영 안됨. 개선 바람.
9. 서울시 '22년 예산편성운영기준 수립 내용에 행안부 『22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에 기재된 주민참여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 관련 예산 편성이 반영되지 않음. 개선 바람
10. 서울시 공사의 이사회 참석률이 낮음. 특히 교통공사, 농수산식품공사 참석률이 낮아,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11.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의 직원 내부만족도 조사 뿐 아니라 기관에서 계약 맺은 위탁업체(콜센터)의 만족도 조사도 실시하고 결과보고 바람.
12. 시민들의 권익·민원에 대한 행정소송 증가는 서울시정에 대한 불만의 반증임. 전반적인 행정기조와 행정소송 원인에 대해 검토 및 대책 필요
13. 서울시 바로세우기 관련 1조 예산 근거자료에 명시된 사업들이 모두 예산 삭감과 사업중단 대상이 되는지 여부 및 사업 중단 등에 따른 대책 필요
14. 투자출연기관의 조직문화 및 비위 관련하여 비위행위자의 징계강화 추진 사항들에 대한 임원 인사규정 근거 미비사항 검토 및 대책 필요
15. 2050 탄소중립(기후환경) 관련 예산 편성의 사전협조가 명확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음. 이에 대한 절차 검토 및 대책 필요
16. 'ESG'정책(기후예산제) 확대를 위한 서울시 정책 검토 및 적용방안 필요
17. 확대재정을 포함한 위드코로나 대응 예산편성 검토 및 방안 필요
18.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절차 거친 후 수탁기관 고용승계 비율 조정을 25%를 원래인 80%까지 고용승계하는 방향으로 재검토 필요

19. 마을변호사, 마을법무사 상담신청 시민들에게 어려운 법률용어를 알기 쉽게 설명하여 상담해 주기를 바람.
20. 투자출연기관 임원인사 시 비상임이사도 임원규정에 포함시키도록 규정 변경된 것과 관련, 노동이사직에도 해당 규정 적용이 적절한지 재검토 필요
21. 투자출연기관 평가지 노동이사직 배점 0.5점에서 추가 상향 조정 검토 및 기관평가 강화 필요
22. 행정안전부(지방공기업평가원)의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대한 공정성과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있고, 이에 대한 개선 필요
23. 지방공기업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경영평가를 토대로 평가지급률과 평가액을 결정하는 '서울시 핵심가치평가'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4. 지역상생교류사업 대부분이 목표에 비해 실적이 부진함. 개선 바람.
25. 서울시와 지방 간 실질적인 지역상생 확대를 위해 지역상생 교류사업 정책을 근본적으로 개편해 주기 바람.
26. 기획조정실 직접 수행 외에 다른 실국의 지역상생교류사업도 기초실의 실적으로 하고 있음. 사업의 명확한 목적과 계획수립을 통해 연관성이 부족한 타 실국의 사업은 배제해 주시기 바람.
27. 소청심사의 지연을 방지하고, 적절한 징계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
28. 소청심사위원회의 인용률이 높으며, 소청 판단 기준을 지나친 주관적 판단보다 명확하게 객관화시킬 필요성이 있음.
29. 투자심사위원회의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분야별로 복수의 인력을 위촉하고 있으나 일부 분야의 경우 특정 전문가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침을 볼 수 있음.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

30. 공문을 통한 재정균형발전관의 투자심사 사업 조사는 투자심사위원회가 추진에 앞서 실제 이행 내용에 대해 확인하지 않고 있으므로 운영 방식을 개선하기 바람.
31. 사업부서에서 투자심사위원회의 조건부추진 의견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이행한 것으로 주장하는 경우 검증할 방법이 없음. 실질적인 조사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32. 시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체해서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실적에 대한 홍보현황을 보면 여러개의 리플릿이나 홍보방법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줄었음. 개선이 필요함.
33.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의 단서 조항은 민간위탁기관 노동자들을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 관리지침을 수정한 것으로 보임. 개선 필요
34. 시민단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센 만큼 민간위탁에 대한 문제를 유발한 생태계를 만드는 데 일조했다는 책임 의식을 가지고 기획조정실에서 합리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바람.
35. 시장에 따라 민간위탁 종합평가, 감사의 내용이 변경되지 않도록 공정하게 추진하기 바람.
36. 최근 10년간 민간위탁 현황, 중간지원조직 운영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없음. 상세히 제출하길 바람.
37. 서울시 바로세우기 관련 분야를 선정하게 된 경위, 예산삭감의 근거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음. 정치적인 의도로 사람을 줄이거나 사무의 일부를 축소/폐지를 결정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38. 납세자 보호관 업무 중 세무상담의 추진실적에 비해 고충민원 추진실적이 저조함. 실무인력, 조직체계, 예산 등을 「서울특별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조례」의 취지에 맞게 운영할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바람.

39. 서울시 인구변화 대응체계 및 중장기 전략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입안을 추진하는 경우, 관련 통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40. 투자 출연기관들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올해 들어 후퇴하고 있음, 경영 평가 항목에서 해당 항목에 대한 비율 확대 등 개선방안 고민 바람.
41. 민간위탁 관련 잘못된 부분은 개선을 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뭉뚱그려서 대뭇이라고 표현하면서 비상식적인 수준으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올바른 방식이 아니라고 생각함.
42. 서울시는 그 전에도 민간위탁의 특정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알고 민간위탁 개선대책을 추진해 왔음. 지금처럼 민간위탁의 특정 분야를 특정해서 전체가 잘못된 것처럼 하진 않았음. 정치적인 이용 지양 요구함.
43. 의무고용승계는 중요한 가치임. 대부분의 수탁기관들은 법인이 바뀌어도 80%이상을 의무고용을 했었음. 그러나 이런 지침이 잘못된 것처럼 문제가 일어난다고 한 것은 침소봉대임.
44. 민간위탁의 개수와 업무가 는 만큼 민간위탁팀의 인력을 보충해 주기를 바람.
45. 단계적 일상회복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중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방역과 특히, 병상의 확보가 중요함.
46. 중증 병상 확보를 위해 공공병원 시립병원의 중증병상 확보된 곳이 한 곳 밖에 없음, 시립병원들의 역할에 대한 변화, 발전, 의료의 질에 대해서도 발전된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음.
47. 특별회계 계정별 지방채 규모가 상당히 크고, 여전히 타회계 전입금이 크며, 많게는 15개 실국에서 하나의 특별회계를 관리하고 있음, 관리 측면에 대한 개선 필요.

48.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 직장 내 괴롭힘 해결을 촉구하길 바람. 청년, 노동 정책이 후퇴하고 있음.
49. 식품진흥기금 관련하여 목적이 그 외에 식중독 예방, 음식문화 개선, 나트륨 섭취 등으로 일반회계 사업과 다른 점이 없어 보임, 일반회계로 진행 가능한 사업은 일반회계로 진행해 주기 바람.
50. 사회복지기금에서도 일반회계에서 진행되는 사업이 해당 기금의 목적에 나와 있는데 검토 바람.
51. 서울시 기금의 세입구조를 봤을 때 전국평균과 비교했을 때 타회계전입금 비율이 훨씬 높고, 타 회계 의존도가 높음. 개선 필요
52. 집행부는 시의회와 소통이 없으면서도 예산편성 등과 관련하여 소통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납득이 될 만한 노력이 필요해 보임
53. 집행부는 요구자료 제출 시 체계적으로 제출하여 제출여부 등의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바람
54. 농수산식품공사 등 현재 공석인 투자출연기관들은 임기를 만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공석 상태인데, 기초실의 역할이 부족해 보임, 행정의 공백이 없도록 개선 바람.
55.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타 지자체 관련 업무에 대한 판넬을 만들면서까지 국정감사를 받는 것은 부적절해 보임.
56. 또한 국감을 대비해서 요구자료 목록에도 없었던 내용을 판넬로까지 만들었다는 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훼손할 수 있음. 유감임.
57. 노동문제, 사회적경제문제, 마을공동체는 기존에 사업을 운영해 오다가 시장이 바뀌자마자 갑자기 죄인 취급을 당하고 있음, 지양해 주기 바람.

58. 또한, 열심히 뛰었던 사람들이 공로를 인정받지 못할지언정 고발 조치 당하였음. 지난 5년여 간 같이 일을 했던 공무원들도 책임감을 느껴야 함.
59. 학술용역관리 시스템 관련 작년 행감에는 한건도 지적받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로 한 것이 없는 것 같음.
60. 2020년 행감 지적사항으로 중복, 공개되지 않는 부분, 심의과정에서의 문제 총 3가지 문제였는데 개선된 것이 없음.
61. 금년 추경에서 신보에 사후 안심자금 출연 관련, 출연금을 줄 때는 상임위에 의결을 받기로 했는데 그런데 사전 작업이 없이 진행됨, 그 과정이 급박하지 않았는데 상의도 없었음. 시정 바람.
62. 금번 개방형 대변인 채용 관련, 통상적인 규칙 개정을 한 이후로 인사위원여는 등의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채용됨, 시정 바람.
63. 마을번호사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충분한 상담시간의 확보 등 합리적인 운영기준을 마련하여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기 바람.
64. 1)서울시의 일방적이고 행정편의적인 민간위탁 관리지침 개악 , 2)종합성과평가와 특정감사 중복 시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특정감사를 다음해로 유예, 고용승계 80% 이상 보장에 대해 교묘하게 단서조항을 적시하여, 노동자 보호 저해 조항 삭제한다는 행정사무감사 제보사항이 있었음. 확인 바람.

② 경제정책실(시립과학관, 농업기술센터, 기술교육원 포함) : 84건

1. 2022년 신규 캠퍼스 조성 사업으로 강남북 균형 발전은 강조했다. 동북권 캠퍼스 조성 계획이 필요해보임.
2. 서울창업허브가 조성중인 마포의 경우 창업기업의 입주지원 공간으로 운영 중인 상황으로 입주지원공간의 공급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공간, 장소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3. 서울시 경제정책실 모든 일자리 목표가 취업 창업인데, 청년취업사관학교만이 취업과 창업이 전부인 것처럼 진행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함. 구체적인 사업 목표 설정과 설명이 필요함.
4. 서울무역전시장(SETEC) 조성 예정인 강남캠퍼스의 경우 종합취업사관 학교 조성을 하는데 정확한 예산 수치가 나오는 점이 투자심사 등의 사전 절차 회피 목적을 위한 예산 조정인지 의구심이 듦.
5. 강남캠퍼스(세택)의 경우, 가설건축물로 안전등급이 낮고 용도변경이 불가능하다는 강남구청의 의견이 있음. 조성 진행에 있어 변경 검토 필요
6. 강남캠퍼스(세택)은 3년마다 준치기간을 연장하는 임시용 가설건축물에 39억원의 조성비용을 투입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의구심이 듦. 현황 파악하는 등 신중한 접근 필요
7. 청년취업사관학교 사업 대상 장소의 약 60%가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용도 변경이 어려워 보임. 용도 변경을 하지 않고 진행을 하는 것은 불법건축물이니, 보류하고 다른 곳으로 변경하길 바람.
8. 지역활성화협의회가 형식상 구성이 되어있고 실질적으로 운영을 안함. 시정바람.

9. 지역활성화협의회를 구성하는 과정이나 활동사항에 대해 전반적인 개선 방안이 필요함.
10. 자치단체 보조금을 사용하기가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큼. 개선방안 필요
11. 청년직무캠프 최초 모집인원 350명 가운데 50명이 직무교육 도중 이탈함. 교육위탁기관을 서비스 질 개선 및 부실관리 문제 시정 바람.
12. 청년직무캠프와 뉴딜일자리 모두 서울시 운영 일자리사업인데, 참여자들이 받는 급여 및 수당 차이가 있어 형평성 문제가 있음. 개선 필요.
13. 서울형 강소기업을 선정하고 근무환경 개선금을 주는 이유는 청년고용을 높이기 위함이나, 퇴사율이 높음. 문제점 찾아 개선 바람.
14. 뷰티복합문화공간 조성·운영에 19억 책정되었으나, DDP 공실률이 87%로 공간이 실효성 있게 쓰이고 있지 못함. 실효성 있는 사업을 통해 주변이 활성화되도록 노력 바람
15. 일자리카페 장점은 높은 접근성이나, 청년 밀집 지역임에도 카페를 없애 버린 경우가 있음. 자치구별 형평성 있는 일자리카페 운영 필요함.
16. 뷰티도시 서울 추진사업 관련 학술용역 통해 화장품과 헬스케어 산업연계를 추진하려 하나, 화장품이 약리적 효과 있다고 과장될 수 있어 시민건강에 영향 끼칠 수 있으므로 유념하여 운영할 것.
17. 서울시에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다양한 지정절차가 있고 13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2000년 대비 감소했다는 것은 늘어난 벤처기업들의 수요에 맞는 지원 관련된 홍보 또는 지원제도에 걸맞은 역할들을 서울시가 부족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서울시의 역할 재검토 및 대책 필요
18. 외국인투자 유치시 상위 5개국과 하위 5개국의 투자액 격차 감소를 위한 방안 필요

19. 외국인 투자 유치시 지속적 투자환경 조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한 방안 필요
20. 외국인 투자유치 심의위원들의 다변화 검토 필요
21. 2020년 8월 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상암동 랜드마크 부지에 2,000세대 주택 공급 발표가 나는 등 주택정책의 절박한 시점에서 주택 공급의 유형과 최종적 공급시기의 모호함은 문제임. 서울시민에 대한 명확한 입장 및 구체적 내용을 알릴 필요가 있음.
22. 시-구 상향적.협력적 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한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개선 방안 및 대책 필요
23.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 사업 현황의 지구지정에 대한 환류체계 검토 및 개선 방안 필요
24. 산지로부터 농산물 수집업무를 담당하는 도매시장법인 수탁독점에 따른 문제 개선 방안 필요 (공익성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출하자 단체에서 재지정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축소/도매법인이나 경매사 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역할을 부여 등)
25. 농수산물시장 독점은 1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 그다음에 3개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75% 이상일 경우, 공정거래법상 독점사업으로 봄.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공정 거래법상 위반행위가 되는지, 또 특정도매법인의 품목제한을 해소해서 과연 경쟁을 촉진시킬 수 있는지 검토 필요
26. 공영도매시장 지정조건에 출하자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방안 마련 필요
27. 서울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비롯 민간위탁기관 인권 및 근로환경 개선 유도, 관리방안 필요

28. 로봇과학관 사업은 설계용역 계약지연과 실시설계기간 증가로 수차례 계획변경을 통해 사업기간을 연장하고 과도하게 공사비가 증액됨. 적기 준공과 과도한 재정투자가 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해서 차질 없이 개관하기 바람
29. 마곡광장 재산이관 관련 미등기 상태이고,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 변경하려는 경우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치도록 한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조속히 해결바람.
30. 민생경제대책 수립 실무 회의 개최가 전무함. 민생경제대책반의 구성 운영과 계획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31. 여성기업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해 시행하도록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준수하고 있지 않음. 종합계획 수립이 필요함.
32. 여성기업 관련 조례에 '여성기업지원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구성 되어있지 않음. 시정 바람.
33. 경제정책실에서 도시농업과 34개 항목이 예산이 삭감됨. 도시농업 사업 항목 또한 도시와 어울리지 않은 항목이 많음. 도시농업을 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듦. 도시농업이 지향하는 점에 맞는 사업 탄생과 예산 관련 문제점도 적극적으로 시정해줘야 함.
34. 경제정책실은 친기업적 정책과 친노동적 정책을 균형잡힌 시각에서 추진 하길 요청함.
35. 양재R&D혁신지구 종합계획을 수립한 시점('15.4.22.)으로부터 여러 해가 지났음에도 추진 사업의 진도율이 저조함.

36. 양재 화물터미널 부지의 개발사업의 경우, R&D 육성 사업 촉진이라는 취지에 걸맞은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경제정책실에서 협업할 필요가 있음.
37. 2017년 AI양재허브를 두는 등 서울시 도심형 R&D 육성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한 개의 빅테크 기업에 비하면 서울시 매출 실적은 저조한 편임. 경제정책실의 적극적 대응을 요청함.
38. 뷰티산업을 활성화하여 서울의 대표브랜드를 만든다는 발상은 좋으나, 시장의 역점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경쟁력 없는 분야를 연계시키지 않도록 산업 고유 특성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길 요청함.
39. 서울 투자청 설립보다 기존에 운영 중인 서울산업진흥원의 인베스트서울 센터를 적극 활용·확대시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고려하길 요청함.
40. 뷰티산업은 신규예산으로 편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은 인지하지 못했고 업무보고 자료에도 없었음. 시의회를 존중해 주기 바람.
41. 영상산업 지원정책을 60억 규모로 하고 있으나 영상산업 정책의 목표가 불분명함. 문화다양성에 대한 지원이 필요.
42. 작년 행감 지적사항인 시립과학관 전시물 설치 건수에 대한 개선 요청에 대해 여전히 이행되지 않고 있음.
43. 메타버스라는 것은 여러 군데에서 이행, 확대되고 있는데 보편적인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됨, 여러사항 고려하여 시립관 업무 추진 바람.
44. 직업 훈련이 취업까지 연계가 되어야 하나 시 경제정책에 사각지대가 존재함. 서울시 인구분포를 보면 중장년 비율이 높는데 일자리 정책은 갓수만 봐도 상대적으로 부족한 느낌이 있음. 적극적으로 중장년 일자리에 대한 정책을 추진하길 바람.

45. 디지털 금융산업 아시아 금융의 중심 금융허브 역할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 상대적으로 세금이 무겁지 않은 환경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정부와 같이 호흡하면서 제도를 개선하기 바람.
46. 청년취업사관학교 관련 가설건축물은 철근 콘크리트가 아니어야 하며 준치기간이 3년이 넘지 않아야 하는 것이 기준이므로 SETEC은 불법 건축물임. 용도변경을 할 때는 변경하는 건물 용도에 맞아야 함. 용도 변경 후 사업 추진 바람.
47. SETEC에 이행강제금을 추징하지 않은 이유가 서울시 행정심판의 결과에 따른다고 하였는데, 서울시 재산에 서울시가 행정심판을 해서 이행강제금을 추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의문이 듦. 합리적인 사업추진 바람.
48. 서울시 인쇄센터에 대해 민간위탁 부결 이후 과장이 방문도 하지 않음. 실장은 인쇄센터에서 일어난 갑질, 성희롱 등에 대한 사안을 단순히 불편한 일이라고만 함. 수탁법인 내 문제라고만 한다면 오세훈 시장이 말하는 서울시 바로세우기는 무엇인지 서울시 공무원으로서 되돌아보길 바람.
49. 인쇄센터 입주 건물은 인쇄조합의 건물이므로 계속 이해당사자인 직원들 간 마주치는데 이러면 또 다른 문제가 벌어질 수 있음. 예방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 필요
50. 뉴딜일자리 만족도가 대단히 높으나 문제는 서울시 출자출연기관들이 26곳이 있는데 이들 중에서 뉴딜일자리를 하고 있는 기관은 9개 밖에 안 됨. 늘리는 방안 검토 바람.
51. 뉴딜일자리 만족도 조사에서 보면 민간공모-자치구-시 직접 고용 순으로 만족도가 높음. 서울시 출자출연기관의 만족도가 낮으므로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52. 탄소중립정책, 기후변화 관련해서 시립과학관, 도시농업과, 농기센터만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예산이 많이 삭감된 곳이 도시농업과 농기센터임. 오세훈 시장의 사업에서도 기후정책부문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음. 2050 탄소중립 정책으로 가야 되는데 경제정책실에서 이와 관련된 사업을 내년부터 시작할 수 있어야 함. 서울은 없는 땅이라도 찾아서 도시농업이나 친환경 정책을 추진해야 함. 검토 바람.
53. 희망일자리, 안심일자리에 대해서 자치구를 통해서 실태조사를 필요.
54. 좋은 일자리, 안 좋은 일자리 파악 및 실태 조사를 통해 좋은 일자리는 확대하고, 안 좋은 일자리는 축소 필요
55. 가락시장 도매법인 현황들을 보면 실제로 대기업임. 법인들의 대표들을 보면 기업에서 파견돼서 온 사람인데 독점을 하고 있음. 또한 법인의 수익 대비 사회공헌 활동을 보면 초라한 수준임. 시정 바람.
56. 인쇄조합은 서울시 7천개 인쇄사업장 중에 1천개가 가입했을 정도로 가장 큰 조합임. 인쇄센터에 공직자 출신의 사무총장이 오면 그 분을 통해서 그동안 못했던 어려움을 풀어내려고 했을 것인데 사무총장은 그 역할을 못했음. 집행부의 관리 감독도 소홀했음.
57. ATM 발언 관련 요구자료에서 경실에 상황의 인지 여부를 요청했는데 해당 사항이 파악되지 않아 미제출한다고 나와 있음. 하지만 기획조정실은 ATM 발언과 관련하여 경실 추진사업인 도농상생직거래장터추진, 도농활성화추진, 반려식물보급 세 가지 사업이 부적절하다고 이야기했음. 해당 사항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은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했다는 정황임. 자료 제출에 대한 불성실한 태도를 시정하길 바람.

58. 도농상생직거래장터추진, 도농활성화추진, 반려식물보급과 같은 세 가지의 사업 등에서 예산 정비를 할 때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한 건지 의문임. 기초실이 예산 정비를 보냈을 때 경실은 의견이 없다고 했음. 도시농업은 삭감이 되고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의 예산이 늘었다는 경제정책실장의 대답은 부서 간 협의를 했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아님.
59. 인쇄센터 사업은 평가담당관을 통해서 평가나 감사를 바람.
60. 도시청년 지역상생 일자리 중도포기자가 많음. 지역 근무환경, 여건이 다르므로 청년들의 기대치에 부합하는 매뉴얼을 마련하기 바람.
61. 도시청년 지역상생 일자리 참여기업의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협약사항 위반 등은 고스란히 청년들에게 피해가 발생함. 사전 예방, 사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62. 남부기술교육원 외국인사업에 대한 예산이 대폭 삭감함에 따라 신뢰도 하락 문제와 인프라 활용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것으로 생각됨.
63. 중부기술교육원을 수탁운영중인 '한국생산성본부'가 연구를 수행함에 따라 컨설팅 과제를 수행하는 것은 자가진단에 지나지 않아 연구결과에 대한 객관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봄. 운영방식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바람.
64. 기술교육원 관련 한국생산성본부가 입찰에 참여해 운영을 맡을 확률이 높아지는 만큼 자가진단 후 통합운영을 맡는 비합리적인 행태가 지행될 우려가 보임. 기술교육원 혁신을 위한 진단과정부터 안일하게 추진한 서울시는 철저히 자성하길 바람.
65. 청년취업사관학교는 편법적인 요소를 불사하며 급하게 추진하려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고 봄.

66. 4개 기술교육원 모두 중도포기자 현황이 꽤 높음. 이 부분에 대해 문제점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기 바람.
67. 신 산업구조 개편에 따라 기술교육원이 제공하는 직업교육도 다양화가 필요함. 산업의 변화에 따른 교과목 및 커리큘럼을 개선할 것.
68. 기술교육원에서 양성하는 학생들이 단순 기능사 자격증을 넘어 산업기사 자격증과 같이 더 높은 자격증을 딸 수 있게끔 강좌 개설이 필요함.
69. 동부기술교육원 민간위탁금 집행률 저조에 대한 방안 마련 필요
70. 각 기술교육원별 예산집행률 제고 방안 마련 필요
71. 기술교육원 통합운영 제고 방안 마련 필요
72. 예산 전입금이 없다는 것은 기술교육을 수익사업으로 여기는 행태로 보임. 이에 대한 교육 질 제고 방안 등 마련 필요
73. 통합 운영을 위한 로드맵 마련 및 소프트랜딩을 위한 각종 방안 마련 필요
74. 서울시에 대한 예산 확대만 요청할 것이 아니라 교육원 자체적인 예산 전입금 등 자구책 병행 마련 필요
75. 현재 기술교육원의 운영 방식은 시대적 소명을 다 마친 것으로 평가함. 혁명적인 발상의 전환을 통해 기술교육원의 공적 서비스 제공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임. 특히,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방안을 모색해야 함.
76. 기술교육원 종사자들의 신분 및 고용안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설계 및 수립해야 함.

77. 기술교육원, 50+재단, 평생교육진흥원, 여성직업능력개발원 등 서울시의 교육과 관련하여 종합적·통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각 소관 부서에서 TF를 구성 및 운영하여 본질적인 개선 방안 도출 필요
78. 기술개발이 일어나고 직업 주기도 짧아지고 있으나 기술교육원은 이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향후 변화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 바람.
79. 기술창업학교라는 것이 새로운 기술을 반영하고 유용하다고 생각함. 향후 기술 5.0 시대도 오고 인간중심성 사회가 다가오고 있음. 대비 바람.
80. 기술교육원 교육과정을 수혜자 중심의 방향으로 바꾸어야 함. 시민들의 수요에 맞게 콘텐츠를 만들어 배포하고 비대면 시대에 들을 수 있는 원격 플랫폼도 만들어야 함.
81. 직업훈련을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 중장년층 특별한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접근성이 높아질 수 있게끔 고민을 해야 하고, 여러 직업 기술들을 위한 통합 플랫폼을 구축 필요
82. 기술교육원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에서 수탁법인에게 제안한 사항이 이행 되지 않을 시 다음 위탁심사 시 감점, 이행 시 가점하는 방안 필요
83. 서울시 뉴딜 특성화고 취업 지원관 해임 시 절차를 무시하였다는 행정 사무감사 제보사항이 있었음, 확인 후 조치 바람.
84. 서울시립과학관 일회용 입장권과 ATM기 전기운영은 탄소중립 차원에서 다회용 플라스틱 목걸이로 대체하여 쓰레기 배출량과 전기 사용량을 줄일 필요가 있음

③ 노동·공정·상생정책관(서울노동권익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조합지원센터 포함) : 26건

1. 주말에 제일 바쁜 라이더들에게 주말에 플랫폼 라이더 안전교육을 진행하는 건 잘못됨. 시정 바람.
2. 사회적 경제 관련 10년 전에는 착한기업, 착한 사업이라고 극찬하던 사업을 이제 와서 번복하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봄.
3. 사회적 경제 관련 구체적이고 확실한 비전과 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갖기를 당부함.
4.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의 콜센터 민간위탁 관련 고용안정 대책마련, 노동환경 개선 및 관리감독 실시, 직고용 과정 추진할 것.
5. 플랫폼 배달라이더 서울형 안심 상해보험 단체가입 관련 민간상해보험은 산재보험보다 보장성 떨어지므로, 산재보험 가입이 우선시 될수 있도록 사업운영의 방향성 제고를 요구함.
6. 오세훈 시장의 25분에 달하는 대국민 브리핑 관련, 노동·공정·상생정책관에서 서울시장에게 사회투자기금이 특정단체에 운용을 맡기면서 위탁금 40억 원 혈세가 낭비됐다는 업무보고 등이 의심이 되고 있음.
7. 생활임금은 최저생계비를 보전하는 차원에서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설계돼 있는 것임. 타 시도도 4~5%인상하였으나 서울시는 0.6%의 임금인상에 그침. 이에 대한 대책 필요
8. 플랫폼 노동자의 산재보험의 경우 민간보험, 산재보험 중 수혜자 중심으로 적절한 것이 무엇인지 재검토 필요
9. 서울사랑상품권을 구매하려 했으나 구매하지 못한 사람이 746명(29.8%)이고, 이 중에 판매량이 소진되어서 구매하지 못한 사람이 76%(567명)임. 서울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10. 2022년도 예산안을 보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예산이 올해보다 77.2% 감액으로 축소될 예정임. 서울사랑상품권을 이용하는 분들의 63.7%가 월평균 가구소득 500만원 이하의 서민층으로 서민층의 서울사랑상품권에 대한 정책 수요가 더 높은 것으로 보아, 예산 증액을 노력 바람.
11. 함께누리몰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미진함. 접근성과 노출성에 대한 대책 방안 마련 바람.
12. 애초에 함께누리몰은 쇼핑몰에 대한 기능을 고려하지 않고 만들어 놓은 것 같음. 바로 검색되는 부분, 눈에 확 들어오는 부분들이 매우 부족함. 편의성을 강화한 쇼핑몰이 되도록 보완이 필요함.
13.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서울시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생활임금 산정 현황, 인상 근거 등을 숙지할 필요가 있음.
 ※ 서울시 생활임금: 10,702원(2021), 10,776원(2022)
 서울시 교육청 생활임금: 11,010원(2021), 11,240원(2022)
14.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의 운영 취지에 부합하는 제도를 운영해야 함. 기존 최저임금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매해 생활임금을 산정할 필요가 있음.
15. 민간위탁사업 센터 방만 운영, 중복지원 방지의 문제로 예산 삭감을 했다면, 그 근거가 되는 자료를 적시에 제출 및 보고 필요.
16.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11월 19일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 내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등의 권한과 의무가 지방자치단체에 부과됨. 이에 노동권익센터와 같은 곳의 역할과 비중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감안, 내년도 예산 편성 시 반영하길 요청함

17. 산업안전지도관이 도입되면 민간 사업장에 까지 지도 권한을 받게 됨.
이에 따른 신속한 준비를 하기 바람.
18. 서울시 노동센터 예산 운영비, 사업비가 1억 3천으로 잡혀있는데 운영비로 직원들 급여를 내는데 이 정도 되는 돈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지 서울시가 서울시 기관에게 불법을 저지르는 예산을 주는 것인지, 상식선으로 예산을 배정하기 바람.
19. 금번 추경시 소상공인 정책자금지원 4無안심금융자금을 신용보증재단에서 지급하기로 했는데 우리 상임위에서는 이 출연금을 동의한 적이 없음.
출자출연기관에 출연금이 갈 때 기본적으로 상임위에 동의안을 보고해야 되는데 사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절차를 필히 지킬 것.
20. 해외에서 서울은 어떻게 사회적경제가 빨리 발전할 수 있냐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이런 사회적경제를 두고 ATM이라는 발언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함.
21. 서울의 사경 사업은 폐기가 되고 정부 매칭 사업만 진행한다는 이야기는 지금까지 쌓아왔던 10년을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는 일이므로 시정 바람.
22. 서울시 바로세우기 예산 관련해서 사회적 경제는 오세훈 시장이 시작하고 박원순 시장이 체계화 시킴. 1단계 생태계 조성 2단계 판로개척 3단계 일상으로 들어가는 사회적경제로 마을 속으로 녹아들게 함. 사회적경제는 25개 자치구가 함께 하는 사업임. 숙지 바람.

23. 풍물시장 관련해서 가설건축물에 이전을 한 이후 지난 10년 동안 500억 정도가 들어감. 오세훈 시장이 동대문 DDP를 이루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부지사용료를 내고 있는 유일한 시장임. 앞으로도 얼마나 더 들어갈지 모름. 그런데 사회적경제는 1,300억 들어갔다고 비판하면서 풍물시장에 대해서는 왜 아무런 말이 없는지 궁금함.
24. 내년에 사회적경제 예산이 얼마나 삭감이 되었는지 봤을 때, 풍물시장과 비교해 보면, 풍물시장은 예산 삭감도 이루어지지 않음. 풍물시장은 1년에 30억씩 갖고 감. 다른 시장은 1년에 1억 가져가기도 쉽지 않음. 박원순 시장은 오세훈 시장처럼 취임 하자마자 서울시 바로세우기를 내세우며 기자회견을 열어서 예산을 삭감하고 이리진 않음. 두 개의 사업을 비교했을 때 어떤 사업이 서울 시민들에게 호응을 받고 공감을 받았었는지 느껴야 함. 예산 배정에 대한 검토 바람.
25. 서울시 바로세우기를 말하면 본인이 했던 사업들에 대한 잘못 제기도 필요함. 지금 서울시는 의회와 코로나19를 같이 해결해야 하고 같이 고민해야 하는 시기임. 거기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야 함.
26. “플랫폼 배달라이더 서울형 안심상해보험”은 당초 계획과는 달리 민간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고 있음. 올해 연내 사업의 실현 가능 여부를 파악하여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4 남북협력추진단 : 16건

1.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을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것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기금 사용 용도에는 맞지 않음. 다른 방법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 필요.
2. 탈북자 지원 사업이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조례에 부합하지 않음.
3. 탈북자 지원 사업이 남북교류협력기금 사업으로 추진한 부분에서 검토과정이 합리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음. 이에 대한 예산 심사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
4. 평화통일 교육 관련, 청년리더 양성사업 참여자 수가 너무 적고 세부사업 프로그램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임, 또한 민간단체실무자 역량강화 사업은 집행률이 0%로 추진이 불가해 보이는데 대책이 필요해 보임.
5. 정부도 남북산림협력을 통한 한반도 온실가스 감축을 강조하고 서울수도 탄소저감 관련 예산을 대대적으로 편성한 만큼 남북협력추진단에서도 산림 협력 분야 예산을 적극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바람
6. 이산가족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 통계자료 제공, 사후관리, 공감 확산 문제 등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 바람
7.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너무 전문적이거나 어려운 설문 문항들에 대해 조정이 필요해 보이고 결과 위주 발표 보다는 정책에 반영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고민 바람
8. 녹둔도 이순신장군 유적은 발굴조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큐멘터리를 위한 아카이빙, 방송매체를 활용한 홍보 기획에 대해서도 고민 필요
9. 보건의료 협력 분야에서 대북제재 면제 등과 같이 외부와의 협조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서울시 역할 필요

10. 20년 실행력 강화 계획 수립 이후 자문회의 개최건수도 줄어들고 있으며 예산편성 및 집행도 없음, 의지가 부족해 보이는 사업추진에 대한 개선 필요
11. 3대분야 10대과제에서 4대 분야 15대과제로 개편하는 과정에서 위원회 구성안을 실행하지 않은 점과 담당 실국 본부들이 한 번도 남북 사업에 대해 계획수립조차 생각하지 않은 점은 문제가 있음. 남북협력추진단의 구체적인 사업 계획과 실행이 필요함.
12. 사업에는 높은 참여율을 보이는 자치구가 실태조사 홍보에는 낮은 비율을 보임.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이 필요함.
13. 자치구 홍보 현수막 수요조사 결과를 보면 25개 자치구 중 용산구 금천구 등 5개 자치구만 참가함. 적극적인 홍보활동 지원이 필요함.
14. 남북관계가 어려운 때 일수록 유연하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야 해야 더 나은 남북관계를 만드는 길이라고 생각함. 제출자료에서 그에 대한 의지가 보이지 않음. (정원 대비 현원, 예산 삭감 등)
15. 학창시절에 통화 평일 교육을 많이 받았는데 시대가 지나면서 단기간에 통일이 어렵다는 공감감이 쌓이면서 요즘에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으로 공감을 표하는 것 같음. 그러나 자치구 평화통일 교육 등의 사업을 보니 사람들이 느끼는 평화체제 구축이란 좀 다른 방향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듦. 현시대에 맞는 사업을 하기 바람.
16. 남북 관계는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하고 균형적인 시각이 필요함. 북한의 상황, 미국의 외교 등 시민들에게 알려 줬으면 좋겠음.

5 1인가구 특별대책추진단 : 6건

1. 안심마을 보안관 운영방식 관련 보안관 채용 관련 예산을 사무관리비에서 전용하여 편성하였는데, 사전에 제반사항 고려하여 적절한 예산 편성을 요함.
2. 안심마을보안관 관련 국민신문고, 직소민원 등이 여성 1인가구만을 특정한 안전정책이라는 내용으로 제기되고 있으므로 사업설계와 추진방향에 대해 다각도의 고민이 필요해 보임.
3. 모든 1인가구에 대한 지원들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봄. 타겟팅을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의문이 드는 것은 안심마을보안관 운영 사업은 그 전에는 여성안심보안관 사업이었고 디지털 성범죄 등이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이를 막기 위한 것이었음. 이런 정책들이 1인가구 정책으로 바뀌면서 사업의 효과성 측면에서는 고민해볼 필요가 있음.
4. 1인가구 병원 동행 서비스는 원래 장애인이나 노인을 중심으로 시행 하다 1인가구 전체로 확대되었는데 젊은 분들이 이런 것을 이용할까 의문이 듦. 타겟팅을 해서 가는게 맞아 보이고 사업대상의 무분별한 확대에 의문을 제기함.
5. 지원센터 관련해서 시가 직접 진행하는 것과 구가 시행하는 것에 있어서 독립형과 통합형이 있음. 독립형을 하면 시는 건물을 임대하고 사람을 뽑는 일을 하고, 자치구는 별도로 인원을 선발함. 추진단은 컨트롤 타워 역할만 하고 나머지는 자치구가 하는 것이 맞다고 봄. 자치구에서 맡은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업무를 추진단에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등을 고민해서 정책의 수행체계를 튼튼하게 정비해 주기 바람.
6. 1인가구 전체가 취약계층처럼 보이는 시각을 주의해야 함. 빈곤, 외로움 등의 단어는 선입견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용어 사용에 주의 필요

⑥ 서울시립대학교 : 26건

1. 총장 선출 관련 교수 투표권은 91.1%로 현저히 높고, 직원과 학생 투표권은 10%에 불과함. 투표권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2. 1994년 제정 이후 한 번도 개정이 된 적이 없는 총장 선거에 대한 관련 규정을 개선 할 필요성이 있음.
3. 총장후보자 선출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해 총장 후보자추천위원회는 38명으로 구성되나 직원들은 포함되지 않음. 구성원들의 민주적 참여가 잘 보장 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
4. 코로나 이후 온라인 원격수업이 확산되고 있는데, 관리 규정이 만들어졌음에도 수업 질 관리가 잘 되고 있지 않음. 개선계획을 세우기 바람.
5. 여성 교원 채용률을 제고 위해 특정 과에서 여성만 지원할 수 있도록 공고를 냈는데,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다양한 방법 강구 바람.
6. 코로나19 이후 학점부여방식을 절대평가로 변경하면서 성적 변별력이 없어졌음. 학점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도록 평가방식 개선 바람.
7.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관련 일반대학원과 교육대학원간 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 필요
8. 대학 평가시 논문 인용도, 연구역량 분야 평가 개선을 위한 방안 필요
9. 인권센터 운영 개선을 위한 방안 필요(상담실 보완 등)
10. 법적으로 학생을 교육지도할 근거가 없는 행정직공무원들을 학생지도비 지급대상에 포함해서 사실상 급여보전성 경비로 운용하고 있음. 국민권의 위원회의 권고, 교육부 지침에 따라 학생지도비 지급 관련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11. 장애인화장실 등을 비롯하여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교육부 평가를 반영하여, 소요 예산을 확보 등 순차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을 개선하기 바람.
12. 교내 구성원의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이수율이 저조하므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바람.
13. 사회공헌활동인원이 2019년도에는 4479명인데 2021년에는 반 정도 인원이 줄었음. 개선방안이 필요함.
14. 사회공헌활동 참여인원 확보인원은 쉬우나, 참여자 비중이 커질수록 참여활동의 자발성, 순수한 참여성 논란이 커지고, 시립대 자체적인 사회공헌활동의 의미도 퇴색시키고 있음. 학교차원의 활동과 실적에 연계하지 못하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15. 서울시와 유관기관 연계 프로그램 같은 경우 시립대는 인력 제공 외에는 별다른 역할이 없음. 학생들이 단발성 행사, 비용절감을 위해서 자원활동으로 이용된다는 여지 발생이 우려됨.
16. 학술연구에 있어서 시립대는 학교역량강화를 위해서 활발한 연구 실적이 기반화 되어야하지만 학술 연구지원이 부족함. 연구 지원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17. 최근 3년간 서울시 공무원 출강 현황과 관련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나, 현 시점에서 서울시 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포함되어 있는 등 자료가 부실함. 보다 성실한 자료 제출을 요구함.
18. 의회에 대한 시각을 변화하고, 의회실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공무원 대상 교과목 신설이 필요함. 의회민주주의 관련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직무교육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청함.

19. 서울시립대학교 대학회계직원 채용시 블라인드 채용을 준수할 필요가 있음. 특히, 채용지원서에 학교명, 전공을 기재하게 되어있는 것이나, 학력에 대한 배점을 두어 정량평가를 하는 등의 구시대적 채용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인사관리규정 등을 전면 검토하여 학력, 성별 등에 상관 없이 훌륭한 인재들이 채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청함.
20.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인상에 따른 외국인 유학생 지원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것을 요청함. 특히, 학교에 재정적 부담이 가지 않은 선에서, 대외원조 형식으로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는 방안도 모색할 것을 요청
21. 총장의 공약 추진률이 높아 보임. 하지만 강의전념 학기제 도입이 잘 이행되지 않았음. 노력 바람.
22. 전임교원이 확보되어야 하는 것은 학생들이 좋은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기회임. 전임교원 확보율을 높아지는데 전임교원이 담당하는 학점은 줄어들고 있음. 노력 바람.
23. 소규모 강의 확대 지원을 위해 노력 바람.
24. 글로벌 캠퍼스 취지는 좋으나 몽골에 건립될 대학의 학생 등록금이 6천달러로 너무 높다고 생각함. 무리한 액수가 책정된 타당한 근거가 부족함.
25. 코로나 이후 실습같은 대면수업이 불가피한 수업은 어떻게 하는지. 대학이 평생교육의 차원도 있지만 학생과 학생, 학생과 스승님의 교류에서 미래를 정하는 것이 있는데 업무보고를 보면 부설연구소가 늘어나는 것 외에 코로나를 대비한 성과물이 없음. 노력 바람.
26. 일자리 관련해서 교수나 학생들을 연결시키는 기관이 있어야 함. 코로나로 힘든 상황인데 이에 대한 대비 필요

7 서울농수산물공사(서울농수산시장관리(주), 서울농수산물도매시장정산(주) 포함) : 24건

1. 시장도매인제 도입 등 거래제도 다양화를 위한 적극적인 공사 역할 필요
2. 서울친환경유통센터의 친환경 식재료 공급비율 개선 방안 필요
3. 친환경 농산물 공급을 위한 계약재배 확대 방안 필요
4. 요소수 등 물류 대란 발생시 농산물 관리 및 유통 매뉴얼 필요
5. 농산물 유통관련 화물차량 및 물류에 따른 금액 환산 데이터 관리 필요
6. 도매시장 개혁이 지속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7. 도매시장법인들의 체질 강화로 경쟁력 제고 방안 마련 필요
8. 도매시장법인 심사위원회 위원 다양화 방안 마련 필요
9. 도매시장법인 지정조건과 평가 연동 방안 마련 필요
10. 특정 법인이 특정 항목 독점유통 방지를 위한 방안 마련 필요
11. 도매법인간 건전한 경쟁 환경 마련을 위한 방안 필요
12. 시장관리운영위원회 관련, 구성원의 형평성 문제, 현장 경험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차기 시장관리운영위원회 구성은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해서 위원회의 공정성을 기하기 바람
13. 가락시장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 늦장 대응이 없도록 사전관리감독을 철저하기 하기 바람.
14. 시장종사자들이 술선수범하여 방역관리지침을 준수하도록 각별한 홍보, 지시 등 관리를 하기 바람.
15. 공사시설물 중에서 가락시장의 도매권역 사무실 274개 중 82개 공실이 발생되어 공실률이 30%나 됨. 2017년 이후부터 매년 높아지고 있는 공실률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16. 가락시장 가락몰 판매동의 경우 도매권 식품종합상가 등의 이전 장소 확보를 위해 신규모집을 하지 않고 공지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 효율적으로 보이지 않음. 다양한 활용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17. 공사의 공실률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됨. 두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두 손 놓고 있는 것은 고질적인 방만한 관리임. 이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함.
18. 스마트 마켓이라는 것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맞추기 위해서 도태될 수 없기 위해서 필요한 것인데 자료를 통해서만 확인해보면 이게 '절실한 과제다.'라는 인식이 약해 보임. 일단 관련 조직구성원 수가 부족하고, 예산이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이 필요해 보임
19. 경매 관련 공정거래탐지시스템을 만듦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보임.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은 거래자료 미전송 문제임. 이런 것이 누적되면 다음에 재지정되는 것에 대해 제지가 가도록 해야 함.
20. 공정경쟁을 위해서 법인들을 제지하는 방안으로 연구용역만 발주내고 있음. 이를 통한 개선방안을 낼 때마다 소송이 들어오는데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길 바람.
21. 11월 11일 농업의 날인데 공사의 요구자료에 이벤트나 행사에 관련된 것은 없어 보임. 앞으로는 농업인들을 위한 행사도 고민해 주기 바람.
22.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산하 수산 소위원회는 도매법인 3명, 중도매인 8명으로 위원회 구성 비율의 균형이 맞지 않음. 공사는 도매법인과 중도매인이 비슷한 균등 비율로 수산 소위원회 위원을 구성하고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바람.
23. 양곡시장의 거래물량이 줄어들고 있음. 양곡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24. 출근 등 근태 관련 민원이 있으니, 수당이 부당하게 집행되는 등 예산 낭비가 없도록 노력 바람.

8 서울연구원 : 19건

1. 연구원이 정치 현안에 휘둘리지 않고 객관적 연구결과 산출을 위한 방안 마련 필요
(서울비전2030 등에 대한 연구원의 합류, 기능지원, 자문위원회 활동 등)
2. 연구원 원장 장기 부재에 대한 대책 및 재발방지 방안 마련 필요
3. 서울연구원 청사 이전 관련 연구원 및 서울시 수행 역할 등에 대한 검토 및 신속 추진을 위한 미비점 보완 필요
4. 연구직의 법정 의무교육 및 직무능력교육 개선 방안 필요
5. 휴식년제를 1년, 2년 등 장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6. 정책연구, 기초연구도 많이 있는데 그런 장기적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다른 연구기관이나 학술지에서도 어느 정도 인용되는지 조사 필요
7. 기술연구원, 시립대학교 등 서울시에 투자출연기관들과 협업연구 확대 방안 마련 필요
8. 영상콘텐츠를 통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연구성과를 확산시키고 시민들과 소통하려고 하고 있으나 조회수가 적음. 비대면 역량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9. 일반사람들이 직접 유튜브 검색창을 통해서 영상 콘텐츠를 접할 수 있는 비효율적인 채널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음.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노출성 확대가 필요함.
10. 온라인 생중계의 연구성과에 대한 분석을 위해 참여인력이나 예산 등 기본적인 정보와 실적과 성과 분석이 가능하도록 정리가 필요함.
11. 최근에 서울시의회 30년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서울시의회 미래전략 토론회는 의회와 공동으로 주관하는 행사임에도 의원들에게 홍보가 전혀 없었고 의회 어디에도 포스터가 붙여있지 않음. 공유와 소통이 필요함.

12. 개원 29주년 기념세미나가 비대면으로 개최됨. 참여인원은 30여명에 불과했으나 행사비용은 1,800만원에 달했음. 비대면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토론회에서 의례적으로 지출되는 단순 행사성 경비사용은 지양
13. 비대면 환경에 부응하는 디지털 홍보체계로 전환하여 연구성과 관리와 확산을 달성하기 위해 빅데이터 분석기능을 담당하는 도시정보실을 신설했는데 도시정보실장인 연구직 1명 외에 연구 인력이 전무하며 작년 연구실적은 1건, 올해는 4건으로 매우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음. 개선 방안이 필요함.
14. 작년 행감지적 사항이었는데 장애인 의무고용이 아직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올해 더 비율이 하락했음.
15. 급변하는 기술의 변화 발전에 있어서 노동도 빨리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노동시장에 관한, 새로운 시대에 맞는 직업 훈련, 일자리 변화에 관한 연구가 많이 필요함
16. 코로나로 자영업자들이 많이 힘들었는데 이에 대한 연구용역도 시행 필요. 시기적으로 맞는 연구를 빨리 파악할 필요가 있음.
17. 포괄임금제 관련해서 4년차인데 개선된 것이 무엇이 있는지, 인센티브를 받는 기준에 연구자료 같은 것들이 얼마나 포함이 되는지 등 고려하여 납득이 될만한 인센티브 기준을 수립하길 바람.
18. 1인가구 관련해서 실태조사 연구용역이 서울시 수탁과제임. 6월에 논의가 되고 8월에 계약을 했음. 1인가구 추진단이 하는 사업이나 예산보다 다른 부서가 하는 사업이 훨씬 많음에도 용역을 3억 5천만원을 들여서 하고 있음. 그런데 이 연구는 실효성 측면에서 의문이 듦.
19. 2021년 구정연구 활성화 지원사업 종료 예정에 따른 파견 연구원들의 신분이 불안정함. 연구원은 자치구와 연계하여 지속가능성 및 향후 운영 방안을 모색하기 바람.

9 서울산업진흥원 : 19건

1. 신규채용 인원의 10%는 고졸채용을 목표로 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고졸 채용자들이 일괄적으로 시설관리직 위주 편성됨. 고용 취약계층이 다양한 직무를 경험하도록 기회 마련을 위한 채용과정 검토 필요함.
2. 서울뮤지엄 건립 사업의 정책방향이 바뀌며 매몰비용이 5억원 이상 발생함. 문제 책임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
3. SNS 채널 홍보 관련해서 각 채널들에 대한 운영비는 거의 비슷한데 제출된 자료를 보면 예산이나 콘텐츠 수 이런 것이 들어있지는 않음. '나만 알고 있는 꿀템' 과 비교했을 때 다른 것들은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임. 실효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함.
4. SBA는 서울시 보조비(고유사업), 수탁사업 외에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방법이 무엇일까라는 고민이 필요. 새로운 수익사업의 발굴에 대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람.
5. 서울 소재 모든 기업이 대상이 아닌 일부 소수인 하이서울기업에만 국한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듦.
6. 하이서울기업 지원에 대한 불만으로 기업의 해지 요청이 많아 매년 감소하고 있음. 이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이 필요함.
7. 2억 천만 원 예산이 편성 되고 있는데, SNS 홍보 같은 경우 페북 '좋아요' 가 1개밖에 안되어 있음. 홍보방안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8. 어려운 재정 사정으로 인해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통·폐합하거나 지원규모를 축소하는 상황에서 하이서울기업만을 위한 행사와 지원 등을 목적으로 예산을 확대 편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9. 서남권 기술특화캠퍼스 첫 졸업생의 취업 현황을 살펴보았을 때, 취업률, 취업대상 기업, 계약조건 상세 현황에 대한 자료를 관리할 필요가 있음.

10. 서울산업진흥원이 계속 사업들을 계승 및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함. 특히, 서울의 전략산업과 더불어 해외 투자유치 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방안 모색 필요.
11. 서울시 본청과의 업무 조정 때문에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고 퇴사하는 인원이 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서울산업진흥원이 산업 진흥 전반을 책임지는 곳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야 함.
12. 대표이사, 상임이사 등 임직원 간의 조직 운영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함. 특히 관련 경력과 전문성을 살려 조직 대내외 협의 조정에 적재적소의 인력을 투입해야 함.
13. 디지털 전환 관련, 중소기업에서 그 필요성에 적극성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함. 컨설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필요
14. 펀드는 특정한 목적을 갖고 조성을 하는데 투자금액이 적은 펀드들도 있음. 수치로 봤을 때 불안한 요소들을 개선하기 바람.
15. 진흥원 4급 직원 78명중 10명이 직무대리임. 나머지 인원들은 사기 저하 요인이 될 수 있음. 인사 관련 문제에서 사실을 확인해서 문제가 나오면 즉시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함.
16. 공기업과에 자료요청을 했던 것 중에 sba 이사회의 회의 내용과 이사들의 의견 내용이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 요청했는데 제출이 안 됨.
17. 애니메이션 센터 계약서를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미제출됨.
18. 애니메이션 센터가 단기간에 이전됐어야 했는데 문화재 발굴로 연장되고 있음. 임차료와 관리비가 연간 13억이고, 주차문제가 일어나고 있음. 조치 바람.
19. 서울게임산업-E스타디움 관련, 당시 창조경제의 육성산업 가운데 핵심사업으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결론적으로 경기장 운영이 중단되는 상황에 처해있음. 1년전에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흥원에서는 사전 대책이 부족해 보임. 개선 바람.

10 서울신용보증재단 : 9건

1.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지원사업 대행 업무 시, 소외계층을 위한 보증 혜택이 확대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의하기 바람.
2. 기본재산 확충을 위해, 금융회사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출연금을 확보하기 바람.
3. 서류미비, 제출미비, 세금체납 등의 사유로 보증처리기간이 지연되고 있음. 보증 처리기간 지연사유를 면밀히 파악하고, 신속한 보증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바람.
4. 마이데이터 플랫폼을 활용하여 폐업위기 소상공인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안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5. 4無 안심금융 보증지원의 수요 예측을 통해 효율적인 지원하기 바람.
6. 4無 안심금융 보증지원이 자치구별 실적 차이 개선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7. 업체 수는 서울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비슷한 두 개의 자치구가 지원은 두 배가 넘게 차이가 남. 효율적인 배분이 필요함.
8. 시민의 재산이니 재단이 기본재산을 잘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함. 작년 행감 지적사항과 같이 본 사옥 임대료가 평균 수익률 보다 낮음. 개선 바람.
9. 코로나19로 통해서 자영업자 대상 대출 회수시기가 돌아오고 있는데 자영업자에게 부담으로 다가올 것임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하고 서울시와 정부에 건의할 사항도 준비하기 바람.

기후환경본부 - 12건

1. 민간위탁사업 시정요구사항

-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항목 중 정량적 평가 지표를 확대하는 등 지표의 객관성을 확보할 것
- 민간위탁 지도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점검하도록 개선할 것
- 사업별 특성 고려한 사업평가지표를 적용할 것
- 수탁기관의 필수교육 이수 비율 높일 것

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조례에 따라 지도감독 책임이 있으며, 서울 에너지공사에 대해 업무·회계·재산에 관해 3년마다 점검·조치할 것

3. 햇빛발전협동조합 태양광 설치사업(7차) 추진이 중단되었는데 책임감 있는 행정기관의 조치를 취할 것

4.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관련 과태료 부과와 마찬가지로 취소·환급 시에도 법령에 근거를 두어야 하고 시의회에 사전 동의를 구하여야 함

5. 민간부문 건물에너지효율화(BRP) 사업의 저조한 집행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요구하고 아울러 사업 전후 에너지 절감 등 효과 분석 관련 자료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해 시정 조치할 것

6. 1회용품 사용실태를 점검함에 있어서 점검을 위한 점검이 되지 않도록

점검 결과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통한 개선 방안 마련할 것

7. 기후환경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로 지속적이고도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추진되어야 하나, 진행되는 사업들의 계획, 추진 및 평가 주체가 각각 다르고 정책의 환류구조를 갖고 있지 못함.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기후환경 정책의 추진을 위한 독립된 기구의 신설이 요구되며, 전담 공무원과 우수 인력을 확충하는 등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함.

8. IPCC 6차보고서 발간에 맞춰, 서울시 탄소중립 정책의 수정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 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

9. 탄소중립 특위나 그린뉴딜 소위 보고에 앞서 상임위에 최우선적으로 보고하고, 누락시키는 일이 없도록 할 것

10.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과 관련하여 과태료 부과 후 취소/환급을 본부장 방침으로 적용한 것은 법률을 확대한 것으로 운행제한 위반차량의 과태료 부과 및 취소/환급은 관련 법률에 근거를 두고 시행할 것

11. 수소차 보급을 위해서는 충전소 확대가 중요함에도 서소문 수소충전소와 진관 버스 충전소 등 인프라 구축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정상적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할 것

12. 소규모 방지지설 지원사업 등 민간 보조금 지원사업에 있어 지원대상자 자부담을 업체가 대납하는 사례 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점검할 것

푸른도시국 - 29건

[푸른도시국] - 26건

1. 국제정원박람회에서 초청정원 1개소를 시공하지 않았으나, 설계비가 소요됐으므로 공식홈페이지에 설계안이라도 공개(소개)할 것
2. 유튜브에 게시된 동영상에는 초청정원(마살슈왈츠)이 시공될 것으로 안내되고 있어 시공되지 않은 사항을 안내할 것
3. 초청정원 시공 대상지에 초청정원 예산으로 '문화공원 내 뿌리공원'을 조성한 것은 목적에 맞지 않는 예산집행으로 시정할 것
4. 조성된 초청정원 1개소는 설계안에 비해 휴식공간 수목 등 시공현황이 달라서 공사 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5. 모델정원 1개소는 기존의 나무를 묻는 비생태적인 형태로 시공됐으므로 유튜브에 게시된 정원조성 과정 영상은 삭제할 것
6. 민관협력사업 중 기부심사를 받지 않고 협약을 통해 진행했지만, 협약서가 없는 경우가 있고 협약서가 있더라도 가액산정이 가능하지 않아 향후 반드시 가액 규모를 포함하고 협약을 작성할 것
7. 플랜팅챌린지 사업에서 시민참여 결과로 기부받기로 협약한 후, 후원 달성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으나 확보한 물량 전체를 식재하지 못한 바, 향후 협약 추진 시 유의할 것

8. 당초 계획한 교목식재 비율에 비해 실제 비율이 감소하여 목표에 미달했으므로 향후 협약서에 구체적인 기준을 세워 추진할 것
9. 서울로 7017 산책로에 바닥 경관유리가 관리부실로 지저분하다는 시민의 제보가 있으므로 교체할 것
10. 주차장 중복 결정 자료에 현황파악이 미흡하여 향후 철저히 관리할 것
11. 중복결정을 시설계획과에서 하더라도 시공원에 대한 현황 자료는 푸른도시국에서 파악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12. 각종 위원회 위원들이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 사업의 연관성을 고려하고 규정에 의거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할 것
13. 움직이는 공원 사업은 목적에 맞게 추진하고 화분, 수목, 재료 등의 단가를 표준화할 것
14. 공공조경가 공고문 자격요건 중 의미가 분명하지 않은 3번의 개별 항목(4건)에 대해 정확한 표현으로 수정할 것
15. 공공조경가 기수별 모집 때마다, 공백기가 발생하지 않고 연임이 되도록 추진할 것
16. 공공조경가 임기가 아닌 때에 자문위원으로 추천하고 회의에 참석하고 자문비를 지급한 것은 내부 방침을 어긴 것이며 근거가 없는 행정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할 것

17. 관련 요구자료에 대해 누락된 사항이 발생하였으므로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
18. 양재고개 단절된 녹지축 최종 투자심사에서 '사업비 절감'으로 조건부 결과를 받았으나 오히려 사업비가 증가하고 있는 바, 사업 적정성을 재검토 할 것
19. 유아숲지도사 채용 시 성범죄경력사유 경력 조회를 시행하고 청소년 성보호법에 의해 성범죄의 경력자 점검·확인을 연 1회 이상 점검할 것
20. 용역업체에서 상시배치자로 지정한 사람이 다른 곳에서 수시배치자로 근무하는 경우가 있는지 확인하여 시정할 것
21. 산림복지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업체등록업, 전문가 자격현황, 재직현황을 조회하여 용역업체의 입찰 및 운영현황과 일치하는지 확인할 것
22. 용역업체의 지도자 수에 비해, 서울시에 배치한 숫자가 더 많은 경우가 발생하였고 전문가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용역계약 시 전체 현황을 파악할 것
23. 민간위탁 관리지침 개정으로 75점 이하는 재위탁, 재계약이 안 됨. 현재 독점적으로 위탁 운영 중인 난지도 매립지 매립가스 포집 및 처리시설 위탁 업체의 평가점수가 75점 이하이므로 대책 강구가 요구 됨.

24. 옥상녹화 대상지 관리현황 파악이 미흡하여 조례와 협약서에 명시된 기간 동안 철저히 관리하여 시민의 무더위쉼터, 휴식공간을 보장할 것
25.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와 가로수 수종갱신 실적 이 상이하고, 시방서, 공사설명서, 준공보고 내용이 전체 일치하지 않아 상황을 파악하여 세심히 관리할 것
26. 가로수 심의에서 조건부로 통과한 내용 중 ‘토양치환 병행 시행’이 있는데 이와 관련한 내용이 서류상에 파악되지 않고 있어, 향후 관리감독 및 서류 작성을 철저히 할 것

[서울대공원] - 3건

1. 주차할 때 SNS 메시지로 주차 정산정보(차량번호 등)가 공개돼 개인 정보 유출에 대한 문제가 없도록 조치할 것
2. 시민편익 제고를 위한 주차장 시설개선 사업을 추진 중이나, 주차요금 2배 인상은 시민 가계 부담을 증가시키므로 재검토 할 것
3. 스마트주차장 플랫폼 서비스 계약해지 또는 종료 시 시설물 소요와 시설물 원상회복 등의 사용조건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마련할 것

상수도사업본부 - 9건

1. 배수지·정수지 방수방식 적용 시 적정 재정비 주기를 결정하고 이에 따라 연간 정비물량을 확대하거나 고품질 자재 사용(내구성 향상) 등을 적극 검토할 것
2. '19년 정수지·배수지 정밀안전진단(B등급)에 대한 조치가 '25년까지로 계획되어 있음.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정비가 우선순위에 따라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3. 폴리케톤 계량기의 설치·재활용 등의 문제점이 많아 설치에 대해 검토할 것을 지적('19년)하였으나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감사위원회 감사('21.7) 결과 이후에야 구매 중단을 검토하는 등 낭비적 문제점을 보였음. 향후 신제품(재질, 기술 등) 적용에 있어 충분한 사전 검토가 이루어진 이후 도입 등을 확대할 것
4. 물리적수처리 테스트베드 제공과 같이 중단, 보류된 사업에 대해서도 그 사유 및 후속 조치 등에 대해 보고할 것
5. 작년 행감 시 음수대 유지관리 용역에 신규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낮춰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에도 기존업체와 계약, 심지어 계약기간 연장(1→2년)까지 단행하는 등 개선의 노력이 전혀 없음. 다양한 업체가 음수대 유지관리 용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6. 재건축 대상 아파트의 경우 수도배관 교체로, 재건축 안전진단에 영향

을 미쳐, 재건축이 늦춰 질수 있다는 우려로 배관 교체를 제 때 못하고 있음. 따라서 배관공사와 안전진단과의 상관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하여 주민들에게 전달하고, 이로 인한 주민들 간의 불필요한 갈등이나 우려를 해소하여. 옥내 노후관 교체 지원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할 것

7. 수도권계량기 원격검침서비스 사업 추진 시 서울시 자가망 구축과 기타통신망과의 안정적인 연계(활용)가 가능하도록 면밀한 사업검토와 계획수립을 통해 시행착오를 최소화 할 것
8. 대형관 세척 용역업체 선정 과정에서 선정과정 평가방법이나 기준이 미흡해 작년 기술경진대회에서 인정받지 못한 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드러남. 향후 업체 선정 시 관세척 기술의 상용화, 현장 적용성을 고려하는 등 선정 평가방법을 개선하여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조치할 것
9. 홍대 지역에 조성한 아리수 친화거리 내 음수대 설치가 시민들의 호응 부족과 유지관리 소홀로 방치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해 조속히 조치할 것

한강사업본부 - 18건

1. 점용허가가 취소된 서울마리나 주차장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하고 오랜 기간 체납된 서울 마리나 하천점용료에 대한 철저한 징수활동과 그에 관한 진행 상황을 시의회에 보고할 것
2. 의회보고 자료에 마리나 부속시설(더바지라운지)에 관한 사항이 누락되었으며, 일반 음식점 용도 변경 불허에도 영업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니 이에 대한 단속 및 영업중지 조치를 취할 것

3. 이크루즈 잠실선착장 주차장 관리 운영이 부실함. 구역별로 점용허가 주체가 다르더라도 한강공원 내 주차장 운영 관리에 대한 책임자는 한강사업본부이므로 보다 철저히 잠실선착장 앞 주차장에 대해 관리할 것
4. 7월 공사한 어린이 놀이터 코르크 포장인 같은 해 10월에 들뜸 현상 발생하고 있는 만큼 공사 관리를 철저히 할 것.
5. 침수가능성이 있는 한강공원에 코르크포장이 적합한지 재료 선정에 신중을 기하고 한강의 환경적 특성에 맞는 소재를 선정할 것
6. 한강공원 내 대부분 화장실이 공중화장실법의 남녀 화장실 비율 기준에 미달하고 있으므로 부족한 여성화장실 변기를 확충할 것
7. 한강공원 내 장애인 전용 화장실이 부족하므로 신규 설치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
8. 청원경찰의 '단속업무'에 대한 갈등이 오랜 시간 지속되고 있으므로 업무 분장을 명확히 할 것
9. 잠실철교~위커힐사이 한강변에서 자라고 있는 생태계 교란생물 가지박으로 인해 토종식물이 고사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빠른 조치를 취할 것
10. 세빛섬 공공성 확보사업의 규모가 줄어들고 있으며 그마저도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원래의 목적대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진정

한 공공성 확보사업을 추진할 것

11. 세빛섬 포함 한강르네상스 관련 사업이 오세훈 시장 치적사업으로 포장되어 언론에 보도되고 있으므로 한강사업본부는 사실에 근거한 언론 보도가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
12. 기관감사 이후 기초질서 위반 단속 활동은 증가하였으나, 과태료 부과 건수는 현격하게 감소함. 징수행위에 대한 부담 없으로 과태료 부과를 소홀히 하는 측면이 있음. 징수활동에 철저를 기할 것
13. 한강공원 CCTV 추가 설치 포함 2021년 추경으로 편성된 사업 대부분이 현재까지 집행율이 0%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올해 안에 신속하게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긴급하지 않은 사업은 앞으로 추경 편성을 자제하도록 할 것
14. 난지캠핑장에서 판매가 금지된 주류를 매점에서 판매한다는 민원이 있는데, 한강공원 내 매점의 주류 판매행위에 대해 점검할 것
15. 미등록 건설업체 계약과 관련한 업체는 고발되었지만 정작 직원에 대해서는 교육 등에 그친 것은 적절하지 않은 조치임
16. 원칙적으로 영업행위가 불가한 뚝섬 윈드서핑장 3개 협회의 점용료에 대해 코로나19 감면 혜택을 준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17. 한강공원 자전거 도로의 정규속도 20km/h가 현장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한강사업본부는 이를 단속할 권한이 없어 사실상 자전거도로는 무법지대인 상황임. 속도관련 안전사고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만큼 실질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

18. 뚝섬 윈드시핑장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 강력히 조치할 것

서울에너지공사 - 41건

1. 출자 계획 변경 내용, 추진사항, 출자금 변경 및 사용 등에 대해 시의회에 철저히 보고할 것
2. 공사 인력구조가 고령자와 신입직원이 많은 기형적인 구조이므로 신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
3. 일반직과 교대근무직 직원(4급기준)의 연봉이 3천만원 이상(37%) 차이가 발생하므로 직원간 위화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할 것
4. 비수기 동안(6개월 정도)은 발전소 가동이 없으므로 대직근무 발생이 많지않도록 근무시간 조정 등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할 것
5. 서남집단에너지사업 타당성 검토는 공사의 핵심 사업이므로 최대한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
6. 감사는 청렴, 공직기강, 일상감사 업무뿐만 아니라 출자금 관리, 인력 관리, 사업 검토 등 공사 업무 전반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감사를 실시할 것
7.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것

8. 태양광 지원 콜센터 근무 직원에 대해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바, 이미지 제고방안 및 직원 CS교육 방안을 마련할 것
9. 공사 비전 2030 선포에 대해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며, 선포식 행사로 그치지 말고 조직적으로 대응할 것
10. 비전 실행계획은 직원과 임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공통의 목표를 정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11. 열병합발전 사업에만 그치지 말고 다양한 신규 사업을 발굴하여 서울시 에너지정책을 이끌 수 있도록 할 것
12.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이 부진하여 출자금 집행이 저조한데 이는 사업 준비 부족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보다 철저히 준비하여 추진할 것
13. 공단과 공사의 차이점을 전직원이 숙지하고, 경영에 대한 책임을 지고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14. 집단에너지사업뿐만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사업 등을 확대하고, 신사업을 적극 발굴할 것
15. 청원휴가 등을 더욱 명확하게 관리하고, 무분별한 병가 사용으로 직원들 간에 불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
16.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급여성 성과급이 과도하므로 지급방식 및 성과급 기준을 명확히 하여 집행할 것

17. 무재해 격려금을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현금지급과 상품권지급에 대한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지급 방안을 마련할 것
18. 상품권 구입 시 사용금액, 할인금액 등을 확인하여 명확히 집행할 것
19. 뉴딜일자리 직원의 복무불량에 대한 시민제보와 관련하여 철저히 복무를 관리하고, 뉴딜일자리 자체의 취지를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내년도 사업을 추진할 것
20. 공사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오류가 많고 신뢰도가 낮으므로 이를 개선하고, 업무보고 시 정확한 자료에 근거한 예측 가능한 답변을 할 것.
21. 노후 열사용시설 지원사업은 지원 폭을 넓히고 조건을 낮춰서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동참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것
22.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사업은 감사가 진행 중임. 감사가 일몰을 전제로 진행되고 있는 듯 하나 그럼에도 감사의 결과도 나오기 전에 일몰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시정할 것
23.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사업은 서울에너지공사가 사업의 주체로서, 감사에만 의존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향후 사업추진에 대해 판단할 것
24. 업체 폐업에 따른 하자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므로 하자보수 관련 대책을 마련할 것

25. 동부지사 열 공급 시설 수명(30년)이 다되어가므로 가동연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하고 중·장기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할 것
26. 열병합보일러 정비 및 운영에 대해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할 것
27. 태양광발전 등 실증기술이 실용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
28. 당기순손실이 증가하고 있는 바, 경영수지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29. 공사채 발행 등 차입 금액에 대한 중장기적 상환계획을 수립할 것
30. 기후환경본부와 소통·협업을 통해 공사의 인사, 조직, 업무추진이 짜임새 있도록 할 것
31. 자본적지출 집행이 저조한데, 투융자기금 상환, 개보수 등을 적극 시행하는 등 집행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32. 교대직과 일반직 근무자의 인건비 차이가 크므로 임금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33. 열수송관 정비 공사는 열 사용량이 적은 비수기에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할 것
34. 교대직 근무자의 대직근무 시간외 수당 발생 산정 방법이 적법한지에 대해 내부감사를 시행할 것

35. 목동 열병합보일러 사고로 줄어든 발전량 수치와 미가동으로 인한 경영손실을 파악할 것
36.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예산집행도 저조하므로 사업 추진 전 대상지 선정이나 사업성 검토 등을 철저히 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
37. 여주 및 코레일 등의 태양광 사업은 추진이 되지 않으므로 대안을 마련할 것
38. 서소문 수소충전소 사업이 문화재 조사로 지연되고 있으므로 이후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부서간 협조를 원활히 할 것
39. 코로나19 재택근무로 직원용 노트북 구매는 과도한 조치로 보이는 등 자산 취득 및 관리를 철저히 할 것
40. 사업타당성 검토결과 타당한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대공원 주차장, 인천김포고속도로 태양광 사업 등이 중단되고 있는 바, 타당성 검토 시 보다 포괄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41. 업무용 공용차량 이용률이 저조하므로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 대변인 : 7건

1. 대변인은 시장에 관한 문제뿐만 아니라 가짜뉴스 등 시정에 대한 왜곡보도를 근절하기 위해 기사의 왜곡 정도에 따라 단계별로 강력한 대응을 해줄 것을 요청.
2. 취임 이후 외국매체 인터뷰 없음. 비대면, 화상 등을 활용하기 바람.
3. 전문가 기고의 매체 다양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4.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서울시의 온라인 매체 부정왜곡 보도 대응 현황의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바, 언론사들과 소통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 5.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매체별 인터뷰 및 기획기사의 편향성이 나타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6. 10월 8일에 대변인이 발표한 입장문은 서울시와 자치구의 불협화음을 조장하고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한 사안임.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대변인실 본연의 업무와 역할에 충실하기 바람.
7. 보도자료 배포 시 시와 시의회의 갈등을 조장하지 않도록 심사숙고 및 팩트에 기반을 두어야 할 것임.

□ 시민소통기획관 : 19건

1. 티비에스 재정건전성 확보가 티비에스 만의 문제는 아니며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함에도 출연금 대폭삭감 조치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재정 독립 관련이라고 하지만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움.
2. 2022년 미디어재단 티비에스의 예산 삭감 규모는 현실적으로 급여 외 방송편성이나 사업 등을 전혀 진행할 수 없는 수준이므로 재고가 필요함. 재단의 예산 독립이 필요하다면 상당한 유예기간이 마련되어야 하며, 혁신방안 마련에 대한 경고도 선행되었어야 할 것임.
3. 티비에스 2021년도 개인 성과급을 시민소통기획관에서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은 노동법 위반 소지 등이 있으므로 파악하여 검토·시행할 것. 120다산콜재단은 개인 성과급을 모두 지급하였는데 형평성에도 맞지 않은 실정임.
4. 라이브서울 유지보수 업체의 2년 연속 수의계약 등은 문제소지가 있으니 검토 바람.(높은 유지보수 비용 대비 낮은 방문객 수, 수의계약 등을 통한 특정업체

일감몰아주기 등 문제, 입찰조건 변경 등 통해 입찰에 의한 공정한 경쟁계약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의 개선 필요).

5. MCN 기반구축 관련 이사진 5명에게 태블릿 5개를 렌트해서 지급하였는데 적정성 여부 확인 요청 및 관리감독 철저. 각종 회의비 지급 등 사업결과를 검토하여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하기 바람.
6. 202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지난 출연 동의안 제출 시 보고와 달리 TBS의 급격한 예산삭감은 행정의 연속성을 무시한 징벌적 조치라 판단되며, 한두 달 사이에 행정의 연속성이 무너지고 있음. 신생출연기관의 수익구조를 수신료 등으로 오랜 기간 동안 재원을 확보하고 있는 KBS, EBS 등과의 단순비교는 납득하기 어려움. 상식에 기초한 행정을 펼쳐야 할 것임.
7. 시청 시민청, 권역별 시민청의 운영은 같은 예산 투입대비 더 큰 효율과 성과를 내는 업체를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8. 권역별 시민청에 대한 타당성 용역 실시 및 조사가 완료되었음에도 2022년도에 조성과 관련된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은 시민들에게 행정의 안정성 및 신뢰성의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9. 우수정책 해외진출 사업 관련, 매년 10억 정도 예산 편성 및 집행이 이루어지는데, 최근 3년 실적이 부족하므로 사업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람.
10. 민간육외전광판 관련 예산과 초과집행의 지속적 불균형 개선 필요 및 미설치 자치구 설치 필요.
11. TBS 예산 삭감 관련, 자체 자원 확보를 원한다면 일을 할 수 있는 기본적 예산은 있어야 하는데 예산안을 보면 광고추진비, 미디어 정책 계획협력 예산이 반 이상 줄어들었음. 시민소통기획관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재정자립도가 올라가지 못한 것 아닌지. 또한 TBS 이사장과 시장 간 적극적인 중간역할을 요청함.
12. 회비납부 회원수 감소로 씨티넷 운영이 올바르게 될 수 있는지 의문임. 특히 사업비 비중이 3%에 불과한 상황인데, 이를 위해 서울시에서 씨티넷 전체 운영비의 70% 이상을 지원하는 것은 회의적임. 회원 도시들의 회원비 납부율을 제고하여 원활한 운영도모를 요청함.
13. 현재 상수도사업본부의 재산으로 되어 있는 120다산콜재단 청사의 시민소통기획관으로 재산이관 진행상황을 잘 확인하고, 시와 재단의 긴밀한 업무협조로 조속히 근무환경을 개선 해주기 바람.
14. TBS에 대해 시민소통기획관이 이번 예산삭감 조치 외 지속적인 관리감독에

대한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의문임. 정치적 편향성 논란, 프로그램의 공정성 등에 대한 시민들의 논란 등이 지속적으로 야기되는데에 비해 시민소통기획관의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는 TBS 재단과의 회의 내역이 없는 등 소관기관으로의 역할이 부족했음.

15. 영상크리에이터 사업 관련, 영상별 최저/최대 조회수 사이 편차가 심하고, 유튜브 채널 자체에서도 조회수 편차가 심함. 또한 동일한 사람이 다른 이름, 다른 작품으로 활동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업로드 당시에는 상당한 조회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 상당시간이 지난 뒤엔 거의 조회수 상승이 없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콘텐츠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미흡하여 개선이 요구됨.
16. 해외공무원 대상 서울시립대 도시행정 석사과정 지원 사업에 참여한 해외공무원들이 자국으로 돌아간 뒤 서울시와 협력체계를 굳건히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17. 권역별 시민청 진행상황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18. 국제기구 평가관련 절대평가 기준마련 등 명확화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19.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정보 제공 및 인터넷언론사 활용한 시정정보 안내의 3사 분기 지난 시점의 집행률이 40프로대임. 연간 균형 집행 필요. 시민이 다양한 정책을 접할 필요가 있음. 다양한 홍보 아이템 발굴 요구됨.

□ 문화본부 : 32건

1. 문화본부가 관리하는 전문예술법인의 변경·등록·취소와 관련하여 전수조사 후 변경하기 바람.
2. 템플스테이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맞춤형 템플스테이 사업을 기획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들과 지속적으로 협업하기 바람.
3. 최근 3년, 한성백제박물관을 방문하는 관람객이 여성과 60대 이상으로 남녀노소 다양한 연령에서 방문할 수 있도록 분석하고 향후 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4. 코로나19에 따른 관람환경 변화로 한성백제박물관에서 전시해설영상을 제작한 후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공개하였으나 조회 수가 낮게 나타나고 있는 바, 조회수 증대를 위한 홍보방안 등 전략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5. 통합문화이용권의 발급률은 97.5%인 반면 이용률은 51.14%로 저조한 바, 자치구와 협업 등을 통해 통합문화이용권 대상자들의 이용 유무에 대한 정기적

인 점검과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6. 통합문화이용권의 사용처가 도서구입에 편중되어 있는 바, 다양한 사용처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7. 문화분야 주요 데이터를 전국단위 통계에 의존하는 구조로 이는 전국 및 국제비교는 가능하지만 서울시내 자치구간 비교는 어려우므로 문화통계의 호환성·구체성이 모두 확보 가능한 지표를 개발하고 문화분야 필수통계·필요통계와 자치구의 문화특성을 반영하며 이에 대한 인력은 지방문화원을 활용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기 바람.
8. 서울문화포털을 활성화시켜 문화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람.
9.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출자·출연기관의 기록관리가 의무화 되었으므로 기록물 관리실태를 파악하여 법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람.
10.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봐주시고, 특히 주민참여 절차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기 바람.
11. 공공미술 시민아이디어 구현 사업에 올해부터 시민선호도 조사 절차가 빠져있고, 전문가 심사에 시민을 포함시킨다고 했으나 모두 전문가였음. 지역의 정체성이나 장소성을 제대로 살리기 위해 시민선호도 조사를 실시하기 바람.
12. 문화본부 소관 공유재산관리시스템의 불일치·미등재 자료에 대해 법과 조례상 수시로 정비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특정감사 이후 토지·건물 불일치 현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으므로 공유재산이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람.
13. 문화지구로 지정된 지역 약 20여년이 되어가지만 관리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피드백없이 관례적으로 업무를 하고 있는 바, 현실에 적합한 정책의 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14. 우리소리박물관의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운영방안과 메타버스를 접목하는 등 전시와 프로그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15. 삼청각 운영이 전문 민간기관으로 이관되더라도 소속 직원들의 고용불안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실 것.
16. 뉴딜일자리 등을 통해 성북구 가구박물관에 외국인 통역전문 인력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 방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람.
17. 왕궁수문장교대의식 사업의 경우, 올해 덕수궁 앞 월대공사 실시로 인하여 실

제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기 어려웠고 승례문 수위의식 또한 실제 참여인력 및 인건비 집행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예산 집행에 대한 감사 필요.

18. 글로벌음악도시 서울조성 사업의 경우 민선7기 시장 공약사항이며 4년 계획으로 이뤄지는 사업인 바, 편성된 예산에 대한 집행이 계획상으로는 2월이나 9월에서야 추진됨. 또한 2월 해당 분야의 음악기획 전문요원을 채용하였으나 '22년에는 예산이 미편성된 것으로 제대로 된 정책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사장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19. 상도동 장승배기의 장승과 제사의 유례에 대해 잘못된 역사라는 지적이 있으므로 재확인해서 바로잡아줄 것을 요청.
20.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르면 수탁기관 선정시 노동자의 고용·노동조건에 대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및 유지 정규직 비율에 대해 검토하고 '협약서'에는 정규직 비율을 25%이상 유지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생활문화센터 신도림' 근무인원 4명은 모두 비정규직인 바, 시정하기 바람.
21. 박물관과의 '국제 박물관회의 연례회의'는 당초 5월에 개최할 예정으로 용역업체와 계약을 했으나 코로나19로 무기한 연기하던 와중에 폐업한 하청업체에 계약불이행 책임을 전가하려고 한 건과 관련하여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권고를 기준삼아 억울한 용역업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바람.
22. 서울시에서 공연하기 좋은 최적의 생활문화센터를 조성하였으나 현장에서는 「서울특별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제6조의3제5항제4호에 따라 이용자들은 유료로 공연이나 강습을 할 수 없다고 하니 확인해 보시기 바람.
23.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제출기준이 9월 말임에도 제출 누락된 건이 있으니 주의하기 바람.
24. 예술인 고용보험 관련 시립미술관 같은 경우 창작대가비가 책정되어있는데 공예 박물관 창작대가비는 산출방식이 다르므로 동일기준 마련해야.
25. 시민들에게 역사적 사실과 가치를 전달해야 하는 문화재 안내판의 문안을 작성하고 감수하는 위원 중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 구성되고, 최근 3년 연속으로 같은 업체가 국·영·외국어를 감수하며 번역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전문가 구성으로 역사적 오류가 없도록 조치하고, 공개입찰을 통해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개선 바람.
26. 공원의 기초질서 단속, 공공요금 징수가 역사문화재과 업무인지, 「서울특별시

김치산업 진흥 조례」는 도시농업과 소관으로 ‘김장문화제’는 경제정책실로 이관이 필요하다고 작년에 이어 지적하고 있는 바, 전반적으로 각 과에서 관례적으로 하고 있는 업무를 재확인하고 문화본부 소관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업무는 빠른 시일 내에 관련부서로 업무를 이관하기 바람.

27. 한양도성도감과 한양도성연구소 두 기관 간 긴밀한 업무공유가 필요함. 동대문역사관과 동대문 운동장기념관을 한양도성연구소에서 운영·관리할 이유는 무엇인가, DDP를 운영·관리하는 디자인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듯하니 검토바람.
28. 돈의문 박물관마을 편익시설이 3회 유찰 끝에 사회적기업과 수의계약하고 용도변경으로 대표자 한 명이 두 개의 사업자로 시설 운영권을 획득하고 기존 업체와 달리 임대료가 10%도 되지 않는 등 특혜의혹이 있으며, '19년 8월부터 운영하였으나 지속되는 코로나19로 폐업위기에 놓인 업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29. 풍납동 토성 문화재 관련 주민 이주·정주대책의 마련을 위해 행정2부시장을 주축으로 해당 부서의 TF를 구성하여 문화재청과 협의하고, 삼포레미콘 대표가 국회답변에서 2년 이내 이전 가능하다고 했는데 삼포레미콘 이전이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람.
30. 법과 조례에 따라 전문예술법인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30일 이내에 변경 신청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도 문화본부 소관 4개 재단은 변경되지 않은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가 제출되었으므로 시정하기 바람.
31. 한양도성 문화체험 프로그램 일부단체의 사업계획이 3개년 간 날짜만 빼고 그대로 똑같은데 검토절차 없이 예산을 지급하는 건 아닌지 철저히 관리해주기 바람.
32. 사전통보 없이 마을예술창작소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는데 유예기간을 주는 방안 등을 검토하여 대처가능 하도록 조치해 줄 것.

관광체육국 : 22건

1. 장애인 생활체육시설 확충에 대한 서울시 노력이 부족함.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설 확충이 선행되어야 함. 기존 시설에 대해 장애인 포선제 도입 등을 검토해주기 바람.
2. 2032 올림픽 유치 관련

- 올림픽추진과가 늦게 신설되어 급하게 업무가 추진된 면이 있음. 올림픽은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고 서울시, 문체부, 통일부와 협의 필요함. 향후 전문성, 지속성을 갖추고 장기플랜 수립해 줄 것.
 - 전국체육대회 때 경기장 확보 문제 있었는데 올림픽 유치 위해 노력바람.
3. 심석희 선수 관련 서울시 차원의 적극 대처 필요하며 빙상종목의 경우 특히 성폭력 관련 민원 많은 상황이므로 철저한 관리를 요청함.
 4. 서울시체육회 홈페이지 운영 유지보수 업체 지속적인 관리 및 검색 시 화면 지연 등 홈페이지 이용 불편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할 것.
 5. 뷰(View)티폴 10선 발굴사업 및 기타 관광 관련 사업에 있어서 인플루언서 등 개인의 의견이 반영되는 경우 객관성 확보를 위한 문구를 삽입할 것(예: 해당 내용은 개인의 의견일 뿐 서울시의 견해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등).
 6.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서울을 방문하는 여행객들이 기존 여행객들의 형태와는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니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
 7. 서울시체육회 관련 부정적 민원(성과금 지급 기준과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 관련)에 대해 조사 후 결과 보고 바람.
 8. 서울시체육회가 5월 법인화되었는데 자립도와 독립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주기 바람.
 9. 스포츠강좌이용권 이용에 있어서 자치구별 편차가 크게 나타나는 바, 이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것.
 10. 매년 평가 순위가 하위이던 자치구를 선정해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제대로 사업하고, 평가를 잘 받은 자치구를 선정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요청함.
 11. 생활체육포털 홈페이지 구축에 270백만원, 유지 비용으로 80백만원 등 들어 가는데, 이용자 숫자가 적어 예산 투입대비 효과가 적은 사업으로 보이는데, 이용자 수가 적은 것은 홍보 부족 때문 아닌지 검토하여 개선해주기 바람.
 12. 코로나 이후 단체관광 보다 개별관광 정착되고 있어 관광코스의 다양화 필요. 25개 자치구별 관광 인프라를 고르게 개발·홍보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줄 것과 예산 증액. 특히 외곽 지역의 등산 관련 관광 프로그램 도입을 검토해 주기 바람.
 13. 체육계 인권침해 대책 관련, 피해가 일어날 당시 대책은 있지만 그 이후 피해자의 신원보호 등 적절한 후속대책이 없어 보완 필요함.
 14. 내년도 예산의 경우 평준화되어 있는데 체육의 경우 포스트코로나 대비 예산

은 미편성됨. 체육인들의 어려움과 시민들의 체육활동 욕구를 감안하여 좋은 정책 추진 바람.

15. 전국체전 당시 수영 외에도 8개 종목이 타 시·도에서 분산 개최되었는데, 수영장 외 승마장, 스쿼시 경기장, 양궁장 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함.
16.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 관련 추진상황은? 생활체육지도자의 생계와 연관된 문제이므로 피해 가지 않도록 의견반영 필요하며 향후 생활체육지도자 처우 등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대안을 마련해 주기 바람.
17. 심석희 선수가 어려운 시기를 겪다가 서울시 직장운동부 입단 후 다시 한 번 거듭나는 계기가 되었는데 최근 불미스러운 일로 국가대표에 나서지 못하게 된다면 서울시 입장에서도 큰 손실 아닌지, 대책마련 할 것.
18. 관광진흥기금을 통한 관광업계 단계적 지원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초도화된 관광업계 회복에 턱없이 부족했음.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법적 지원근거 마련된 바, 향후 정책지원 등의 검토가 절실히 필요하며, 향후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신용보증 지원을 하는 등의 방안을 논의하고 검토하기 바람.
19. 서울시에는 기존에 있던 승마장이 없어져 승마장 건립을 위한 방안을 적극 마련해 줄 것.
20. 2032 하계올림픽 유치 실패원인은? 북한이 올림픽 유치 관련 우호적, 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적이 없는데 그 점을 감안하고 추진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올림픽 유치의 당위성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 있음. 2036 올림픽 유치를 위해 제대로 포커스를 맞춰 준비해 주시기 바람.
21. 외국인이 서울 방문 시 시설물 안내가 중요한데 외국어 안내판이 미흡함. 외국어표기 지침 개정사항 반영 등 내실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서울시 외국어 표기사전 온라인 누리집의 오류접수 기능 점검 요청함.
22. 서울시 직장운동경기부 엘리트 체육 선수에 대한 지원책 미흡. 최근 서울체고 황선우 선수가 강원도청에 입단했는데 이런 우수한 선수 유치 및 기업체와의 매칭 방안 등을 검토해주시기 바람.

서울역사박물관 : 9건

1. 공무원 직원의 관내에서 흡연, 임의적인 근무복 교환, 동료 괴롭힘 등 부적절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복무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2. 박물관 멤버십 관련하여 회원 혜택도 많이 제공할 수 있고 가입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3. 일반적으로 박물관 관람 후 기념품을 구입하게 되는데 역사박물관의 현재 기념품 내역을 보면 서울이라는 도시의 역사를 상징하기에 부족함. 서울을 상징할 수 있는 기념품 제작을 고민해주기 바람.
4. 관람객 맞춤형 전시·프로그램 개발과 재방문을 제고를 위하여 만족도 조사방법을 개선하여 관람객 세부정보를 빅데이터화, 활용하는 관람객 관리방안이 필요.
5. 유물 구입은 건수 위주의 양적 관리는 지양해야 하며 질적인 검토를 통해 서울을 대표하는 박물관을 상징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유물을 구입해야 함.
6. 관람객의 진정한 욕구와 불만사항을 심도 있게 파악하여 전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만족도 조사방법을 개선해 주기 바람.
7. 박물관의 이미지를 쇄신하고 MZ세대와 장년층 등 대상별 타겟팅 전략을 담은 중장기 계획이 필요함.
8. 미래고객인 청소년 대상 교육프로그램이 예년과 달라진 게 없는데, 자유학기제 활용 학교 연계 프로그램 등 다양하고 매력적인 프로그램 개발에 힘써주기 바람.
9. 도시개발 과정에서 사라져 가는 서울을 기록하는 서울생활문화자료조사 사업이 예산 삭감으로 조사에서 소외되는 자치구가 없도록 예산 확보에 노력해 주기 바람.

□ 서울시립미술관 : 12건

1. 평창동 미술문화복합공간을 조성하는 문화시설추진단에서 책임운영기관인 서울시립미술관에 MI교체를 제안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미술관에서 할 일은 자체적으로 예산확보 노력을 통해 추진해주시기 바라며, 신규 MI는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디자인 되도록 신중히 검토바람.
2. 제11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관련
 - 시민들이 미디어예술에 대해 아직 공감하기 쉽지 않는데, 미디어 홍수 현실에서 시민들에게 미디어 예술에 대한 교육으로 제역할 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 대중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전시설명을 강화하고 홍보에도 신경 써 줄 것.
3. 시립미술관 홈페이지 재구축 용역 계약 변경사유에 대한 재검토 및 정확한 변경

사유를 규명한 후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4. 위드코로나 및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면서 방문 전시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향후 새로운 감염병 등 돌발상황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온라인 전시도 필요한 상황임. 이에 방문 전시와 온라인 전시를 병행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5. 관람객 만족도 조사 시 방문객이 의사가 반영할 수 있도록 조사대상·조사방식 등 변경을 통해 심도 있는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주실 것.
6. 제11회 미디어시티비엔날레 관련 예산투입 대비 사업 실적이 저조함. 사업 평가를 제대로 해 비엔날레의 성과를 높일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7. 제11회 미디어시티비엔날레 관련
 - 협력 큐레이터로 외국인이 선정되어 주거지원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시민의 혈세로 비엔날레가 개최되는 만큼 이왕이면 한국인을 고용하여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비엔날레 개막식 유튜브 생중계 시청자수가 적어 보이는데, 앞으로 비엔날레를 계속 개최하기 위해서 서울 시민의 호응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시기 바람.
8. 전시하기 불편한 여러 이유가 있더라도 SeMA 벙커의 좋은 입지를 활용하여 주변 회사원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SeMA 벙커 전시 활성화 요청.
9. 교육프로그램에 관하여
 - 청소년들의 미술관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하여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에 신경써 주기 바람.
 - 미술작품에 투자하는 20대가 많아지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교육 계획을 마련해 주기 바람.
10. 시립미술관 부속 미술관 운영과 관련 상주인력 충원 등 적극 검토하여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11. 주차장 임대계약이 제대로 체결되었는지 계약내용(계약날짜, 기초가격 산정, 계약금액 등) 확인 및 특혜있는지 재검토 해주기 바람.
12. 예술인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창작대가비(artist fee)를 지급함에 있어 관련 심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사후정산 과정이 없어 무분별하게 집행되는 것은 아닌지 확인 후 시정조치 바람.

□ 세종문화회관 : 6건

1. 세종문화회관 리모델링 관련 예산이 낭비되고 있음. 공실을 최소화해 공간 활용률을 높이고, 임대수익을 더 많이 창출해주기 바람.
2. 22년도 기부금 수익을 소극적으로 편성해옴. 위드 코로나로 내년은 점차 공연 수요가 회복되면서, 세종문화회관이 기부와 후원 유치 마케팅만 잘 한다면 충분히 많은 기부와 협찬을 받을 거라 예상됨. 기부, 후원 유치에 노력해 문화예술계 발전 및 재단 자체재원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3. 브랜드리뉴얼 사업 관련, 당초 계약업체와 계약기간 변경, 중단 후 영역을 나누어 재추진함에 있어 보다 면밀하게 재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람.
4. 브랜드리뉴얼 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집행 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정확하게 집행해달라.
5. 인건비 증가와 임대수익 감소의 예산 구조에 대한 해결 방안 모색하여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바람.
6. 임대 사업 관련, 세종홀, 아트피아, 광화문아띠 등 임대료 유찰이 거듭되어 낮은 가격에 낙찰되고 있음. 철저한 공유재산 관리가 필요하며 공간 운영 방안 재검토할 것.

□ 서울시립교향악단 : 12건

1. 단원 정년도입 및 근태관리 문제를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기 바람.
2. 노조와 소통을 통해 단체협약이 정상적으로 재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3. 모바일 출근시스템 실시 후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근태확인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부족한 연습실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
4. 우리동네 실내악 사업에 강남구는 소외되고 있는 바, 자치구 간 균형적인 사업을 실시하도록 할 것.
5. 특정업체에 계약 몰아주기가 나타나고 있으니 이를 파악해 처리하고 결과를 보고해주기 바람. 시향의 영상작업을 톤마이스터 한 사람이 매년 10건 이상 맡아 하는 사례는 개선이 필요함.
6. 악기·악보위원의 경우 직제변경 및 성과평가에 특혜가 주어진 상황이며, 정년 및 임금피크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7. 계약이 필요한 사업의 70%가 수의계약임. 동일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2천만원 이하 편법 쪼개기식 수의계약도 여러 차례 실시된 것으로 보임. 특히 정상적인 공모사업 절차를 거쳐야 하는 성격의 사업을 팀장 전결의 일반계약으로 처리해 불법적인 시행이 있던 것으로 조사되었음. 특정 업체의 대표를 개인자격으로 지급결의한 건도 발견되었음. 이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서울시향 감사를 요청함.
8.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노조는 인사경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음에도 2019년 9월에 맺은 노조의 단체협약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함.
9. 서울시향 기안문의 대부분이 비공개 5, 7호로 되어 있어 비공개 기준에 부합하지 확인이 필요함. 시민을 위한 투명한 정보공개가 이루어지도록 관련 사항 시정요구.
10. 단원들의 연습실 부족, 출퇴근 기준의 불명확함, 연차소송 등으로 개인연습이 철저히 지켜지고 있는지 의문스러움. 출퇴근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11. 근무시간 중 언론사에 정정요청을 한 직원에 대하여 정당한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징계 검토를 요청하였고, 서울시향의 법률자문도 징계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징계 처리를 하지 않았음. 서울시향 감사는 휴게시간을 미리 제공한 것이라 하나, 그에 대한 결재처리가 전무하고 휴게시간은 사후에 제공하는 것이 관례적인 것을 감안할 경우 결과처리가 미진하다고 판단됨.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를 재검토하여 주기 바람.
12. 전임 대표 시절 집단행위를 했던 직원에 대해 서울시향이 2016년 공익제보자 보호성명을 냈었음. 시향 자체 법률자문 결과, 전임 대표의 무죄판결, 직원의 형사기소 사실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성명 철회 입장을 발표하시기 바람.

□ 서울문화재단 : 10건

1. 예술청 운영을 위한 공동운영단 운영과 관련
 - 계약관계를 보면 일반적인 고용관계 원칙에서 벗어나므로 분명한 계약원칙을 정하도록 할 것.
 - 예술청 공동운영단 활동비를 고정적으로 인건비와 동일하게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을 행사홍보비로 편성한 것은 부적절하므로 개선 요청.
2. 활동비 지급기준은 어떤 식인지 출근을 50~60%만 하면 지급되는 것인지, 한

일은 어떤 것인지 걱정했는지 확인바람.

3. 서울시민 문화향유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서울문화재단과 서울시 관련 부서 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조사결과가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4. 잠실창작스튜디오의 임시이전공간은 장애예술인들이 이용하기 편한 시설로 검토하여 마련해주기 바람.
5. 2020년 만족도 조사 결과가 2019년 만족도 조사 결과에 비해 감소한 바,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것.
6. 잠실 창작 스튜디오 건립 시 장애인 거점 예술공간이니 만큼 장애인의 편의성을 고려해야 함.
7. 장애인 의무고용 한시적 일자리 사업으로 부담금 면피, 문제회피 성격이 짙은데 개선책 마련할 것.
8. 예술창작활동 지원 사업 관련 경력단계별 트랙구분이 오히려 예술가들이 지원하는데 혼선을 초래할 것으로 보임. 지원 사업 설계에 최대한 많은 예술인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공정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개선하기 바람.
9. 노트북 구입내역이 많은 이유와 가격 차이가 나는 원인과 직원 재택근무 시 개인용 PC를 지급하는 것이 적정한지 확인요청. 자산취득비 집행에 예산낭비 없도록 관리바람.
10. 문화재단에서 그간 춤 관련 여러 사업을 해왔지만 2020년을 끝으로 모두 종료되었는데 누구의 결정이었나. B-boy 사업예산은 대폭 상향된 이유는? 다양한 분야 지원이 필요하며 형평성에 맞는 예산편성을 요청함.

서울디자인재단 : 7건

1. 뉴딜일자리 사업 및 그 외 다양한 방법을 통한 청년디자이너 양성의 지속성 확보는 물론 사업 참여자들의 지속적인 관리 및 민간기업의 취업 또는 창업으로의 성과 증대 방안을 마련할 것.
2. 디자인재단 고유콘텐츠 관련 임대사업 외 재단의 고유콘텐츠 사업이 부족해 보이는데 고유 콘텐츠 사업을 확산했으면 좋겠음.
3. 디자인비엔날레 관련 연구용역 결과가 도출되기 전에 의견수렴 세미나를 하는 것은 불필요해 보임. 향후에는 연구용역 결과가 나온 후 세미나 또는 의견 청취 진행 바람.
4. 서울라이트 관련 그간의 개최성과 등을 검토하여 향후 사업방향을 명확하게 하기

바람. 이미 구매한 기기의 활용에 대해 검토하고 사업의 확장, 축소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함. 총감독 지침 준수하여 운영 바람.

5. 2022년 예산안이 전년 대비 감액되었는데, 편성된 사업비를 적극 활용하여 DDP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 바람.
6. 휴먼시티디자인어워드 관련 휴먼시티디자인어워드 심사위원 구성을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3년이나 같은 심사자가 참석하는 것은 공정성의 문제가 있어 보임.
7. 정원보다 현원이 3명이 더 많은데, 정원에 맞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 서울관광재단 : 11건

1. 관광객 감소에 따라 고정식 안내소 사업방식에 변화를 줄 필요가 있음. 서울식물원의 경우 천만명이 방문하는데, 타 지역의 관광안내소를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길 바람
2. 위드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적극적으로 해외마케팅을 추진해야할 시점임. 단순 계획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등 심도있는 고민이 필요.
3. 관광접근성 개선사업이 예산투입대비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사업 실효성을 높이기 바람.
4. 유니버설 관광시설 인증제 추진 시 대형업체 등을 지원하는 경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5.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관광업이 활성화되고 관광업계의 관광플라자 이용 욕구도 높아질 것으로 예측되는 바, 비용절감이 절실한 영세업체들이 우선적으로 관광플라자 내 회의실 등의 대관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6. 서울관광홈페이지(비짓서울) 추천코스 및 맛집이 강남권에 편중되어 있는 바, 강북권 추천코스 및 맛집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것.
7. 서울관광할인패스 사업의 업체 선정과정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업체들이 포함됨. 비슷한 사업 수행 시 업체선정에 신중을 기하기 바람.
8. 내외국인 관광 패스 사업 진행시 업체뿐만 아니라 관광객과 시민들이 제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업체 및 할인율을 설계해주기 바람.
9. 서울관광할인패스 관련,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주기 바라며, 사용정산을 필수적으로 진행하여 그 결과를 향후 사업에 반영하길 바람.
10. 관광특구 상품권 사용 중 발생한 민원인 업주의 상품권 사용 거부, 한정된 사용처 등의 불편사항이 서울관광할인패스 사용 시에 발생하지 않도록 가맹점 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람.

11. SMA를 기반으로 유통 등 다른 산업과 연계가 가능하므로, 회원사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해주길 바람. 필요하다면 SMA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등 SMA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람.

□ 미디어재단티비에스 : 12건

1. 삭감된 출연금과 자체재원으로 기존 세출예산 규모를 맞출 수 있는 상황이 아님. 상업광고 허용이라든지 이런 물적 기반의 토대가 마련되어야 함. 출연금 삭감은 예산을 통한 압박으로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책마련 필요함.
2. 언론중재위에서 반론보도와 정정보도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의신청을 해서 서울시와 소송까지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보임. 앞으로 서울시와 소통을 강화하여 보도 전 팩트체크를 반드시 해야할 것.
3. 공영방송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자체재원 확보를 통해 출연금 의존도를 지속적으로 낮춰나가야 할 것.
4. 시장과의 면담 등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
5. TBS 장애인고용 관련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
6. 킬러 콘텐츠의 청취율 및 시청률이 기존 프로그램과 차이가 크지 않은 바, 킬러 콘텐츠 기획 및 제작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7. 뉴스공장 외 다른 프로그램의 청취율 및 시청률 향상을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8. TBS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스템 구축 및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9. TBS TV 시청률이 여전히 저조하며, 번호통합도 개선되지 않고 있음. 대책을 마련해 개선하기 바람.
10. 국가인권위 조사결과 국내체류 외국인의 긴급재난문자나 뉴스 의존도가 65%가 되는데 해석이 좀 어려운 현실임. TBS의 역할이 필요
11. 직원들 간 편차가 심한 시간외수당 개선 필요, 못 받거나 과도하게 받거나 하는 부분에 대하여 조사실시 후 조정요청함.
12.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광고유치추진비와 미디어정책 대외협력비를 증액할 수 있도록 요청.

□ 120 다산콜재단 : 8건

1. 120다산콜재단의 핵심적인 업무인 응대율 문제 해결을 위해 병가사용 개선, 전화 외 상담매체 활용 등 변화를 강구하여 현 정원 안에서 혁신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2. 인력 충원을 위한 계획은 시기에 맞지 않음. 어쨌게든 현 정원 안에서 혁신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를 선행 검토할 것.
3. 시간대 별 상담사 배치에 있어서 재단 자체에서 데이터 분석을 면밀하게 하여 효율적인 인력 운영 시스템을 구축할 것.
4. 2019년도부터 2021년도 다산콜재단 만족도 조사 실시 결과 공기업담당관에게 의뢰한 조사가 재단에서 의뢰한 조사보다 샘플 인원이 높은 대신 만족도가 낮은 것은 개선 필요.
5. 형식적인 치유 프로그램, 감정보호 프로그램 대신 실질적인 방안으로 개선 요망.
6. 다산콜재단 직무분석 및 조기진단 연구용역 등 관련예산을 전용하여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사전보고 필요함.
7. 감사자료 제출을 보면 맞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세밀하게 검토 후 제출하도록 시정.
8. 5급 정원 290명에 비해 현원이 많이 부족한데 직원들 사기를 위해 인사적체 문제는 잘 해결하기 바람.

◆ 여성가족정책실 - 27건

1. 보호치료시설인 살레시오 청소년 센터 건 관련하여, 서울시에서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니 영등포구청과 협의하여 내용파악 및 조치 강구하여 보고할 것
2.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홈페이지에 신고번호 등 보완할 것. 아동학대 원인을 아동 요인으로 표현한 문구 등 시정할 것
3. 여성가족재단 스페이스살림의 시공 하자문제는 서울시가 직접 나서서 문제해결할 것
4. 아동양육시설인 강남드림빌 관련하여, 아동학대, 회계부정 등 심각한 문제 있음. 시에서는 개선명령만 하면 끝이 아님. 자치구와 구체적으로 협의하여 조속히 조치되도록 하고, 세부 사항을 파악하여 별도로 보고할 것
5. 우리동네키움센터 관련하여, 수요와 공급에 맞게 제대로 설치되었는지 다시 점검하고 자치구간 격차에 대해 해소 방안 마련할 것
6. 코로나로 인한 일반마스크 착용시 언어발달에 장애요소가 됨.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린이집 아동의 의사소통 발달 위해 투명마스크 지원 확대 필요. 지급 계획 및 예산 마련할 것
7. 스페이스살림 준공한 지 얼마 안 되었고, 준공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한 보수조치 후에 다시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됨. 또한, BF 예비인증 후 본인증에서 지적사항 많음.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하자가 처리될 수 있도록 조속히 조치 필요
8. 요소수 대란으로 인하여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행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현황 파악하고 대책 마련할 것
9.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2에 의거 시장은 사회복지시설의 수탁기관이 변경된 경우 종사자의 고용승계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21.10월 개정된 민간위탁 관리지침은 종사자가 10명 미만인 경우 고용승계 비율 조정범위 25~80%로 조정된 것으로 규정에 위배됨. 개정 관리지침 적용 대상 민간위탁기관 현황 정확히 파악하고, 개정 지침에 대한 재검토 필요
10.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사업을 민간, 가정 등 다른 어린이집 유형으로도 확대할 것

11. 법인 소속 어린이집원장은 산재보험이 지원되나, 개인 사업자로 구청과 계약 맺은 국공립어린이집원장은 산재보험이 안 되는 불합리한 구조임. (국공립어린이집원장에 대한 중소기업산재보험료의 지원 등)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이 4대 보험 가입이 어려운 것에 대한 대안 마련할 것
12. 우리동네키움센터 확충현황을 보면 자치구간 격차가 큼. 관심을 가지고 자치구와 지속적이고 긴밀하게 협의하여 자치구간 격차 줄이도록 노력할 것
13.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에 대해 정부평가 인증취소 관련, 2~3년이 지나도 등급 조정이 안 되어있음. 인증 평가 조정 기간이 너무 길어 개선 필요하며, 평가지표, 평가방법 등 개선할 것
14. 어린이집 CCTV 설치 후 5년 이상 노후화가 심함. 아동학대 제보 관련 의심 시, 노후화된 CCTV의 경우 확인 어려울 수 있음. 개선할 것
15. 어린이집 이용 불편 신고 관련, 행정지도가 시정명령에 그치는 등 강도가 약함. 강력한 패널티 마련할 것
16. 공유어린이집 사업과 관련하여 자치구 전담요원 및 보조교사에 대한 공동체 내 공유프로그램 참여 수당 및 인센티브 방안 마련할 것
17. 국공립어린이집 중 노후된 시설도 많고, 아동 정원 충족률이 낮은 곳도 많음. 리모델링을 통해 시설 개선 및 운영난 해소토록 노력할 것
18. 아이들이 학교돌봄터 사업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19. 보육교사의 보수교육, 병가 등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담임정교사 지원 방안 강구할 것
20. 서울시가 여성인력개발센터 임대보증금 지원에서 임차료(월세) 지원으로 정책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2개 센터만 서울시 정책에 따라 임차료 계약을 하였음. 이로 인해 18개 여성인력개발센터 중 유독 2곳만 천만 원 이상의 막대한 임차료를 부담해야 하는 부당한 상황 발생함. 서울시 정책 변화에 충실히 따른 기관이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정작 서울시 대책은 전무한 상황임. 막대한 임차료를 부담하고 있는 일부 센터(2개소)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할 것

21. 보조금 사업 관련 부정수급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보조금 환수 외에 별도의 제재조치를 마련할 것
22. '서울우먼업인턴십' 사업은 여성능력개발원의 인턴십 사업인 '서울형 뉴딜일자리 일자리메이커사업'과 유사·중복 사업일 뿐만 아니라 사업 대상자 선정과 실습기관 배정, 근무 내용 등에서 총체적으로 부실함.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에게 재취업 기회를 제공한다는 사업목적과 달리 일부 참가자는 혼인·임신·출산·육아를 경험한 적 없는 미혼 여성으로 밝혀져, 인턴선발 방식과 경력단절 증빙서류 등 관련 절차 점검 필요. 홍보예산 과다하며, 유사·중복 사업에 대한 정리와 지속적인 취업연계가 가능한 민간기업 위주로 사업을 추진해 내실 다지도록 할 것
23.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채용 시 성범죄경력 조회 필수사항임. 영등포구의 경우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 완료한 것으로 제출했지만, 위반 내역에서는 조회 미실시로 과태료 부과한 사실이 확인됨. 또한, 「아동복지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거나, 과태료 부과 대상 불법행위가 3년 연속 이루어졌음에도 행정처벌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거나, 뒤늦게 과태료가 부과되기도 함. 이에 대한 서울시 지도감독 이루어지지 않았음. 또한 이런 기본 법을 이행하지 않는 시설에서 지속적으로 아동학대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서울시의 역할이 필요함. 서울시는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고 시정할 것
24. 서울시 각종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성비 불균형이 여전함. 특히, 노동·건설·도로 등 분야 위원회는 여성위원 비율이 낮고, 보육·식품 관련 분야 위원회는 남성위원 비율이 낮아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남.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 마련할 것
25. 성폭력 예방 및 성 인권 교육의 경우 참석인원수 등 정량적 평가만 있고, 피드백에 대한 지표가 없음. 교육 후 참석자 무작위 선별해서 카운슬러 두고 랜덤 체크하는 방식 또는 설문조사를 통해 교육내용 보완하는 등의 방식으로 내실 있게 운영할 것
26.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의 교육안은 성폭력 자체의 부도덕성보다는 성폭력을 저지르면 불명예를 안게 된다는 가이드라인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교육방향성은 근절에 방점을 두고 '~하지 말라'는 내용이 대부분임. '~하자'는 방식의 긍정적 시도를 담은 가이드라인으로 변경할 것

27. 강서구의 경우 인구비율 높고, 젊은 층이 많은데 우리동네키움센터 4개소만 설치되어 있는 것에 비해 노원구의 경우는 20개소가 설치되어 있음. 자치구별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

◆ 여성가족재단 - 1건

1. 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지원자의 전문 역량에 대한 검토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심사위원 구성과 기본적인 제척사유도 지켜지지 않는 채용절차 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임. 심사위원 구성 기준 명확화 및 심사위원의 전문성 확보, 심사위원과 합격자와의 이해관계 여부 확인 절차 철저 등 채용 과정 및 심사(제척·기피 등 이해관계 확인 절차 포함)의 절차 적정성 제고하고, 채용 관련 감사결과 보고할 것

◆ 여성, 아동, 외국인주민 관련 시설 - 20건

(여성능력개발원, 동부여성발전센터, 서울여성공예센터 더아리움, 서울특별시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 여성긴급전화1366 서울센터, 십대여성건강센터, 서울상상나라, 시립꿈나무마을 초록꿈터, 시립꿈나무마을 파란꿈터, 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 서울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 제1호 노원·도봉권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서울글로벌센터(외국인주민 생활지원 사업))

〈여성능력개발원〉

1. 징계위원회 개최 없이 '주의' 처분을 내림. 징계처분을 내릴 때에는 징계 당사자가 정당한 처분임을 인정할 수 있도록 반드시 징계위원회를 거쳐서 처분을 내리도록 할 것
2. 직원 채용 시 자격기준을 임의로 변경하고 그 내용에 혼선을 준 문제가 있음. 시정할 것

〈서울여성공예센터 더아리움〉

1. 생활창작프로그램, 감고당길 공예마켓 등 사업비 대비 효율성 떨어지는 사업 다수 존재함. 개선할 것
2. 감고당길 공예마켓은 결과보고서가 부실할 뿐만 아니라 결과보고서 상 결산내역과 세부내용이 불일치하고, 2019~2021년도 회계감사보고서와 추가 제출 자료의 인건비 지출총액이 불일치하는 등 자료제출이 불성실함. 개선할 것
3. 인사위원회 위원 구성 중복, 채용위원회 외부위원 비율 등 규정에 맞지 않게 인사위원회·채용위원회가 구성되었음. 시정할 것
4. 민간위탁 지침 등 운영규정과 임금 관련 기준을 서울시 산하기관에 맞게 구비하여야 하며, 임금은 생활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그러므로, 관리운영규정 중 '임금' 부분에서 '고시한 생활임금을 준수하도록 노력한다, 서울시 예산 상황에 따라 생활임금 적용 여부는 달라질 수 있다'는 표현 정리할 것
5. 관리운영규정 제29조 시간외근로수당 및 포괄임금제가 명시되어 있는데, 연장근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업장의 경우 포괄임금제에 집어 넣고 야간 또는 연장 근무를 시키거나 임금은 20시간으로 한정해 놓고 훨씬 많은 시간 일을 시키는 문제 등에 대해 사회적으로 지적이 많은 상황임. 관리운영규정 개정할 것
6. 각종 위원회 구성 시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의 기본적인 법과 관련된 위원을 한 명 정도는 채우도록 노력할 것
7. 취업규칙 중 복무수칙에서 '직원은 센터의 직원임을 명심하고 제 규정을 준수하며, 항상 건강에 유의하고, 명랑·활발한 태도로 근무한다'는 표현이 있음. 정관이나 규칙은 평가 가능한 정량적·객관적 지표로 규정할 것
8. 업무처리 기본사항 가운데 '업무시간 중에 10분 이상 자리를 비울 경우 사전에 팀장의 승인을 받는다'는 내용이 있음. 인권침해 요소가 큼. 바로잡을 것
9. 일일 업무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불필요한 행정적 절차가 아닌지 검토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시정할 것
10. 이직률 높고 매년 지도점검 시 지적 건수가 너무 많음. 좋은 일자리 문화 만들고, 기본적인거나 상식 밖의 것들이 계속 지적되지 않도록 할 것

〈여성긴급전화1366 서울센터〉

1. 교육사업 집행률 18.7%로 매우 저조함. 교육을 적시에 실시해서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것

〈서울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1. 현장조사 지원 사업의 경우, 목표 대비 실적·달성을 저조함. 개선 필요
2. 아동학대 의심사례 신고 접수시, 접수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사례관리 전과정에 대하여 면밀히 점검할 것

〈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

1. 가정복귀된 학대아동에 대해서 정말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가정복귀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가 가정복귀한 아이들보다도 훨씬 부족함. 가정복귀프로그램이 의무화되지 않은 경우 등을 포함하여 아이들이 복귀한 가정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느냐를 계속적으로 확인하여 보호하고, 법이나 조례 등 법률적인 지원이 필요하면 강구할 것
2. 급하게 도움받기 위해서 들어간 아이들이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신고전화번호나 어떻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관리할 것
3. 가족기능회복 프로그램, 학대예방교육, 홍보물 배포, 캠페인 등 목표 대비 실적·달성을 매우 저조, 개선 필요

〈1호 노원·도봉권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1. 노원·도봉권 자치구별 이용 편차를 해소 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하고, 지역아동센터 이용 촉진 방안 마련할 것
2. 시설 내 아동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수립할 것

◆ 복지정책실 - 21건

1.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5년 동안 총 225억 원의 재원과 행정력 투입되는 사업으로, 7개월 남은 시장임기로 완료할 수 없는 사업임. 안심소득 추진을 위해 서울시 복지예산 대부분을 쏟아 부어야 하는데 꼭 추진을 해야 하는지 의문임. 안심소득 신청방식 및 평가의 적절성, 근로유인 저하 등 비공식노동시장 참여 가능성, 서울 전역 확대 시 막대한 소요예산 및 재원 확보에 대한 의문 등 여러 문제점이 있으니 사업의 실효성과 필요성에 대해 재고할 것
2. 50플러스 재단 대표의 요구자료 미제출과 행정사무감사 불출석에 대한 조치사항 마련할 것
3. 하상복지재단 산하 시설에서는 반복적으로 심각한 장애인 학대사건이 발생하고, 회계부정 등 부적절한 운영으로 수 차례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바 있음. 재단 역시 후원금 용도의 사용으로 인한 회계부정, 법인 산하 보조금 시설 종사자의 법인 수익사업 수행으로 인한 보조금 목적외 사용 등으로 수사의뢰 처분을 받는 등 재단운영의 총체적 부실을 지적하며, 이로 인한 서울시의 다수 이사 해임명령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대로 책임지지 않고 있는 이사회에 대해 하상복지재단 이사회의 혁신을 포함해 법인의 정상화를 위한 서울시의 향후 계획과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주문함
4.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의 경우 부적정한 세출예산 집행, 연구용역 수행 및 자문회의 구성의 문제점, 직원 채용 및 수당 지급의 부적정 등 센터운영에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었고 그 대부분은 여전히 명확하게 해소되지 못하였음.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 철저히 할 것
5. 보조기기센터에서는 고가의 보조기기를 구입한 후 한 번도 대여되지 않은 사례가 다수 존재하는 등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음. 지체장애인부터 시작해서 많은 유형의 장애인분들이 보조기기센터를 잘 모르고 대여할 것이 없다고 이야기함. 시민의 세금인 예산을 제대로 집행해야 하는데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으니, 개선방안을 제출할 것
6. 2020년 시설 행정사무감사에서 복지관 식단을 개선해 달라고 요구하였음. 올해는 조리식을 추가하는 등 작년보다 많이 시정이 되었으나, 아직도 레토르트가 많이 제공되

어 영양이 부실하다고 보이므로 조금 더 어르신들의 영양에 신경 써 줄 것

7. 푸드마켓 사업의 경우 자치구별로 편차가 크고, 푸드마켓 이용대상자 46.5만명 중 실제 이용인원은 7만명에 불과하는 등 푸드마켓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못함. 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할 것
8. 탈노숙, 탈쪽방을 위한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할 것
9. 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으로 차량을 교체했는데, 해당 시설이 아닌 목적 사업 외 다른 용도로 법인에서 사용하는 경우 있음. 이에 대해 파악하여 조치할 것
10. (노숙인, 쪽방촌) 기부 받은 의류에 대한 관리 자료가 없음. 현장 관리 강화할 것
11. 따스한채움터 문제 지속됨. 노숙인 폭행, 자금횡령, 시간외 수당 부정수급, 직원 부정 승급, 노숙인 일자리 갖기 사업에 특정 인물이 몇 년 째 해당시설에서 근무하는 등 문제가 계속되고 시설장 교체만으로는 근본적 개선이 안 됨. 구조적인 결함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 서울시에서 직영하는 방안 강구할 것
12.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종사자 10명 미만인 극소수 기관의 경우 고용승계 비율을 25~80%로 조정 가능한 예외규정 신설됨. 소규모 기관 종사자의 고용불안과 차별을 초래하는 개정 지침에 대한 재검토 필요
13. 서울시 장애인 일자리가 한시적, 단기 일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됨. 장애인의 공공 일자리 등 일자리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14.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조례 제6조에서는 우선구매대상기관의 장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재무과에서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해 하향식으로 우선구매 목표액을 설정하고 있음. 재무과와 복지정책실이 협의하여 조례에서 명시한대로 개별 부서, 기관들이 자체적으로 목표를 설정해 상향식으로 이행계획 수립하고 달성할 수 있도록 운영방식 개선할 것
15. 서울시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의 부적절한 세출예산집행과 돌봄가족휴가사업 선착순 대상자 선정 부적정, 조례에도 명시되지 않은 돌봄가족 심리상담 지원사업, 수탁법인과 센터간 부적절한 용역 발주, 법인관계자를 센터직원으로 채용해 서울시

지침에 맞지 않게 각종 수당, 강사비 지급 등 총체적 부실 있었음. 복지정책실에서는 전체 센터에 대해서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전수조사 할 것

16. 장애인 탈시설 목표 대비 이행실적 부족함. 탈시설 장애인의 자립생활 유지를 위한 환경 조성 지원책 마련하고, 탈시설 지원 조례 제정 차질 없이 추진할 것
17.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는 지역사회 자원 연계와 협력체계 구축이 중요한 역할이나 대부분 지역연계사업 내용이 전무한 상태임.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서 지역연계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 할 것
18. 서울시는 시민들에게 사전정보공개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홈페이지에 2019년 이후 업데이트 된 자료가 없음. 이번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현황도 사전정보공개 내용이나 업데이트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확인 후 시정조치 할 것
19. 장애인 탈시설 과정에서 시설의 축소 또는 폐지로 인해 종사자의 고용불안 문제 발생하고 있음. 고용유지를 위한 구체적 대안 마련할 것
20. 서울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의 경우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공간과 편의시설 및 전담인력이 확보되지 않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교육도 부족한 상황임.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하고, 평가체계 만들어서 같은 지적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
21. 노숙인 임시주거지원사업 방침상에는 지원불가 대상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는 '1년 내에 지원받은 경험이 있는 자, 전염병·알코올중독자, 단독으로 거동이 불편하다고 판단되는 자' 등이 지원불가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음. 거동이 불편한 자는 임시주거지원사업 혜택에서 제외되어 있었음. 법령이나 서울시 지침상 장애 유형에 따른 지원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장애 유형 등 특수한 상황에 맞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하고 이를 위해 서울시에서 임시주거지원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 모색할 것

◆ 서울시복지재단,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 21건

〈서울시복지재단〉

1. 안심소득 관련하여 서울시의회에서 예산이 통과 되지 않았는데 복지재단에서 예산을 전용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음. 시정할 것
2. 찾동 사업은 2015년 처음에 시작하여 양적으로 확대되어 왔음. 그러나 서울시 담당부서가 자치행정과, 지역공동체담당관, 복지정책과, 지역돌봄복지과, 여성정책담당관, 보육담당관, 가족담당관,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등에 분산되어 있는 등 복지대상자에게 효율적으로 서비스 전달체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항상 의문이고, 제대로 된 평가지표가 없는 상황임. 이에 대하여 연구용역의 필요성이 있으니 추진 바람
3.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의 센터별 상담관 배치기준이 모호함. 직급 및 자격과 센터별 업무량 고려한 인력배치가 필요하며, 지역센터별 상담유형이나 서비스연계 지원 실적 등에 대한 통계 관리할 것
4. 복지재단 홈페이지와 복지통합자료실(공유복지플랫폼) 홈페이지의 회원가입을 각각 하도록 되어 있어 이용자 접근성 떨어지고,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로그인 시 오류 발생함. 시민들 이용 시 회원가입, 로그인 등에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할 것
5. 복지교육센터 찾아가는 교육의 경우 타 교육기관과 중복됨. 사회복지사에게 방대한 범위의 교육이 지나친 측면이 있으므로 특화되고 전문적 교육이 필요. 또한 공무원 관련 이수교육 수료율 저조하고 최근 3년간 교육내용과 강사가 유사함. 개선방안 마련할 것
6. ‘이웃살피미 사업’은 생계비나 주거비 지원을 하는 서울형 긴급복지와 달리 지역으로 들어가서 발굴 및 연계까지 해야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고독사의 85%를 차지하는 50대 남성 매칭률이 높지 않고, 지원내용 및 교육 내용도 자존감과 사회적 경력이 높은 50대 남성들에게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구성되어 있음. 또한, 발굴 이후

일자리로 연계될 수 있는 망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함. 이웃살피미 사업 내용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보완할 것

7. 사회적고립가구 지원사업 고독사예방을 위한 전문가양성과정 관련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을 위한 교육과정 개편 필요. 사회적고립가구 주민관계망 형성사업에서 가장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일자리 지원임. 관계망 구축에만 머물지 않도록 노력하기 바람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1. 사회서비스원은 기획관리실, 감사실, 전략사업팀, 그리고 종합재가서비스팀 등 조직만 비대하고, 소속기관 모니터링, 경영평가, 실적관리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시정할 것
2. 사회서비스원 든든어린이집 관련하여 급간식 차별화 필요한데 차별화가 되고 있지 않으며, 홈페이지도 찾아볼 수 없음. 시정할 것
3. 민간협력기관과의 소통에 매우 소극적임. 민간 기관들과의 적극적인 소통·협의를 통해 민간곤란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지원하는 공공기관 본연의 목적과 역할에 충실할 것
4. 전일제 활동지원사 간 많게는 3배 이상 업무량 차이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급여를 받고, 반일제가 전일제보다 2배 가까이 많은 일을 하고도 백만원 이상 급여를 적게 받는 등 심각한 업무와 임금 불균형에 대한 문제 인식하고 대책 마련 할 것
5. 사회서비스원 장애인활동지원 매칭 실적 극히 저조한데 긴급돌봄지원단을 별도 예산으로 단기계약직 채용해 운영하는 문제 개선할 것
6. 장애인은 야간·휴일 구분 없이 활동지원 필요함에도, 민간곤란 사례는 회피한 채 민간에 떠넘기고 평일·주간·경증 위주의 서비스 지원하는 문제 지적하며 공공기관으로서 민간이 곤란한 긴급돌봄·중증장애인 집중지원 체계로 체질개선 할 것
7. 사회서비스원 만족도 조사는 적은 모수로 유의미한 결과 도출 어려우니 개선할 것. 송파든든어린이집의 만족도 저조하니 문제점 살펴보고 개선할 것. 만족도 조사 결과 투명하게 공개해 각 기관별로 자체점검 및 개선 할 수 있도록 할 것

8. 사회서비스원 직장내괴롭힘 사건 관련하여, 가해자에 대한 조치 미흡하였으며 2차 피해 발생함. 소속기관장이 가해자가 되었을 경우의 절차 개선, 정기적인 직장내감질 실태 점검, 사전예방 대책, 사건 발생 이후 사후조치 관련 실질적 대책 마련할 것
9. 긴급돌봄지원단 단기계약직 투입 시 서비스를 제공받는 당사자의 유형 및 특성에 맞게 장애인활동지원사 또는 요양보호사 자격자를 적절히 투입할 것
10. 긴급돌봄 수요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초단기로 긴급돌봄 지원인력을 활용하는 것은 서비스 질 확보와 노동자의 고용안정성을 위해 설립한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취지와 맞지 않아 문제가 있음. 고용안정 방안 모색할 것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1. 대표이사 행정사무감사 자료 미제출 및 불출석 이유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보고 할 것
2. 50플러스재단은 연구 인력도 없고 현재 연구를 모두 외주 의뢰하는 등 자체연구 능력이 없고, 교육이나 일자리의 경우 서울시 평생교육센터나 일자리포털에 더 많은 프로그램과 정보가 있으며, 지역에 있는 종합복지관, 노인복지관, 주민센터 자치회관, 노인대학, 평생교육원 등에서 많은 프로그램 진행함. 50플러스재단의 정체성을 재정립할 것
3. 보람일자리, 적합일자리, 중장년 1인 가구 세부사업 중 사업명만 다르고 비슷한 사업을 수행 중인 것으로 보이는 것이 많음. 중복사업에 대하여 점검하고 정비할 것
4. 법령상 가족돌봄 휴가와 휴직 제도가 규정되어 있고, 단협에도 휴가 관련 규정이 있으며, 기관에서 일한 기간에 따라 쓸 수 있는 휴가일수가 정해져 있음. 재단 대표이사의 휴가 사용 가능일수 등 확인해서 엄격히 적용할 것

◆ 복지 관련 시설 - 22건

(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 시립강북노인종합복지관,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 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 시립중계노인전문요양원, 서울시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 서남 어르신돌봄종사자 지원센터, 서울시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남부장래인복지관, 서울곰두리체육센터, 서대문농아인복지관, 커리어플러스센터, 번동코이노니아 장애인보호작업시설, 서울시동남보조기기센터, 서울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브릿지종합지원센터, 양평쉼터, 비전트레이닝센터, 따스한채움터, 돈의동쪽방상담소, 서울역쪽방상담소, 영등포쪽방상담소)

〈시립강북노인종합복지관,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

1. 2020년 시설 행정사무감사에서 복지관 식단을 개선해 달라고 요구하였음. 올해는 조리식을 추하는 등 작년보다 많이 시정이 되었으나, 아직도 레토르트가 많이 제공되어 영양이 부실하다고 보이므로 조금 더 어르신들의 영양에 신경 써 줄 것

〈시립중계노인전문요양원〉

1. 요양원에서 발생한 요양보호사 피해 사례와 관련하여 요양보호사 보호를 위한 조치나 매뉴얼을 구비해 놓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

〈서울시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

1. 돌봄가족에게 여행경비와 돌봄 대체인력 지원하는 돌봄가족휴가제사업의 대상자 선정을 명확한 기준이 아닌 선착순으로 하였음. 시정조치 필요
2. 별도의 예산과목 변경 등 전용절차 없이 돌봄가족휴가사업비를 심리상담사업으로 전용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5조」 예산외 목적 사용 금지 위반임. 시정조치 필요
3. 센터에서 발주한 연구용역을 수탁법인인 '보건복지자원연구회'에서 수 차례 수탁하였고, 유사한 내용의 용역을 반복하여 모법인의 관계자에게 맡긴 사례도 있으며, 센터에서 발주한 위탁연구용역을 모법인이 재수탁하는 과정에서, 용역발주 전 자문회의에 법인관계자들이 자문위원으로 참석 후 수의계약 형태로 2차례 수탁 받음. 시정조치 필요

4. 모 수탁법인 관계자가 센터로부터 강사비를 지급받고 자문회의도 참석하고, 정규직이 아닌 기간제연구원에게 정규직에 준하는 수당을 지급하는 등 부적절한 비용 집행이 의심되는 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후 부당·부적절한 사례가 있으면 적의조치할 것

〈서울곰두리체육센터〉

1. 석면건물일 경우 법적 의무사항 준수해야 하는데 석면안전관리 위해성 평가 합동점검 검증 결과 지적사항이 있으며, 석면농도검사를 검사기관을 통해 2년간 1회 하도록 되어 있고, 유해성 평가도 지정안전관리인이 6개월당 한 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법정 조사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됨. 또한, 석면건축자재 유해성 평가 결과 지하 1층 및 1층 전기기사실과 2층 복도가 높게 나옴. 그럼에도 시설 및 장비 유지보수비 집행률이 낮은 상황임. 석면은 인체에 위험한 1급 발암물질로서 위험도가 매우 높은 물질임. 코로나19로 시설 이용자가 줄어든 상황에서 시설보수 등 예산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관리할 것

〈커리어플러스센터〉

1. 업무추진비 행정처리 관련, 예산의 성격을 자세히 기입하지 않았고 바뀐 행정용어 사용이 미숙함. 2019년도 거마비라는 표현이 있음. 2012년 거마비를 교통비로 바꿨는데 센터 내 지출행위에 대한 회계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음. 운영위원회 실시하고 회의비라고 하고 참석비로 명기하는 등 용어가 달라짐. 기준표 확인하여 적용할 것. 자원개발비 예산에서 홍보비 예산을 분리해 처리하지 않음. 예산 사용이나 사업비 항목을 정할 때 목적에 따라 정확히 분류할 것

〈번동코이노니아 장애인보호작업시설〉

1. 번동코이노니아 장애인보호작업시설의 명칭이 종교적 색채 띠고 있으며,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시설이라는 점 드러나지 않는 모호한 명칭임. 개선 필요
2. 홈페이지 시설소개란에 KGC 인삼공사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는 문구 있는데 서울시 위탁시설 홈페이지 내용으로 적절치 않음. 시정할 것

〈서울시동남보조기기센터〉

1. 보조기기센터에서는 고가의 보조기기를 구입한 후 한 번도 대여되지 않은 사례가 다수 존재하는 등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음. 지체장애인부터 시작해서 많은 유형의 장애인분들이 보조기기센터를 잘 모르고 대여할 것이 없다고 이야기함. 시민의 세금인 예산을 제대로 집행해야 하는데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으니, 개선방안을 제출하고, 4개 장애인보조기기센터에 대하여 부서 종합점검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할 것
2.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들 간에 보조기기를 거래하는 ‘장터사업’의 경우, 홈페이지를 통한 불법거래 발생 시 책임소재 불분명 및 그에 대한 대응책 미비 문제가 있음. 또한,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없이 의료기기가 판매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되는 물품과 거래자 신원 확인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확인 후 시정조치할 것
3. 센터가 운영하는 보조기기 장터의 취지는 좋으나, 시민들은 의료기기인지 보조기기인지 구분이 어렵고 불법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리를 철저히 할 것
4.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4조에 3에 보조기기 구매 시 이용자의 의견 수렴 항목 있으나, 이용자 욕구를 반영한 구매가 이뤄지지 않고 있음. 욕구조사를 통해 보조기기 구매, 내구연한 지난 물품들 보유·처분토록 할 것
5.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보조기기임대현황 497개 중 254개인 55.1%가 단 한 번도 임대되지 않았고, 최근 3년간 구매한 89개 품목 중 단 한 번도 임대되지 않은 기기가 30개임. 내구연한을 10년 이상 넘겨서 보유중인 기기도 상당수인 것으로 확인됨. 보조기기 내구연한에 비해 보유기간이 너무 길어서 임대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며, 서남보조기기센터와 비교했을 때 보조기기 보유기간이 너무 길다고 보임. 또한 보조기기가 제대로 작동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있음. 개선할 것
6. 보조공학기기의 경우 이용자 대상 사전교육 필요함에도 교육이 잘 되지 않고 있음. 사전 교육체계 점검하고, 주변 복지관이나 자활센터의 무료교육으로 안내하거나 연계하는 방안 마련할 것
7. 홈페이지에서 보조기기 정보 확인 어렵고, 보조기기 상태에 대한 설명, 사진 등이 없음. 보조기기 임대 관련 대상별로 홍보될 수 있도록 조치 할 것

〈서울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1. 바우처택시 만족도 조사결과 매년 ‘승하차 안내’에 대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남. 시각장애인에게 승하차 안내는 중요한 서비스이므로 운전기사에 대한 교육 철저히 할 것
2. 코로나19 관련 만족도 조사 내용 중 손소독제 비치, 운전자 마스크 미착용 부분이 있는데 개선할 것
3. 장애인복지콜은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차량은 2015년 이후 158대로 고정되어 있음. 복지콜 대기시간 단축을 위한 차량 증차 및 차량 운전원 증원 대책 마련할 것
4. 보행상 장애를 가진 장애인이 선별진료소, 임시선별검사소를 찾아가기 어려운 상황으로 장애인 이동권 보장 필요. 장애인복지콜 이용자의 코로나19 PCR 검사를 위한 보건소 이동시 차량 지원 대책 마련할 것

〈서울역쪽방상담소〉

1. 쪽방상담소 시립화 및 수탁법인 변경으로 인수인계 과정에서 서울시 허가 없이 후원물품 임의 처리함. 후원물품, 생필품 등의 관리에 철저할 것

◆ 시민건강국 - 13건

1. 스마트 헬스케어의 경우 실물을 확인하지도 않고 업체를 선정하고 계약이 이뤄지기 전에 검수가 이뤄지는 등 많은 절차상 하자의 의혹이 있으며, 업체의 제안사항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시민들이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최신형 헬스케어 기기가 제공되는지 등 모든 의혹이 해결될 수 있도록 면밀히 조사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었을 경우에는 고발과 함께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2. 시립병원들의 필수 의료장비 설치가 예산이 편성 되어도 현장에서는 늦어지고 있는 현상이 계속 발생. 시급성이 요구되는 의료장비가 제대로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3. 서울형 헬스케어 사업(스마트밴드 무상대여)의 경우 진행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어기고, 오래된 제품을 활용하는 등 문제가 많았음.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니라고 판단됨. 사업의 실효성과 필요성에 대해 재고할 것
4. 백신 수요를 분석하여 폐기율을 줄일 수 있도록 할 것

5. 서울시 부적합 약수터 비율이 높음. 음용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할 것
6. 건강도시 환경조성 사업(건강생태계 조성 사업) 관련 내년도 서울시의 예산전액 삭감은 공공보건의료재단의 연구결과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며 '2021년도 지역보건의료 계획'에도 역행하는 포리부동의 행정임. 내년에도 사업을 지속 추진해야 할 것
7. 시립병원 의료인력 충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의료인력을 비롯한 재직 직원이 공공의료에 기여한다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처우개선에 힘쓸 것
8. 시립병원 별 적자해소와 관련하여 시민건강국의 지원 대책 마련하여 보고할 것
9.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 실적 저조함. 개선할 것
10. 서울시립병원 코로나19 전담간호사 배치 관련하여, 조속한 대책 마련과 코로나 상황으로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시립병원 간호사 처우를 조속히 개선할 것
11. 스마트헬스케어 관련 업체선정을 위한 면접 당시 제안서에 납품예정 물품의 실물을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음에도 선정된 업체의 물품을 면접장에서 확인하는 과정이 없었다는 이의가 제기되어 감사원 감사 중임. 적의 조치할 것
12. 부실한 샘플 검수 작업과 계약도 하기 전에 물품 확인부터 진행한 과정 부적절함. 시정할 것
13. 정신위기에 대한 24시간 개입에 대해 시립병원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자치경찰과도 연계할 것. 또한, 병원에서 치료받고 집으로 가기 전에 안정화할 수 있도록 중간쉼터 등 마련할 것

◆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 1건

1. '정신건강돌봄 모형 및 성과지표 개발' 연구 내용은 좋으나, 서비스를 받고 있는 당사자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았음. 성과지표 적용할 때와 그 밖의 다른 연구과제에도 당사자의 목소리 반영되도록 할 것

◆ 서울의료원, 직영병원, 위탁병원 - 13건

(서울의료원, 어린이병원, 은평병원, 서북병원, 보라매병원, 동부병원, 북부병원, 서남병원, 장애인치과병원, 백암정신병원, 축령정신병원, 고양정신병원)

〈전체 병원〉

1. 시립병원들의 필수 의료장비 설치가 예산이 편성 되어도 현장에서는 늦어지고 있는 현상이 계속 발생. 시급성이 요구되는 의료장비가 제대로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2. 장애인 의무고용에 미달한 시립병원들은 시정하고 특히 정규직 종사자를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
3. 병원의 특성상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서울의료원이 운영하는 시각장애인 헬스키퍼,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와 같이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여 장애인 고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
4. 저명한 의료인력 육성 및 발굴, 적극적인 홍보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이 시립병원을 신뢰하고 방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립병원의 부채·적자를 감소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
5. 2020년도 의료질 평가 결과가 좋지 않음. 좋은 등급을 받으면 가산 수가가 증가하는 만큼 현재의 문제점 개선하도록 노력할 것
6. 서남, 서북, 은평, 어린이병원 등 일부 시립병원 최근 4년간 장애인의무고용 달성률이 지속적으로 낮았음. 시립병원들은 병원 내 장애인 맞춤형 직무분야 많이 있으니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장애인고용률 달성할 것

〈서울의료원〉

1. 연간 30-40명의 퇴사자는 생활임금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임. 관련 조례에 따라 근로계약서 상 생활임금 지급을 명시해 생활임금 차별적인 지급문제 개선할 것
2. 서울의료원은 간호사의 이직율이 매우 높으며, 서울형노동시간단축모델 시범기관으로 선정되어 인건비를 지원받고도 간호사들이 체감하는 업무강도에 큰 변화가 없는 상황임. 다양한 노조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직원들이 만족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3. 가임센터의 경우 사업계획과 예산 관련해서 이사회 거치지 않고 의료원장 결재로 사업 시작(「지방의료원법」 위반), 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지방재정법」 위반), 직원채용 시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 및 「서울의료원 인사규정 시행 내규」 위반, 서울의료원장의 서울의료원 사무 책임자로서 서울의료원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결정에 대한 책임(배임죄) 등 각종 의혹을 가지고 출발함. 그러나 투입예산 대비 실적 및 수익이 매우 저조함. 난임에 특화된 다른 병원에서 맡아서 하는 것에 대해 검토할 것
4. 간호사 이직률 높고, 보건복지부의 ‘코로나19 병상 간호인력 배치 기준’에 맞춰 간호인력을 충원하기도 어려운 상황임.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해 서울시와 함께 노력할 것
5. 간호조무사, 조리원, 환경미화원 등 정규직 전환하면서 임금이 더 낮아지는 결과를 낳았음. 이 분들의 임금 등 처우에 대해 부당한 부분 있는지 살펴볼 것

〈보라매병원〉

1. 직원식당 질적인 부분에 대한 직원들의 민원과 불만 감안해 직원식당을 위탁이 아닌 직영으로 운영하는 방안 고려해볼 것
2. 보건복지부의 ‘코로나19 병상 간호인력 배치 기준’에 맞춘 간호인력 충원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며, 간호조무사 인력도 부족해서 업무가 너무 과중함.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해 서울시와 함께 노력할 것

◆ 건강 관련 시설 - 3건

(시립은혜로운집, 서울시자살예방센터,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서울시자살예방센터〉

1. 20, 30대 자살 증가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대책 마련 필요
2. 센터 상담팀을 포함한 근무인원이 자치구 25개 대비 현저히 적어 인원 확충 필요
3. 직원 이직률이 높고, 평균 근무개월 수가 너무 낮음. 응급상담에 대한 트라우마 등 심적 부담요소에 대한 대책 마련할 것

[안전총괄실 · 도로사업소] — 50 건

1.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도로사업소(동부, 서부) 기관운영 감사 결과(2021.7.) 동부도로사업소에 대한 지적사항 중 제설제로 사용하는 천일염의 납품기한 연장에 대한 지연배상금 부과여부를 확인하여 부과토록 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
2.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2020년 10월부터 11월까지 동부 및 서부도로사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 결과 “천일염 구매 납품기한 부적정”, “염화칼슘 관리 및 보관 부적정” 등 원활한 제설의 저해요소가 상존해 있었다고 사료되는 바, 동절기 제설대책에 철저를 기할 것.
3. '20년 하도급 현장점검결과 지적사항 중 부당특약과 관련하여 안전사고 및 민원처리를 하도급업체가 부담토록 하는 등의 불합리가 아직 적발되고 있는 것 등에 미뤄볼 때 서울시 하도급 개선대책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를 시정할 것.
4.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장기 미집행 도로로 묶여 있던 사유지의 소유자 입장에선 장기 미집행 도로 해제에 따라 상당한 손해를 입게 되는 것이며 분쟁발생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장기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여 추진 경과를 보고할 것.

5. 서울시가 시 발주 공공 건설공사에 '하도급대금 직불제'를 내년 부터 전국 최초로 의무화한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하여 현실성 없는 선지급금 방식 등으로는 하도급대금 체불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할 것.
6. 서울시 대금지급시스템을 대금e바로시스템에서 조달청의 하도급 지킴이로 전환한 것과 관련하여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상 건설근로자 임금 및 자재·장비대금 등의 서울시 지급률에 대한 파악 및 개선노력이 부족하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해 시정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7. 지난 해 7월 감사원의 국가안전대진단 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 국가안전대진단 당시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되었지만 불과 8개월여 후 건물 붕괴위험이 발견돼 입주민이 모두 퇴거한 사례가 발생하는 등 부실점검 사례가 지적되었던 바, 점검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8. 국가안전대진단점검 후 1년 내 화재사고가 발생한 시설이 360개소였는데 이 중 점검 시 지적사항이 있었던 시설이 42개소로 점검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가 조속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바 이를 시정하고 엄정하게 사후관리를 실시할 것.
9. 국가안전대진단 관련 감사원 감사기간 동안 대진단 실시 완료 시설 중 임의로 재점검한 결과 중대 위반사항인 방화문 파손 또는 폐쇄사례가 발견된바 이를 시정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

10. 동국대학교 인근 육교 외장재 파손이 심각한 상태이나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관할 자치구에 전달하여 조치할 것.
11. 국가안전대진단 관련 감사원 지적사항 중 점검을 담당한 공무원 대비 점검물량 실적이 과도한 것에 미루어 볼 때 형식적으로 점검이 이뤄진 정황이 있다 사료되므로 이를 시정할 것.
12. 백년다리 조성사업 중단과 관련해 서울시가 제시하고 있는 중단 사유들은 사업 추진 당시 대비 모순된 부분이 다수 발견되는 바, 행정의 일관성 및 신뢰 회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13. 서울시 국가상징거리 조성계획의 상위계획은 당시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의 '국가상징거리 조성 종합계획(2010.9.)'이며 사업의 범위는 광화문에서 한강 노들섬까지 7km를 대상으로 하는데 백년다리 조성사업은 그 계획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상위계획을 벗어나는 월권 행정을 시정할 것.
14. 백년다리 조성사업의 중단으로 인해 현재까지 파악되는 매몰 비용이 약 25억원을 이를 것이며, 계약 타절로 인한 소송도 예상되고 사업 추진을 위해 투입되었던 행정력 손실까지 감안하면 그 규모는 작지 않다 사료되므로 이를 시정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15. 월드컵대교 개통 이후 인공폭포 인근 병목현상으로 인해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는 바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16. 신월여의지하차도 개통 이후 당초 홍보했던 통행환경 개선효과에 비해 출퇴근 시간 통행환경은 기대에 못 미치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17. 신월여의지하차도의 무인징수시스템과 관련해 사전에 결제수단을 등록하지 않은 차량들에 대해 감면대상 차량 미인식, 통행료 고지 착오 등 다소 복잡해지는 상황이 발생해 이로 인해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홍보 강화 등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18. 재난관리기금에서 비축용 방역물품을 구매함에 있어 수의계약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므로 이를 시정할 것.
19. 도로사업소 공공운영비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예산 편성액 대비 지출액의 차액이 과다한 것으로 여겨지므로 향후 공공운영비 편성 시 신중을 기할 것.
20. 도로사업소 제설 관련하여 제설제 사용량은 없는데 인력 및 장비가 동원되었다는 실적은 허위로 제설작업을 추진한 것으로 의심되므로 이에 대한 경위를 파악하여 시정할 것.

21. 도로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용역이 도로관리시스템, 제설현장 관리시스템, 포장도로관리시스템, 도로굴착복구시스템으로 실제로는 각각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일의 통합유지관리용역으로 발주하는 것은 소규모 소프트웨어 업체의 입찰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통합유지관리용역 발주 및 시행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22. 도로굴착복구기금을 활용해 발주하는 도로굴착복구시스템 관련 용역의 2020년 총 계약금액 22억 25백만원 수준으로 기금예치금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해 방만하게 기금이 사용되는 부분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23. 신월여의지하도로의 당초 건설목적이 해당 구역의 상습 교통정체 해소와 그로 인한 미세먼지, 소음 등을 해소하기 위함인데, 시민들의 의견들을 참고하면 진출입로 부근의 정체로 교통정체 해소효과 측면에서는 아쉬운 면이 있다 판단되므로 진출입로 정체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
24. 자동차전용도로 미세먼지 저감 숲 조성사업에서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는 관목류, 초화류 비중이 월등하게 높게 조성되어 있어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바, 사업의 실효성을 검토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25. 성산대교 성능개선 공사에서 고가도로 배수관 낙수 민원으로 인한 설계변경은 평상시 처리해야 할 민원사항에 해당되어 설계변경이 부적절했다고 판단되는 바, 교량안전과에서는 향후 교량 또는 고가도로와 관련한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평상시 점검업무를 철저히 할 것.
26. 교량이나 고가도로의 배수관이 교각 중간 또는 교각 바로 아래까지만 설치되어 있어 낙수로 인한 도로 훼손 또는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설계지침 마련, 기존 교량 및 고가도로의 배수관 전수조사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27. 금년 1월 6일 폭설에 따른 교통대란 발생에는 서울시의 판단 미숙과 능장대응이 큰 역할을 했다고 판단되는 바, 이를 시정하고 원인을 분석하여 재난대응체계를 정비할 것.
28.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 공원화 사업에서 설계변경으로 공사가 미뤄지고 사업비가 크게 증가했는데, 이는 당초 사업계획 수립 시 면밀하지 못했던 것을 방증한다 할 수 있으므로 이를 시정할 것.
29. 가로등 무선원격 제어시스템이 구청과 남산통제소 간 연동이 되지 않으므로 이를 시정하여 보고할 것.

30. 영등포뉴타운지하상가 해지시지급금 관련 소송과 관련하여 현재와 같은 운영불가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에 대한 책임소재를 규명하여 조치를 취하고, 유사사례 방지를 위한 백서를 제작하여 보고할 것.
31. 시민 한파 저감시설 설치현황이 자치구별로 편차가 큰 것으로 파악되는바, 자치구 지원 한파저감시설 설치·운영 계획 수립 시 균형 있는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정할 것.
32. 황학동 가구거리 인근 도로의 공사현장에 주변이 어둡고 한 개 차선이 차단되어 있어 안전사고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내원이 미배치되어 있는 등 안전위해 요소가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바, 이를 시정하고 공사장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33. 최근 배포된 100% 직불제 의무화로 서울시 하도급 체불 제로 도시를 만들겠다는 보도자료는 현실적으로 실현이 가능할지에 대해 의문시되므로 과장된 보도를 지양할 것.
34. 백년다리 조성사업 추진과정에서 안전성과 사업추진의 당위성 등이 논란이 되던 시기에 공교롭게 설계자문위원과 설계심의위원이 중복된 것은 다양한 의견이 입체적으로 검토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향후 유사 불합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35. 국정감사에서 안전총괄실은 월드컵대교 준공 지연사유를 민원 발생에 따른 것으로 해명했는데, 실제로는 설계가 잘못되어 지연된 것이었던 것으로 사료되므로 지연사유를 허위로 보고하지 말 것.
36. 한강대교 자살방지를 위한 롤링시스템 설치에 장력센서를 이용한 경보시스템보다 효과가 낮다 판단되므로 롤링시스템의 설치를 지양하고 대안을 강구할 것.
37. 시민안전보험과 관련하여 실제 사고 발생 피해자 대비 보험금 지급현황은 미미한 것으로 파악되므로 홍보방법을 개선할 것.
38. 미세먼지 저감 숲 조성 사업에서와 같이 차도 주변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추진 시에는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제한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39. 서울시 관내 중앙분리대 관리가 손상된 채로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쉽게 목격되는바, 현장을 살펴보고 정비할 것.
40.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님에도 자가격리 안내문자를 발송하거나 자가격리자 관리 공무원이 휴일에 연락이 두절되는 등 코로나 19 자가격리자 관리에 소홀한 부분이 있다고 사료되는바,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관리 총괄을 담당하는 안전총괄실에서 철저한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

41. 한강대교 구교에 대해서는 도장공사가 진행 중이나 신교도 부식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보수가 되지 않고 있으므로 신교에 대한 도장공사도 신속히 추진할 것.
42.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방지턱 도색으로 인해 낙상사고 발생이 우려되므로 관련 지침을 마련하여 자치구에 시달할 것.
43. 이전을 앞두고 있는 남부도로사업소 부지의 협소로 이원화, 분리 이전, 고가도로 하부 현장근무동의 열악한 근무환경 등은 문제가 있다 사료되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 근본적인 대책안을 강구할 것.
44. 한강대교 안전난간 설치공사의 난간 높이 1.65m는 한강 조망을 위한 시야 방해 우려가 있으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45. 신월여의지하도로 개통으로 인한 미세먼지, 소음 저감효과에 대한 자료를 축적하여 향후 유사 사업 추진 시 이를 참고할 것.
46. 스마트폴 사업이 스마트도시담당관에서 주관하여 기획하고 있으나 실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안전총괄실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사업 계획 수립 시에도 안전총괄실이 적극 참여할 것.

47. 터널 진출입구에 야간에도 식별이 가능한 고성능 CCTV 설치를 검토하고 시범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적극 검토할 것.
48. LED등 교체사업 추진 시 상대적으로 조명이 취약한 강북권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할 것.
49. 마스크 등 코로나19 대비 비축물자에 대해 유효기간에 따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할 것.
50. 동부 및 서부도로사업소 기관운영 감사결과에 지적된 피복비를 현장 공무원에게만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은 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이에 대한 개선안을 검토할 것.

[소방재난본부] — 28 건

1. 최근 119 신고에 대한 늦장 출동으로 코로나 백신 부작용 환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음. 이는 종합방제센터 직원의 안일한 대응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철저히 조사하여 적절히 조치하고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 등 시정 노력을 기울일 것.

2. 최근 중국으로부터 요소수 수입이 어려워져 전국적으로 요소수 품귀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요소수 부족으로 출동체계에 빈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본부 차원에서 각 소방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고량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각 소방서에 적절하게 분배하여 출동체계에 빈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할 것.
3. 지난 4월 개통한 신월여의지하도로에서 화재 등의 긴급 상황 발생 시 양천이나 영등포 등 인근 소방서에서 현장까지 출동·도착하는 시간이 골든타임인 5분을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출동로 확보와 반복적인 훈련을 실시하고 관련 대책 방안을 강구토록 할 것.
4. 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 화재 발생 시 피해확산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만큼 소방시설의 오작동 및 작동불능상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방안전점검을 철저히 하는 한편, 안전교육 등 대형사고 방지를 위한 소방안전대책을 마련토록 할 것.
5.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해 AI 등 관련 기술이 상당히 발전하고 있는 상황인바 소방재난본부도 대형재난의 예방, 인명구조, 지능형 감지기 등 관련 분야에 적용 가능한 기술이 있는지 검토하고 도입방안을 강구토록 할 것.

6. 일선 현장에 있는 직원들의 근무 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향후 소방관서 재건축 시 소방서 상부에 기숙사 등의 직원 편의 시설을 갖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이를 위한 직원 선호도 조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토록 할 것.
7. 고층 건축물 화재와 관련한 예방대책과 대응방안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바 기존 건축물에 대한 예방 및 대응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향후 신축되는 건축물의 경우 대피 공간 확보 의무화를 강화하고 소방동의 요건에 반영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 바람.
8. 가정폭력 등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 활동 중 이러한 상황이 인지되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할 것.
9. 감염병과 미세먼지 등에 소방대원이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내 환기시설, 첨단장비 등을 활용하여 실내 공기질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10. 최근 3년간 범죄발생 비율을 서울시 공무원과 비교했을 때 소방공무원의 범죄 비율이 높게 나타남에 따라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체계적인 교육시스템 및 대응방안을 강구토록 할 것. 또한 소방공무원의 명예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적 장치를 강화토록 할 것.

11.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TSD) 양상은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치료 및 예방활동은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조직 내에서 정신적 치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원인이라고 생각되는바 직장공동체 전체적인 분위기 개선에 노력하고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토록 할 것.
12. 서울소방재난본부 ‘부분부장제 직제신설’과 관련해 소방재난본부 등 관련기관에 여러 차례에 걸쳐 건의하고 추진할 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 못한바 소방재난본부는 좀 더 강한 추진 의지를 가지고 소방청 등 정부부처에 서울소방의 특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부분부장 직제신설을 요청토록 할 것.
13. 2천만원 이상 수의계약이 매년 300여건에 이르고 있는 상황으로 세부내역을 보면 특수한 기술을 필요치 않은 분야에서도 수의계약을 추진한 사례가 있는바, 향후에는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회계 처리에 투명성을 제고하기 바람.
14. 지난 내곡터널 화재(11.3)에서 검은 연기가 많이 나와 차량이 터널 내에 갇히고 사람들이 차량을 버리고 대피하는 등 상당히 염려스럽고 혼란한 상황이 발생했었는데, 서부간선도로와 신월여의지하도로 등과 같은 장대터널, 대심도 지하터널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더욱 혼란한 상황이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제·배연설비, 소방시설 등이 항상 정상 작동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토록 할 것.

15. 한강교량 자살방지를 위해 금년에 안전총괄실에서 일부 교량에 자살방지 롤링시스템을 도입했는데 자살방지와 인명구조를 위해서는 장력센서 방식이 훨씬 효과가 좋다고 판단되는 바, 이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할 것.
16. 2018년 개정된 소방법을 근거로 소방활동에 방해되는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 강제조치가 가능하게 되었으나 실제 조치 사례는 2021년 1건에 불과한 상황으로, 이는 강제조치에 부담을 느낀 소방관의 소극적인 업무 추진 결과로 보여 지는 만큼 적극적인 대시민 홍보를 통해 과감한 강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더 많은 노력을 할 것.
17. 붉은 색 소화전이 오래되면 색이 변색하여 시인성이 떨어지는 바 소화전 식별이 용이도록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 불법주정차 등을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할 것.
18. 불법주정차 강제처분을 위한 소방서 견인차량이 도봉소방서와 동대문소방서에 각 1대씩 배치되어 있으나 관악이나 금천 같은 지역에 상황이 발생하면 대처가 어려운 바 각 지역별 배치를 위한 견인차량 추가확보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19. 소방재난본부 내부 전산망(소방계시관) 등에 등록된 직원들의 업무개선 아이디어·건의사항·애로사항이 249건인데 반해 업무에 반영되거나 처리된 건수는 그다지 많지 않은바 현장에서 경험한 직원들의 의견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반영 또는 수용 의지를 가지고 계획 수립하고 답변토록 할 것.

20. 대형 재난현장에서 장시간 화재를 진압하는 소방대원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회복차량을 1대만 보유·운영하고 있어 운영상의 불편과 충분한 휴게공간을 제공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바 재난현장회복차량의 추가 도입방안을 검토할 것.
21. 소방청이 화재안전정책의 패러다임을 기존 ‘발생건수’에서 ‘사망자수’로 전환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중앙부처의 추진계획에 발맞추는 것도 필요하지만 서울이라는 특성을 반영해야 하는 만큼 이를 고려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업무보고에도 반영토록 할 것.
22. 소방용수시설 정상 작동 여부 등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해 제출된 자료를 보면, 내용이 누락 되어 있는 등 자료 제출이 성실하지 못하고 매우 부실하다 판단되므로 향후 자료 제출 시에는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할 것.
23.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데 위험한 재난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향적인 대책을 강구 할 것.
24. 최근 3년간 유류 구입 및 사용량에 관한 자료에 따르면, 휘발유의 경우 구입량보다 사용량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전년도 잔고량에 대한 철저한 확인절차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전기차 도입 등에 따라 사용량 예측이 정확하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향후 유류관련 예산 편성 시 정확한 재고량과 수요 예측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

25. 보이는 소화기 설치 사업의 경우, 시민들의 반응도 좋고 그 효과가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되는데 반해, 납품경험이나 제작시설을 갖추지 않은 비전문업체가 공개입찰로 낙찰 받아 설치하는 사례가 많아 제품의 질이 천차만별만큼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할 것.
26. 코로나19로 인한 구급대원들이 출동 및 업무는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구급대원 증원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상황으로, 인력수급과 대체인력 확보, 1급 응급구조사, 구급차량 확충 등의 대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
27. 현재 시범 실시하고 있는 4조 2교대 근무에 대해 현장 소방대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도입방안을 검토할 것.
28. 지난 8월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16.6%의 소방관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보도되어 있는데 근무환경 상 발생할 수 있는 부분임을 충분히 감안해 조직 내에서 불이익을 보거나 편견으로 고통 받는 직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일 것.

[물순환안전국] — 25건

1. 물재생센터의 운영에 있어 노조 파업으로 인한 운영 중단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시민의 보건안전과 생태환경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쟁의 행위 등 시설물의 운영에 문제가 될 수 있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관계 법령의 개정을 건의하는 등 방안을 마련할 것.
2. 탄천물재생센터 2단계 건조시설 공법변경과 관련하여 주민협의체의 또다른 민원이 제기되어 사업이 재차 멈추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합의문을 작성하는 등 사전 의견조율에 만전을 기할 것.
3.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서남물재생센터 내 건조시설이 내년 3월 2단계 준공을 앞두고 있어, 슬러지 100% 자체처리가 가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슬러지 처리비용은 오히려 크게 증가한다고 보고되는바, 발전소가 슬러지 건조재를 반입하지 못하는 상황 등을 사전에 예측하여 대비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못해 지금의 예산낭비를 초래한 바, 향후에는 이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
4. 중랑물재생센터 ‘소화조 내부 보수공사’를 위한 공법선정위원회 구성 시 선발된 위원에게 보안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방지책인 보안서약서를 누락한 바, 관련 규정을 온전히 숙지하여 이와 같은 행정미숙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

5. 물재생센터 특정기술(공법) 선정과 관련하여 한명의 심의위원의 점수로 선정 결과가 바뀌는 불합리한 점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수 있는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할 것.
6. 현재 서울시가 직접 운영 중인 중랑 및 난지물재생센터를 서울 물재생시설공단으로 일원화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마련할 것.
7. 장마철 이전에 각종 공사를 시행할 수 있음에도 공사발주 시기가 매년 연말에 집중되어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바, 자치구와 조속히 협의하여 연초부터 효율적으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8. 토양이 오염될 경우 시민의 보건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정화 조치 연장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판단하여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법정 정화기간인 2년 이내에 정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것.
9. 하천부지내 안전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현행 시설물들에 대해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하고, 하천 내 시설물들의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토록 할 것.
10. 지난 2019년 7월에 오염총량제 기준 초과로 부과된 과징금과 관련하여 기존 주식회사 서남환경, 현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직원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한강환경유역청과의 과징금 부담 소송에 만전을 기해 줄 것.

11. 최근 5년간 난지물재생센터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현황을 살펴 보았을 때, 동일한 업체와 수 차례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보이고, 운반·수집업체의 경우 업체등록기준을 만족하고 있는지도 의심되는 정황이 상당한 바, 4개 물재생센터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과 관련하여 업체선정 및 등록요건 등에 대해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요청하고, 문제가 있다면 법적조치하여 차후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
12. 자전거도로 차집관거 맨홀뚜껑에 부착된 해치로고가 탈락되는 등 맨홀뚜껑 관리소홀로 인해 인명사고가 발생할 개연성을 무시할 수 없는 바, 조속히 현황을 파악하여 적의 조치할 것.
13. 지방하천 준설토를 단순히 사토처리 또는 재활용 업체에 반출하였다고 관리를 떠넘기고,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지 말고 정상적으로 활용되는지 추적 관리할 것.
14.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예산과 관련하여 시의회 예산 심의가 완료된 이후 이사회 의결로 변경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바, 이는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했다고 판단되므로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업무 매뉴얼'을 개선하여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
15. 물재생센터 내 내구연한을 초과한 노후장비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파악되는바, 노후장비 교체가 원활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할 것.

16. 서남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사업 중 서광아파트 측의 민원에 의해 환기시스템이 1종에서 3종방식으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바, 최초 설계 시 주변상황을 고려한 설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급기구 폐쇄로 환기성능이 저하되어 지하시설근무자들이 피해를 입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17. 하수도 시설물정보 정확도 개선사업을 위해 Lidar촬영(3차원 정밀조사)방법을 활용하여 하수관로의 공간정보를 조사하고 있는바, 인명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드론 및 무인장비를 활용한 촬영방법을 강구할 것.
18. 한강은 녹조발생 시 취수원 수질저하 등의 피해가 발생하므로, 녹조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19. 서남물재생센터와 중랑물재생센터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 민원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시설물 관리 방안을 강구할 것.
20. 물순환 회복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많은 예산이 투입된 만큼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고, 사업이 지속·안정적으로 진행 될 수 있도록 추진결과를 데이터화 하여 주기적으로 보고할 것.

21. 물재생센터에서 수처리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 차염소산나트륨은 발암물질 생성과 부산물 발생으로 인한 많은 단점이 지적되고 있는 물질인바, 조속히 친환경 소독제로 대체 할 것.
22. 스마트 물순환 도시 조성 시 빗물 유출량이 감소하게 되는데 유출량 감소로 인한 부작용이 없는지 사전에 면밀히 검토할 것.
23. 우리나라도 물부족 국가에 해당하므로 스마트 물순환 도시 조성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고, 시범사업을 통해 자치구 전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것.
24. 스마트 빗물마을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경제적·환경적 기대효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방안 마련하여 추진할 것.
25. 물재생센터는 국가기간시설인 만큼 보안시스템이 해킹 당하여 시민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보안시스템 구축을 검토할 것.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 26건

1. 서남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사업의 각종 설비 재설치는 불필요한 예산낭비이며 공기연장으로 인해 물재생센터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 있으므로 차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할 것.

2. 서남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사업의 종합시운전 중 이미 설치된 설비의 설계변경 발생은 공사 현장과 시 운영 부서간의 소통부재라고 볼 수 있는 바, 관계 부서 간 소통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3. 건설공사장 안전점검 지적 결과에 대해 조치사항을 철저히 검토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할 것.
4. 건설공사장 안전점검 지적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안전점검 지적사항 발생 시 강력한 조치방안을 강구할 것.
5. 코로나19로 대면 안전교육의 어려움이 있으나 비대면 온라인 교육이나 인원을 제한하는 대면교육의 횟수를 확대하는 등 안전교육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6. 지역주민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못해 신림~봉천 터널 도로건설공사 준공기한이 계속 연기되고 있어 추가적인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바, 현장 중심의 행정을 통해 시민의 혈세 낭비를 차단할 것.
7. 금천소방서 건립공사 중 소방안전체험실 설치공사의 설계변경으로 10배가 넘는 예산이 증액된 바, 공사 중 설계변경이 발생되지 않도록 설계를 철저히 할 것.
8. 피복비가 미편성 되었음에도 피복을 지급하거나 업무 관련성이 없는 직원들에게 고급 등산복 등을 지급하는 등의 문제가 반복 지적되고 있으므로 적절치 못한 피복 지급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람.

9.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의 도면등록은 법적인 사항인 만큼 준공도면 등록을 확대하고 철저히 관리하기 바람.
10. 공사현장 벌점부과 제도와 관련하여 공사현장의 부실사항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잣대로 벌점을 부과할 것.
11. 신림~봉천터널, 서남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사업 등의 사업 공사기간이 연장되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이 발생하고 있는 바, 철저한 공사관리로 공기연장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것.
12. 성산대교 본교 성능개선공사에서 하천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사업을 시작한 점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으므로 사전절차 관련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공사착공이 지연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
13. 본 공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공사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을 지양하고, 본 공사에 집중하여 공사가 지연되지 않고 정해진 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할 것.
14. 청계천로 자전거도로 설치공사 추진과정에서 설계가 변경되면서 당초보다 두 배 이상의 예산이 증가한 것은 부실한 원 설계와 설계변경에 따른 것으로 설계 관리를 철저히 하고 공사가 방만하게 운영되는 일이 없도록 시정할 것.

15. 세종대로 사람숲길과 관련하여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설계 심의가 누락된 채 진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설계문제로 인하여 자전거 도로의 경사도 문제가 발생한 바 이를 시정토록 할 것.
16. BT-IT 융합센터 건립공사는 설계누락, 설계오류 등 부실설계로 31건의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바, 설계 과정에서 설계감리와 감독을 철저히 할 것.
17. 광복교-안양교 도로확장공사가 부실한 설계로 설계변경이 발생하여 예산낭비가 발생되었는데 설계단계에서 예상되는 문제를 충분히 반영하여 공사 중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과 공사기간 연장을 최소화할 것.
18. 서울시는 중대재해 발생 하도급업체 제재대상 검증위원회 개최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대재해 발생 시 검증위원회를 개최하여 철저히 검증할 것.
19. 성산대교 교각 보수공사와 본교 성능개선공사가 안전총괄실 교량안전과에서 각각 예산편성하여 도시기반시설본부로 공사 추진을 의뢰하였으나 별도의 계약절차 없이 교각 보수공사를 성능개선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처리된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별개 사업의 경우 절차에 따라 각각 계약을 통해 사업을 철저히 관리토록 할 것.

20. 월드컵대교 등 부실설계를 실시한 업체 및 용역 참가업체에 대한 벌점부과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할 것.
21. 구상권 청구소송 소멸시효가 전에 구상권을 청구할 것.
22. 공공 건설공사장 내 편의시설 미설치 현장을 조사하여 과태료를 철저히 부과토록 할 것.
23. 성산대교 복단 성능개선공사 시 가설교량의 복공판 소음으로 인해 대교를 통과할 때나 하부공원을 통행할 때 이로 인한 피해가 상당했던바 본교 성능개선공사 시에는 공사 중 소음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것.
24. 성산대교 본교 성능개선공사추진에 있어 하천점용허가지연으로 인한 공기연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
25. 성산대교 성능개선공사 준공 후 향후 관리를 위해 도면을 빠짐없이 건설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토록 할 것.
26. 성산대교 성능개선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

[기술심사담당관] — 12 건

1. 건설공사 품질관리계획 적절성 확인 대상의 범위가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로 규정되어 있어 서울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대부분의 공사가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므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2. 최근 5년간 우수건설현장 관계자 수상자 중 소속업체가 법령위반에 따른 과태료 등의 징계조치를 받은 사례가 발견된 바,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표창기준을 재정비 할 것.
3. 기술용역타당성심사 대상 중 1,500만원 이하의 공사의 경우 발주처에서 자체적으로 타당성심사를 실시하는 것은 객관성 논란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전문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할 것.
4. 서울시가 ‘설계경제성운영지침’을 개정하여 설계경제성(VE) 검토대상을 총공사비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변경하여 그 대상을 대폭 축소시켰는데, 100억원 이하의 대상에 대해서도 효율적인 VE검토가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5. 설계경제성(VE) 검토가 예산절감이라는 장점이 있기는 하나, 예산절감에만 초점을 맞출 경우 성능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효율과 효과성을 모두 고려한 설계경제성(VE) 검토를 실시할 것.

6. 건설기술용역업 등록기준 미달업체를 처리함에 있어, 3개 업체에 대한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장기간 누락한 사례가 있는바, 추후 이러한 업무상 과실이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책을 강구할 것.
7. 공법선정위원회 정성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한명의 심사위원 점수로 공법 선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가 있는바,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
8. 설계심의사후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올해 단 한건의 사후평가도 실시되지 않았는데, 이는 코로나19 확산이라는 불가피한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매우 저조한 실적으로 판단되는 바, 보다 적극적으로 설계심의사후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할 것.
9. 설계심의사후평가의견서를 살펴보면 설계심의 시 지적받은 사항이 반영되지 않았으나 조치되었다고 보고되거나 재 지적 받은 사례가 발견된 바, 설계심의 시 지적받은 사항이 올바르게 반영되었는지 검토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구축할 것.
10. 공법선정위원회 위원 구성 시 보안서약서가 누락된 사례가 있는바, 추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검증을 실시할 것.
11. 올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공기적정성심의대상이 총공사비 300억원의 건설공사에서 1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로 심의대상이 확대되었으므로, 건설기술심의 시 이점에 유의하여 누락 없는 공기적정성심의를 실시할 것.

12. 현재 조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적정 공사기간 검토 서비스’로 인해 많은 발주기관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바, 이와 같은 시스템이 서울시에서도 실시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 할 것.

[서울기술연구원] — 13 건

1. 정원 대비 현원에서 결원 발생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 되는 바 원장 선임 즉시 조직구성 및 연구원 역할 등과 관련하여 재정비를 추진하고 인원을 충원토록 할 것.
2. 기술혁신센터 사례와 같이 부서의 업무가 타부서로 이관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됨. 사전에 위원회와 상의를 거쳐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토록 할 것.
3. 전임원장의 임기만료가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장 선임절차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해 현재 원장자리가 공석인 상황이며, 이에 연구원이 상당히 혼란스러운바 원장 선임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수시로 보고토록 할 것.

4.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의 사적사용 등과 관련하여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도 서울시 종합감사에서 무허가 겸직 사례가 적발되는 등 임직원들의 근무태도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바, 연구원 내 근무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대안을 강구토록 할 것.
5. 연구원 설립 이후 조직개편이 빈번하였다는 것은 깊은 고민 없이 조직을 만들었다는 것으로 이로 인해 배치된 연구원들이 안정적으로 연구에 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조직개편 시 연구원의 미래를 길게 내다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고 조직개편을 추진 할 것.
6. 일부 계약 건을 살펴보면 수의계약 사유가 적정한지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계약 건이 있는 만큼, 수의계약 추진 시에 공정성 문제와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과 규정을 철저히 확인하고 계약업무를 추진토록 할 것.
7. 2022회계연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2021회계연도와 비교하여 상당히 많이 삭감이 되었는데, 정상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응방안을 마련토록 할 것.
8. 연구원 내 공사업무 추진 시 하자보수보증금 징구, 하자검수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숙지한 후 업무를 추진토록 하여 불필요한 논란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9. 현재 감사실의 위상이나 전문성 측면에서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상당한 의구심이 드는바 감사실이 독립적으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감사실장을 외부에서 영입하는 등 절대적인 위상강화 방안을 마련토록 할 것.
10. 일부 간부와 직원들의 경우 재택근무를 하면서 연락이 완전히 두절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근무기강이 완전히 추락해 있는데 지금까지 감사에서 지적 받은 임직원, 그리고 앞으로의 감사에서 지적받은 임직원에게 대해서는 성과급과 인사에 있어 불이익을 엄하게 주는 방안을 마련토록 할 것.
11. 특히 모범을 보여야 하는 연구위원급 이상의 간부들의 근무기강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지는바 원장을 제외한 연구위원급 이상의 간부들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직원 다면평가를 실시하고 다면평가 결과 하위자는 임원에서 일정기간을 제외하는 등 인사에 반드시 반영토록 할 것.
12. 근무기강 확립을 위해 출퇴근 지문인식시스템 사용이나 수시 근태점검 등 간부와 직원들의 근태를 바로 잡을 확실한 대안을 강구토록 할 것.
13. 성실하게 근무하고 성과가 좋은 직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의욕을 고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할 것.

[서울물재생시설공단] — 8건

1. 물재생센터 내 내구연한을 초과한 노후장비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파악되는바, 노후장비 교체가 원활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할 것.
2. 물재생시설공단의 설립취지가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하수처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함이었으나 연봉삭감, 인력부족, 고용계승 등의 문제로 인해 노조와 갈등을 빚고 있는바, 노조와의 원활한 협상을 통해 설립취지에 걸맞는 물재생시설공단 운영이 이루어져야 할 것.
3. 서남물재생센터와 중랑물재생센터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 민원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시설물 관리 방안을 강구할 것.
4. 물재생센터에서 수처리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 차염소산나트륨은 발암물질 생성과 부산물 발생으로 인해 많은 단점이 지적되고 있는 물질인바, 조속히 친환경 소독제로 대체 할 것.
5.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대비하여 적극적인 대처 방안을 마련하여 문제 발생 소지를 미연에 방지할 것.

6. 물재생센터 특정기술(공법) 선정과 관련하여 한명의 심의위원의 점수로 선정 결과가 바뀌는 불합리한 점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를 타파할 수 있는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할 것.
7.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예산과 관련하여 시의회 예산 심의가 완료된 이후 이사회 의결로 변경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바, 이는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했다고 판단되므로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업무 매뉴얼'을 개선하여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
8. 물재생센터는 국가기간시설인 만큼 보안시스템이 해킹 당하여 시민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보안시스템 구축을 검토할 것.

[주택정책실] — 43 건

1. 장기전세주택의 효과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운영적자 문제로 지속가능성이 어려운 사업으로 평가된 바 있었는데 지속적인 공급 추진 이전에 적자문제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2. 사회주택, 공동체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등 공공사업에 보조금이 지원되는 경우, 성과평가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조례에 넣고, 필요시 사업자들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것
3.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애플리케이션, 홈페이지에 작품 번역의 오류가 많음. 이용자 후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작품 번역에 대한 피드백을 제대로 해서 개선할 것
4.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홈페이지 UI 접근성과 가독성이 매우 떨어져 시민들이 이용하기 어려운 바, 향후 개선할 것
5. 코로나로 인해 재개발 조합 총회가 중단되거나 늦어지는 경우가 있고 개최 장소를 찾는 데 어려움이 많은데, 지난 8월 도시정비법 개정으로 총회의 전자적인 방법으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해진 만큼 서울시에서 전자총회 시스템 구축을 할 것
6.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추진시 승강장에서 350m 이내에 대상지의 50%가 포함되는 범위를 측정하는 기준이 명확치 않아, 추가 공공기여 부분이 누락되는 등의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개선할 것.
7.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비 소송과 관련하여, 서울시와 조합과의 토지

보상 기준을 다르게 판단함에 따라, 소송 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관련 조례 개정 및 법률 검토 등을 통해 기준을 마련할 것

8. 주거복지센터를 비롯하여 민간위탁 재계약시 재위탁 또는 새로운 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도, 시의회에 주체, 내용, 과정 등을 상세히 보고하기 바람.
9. 주거복지센터 운영 주체를 민간에서 SH공사로 급하게 이관을 추진함에 따라, 고용 승계 문제, 운영 주체의 불분명성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음. SH공사에도 센터 운영에 많은 문제점들이 있는 만큼, 전반적인 내용을 재검토하기 바람.
10. 사회주택 건립시 잘못된 시공으로 준공 이후 사용승인이 되지 않아 방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감리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할 것
11. 지역주택조합 구성으로 주택마련을 추진시 95% 토지 확보가 필요한데 확보가 사실상 어려워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곳이 많음. 사업 추진을 강구하거나 진행이 어려울 시 자동으로 조합을 해제할 수 있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
12. 재건축 사업시 기존 단지 노후 아파트를 근현대 흔적남기기 사업으로 남겨놓은 곳들이 있는데 주민들이 원할 경우 재검토할 수 있도록 할 것
13. 주거복지센터에 대해 민간이 맡는 부분을 SH공사로 이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SH공사로의 재계약을 추진하고 있음. 관련 내용에 대해 재고할 것
14. 청량리 미주아파트 정비계획 관련, 도로 소유권 문제가 심의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머물고 있는데,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해결 방안을 제시 했음에도 처리를 못하고 있음. 서울시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시킨 후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

15. 주택정책실 내 웹사이트 13개 중 8개가 웹 접근성 품질마크 인증을 받지 못함.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의 웹 사이트 이용 접근성과 관련 있는 만큼 개선이 필요함
16. 금천경찰서 이전부지 공공주택 및 권역도서관 건립 추진이 많이 지연되고 있어 관련 부서간 협의를 통해 신속하게 착공될 수 있도록 할 것
17. 상생형 장기전세주택 공급 확대방안 마련시, 향후 특혜 시비가 없도록 체계적인 제도 등 방안을 마련할 것
18. 동자동 공공개발 사업 예정지 인근 주민들이 민간개발 추진을 요구하고 있는데, 주민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서 정리된 입장을 국토부에 전달해주기 바람
19. 사회주택 운영기관 선정시 감사위원회로부터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 추후에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
20. 사회주택 시행사 직원이 감리중간보고서를 위조하는 등 정황이 있는데 확인하여 조치하기 바람
21.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전시장에 시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작품들이 많으므로, 향후 개최시 고려하도록 할 것
22.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세운상가 전시장 인근 공사장 소음으로 해설방송에 집중하기 어려움. 또한, 야외전시 근무자 교육이 미흡하고,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어 개선하도록 할 것
23.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참여 인원 계산시, 일부 인력이 계수기로 측정하는 등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어 개선할 수 있도록 할 것
24. 주거복지센터 운영 추경예산 편성시, 주거취약계층 발굴을 위한

용역 계획 수립을 위해 상임위에서 증액한 예산을 의회에서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였는데 잘못된 집행이 확인될 경우 책임져야 할 것

25. 아파트관리팀 민원 처리내역을 보면, 추가적인 내용을 자치구 또는 다른 부서로 넘기는 일이 대부분인데, 부서 폐지나 업무 재조정을 검토할 것
26. 역세권 청년주택의 한시 운영 연장을 추진할 경우, 금년도 안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홍보할 것
27. 위반건축물 건수 및 이행강제금 징수가 해마다 늘고 있는데 사후적인 지도점검에만 치우치지 말고, 건축물 인허가 방식과 건축물 건립시 단계별 점검 등 사전적인 예방 방법을 마련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28. 장기전세주택 공급 기준관련 보도자료 배포시, 사업시행인가 기준 물량을 실제 연도별 공급 물량처럼 대규모 공급 같이 발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개선하도록 할 것
29. 소규모 관리구역은 대부분 저층주거지인데 1종과 2종이 혼종되어 있음, 1종이라는 이유로 재개발에 어려움이 많은데 대안을 만들 수 있도록 할 것
30. 주택정책실의 시민숙의예산 반영률이 매우 낮는데, 예산안 편성시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할 것
31.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에 따른 역세권 복합개발 추진시 용적률이 과도하게 상승될 경우 도로, 상·하수도 시설 등 도심 인프라가 과부하될 우려가 있음. 도시계획국과 논의하여 필요시 용적률 관리 방안을 용역이나 자료 정리 등을 활용하여 보고할 것

32.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등 탄소중립을 위한 각종 정책 및 사업들을 추진중에 있는데, 성과가 다소 미흡함. 공공건축물 및 공공 소유 건축물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33. SH공사 임대주택에 설치된 승강기 세균감염방지 살균 LED등 설치 만족도가 높고, 승강기 자가발전장치로 서울시에서 탄소배출권도 획득한 만큼 더욱 활성화가 되도록 할 것
34. 서울시 내 환기 설치 비의무대상인 국·공립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설치 사업이 진행중인데 어린이집에 적극적으로 설치를 권장하도록 할 것
35. 청년월세 지원사업에서 만 19 ~ 39세 구간에 대해 사업일 기준에 따라 받지 못하거나 적은 지원을 받는 연령 구간을 고려하고, 정부 한시사업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대상인 만 19 ~ 34세와 중첩되지 않도록 검토할 것
36. 청년월세 지원, 청년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신청시 제출 서류 등 절차가 복잡하여, 신청인들의 이의 신청 건수가 많음. '서울시 디지털 지갑' 어플 등을 활용하여 절차를 간소화하기 바람
37. 서울시와 자치구 각종 위원회에 위원장을 공무원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청년주택 민관통합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외부 위원으로 하고 있어,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할 것
38.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시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선정 및 평가 기준을 명확히 만들도록 할 것
39.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과 규제 완화 관련하여 완화 대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국과 협의하여 추진할 것
40. 최근 공공재개발시 사전계획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 재

개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하는데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할 것

41. 서울시가 주택 공급의 당위성만을 앞세워 각종 정책들을 발표함에 따라, 주거취약계층·중산층 이하에서 필요한 빌라 가격을 상승시켜 실수요자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세밀한 정책 검토와 대안을 마련할 것
42. 주거복지센터 운영에 시민 사회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는 부분은 중요하고, 주거복지센터 민간위탁에 대해 민간에서 잘 할 수 있는 부분은 계속해서 유지해야 하므로, 기존의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할 것
43. 마곡지구 군부대 이전 관련 무려 10여년이 지났음에도 진행 상황이 매우 더디므로, 신속히 추진하기 바람

[도시계획국] — 27건

1.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관리에 있어 포지티브(positive) 규제를 네거티브(negative) 규제로 전환하여 다른 용도지역 규제와 제2종(7층) 규제의 형평성을 제고할 것
2. 남산고도지구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재정비안 마련하여 고도지구 해제 절차를 추진할 것
3. 용산공원 시민소통공간, 시민참여프로그램도 위드코로나 시기에 맞게 운영을 확대할 것
4. 도시자연공원구역 관련 소송상대가 일반시민인 만큼, 승소여부를 떠나 시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며, 소송 외 해결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
5.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제 관련 자치구 인력부문, 업무처리 분야

- 어려움과 신고유형의 차이 등을 모니터링을 통해 조정 및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조례 제정 독려와 방문 신고 시 대법원 전산망간 호환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앙부처 등과 적극 협의할 것
6. 최근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등에도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있는데, 일조·채광·통풍 등 거주민의 질적 주거환경도 고려해야 하고, 생활인프라 확충도 필요하므로 이에 대해 검토할 것
 7. 토지 대비 주택가격 역전현상이 빈번하고, 이에 따른 이의신청 건수가 증가되는 것으로 분석되므로 부동산(토지·주택) 가격공시 관련 조사·공시 주체 일원화를 검토할 것
 8. 신속통합기획은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으로 바람직해 보이나 결국 사유재산을 모아서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주민 동의 절차 강화를 검토할 것
 9. 도시계획정보시스템 온라인 의견청취 참여율이 저조하므로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 할 것
 10. 지역생활권계획 가이드라인을 잘 만들어 자치구에서 도시계획관리가 잘 이루어지도록 할 것
 11. 35층 규제 완화, 역세권 개발 등 외에 주민이 자체적으로 정비하기 어려운 저층주거지에 대해 공공의 지원방안을 강구할 것
 12. 상업지역 배분 계획 후 실적이 저조해 보이는데 자치구와 협조하여 원활히 추진바람.
 13. 오금현대 재건축 신속통합기획에 주민 반발이 많으니, 주민들의 정확한 요구사항을 확인하고, 찬성·반대 각각의 입장/내용과 비율을 우리위원회에 보고할 것
 14.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다세대주택, 빌라가 개별적으로 입지하면 지역환경이 개선되기 어려우니, 각종 사업을 통해 정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바람.

15. 준공업지역내 용적률 300% 초과한 공동주택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마련해주시기 바람
16. 서울 4대 지천 특화 조명 설치시 향후 관리(청소, 유지관리) 어려우므로 대책을 마련 할 것
17. 저층(단층) 주거지는 기존 가로등이 야간에 너무 밝음. 이 부분을 개선토록 노력 바람
18. 도시계획위원회 등 각종 심의절차가 오래 지속되어 사회적 비용을 비롯해 문제들이 많으니 효율적 진행 등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19. 상업지역 주거비율 완화 한시 규정에 대한 3년 연장 관련 조례개정을 발의했는데, 추가적으로 비주거비율을 완화하거나 해당 조항 영구적용 등에 대하여 조례 심사전 검토해서 보고할 것
20. 2종 7층 규제 완화 보도자료 배포 후, 일부 지역이 완화된 내용을 전면 폐지한다는 것처럼 자료가 작성되어 오보 기사가 난 사례가 있는데, 향후에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
21. 2040 서울플랜이 현 시장의 '서울비전 2030' 실현을 위한 도구가 되고 있음. 서울시 비전과 중장기 방향을 담는 도시기본계획이 시장 방침인 서울비전 2030과는 다른 차원인데도 시장 방침을 우선시하여 서울비전 내용을 서울플랜에 반영하는 것은 잘못된 방식이므로 재고할 것
22. 저층주거지 및 기성시가지 활성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기준 마련 용역을 토대로 현장 여건들을 충분히 반영하여,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 및 개발 대상 지역 확대 등을 모색할 것
23. 도시자연공원 구역 지정시 사유지 보상에 관한 예산액 편성이 매우 적는데, 타 부서의 업무라고 하여 도시계획국에서 사유지 보

상 업무에 관해 소홀히 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24. 제2종 7층 일괄완화 및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우선 일괄완화에 대해 검토할 것
25. 도시계획위원회도 건축위원회처럼 심사위원을 Pool제로 운영하는 것을 검토할 것
26.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전자열람을 촉구하였음. 시민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법 개정을 중앙정부에 요청할 것
27. 도시기본계획을 시의회에서 승인하도록 법개정을 건의할 것

[균형발전본부] — 23건

1. 업무보고 자료에 소관 부서 예산 집행내용이 빠져 있는데, 반드시 기재하도록 할 것
2. 소관 부서에 대한 수의계약 비율이 상당히 높으므로, 사업 추진시 수의계약을 줄일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3. 생활밀착형 집수리 지원사업 및 지역집수리 지원센터 기능이 충분한 사전 계획 없이 자치구로 이관될 경우 고용 문제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22년도까지는 기존 방식대로 사업을 진행하고 사업 방식 변경에 대하여 발생할 문제에 대하여 대안을 마련할 것
4. 이화동 성곽마을과 성북구 마을사랑방, 세운지구 등 도시재생지역에 미완성되고 방치되어 있는 건물, 운영되지 않은 주민소통방 등 관리 및 운영에 총체적인 문제점들이 많음. 지역주민과 현장에 맞는 도시재생 재구조화가 되도록 추진할 것
5. 골목길 재생지역이 신속통합기획 등 재개발지역으로 선정할 경우 바로 해제하거나 개발을 중지하는 경우가 있는데,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어도 진행되지 않거나 소요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해당

지역의 골목길 재생이 지속적으로 진행되도록 할 것

6. 세운상가 일대 개발이 제대로 개선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로 사대문안 경관보호를 위해 건축물 높이를 규제하고 있기 때문인데, 현 상황을 고려할 때 건축 제한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
7. 빈집 매입으로 임대주택 등 생활 SOC 구축시 20년 이상 건물이 라도 안전하고 활용 가능한 건물들이 많음에도 철거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기존 건물들을 활용하여 자원 낭비요소를 줄일 수 있도록 할 것
8. 저층주거지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용자 혜택이 건축자들에게만 돌아가고 있는데 세입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할 것
9.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빈집에 대한 Raw 데이터에 부정확하거나 잘못된 데이터의 정확한 자료 수집 및 관리를 요청하였으나 미흡한 부분이 많으므로 보완할 것
10. 빈집 실태조사에도 등재되지 않은 빈집을 매입하고 활용계획도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어 개선하도록 할 것
11.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빈집 매입 감정평가 보정계수 산정에 대하여 지적한 바 있으나 개선된 내용이 없어 속히 개선하도록 할 것
12. 광화문광장 내 월대도 건축물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월대가 건축물이 아니라는 사유를 내세워 세월호 관련 건축물 설치를 거부해 서는 안 됨
13. 도시재생지원센터 2022년도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는데, 예산 삭감시 기존 현장 지원센터 인력 감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근무자들의 고용 안정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14. 마곡지구 공공지원센터가 공공기여 문제로 준공이 지연되고 있음. 일부 업무의 부서 이관이 있더라도 챙겨주기 바람
15. 마장축산물시장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예산이 감추경되고 규모가 119개소 중 12개소로 축소되었는데, 잔여 구간 107개소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이 없어 잔여구간에 대한 사업 취소로 보여짐. 도시재생사업이 불필요하게 축소되지 않도록 정비계획을 마련할 것
16. 마장축산물시장 일대 불법 건축물에 대한 정비가 부족하여 악취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도시재생 사업 등을 통해 해소 방안 마련할 것.
17. 백사마을 주거지 보존사업 추진시 원주민을 보호하는 정책이 필요함. 토지주의 추가부담금이나 거주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이주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 SH공사와 협의하여 방안을 강구할 것
18. 행정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근거하여, 위탁사무의 중요한 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 각종 위탁업무 및 채용 인원 조정시 시의회의 동의를 받을 것
19. 금년도 골목길 재생사업이 하반기부터 상당히 늦게 추진되었는데, 향후 사업추진시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것
20. 도시활성화 지원사업 2022년도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재검토하여 필요한 곳은 예산을 반영할 것
21. 용역 발주시 업무범위와 기간, 용역비용의 현실화를 통해 잦은 용역기간의 연장, 과업내용 추가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면밀한 사전 준비를 할 것.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용역 발주 시 많은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에 독려하여 유찰 및 단독참여로 인한 수의계약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
22.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사업이 매년 사업기간이 연장되고 사업

추진 중단되는 등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사업비 축소까지 검토하고 있음. 해당 사업 전반에 대해 재검토하고 사업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

23. 현재,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에서 민간투자가 추진되는 구체적인 현황에 대한 데이터를 마련하고 분석하도록 할 것

[공공개발기획단] — 4 건

1. 진행중인 18개 용역 중, 연내 미집행 용역이 12개로 과업지시 등 전반적인 사업관리가 늦어지고 있어 조속한 용역 수행 및 집행이 필요하며, 용역의 관리방안에 대해 보고 할 것.
2. 송현동 부지 매입 협의 당시, 서울시의회가 자원부족을 이유로 반대했으나 의회에 보고도 없이 대토를 진행하고, 교환할 부지의 면적과 금액을 확정하지 않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아울러 공시지가와 등가면적을 기준으로 송현동 부지와 강남의료원 부지를 교환할 경우, 공시지가 대비 시가상승률이 큰 강남의료원 부지의 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교환이므로 공유재산심의 상정철회를 검토 할 것.
3. 사전협상 운영지침에 공공부문 협상대표자 등의 조직개편 사항이 미반영되어 있으며, 체계적 관리 기준이 미흡하므로 점검하여 정비할 것.
4. 서울숲 삼포공장 부지 공원화 관련 도시계획변경 시 자원 마련 대책을 분명하게 수립할 것

[서울주택도시공사] — 32건

1. SH공사 분양아파트 원가공개에 대해 명확한 기준과 입장을 정리하여 혼선이 없도록 할 것
2. 장기전세주택 대폭 확대 방침과 관련하여 공사의 과도한 재정 부

담이 이어지지 않도록 특별 관리할 것

3. 물가 변동에 따른 설계변경시 설계변경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4. 임대주택단지 내 경비원 및 환경미화원 휴게실 냉·난방기가 설치되지 않거나, 1실에 냉·난방기가 모두 설치되지 못한 곳들이 있는데 빠른 시일내에 조치할 것
5. 임대아파트 내 근로하는 노동자들의 채용 및 보수, 근무시간 등이 통일되어 있지 않은데, 공사 차원에서 실태 조사를 하고 가이드라인 등을 만들어 총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6. 임대아파트 내 관리 노동자에 대한 폭언, 폭설 등의 행위를 당할 경우, 향후 계약 업체에 대한 불이익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
7.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에 따라, 행복주택에 기본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데, 일부 설치되지 못한 곳이 있어 파악 후 개선할 수 있도록 할 것
8. 지방공기업법 개정으로 주택·토지 또는 공공건축물 관리 등 자산관리를 공사에서 겸영할 수 있게 되었음에도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향후 추진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9. 복정역 환승센터 복합개발 사업 선정 기준과 관련, 사전에 소송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었음에도 미흡한 대처로 소송이 발생하였는데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할 것.
10. 매입임대주택 공가율이 매우 높은데, 공가 비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매뉴얼 제작을 포함한 대책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11. 임대주택 화재시 원인불명 화재가 세입자만의 잘못은 아님에도, 세입자에게 수리비 전액 부담을 요청한 바 있고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

보한 바 있음. 세입자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을 속히 마련할 것.

12. LH는 건축물화재보험을 통해 임차인이 화재 복구 손해보상금을 부담하지 않고 있는데 비해, SH공사에서는 피해보상금을 모두 부담하지 못하고 있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13. 공사의 공동주택의 외벽 저층부 마감재는 석재뿔칠을 하고 있는데, 라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비용과 건물 디자인 문제를 감안하더라도 석재를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마감자재로 설치할 것
14. 신내지구 콤팩트시티 건립시 저류지 위에 도서관을 짓는 것으로 중랑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서울시와 SH공사에서는 구청과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음.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추진하기 바람.
15. 임대주택 공가 수를 줄이기 위해, 예비입주자를 활용하거나 탈락자분들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통해 입주를 유도하여 공가 비율을 최소화 할 것.
16. 공공재개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추진시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는 부분은 통합심의 등을 통해서라도 최대한 빠른 공급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
17. 마곡 엠플러스센터 준공을 위해 대지부분에 대한 토지보상금을 받아야 하나, 공사에서 시행하지 못하고 있어 신속하게 방안을 마련할 것
18. 사회주택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곳이 많아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경우가 많은데, 투입되는 예산이 적지 않은 만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19. 사회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에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되어야 사회주택 입주가 유리하도록 되어있는데 개선하도록 할 것

20. 세빛섬에 공사가 출자한 금액이 128억이며, 대출보증까지 서는 등 상당한 금액을 수익성이 없는 사업에 무리하게 투자하였는데 향후, 유사한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
21. 2019년 서울시보 ‘마곡도시개발구역 실시계획 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에서 공공청사 부지로 재외동포 교육문화센터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현재 국가나 지자체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하고 있음. 재외동포 재단의 숙원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조치할 것
22. 공사의 이미지 및 신뢰도 개선을 위해 사회공헌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
23. 취약계층 희망돌보미 사업이 올 7월에 종료되었는데, 이후 시행되지 못하고 있어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할 것
24. 임대주택 부적격자 입주와 관련하여 입주자 선정 기준 및 재산 조회 등을 면밀히 점검하여 부적격자 인원이 감소될 수 있도록 할 것
25. 임대주택 불법 전대 적발이후, 소송 진행 등으로 인해 퇴거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한 곳이 있는데 대안을 마련할 것
26. 반지하 주택에서 지상층으로 이주할 경우 임차보증금 연체 비율이 8% 정도로 매우 높아보이는데 개선하도록 할 것
27. 사회적 혼합단지내 입주자 대표회의가 미구성된 곳들이 많은데 관련 법령과 제도 개선 이외에도 코디네이터를 활용하여 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할 것
28. 임대주택 단지내 상가 공실률이 높는데 필요시 시설 개선 등 관리를 강화하고 사단법인 무상 사용 등 여러 대안을 마련할 것
29. 매입임대 공실률이 높는데, 보다 엄격한 기준을 통해 양질의 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대책과 공실 해소방안을 마련할 것

30. 반지하 주택 지상층 이주시 이사비 지급을 이사 후 지급하거나 실비와 책정된 이사비 산출내역 중 더 적은 내용에 대해 지급하고 있는지 여부를 재확인하여 나은 방향으로 개선하도록 할 것
31. 임대주택 재고관리 및 성과평가를 통해 시설관리 등에 대한 차별을 줄이고 불법전대를 감소시키며 입주민의 불만족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 좋은 주거복지를 이룰 수 있도록 할 것
32. 국토부 하자관리시스템에 조치 결과 내용이 등록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는데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

【도시교통실】 - 〈119건〉

1. 서부트럭터미널 조속한 착공일정 및 업체의 과도한 이익 방지 방안 마련
2. 전기차 충전소가 이면도로 등에 생기면서 문제 발생이 우려되므로 활성화 방안 마련
3. 미세먼지 제거차량 본선에 투입 필요
4. 내구연한 경과한 지하철역 자동심장충격기 교체 필요
5. 장애인콜택시 승객이 기사에게 피해를 가하면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방안 검토 필요
6. 교통신호체계 운영용역의 연속된 수의계약에 따른 개선방안, 신생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 마련 필요
7. BIT 설치 사업의 연속된 수의계약에 따른 개선방안, 신생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 마련 필요
8. 5~8호선과 같이 1~4호선도 철도 작업 종사자들의 관리를 위해 자동화된 시스템 도입 필요
9. 키포드 불법개조 견인차량에 대한 관리감독 필요
10. 운전기사 채용 변경 후에도 부정이 있다는 제보가 있다. 현 제도보다 더 나은 제도를 검토해서 보완하는 방안을 강구해 볼 것
11. 서울시 지하철 실내 미세먼지 저감 추진 계획에 시범사업 후 종료된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전 충분한 검토를 하여 조속히 추진 할 것
12. 10억이상 수의계약 특정업체 몰아주기 면밀히 재검토
13. 지하철 종사자들 중대재해처벌법 예방시행계획을 만들어서 안전사각지대 발굴 위험요소 제거
14. 잉여예비차를 신규노선과 배차간격이 긴 노선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할 것
15. 그린파크 사업 유지 필요성 재검토 필요
16. 자전거도로 자치구가 자체 계획 수립·운영에 따라 일관성이 떨어지는데 서울시가 획일화된 지침을 주는 방안 검토
17. 자전거 지하철 연계 계획에 따라 추진할 것

18. 자전거도로 대장 최신화하여 현장을 바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것
19. 어린이보호구역 통학차량 안심승하차존 관련, 교통실 주도로 지침 만들어서 자치구에 배포 필요
20. 23년 하반기 대규모 입주예정인 둔촌주공 관련 5호선 대비책 등 대응 필요
21. 공유주차 서비스를 위한 센서 등 지원하고도 공유율 1.4% 차후 재개발로 인한 부지 축소 등 재검토 필요 지적
22. 둔촌주공 재개발 입주 교통 정책 수립 필요 요구
23. DT공릉점 안전요원 해고, 무인시스템 대체 인근 불법주차 증가 시정 요구
24. DT태릉점 진출입로 문제 지적
25. 경영개선비 및 택시산업 대책 미비 시정 요구
26. 콜 몰아주기 의혹 해소 위해 택시 평가 철회 및 선착순 배정 시정 요구
27. 남산순환버스 정책 한정면허 관련 CNG 조건 등 정책 방향 시정 요구
28. 공공자전거 보험과 일반자전거 보험이 중복지원 가능한 점을 홍보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할수 있도록 자치구와 협의 필요
29. 서부선 차량기지 위치 관련 갈등에 잘 대응할 것
30. 도시교통실 제작 모바일앱은 정보접근성 실태조사 결과 C~D등급에 개선을 0%로 관리가 안 되고 대응도 늦은 것으로 나타남. 향후 장애인, 고령자 등 모든 시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 필요
31. 스타벅스DT점으로 인한 교통체증, 안전사고 문제 발생함. 향후 자치구와 적극 소통하여 방안 마련
32. 환승할인, 장기간 요금동결, 코로나19 등 버스업계 재정지원 필요한 상황인데 2020표준운송원가 적정이윤 산정에 대하여 사업자 일방적 희생만 강요할 것이 아닌 적절한 협의 필요
33. 시내버스 의무 보수 교육이행여부에 따라 인센티브, 페널티 등 부여 방안 검토 필요
34. 가로변정류소 50% 표준형승차대 없음, 자치구 및 거주지역 주민 차별, 형평성 저해 조속 시정 요구
35. 버스정보단말기(BIT) 1,072개소 미설치, 형평성 저해 조속 시정 요구
36. 스마트쉼터 서울시에서 표준모델 만들어 자치구별 균형 필요

37. 따릉이 과부족 거치대 계속 발생, 빅데이터 근거 예측·분석하여 조정 시행 요구
38. 따릉이 빅데이터 최신정보로 현행화 및 빅데이터 활용 철저 요구
39. 카카오택시 프로멤버십제도 통한 승객 골라태우기 심화, 과다 수수료 등 불공정문제, 서울시 대책 요구
40. 온다택시앱 가입 부진 등 목적지표출 방지대책 요구
41. 미아역 승강장 대용량공기청정기 화재발생, 현지 상황에 맞는 필터 조기교체 요구
42. 양방향집진기 시범설치 사업 지속 추진 필요
43.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약 500개소 미폐지, 황색복선 미설치, 불법방치, 개선 요구
44. 어린이보호구역 노상주차장 폐지에 따른 서울시 주도 주차대책 및 단속완화 등 마련 필요
45. 민자철도 운영과 관련하여 도시교통실의 적극적인 역할 필요
46. 우이신설선 재구조화 관련 향후 건설되는 경전철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철저한 검토 후 추진바람
47. 글로벌챌린지2020 우승자 시범설치만으로 중단, 본사업 추진 및 보상검토 요구
48. 신림선 관리운영 관련 도시교통실과 도시기반시설본부 간 업무조정 아직도 미완, 조속히 완료 요구
49. 신림선 관리운영위탁계약 승인 관련 만전 요구
50. 9호선 1단계 운영사의 방만경영 방지를 위해 부대수익 창출안 마련할 필요 있음
51. 요소수 품귀현상에 따라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을 일시적으로 풀어줘야 할 필요 있음
52. 전국 요소수 품귀 현상에도 대중교통 운영하는 도시교통실, 일부 CNG 시내버스, 마을버스, 공항버스, 장애인콜택시 등 디젤 운행 차량 관련 현황 파악 미흡 및 대책 전무
53. 따릉이 신규 대여소 설치 시 명칭 선정 가이드라인 없어 근접한 대여소 간 명칭 혼동 문제 지적, 선정 위원회 또는 가이드라인 신설 필요
54. 별도공간을 조성하지 않고 영업하는 드라이브스루(픽업)에 대한 대책마련 필요
55. '19년도 「서울특별시 청소년 대중교통 이용요금 할인에 관한 조례안」 발의

당시 서울시 타 지역 청소년과의 형평성, 사회적 갈등, 재정부담 등의 이유로 보류 입장이었는데, 최근 만 19~23세 청년 대중교통 요금 마일리지 환급 정책 발표한 것 입장 배치 지적

56. CNG 충전소 관련 충분한 토론을 통해 서울시민이 불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 마련
57. 교통신호제어기 유지보수동일한 업체가 수행하는 문제 해소 필요
58. 교통신호제어기 열쇠 1개로 통일한 것에 대한 보안대책 마련 필요
59. 시내버스 미세먼지 측정사업에 대한 낮은 효율성 대책 필요
60. 카카오와 비교 온다 택시의 메리트 및 택시기사 유인책 부족 지적
61. 제대로 폐기되지 않는 미세먼지 필터, 관리 감독 필요 요청
62. 마을버스 인력난 해소를 위해 대책 방안 마련
63. 준공영제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인 청년추가고용지원금 문제 해결 필요
64. 택시 감차 관련 서울시가 법인에 배당을 줘서 감차하는 방안 검토 필요
65. BIT 사업 관련 특정 업체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
66. 시내버스 평가시 시정협조도에 따라 감점하는 방식 재검토 바람
67.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단속 카메라 정상 작동 필요
68. 어린이보호구역에 안심승하차존 조속 조성
69. 어린이보호구역 노상주차장 삭선 조속 추진
70. BIT 자치구별 균형 맞춰 추진
71. 지하철 CCTV 설치 뿐만 아니라 통합관제 필요
72. 시내버스 CNG충전소 계약 종료에 따른 기부채납협약서 1조 협약목적에 충
전시설과 건물 모두 기부하는 것으로 작성이 되어 있으니 조속히 기부채납
받도록 추진
73. 택시 차량광고를 전면에 할 수 있도록 검토
74. 택시업계를 위해 서울시에서 저리로 용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
75. 스마트쉘터 시범사업에 참여한 민간업체가 손해를 보지 않도록 철저히 사

업추진

76. 장지·강동지하공영차고지 입체화개발사업 관련 주민 및 버스업계와 협의 부실, 소통 강화 요구
77. 장지·강동지하공영차고지 입체화개발사업 지하 수소 전기 충전소, 각종 인화물질 등 관련 안전성 문제, 전문가그룹과 검토를 포함한 근본대책 요구
78. 공영차고지 고도화 관리방안 용역 미집행, 버스공영차고지 부족심화, 지가상승, 예산낭비 등 고려, 계획 세웠으면 지연 안되도록 적기시행 요구
79. 시내버스준공영제 개선 방침 2년 이상 지연. 표준원가제, 버스업체 ERP
80. 통합시스템구축 등 조속 추진 요구
81. 감사원 지적사항 방지방침 미수립, 내부분제(검증절차, 업무분장)와 외부문제(제도개선 등 버스회사와 협의사항)로 나누어 조속히 개선 요구
82. 감사원 감사결과 준공영제에 배치되는 버스회사 부당회계처리 외부감사인 검증 못하는 문제, 준공영제에 대한 전문성 부족, 대책 마련 요구
83. 외부회계감사인단 회계감사시 준공영제 기준에 맞지 않는 회계처리에 대한 서울시 보고제도, 부적절한 회계처리 버스회사에 대한 서울시 외부감사인 지정제도 도입 검토 요구
84. '20년도 준공영제 정산 지연, 당해연도 준공영제 운영 최종실적은 익년도 10월 전 마무리, 그해 행감에서 최종 검증할 수 있도록 요구
85. 드라이브스루 관련 어린이 안전 및 교통체증 민원 과다 발생, 대책 요구
86. 드라이브스루 인허가조건에 교통영향평가 의무화 및 사전 서울시협의 요구
87. 드라이브스루 건축물에 교통유발부담금 강화 요구
88. 티머니복지재단에 前택시팀장 이직, 심판이 선수로, 이해충돌방지대책 요구
89. 카카오택시 목적지표출 방지 위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사업개선명령 검토 및 목적지 미표시사업자에게만 유가보조금 지급 등 검토 요구
90. 택시 승차거부 계속되거나 단속적발 저조, 단속기준 완화 원인, 불법 목인,
91. 시민불편 방치, 대책 요구
92. 내년예산 도시철도 적자지원 1천억 원 편성, 정확한 산출근거 마련 및 예측가능성 높이기 위한 중장기 재정지원계획방침 수립 요구
93. 마을버스 외부감사 12개회사 부적절의견, 특별점검 및 법률검토 통한 재정지원금 환수 검토
94. 마을버스관리시스템 부실 운영, 과대지급 의혹, 재정지원금 산정방식 검증

개선 요구

95. 마을버스 외부회계감사 조례상 시의회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절차 지킬 것
96. 물류센터 자동화재속보설비 미설치, 설치하도록 지도 요구
97. 물류센터 택배종사자 휴게시설, 냉난방, 휴게시간 등 근무여건 열악, 개선 지도 요구
98. 전동킥보드 견인업체 불법개조, 위치조작, 적재불량에 대한 점검 및 불법견인 불시점검 필요
99. 공공자전거 도난 분실 방지 등 체계적 운영방안 마련 및 운영비용 절감 대책 필요
100. 자전거도로 안전방안 마련 필요
101. 자전거보관함 설치 확대 방안 고민할 것
102. 광역알뜰카드 가입이 중단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
103. 9호선 자금 재조달 기간이 길어질수록 비용이 발생하니 조속히 협상할 것
104. 바로녹색결제 예산에 비해 이용자 수가 적어 개선 필요
105.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가이드라인 명확하게 해야 함
106. 도시철도 요금인상 시기를 잘 고려하여 추진할 것
107. 물류단지 신설에 따른 교통정체 분산등 방안 마련 및 계획된 일자리 실현 가능토록할 것
108. 도시물류 체계 구축 시 온실가스 배출 환경적인 부분도 고민이 필요하고 적극 홍보 및 국비가 확보될 수 있는 구조로 가야함
109. 수송물류분야에 있어서도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대비 필요
110. 스마트쉘터 국토부 고시 등 지침에 맞게 기본설계 개선 필요
111. 친환경 버스도입 계획 규모가 축소되고 있는데, 국가정책과 수요에 따라 목표치 상향할 필요성 있으며 적극 도입해야할 것
112. 우이신설 운영 적자로 인한 재정부담이 큰데, 사업재구조화 등 대책 마련해야할 것
113. 노후전동차의 하자 등 정시성 떨어지는데 적기에 교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충분한 재원 확보 노력 필요
114. 현금 없는 버스 사업은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시민 불편 최소화할것

115. 위례신사선 청담역 신설 공사일정 통보해달라는 주민 민원 해결
116. 전동킥보드 관련 안전장치를 만들기 이전까지 즉시견인 시행 유보 필요
117. 인권위 권고에 따라 장애등급이 없는 일시적 부상자 등은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해주고, 운영범위 확대해 줄 것
118. 택시승차대 유지보수 업체인 JC데코와의 계약 연장기간 종료 후 원칙대로 할 것
119.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사업관련 공정 과정에 더 이상의 차질 없도록, 관계기관과 원활하게 협의해 추진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 〈30건〉

1. 동북선 환기구 위치변경 문제 개선 요구
2. 신림선, 동북선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포괄임금제 적용에 대한 개선 요청
3. 공조기 설치 시 미세먼지 등 미래기술발전사항을 고려하여 설비가 설치될 수 있도록 검토요청
4. 신축역사 공기정화시설 설치 시 장기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여 적정위치 선정이 필요함
5. 변전소, 차량용개폐기 등 낙찰자 실적 기준 들쭉날쭉 문제 시정조치 요구
6. 질의 내용 파악이 안되는 등 행정사무감사 준비 미비 문제 시정조치 요구
7. 단일 업체 5년 이상 독점에 대한 문제 시정조치 요구
8. 동일사업에 대한 낙찰 기준 및 신인도 평가 제각각이고 심사 방식 및 경쟁 방식 자주 바뀌는 문제 심사 방식 및 경쟁 방식 자주 바뀌는 문제 시정조치 요구
9. 조달청 입찰공고문 대부분 블라인드 처리되어 있음.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입찰시 공정한 업무처리 개선 요구
10. 폐기물 처리 관련 올바로, 스마트 관리 시스템 연동 등 문제 시정조치 요구
11. 최근 국토부 서부선 직결 협의와 더불어 차량기지 위치를 두고 영등포구에서 반대의견 피력하고 있는데 사업 지연 되지 않도록 요구
12. 신림선 지하수 유출 관련 합몰문제 예방조치, 냉난방 및 열원 등 친환경 활용 및 도립천 수원으로 활용 검토 요구
13. 신림선 보상금 미환수, 관악구와 협의하여 적의조치 시행 요구
14. 신림선 지하수 라돈 재측정하여 김포선과 같은 문제 발생하지 않도록 요구
15. 동북선 착수 후, GW2 지점 사후환경영향조사 시 pH 생활용수 수질기준 초과에도 환경피해방지 조치 없는데, 사업 지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환경부, 서울시 관계부서와 잘 협의하여 대안 제시 필요
16. 동북선 건설, 높아진 공정률 대비 단축 없는 완공 시기 지적
17. 문서의 비공개, 부분공개 비율이 높으며 부분공개 기준도 제각각인데 시민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처사이므로 시정 요구
18. 진접선 차량기지 이전 관련 국가철도공단 위탁사업비가 시설비로 잘못 편

성된 문제 시정 요구

19. 신림선 고무타이어 마모에 따른 유해물질 발생량에 대한 관리 필요함
20. ATO 개량시에 정위치 정차율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 필요함
21. 위례선 트램 차량입찰 지연, 입찰제안서 평가기준 미흡, 최저가 아닌 계약 이행능력 중요, 납품지연 방지대책 요구, 정부 제도개선 의견 개진 요청
22. 위례선 트램 연내 우선시공분 착공 등 전체 준공일정 지연 없도록 철저관리 요구
23. 도기본 행감요구자료 제출부실, 총괄부서가 취합 검증하는 시스템 구축 요구
24. 동북선의 경우, 라돈문제가 부각될 우려가 있는바, 공사 중 라돈측정 등 관리·조치 필요, 신림선도 재측정 필요
25. 요소수 품귀현상으로 공사지연이 없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
26. 영동대로복합개발 사업계획 변경에 대해 교통실과 협조하여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람
27. LTE-R 관련 중소통신사업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검토바람
28. 위례신사선 청담사거리역 관련 정확한 업무 인수인계로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를 위하여 노력 요청
29.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과 삼성동탄선, GTX-A 등 개통 시기 다르 고 사업 추진과정에서 설계 변경 등으로 지연된 부분 지적
30. 자치구와 협의 부족으로 동북선 착공 이후 스마트쉼터 이설 비용 낭비 문제 개선 요구

【서울교통공사】 - 〈77전〉

1. 승강기 유지보수 용역 지역제한 관련 역차별 방지 대책 요구
2. 선로출입관리시스템을 통합(보강)시스템으로 설치 바람
3. 자동심장충격기 내구연한 도래한 것을 순차적 교체 요망
4. 미세먼지 제거차량 본선 영업구간에 투입할 것
5. 공조기 내부 필터에 신제품이 들어갈수 있도록 개선노력
6. 양방향 전기집진기 설치후 추가 비용(인력, 전기료등) 관리 필요함
7. 통합판매대의 품목을 고급화 시킬 필요가 있음
8. 승강기 유지보수 관리감독 담당 인원 수 적은 것 문제 현실에 맞는 충원 필요 지적
9. 승강기 유지보수 업체 신인도 가점에 대한 적정수준을 찾을것
10. 유지보수 발주 전에 발주 안이 유출된 것에 대한 문제 지적
11. 임금 체불 해결방안 필요
12. 교통카드 요금을 자체정산 하는 방법 필요
13. 지하철 혼잡도 사전예보제 신뢰성과 효율성 지적
14. 노후역사 리모델링 사업관련 실효성분석 및 유지보수, 관리를 철저히 할것
15. 미아역 화재경보 미알람 등 공정 감리 문제 지적
16. 대용량 공기청정기 감사후 결과보고 할 것(입찰 관련)
17. 승강기 유지보수 관련 서울시 지역가점 필요성 강조 서울시 지역 업체들의 상생 방안 마련
18. 태그리스 시스템 티머니와 협약 없이 정산 가능한 방안 강구
19. 또타 지하철앱 IOS운영체제 정보접근성 실태조사 C~D등급, 개선을 0%임. 장애인, 고령자 등 모든 시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 필요
20. 우이신설 경전철 3개 환승역에 대한 환승시설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문제 시정 요구
21. 제3노조와 기존 노조간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소통할것
22. 복합형 교통카드 시스템 교통카드 충전·조회 기능도 하지 못하고, 광고·노선알리미 기능도 못한 채 방치되고 있음. 공익광고 표출 등 개선

방안 마련

23. 해피스팟 사업은 업체와 공방이 마무리되지 않고 4년째 방치되어 있어 시민불편이 가중 및 미관저해 문제점 지속 개선 요구
24. 철도사고 증가, 운행 중 승객하차 회송 및 5분 이상 지연 증가 대책 요구
25.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 원인의 80%는 차량고장, 정비실명제, 교육비 충분히 지원해서 기사 이상 자격취득 및 전문교육 강화, 근무평가 강화 등 정비능력 향상 조치 요구
26. 음식조리업종 입점 제한, 경영개선 자구노력 역행, 냄새문제는 환기시설 보완, 노조 협의 통해 개선 요구
27. 재정악화 속 공로여행비 지원, 자구노력 필요, 노조협의 통해 개선 요구
28. 신조전동차 납품지연 및 지체상금 부과, 제작업체 기술력 문제 검토요구
29. 신조전동차 납품지연, 제작업체와 원만히 협의하여 분쟁없이 해결 요구
30. 신조전동차 납품지연, 소송 가능성, 소송대응에 준비철저 요구
31. 미세먼지 기준 일부 역사 초과, 조치 요구
32. 양방향집진기 일부 역사만 설치, 미세먼지 흡입 시범제작 차량 활용 검토
33. 요소수 부족, 총괄관리부서 뒤서 확보대책 및 본부 간 내부분배 관리 철저
34. 1~4호선 잉여인력 5~8호선으로 인력재배치
35. 신조전동차 도입하면서 발생하는 잉여인력 활용대책 요구
36. 지하철 역사 내 이동통신기계실 내부 고온으로 개문해 방치, 보안 관리 미흡 시정 요구
37. 공실 상가에 대한 대책 마련 요구 (소송 및 입찰 포함)
38. 통합관제센터 저조한 사업달성률, 재원 확보 미흡 지적
39. 1역사 1동선 조성 완료된 역사 14개소, 휠체어리프트 미철거로 승객 통행 불편 초래 및 안전성 위협 지적
40. LTE-R사업과 신규차량 TRS 매칭 예산 낭비 문제 시정 요구
41. 장애인화장실 여전히 수치심, 모멸감 발생 문제 시정 요구
42. 장애인 교육 법정 의무교육 미분류 문제 시정 요구
43. 서울메트로환경 업무 미인지 등 지적
44. 메트로,그린환경은 공사에 경영상 도움이 되도록 노력바람

45. 자회사에게 나가는 돈이 낭비요인은 없는지 살펴볼 것
46. 행선안내게시기 때문에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 요구
47. 화재, 사고시 관제에서 영상으로 통제하는 시스템 구축 필요
48. 차량검수가 형식적임. 직원 순환보직 필요함
49. 고객센터를 역무실로 이전시 교통약자가 찾기 쉽도록 할것
50. 자회사 사장의 현장 경영 강화 필요 요구
51. 여유자금 보통예금 예치 중, 금리 높은 은행권 MMDA 운용 요구
52. 자금팀 자금운용 및 재무설계 전문자격증 보유자 및 관련 교육이수 없음, 온라인교육 등 전문교육 통해 전문성 향상 요구
53. 장기미수채권 617억 발생, 발생경위 및 채권관리 전반에 대한 내부 점검 요구
54. 채권관리 부실, 사전 채권확보 위한 채권관리 내부규정 제정 및 전담부서·인력 운영 요구
55. 장기미수채권 외부채권추심회사 위탁 검토 요구
56. 미수채권 발생 및 회수실적에 대한 부서 및 임직원 평가시스템 요구
57. 캐노피 관련 파손사고 증가, 내용연수 설정 등 관리대책 요구
58. 노후시설 투자관련 투자이후 객관적인 성과평가검증제도 없음, 외부위원 및 전문가위원회 검증절차 신설 및 검증결과 서울시·시의회 보고 요구
59. 발빠짐사고 개선 부진, 자동안전발판시범사업 과거 감사원 지적 반복, 사전인증 없이 시민상대 실험, 안전성 인증된 제품으로 시범사업 실시 요구
60. 이동식안전발판 일부 역사 미설치, 모든 역사 설치하고 내용연수 관리, 이용실적 수치화 관리 시정 요구
61. 서울메트로환경과 도시철도그린환경 환경직 근무환경 및 인사 관련 등 문제발생, 사장 대처 미흡, 직접 교섭, 노사공동협의회 구성 등 적극 대응 및 시의회 진행사항 보고 요구
62. 현금 없는 승차가 정책 방향인데 지하철 정기권은 현금 결제만 가능함. 결제수단 다양한 방안에 대하여 모색 필요
63. 지하철 태그리스 개표기 도입 시 타 기관 협의 및 벤치마킹으로 예산절감 필요
64. 지하철 남·여 구분이 없거나, 소변기 가림막이 없는 공용화장실 다수 존재하여 조속한 개선 필요
65. 공사 사고가 잦은 상황인데, 노후시설에 대한 재투자가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 바람
66. 미세먼지저감 추진단 활성화가 필요함

67. 최근 지하철 범죄 증가 추세이나, CCTV 설치율은 저조한 상황임. 연차별 계획에 따라 적기에 교체될 수 있도록 추진 바람
68. 장애인, 사회적 약자들이 개별상가 임대시 할인 혜택필요
69. 지하철 역사 내 생활물류센터 운영 자회사에 위탁, 경영 효율성 증대 위해 민간위탁 고려 필요
70. 소방관리시스템 전수 점검 조치 요망
71. 해피스팟 (철거,소송)관련 철저한 대책 필요
72. 지하철 보안관 사법권 부여 필요함
73. 폐전동차를 몽골에 판매하는 방법을 검토 할 것
74. 지하철 운행 종료 후 전기 차단으로, 특히 대도심 역사 E/L, E/S 이용 불가능 개선 필요
75. 범죄 예방 위해 전동차 내 CCTV 조속한 완비 필요
76. 생활물류센터 틈새시장을 활용 활성화 방안 마련 할 것
77. 민간 건물과 연결된 지하철 역사 통로 유지 관리 관련한 소송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매뉴얼 제정 요구

【서울시설공단】 - 〈43건〉

1. 하이브리드잔디 관련 대책 마련 촉구
2. 장애인콜택시 운전원 안전 위협 등 직원 안전 대책 강구
3. 민간위탁 주차장 수입 현황 관리방안 마련 요구
4. 자동관제 시스템 미설치 주차장 시스템 설치 촉구
5. 월드컵경기장 하이브리드 잔디 문제 시정 요구
6. 포트홀 반복 발생 지점 중점 관리 및 포트홀 발생 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한 조치 요구
7. 지하도상가 승강편의시설 유지보수 관리 철저
8.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대비 예산확보 철저 당부
9. 장애인콜택시 차량 구매 시 일관된 차량선정기준 필요
10. 출퇴근시간 자동차전용도로 공사 관련 시민에게 사전 안내 하여 불편해소 및 민원 해결 노력 요구
11. 내부순환로 홍제천 고가교 내진보강공사 교량받침 납품지연 상황 우려 및 앞으로 업체선정 시 재무건정성 감안하여 제품선정 필요
12. 장애인콜택시 이용만족도조사 결과 운전원 운행 중 흡연 및 휴대전화 통화, 적극 근절 요구
13. 장애인콜택시 운전원 운행 중 흡연 및 휴대전화 통화 관련 징계규정 미비, 규정 강화 요구
14. 장애인콜택시 호출자 정보 표출 계속, 미운행버튼 이용한 콜거부 특정 운전원 2년 간 최대 500건, 적극적 근절 대책 요구
15. 장애인콜택시 콜거부 운전원별 편차 심화, 관련 적극적 조정대책 요구
16. 장애인콜택시 콜거부 관련 운전원 질병 사유로 대량발생 하지 않도록 특별관리 대책 요구
17. 장애인콜택시 요소수 부족, 요소수 확보 및 내부분배철저, 관련 대책 요구
18. 따릉이 탄천정비센터 철회 관련 보상 및 주민소통 강화대책 요구
19. 고척스카이돔 누수 보강 공사 완료했으나, 상시 모니터링해 시행사와 하자 담보기간 결정 필요
20. 돛경기장 지붕 청소용 로봇 개발 시 실효성 확보 방안 마련 요구

21. 지하도상가 수유시설 개폐 관련 일관된 기준 마련 요구
22. 어린이대공원 직원 식당 마련 등 근무환경 문제 개선 요구
23. 서울하이로즈 고척돔 전대 등 특혜 문제 등 시정 요구
24. 고척돔 광고료 수입 잠실운동장 수준으로 개선 필요
25. 근로자 차별 관련 소송있었음, 노사가 협력하여 갈등 없이 운영되도록 할 것
26. CNG충전소 기부채납 범위에 대한 법률해석 요청
27. 임대료 지불 방식에 따른 반포천 매장 비율 조정으로 수입 증대 검토 요청
28. 피복 등 구매시 동일업체 수의계약 지적 및 공정한 계약 추진 필요
29. 따릉이 사고 보험료 증가 지적 및 새싹따릉이 관련 사고 대비 철저 당부
30. 수능 응시생 장애인콜택시 탑승 지원 관련 적극 홍보 및 당일 대비 철저
31. 여유자금, MMDA 등 은행권 고금리 수시입출금식 예금 운용 등 관리철저
32. 자금거래 관련 실시간 상시감시시스템 미구축, 특정거래 등 이례거래 발생 시 감사실에 실시간 알림 등 상시감시시스템 구축 요구
33. 장기미수채권 107억 발생, 사업부서에서 비전문적 관리, 전문관리부서 채권관리 요구
34. 장기미수채권 채권확보 미흡, 채권관리 내부방침 및 내부규정 제정 요구
35. 미수채권 발생 및 회수실적 관련 부서 및 임직원 평가시스템 요구
36. 월드컵경기장 내 스마트워크스테이션 운영 부적정, 장기공실 활용 등으로 개선 요구
37. 공원 내 순찰방역로봇 시범운영 시 어린이 접촉사고 발생 위험 대비 철저
38. 경기장 옥외계단 정밀안전점검(진단) 결과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용역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등의 제재방안 강구
39. 공영주차장 수익금 누락, 정밀안전진단 용역 부실 등 각종 위반사항 발견한 경우 관련 업체, 기관 등 적법한 법적 조치 필요
40. 상임감사 부재로 인한 업무 공백 조속히 해결 요청
41. 따릉이 거치대 설치각도로 인한 보행 불편사항 개선 요청

- 42. 따릉이 사용료 결제 시 제로페이 할인 정책에 대한 타당성 지적
- 43. 팔각당 리모델링 재심의 결과를 수용하지 않은 공사 진행 지적

서울특별시교육청

1. 일부 학교에서 교원 채용 시험 의무 위탁을 규정한 「사립학교법」의 개정 시행 전 진행되고 있는 과도한 채용에 대해 엄정히 조치할 것
2. 그린스마트 사업 추진에 있어 '개축'이라는 용어 사용을 지양할 것
3. 장애학생의 돌봄교실 이용 진흥을 위해 거점형 돌봄교실 설치, 장애학생 돌봄 보조인력 배치 등을 적극 검토할 것
4. 교원 채용 시험 의무 위탁조항' 시행 전 명예퇴직 강요 등을 통해 대규모 신규 채용을 진행하는 서울디자인고에 대한 제재 방안을 마련할 것
5.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교육청 차원의 자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할 것
6. 번들링(bundling) 형태로 추진되는 그린스마트미래학교 BTL 사업의 유지관리 및 보수 관련 비용 중 인건비 절감 방안을 검토할 것
7. 초·중·고교 체육관 무대에 설치된 경사로·리프트의 설치 현황을 파악하고, 기 설치된 시설에 대한 하자보수와 유지관리를 철저히 할 것
8. 교육청이 발주하는 시설 공사 시 불가피한 공사 금액 증가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설계와 계약금액 변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것
9. 그린스마트미래학교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허위 정보 확산을 방지할 것
10. 장애인의무고용비율 준수를 통해 장애인고용부담금이 감소할 수 있도록 할 것
11.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의무예방교육 시행 여부에 대해 교육청이 직접 관리 감독하고,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기관·학교에 대해 불이익 조치를 검토할 것
12.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13. 교직원 화장실 사용 시 별점을 부과하는 일부 학교의 교칙을 조속히 개정할 것
14. 일부 학교에서 화장실에 화장지가 비치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모든 학교 화장실에 화장지가 비치될 수 있도록 할 것
15. 한홍학원의 감사 결과 이행과 즉별경영 척결을 통한 학교 정상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

16. 사학법인의 이사회 회의록 공개 현황을 점검하고, 회의록 정보 중 비공개 처리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것
17. 관내 학교의 장애인 위생시설 설치 현황을 파악하여 관계 법령에 맞게 모든 학교에 장애인 대·소변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할 것
18. 유독성분 배출로 인해 학생, 교원이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각 급 학교에서 개방형 3D프린터 도입을 지양하고, 개방형 3D프린터 사용 시 창문 개방 지침 등을 철저히 준수할 것
19. 특수학교 성폭력 사안 대응을 위해 화장실·샤워실 입구를 확인할 수 있는 CCTV 추가 설치 방안을 검토할 것
20. 지역청별 학교통합지원센터, 특색사업 등의 명칭을 단순화할 것
21. 학교통합지원센터에 대한 학교 현장의 체감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
22. 잔여 임기가 많이 남아있는 교원 위주로 교(원)장 임용을 진행할 것
23. 교육청은 평교사를 대상으로 학교통합지원센터의 역할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것
24. 모든 특수학교에 화장실 비데, 샤워실 설치를 검토할 것
25. 현행 중학교 학생배정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
26. 학교시설의 지역사회 개방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
27. 사회적거리두기 완화 기조에 맞춰 학교 개방이 적극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
28. 교육청의 정책브랜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
29. 관계 법률에 따라 각종 위원회 성별대표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할 것
30.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원문공개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것
31. 교육청은 각 급 학교에서 '학교기본운영비 내 도서구입비 3% 이상 의무 편성 규정'이 준수될 수 있도록 할 것
32. 학생회장 투표권을 가지지 못하는 초등학교 저학년의 학교자치활동 참여 방안을 모색할 것
33. 학교의 장학생 선발에 있어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장학생 선발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모든 학교에서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34. 녹색어머니회 운영에 있어 맞벌이 부부 및 일선 학부모 부담이 크므로 해당 정책 전면 재검토 등 대책을 마련할 것
35.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를 위한 계획을 마련하고 기금 적립 위해 노력할 것

36. 성범죄 교원에 대해 철저히 징계하고 교원 성비위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힘 쓸 것
37. 교직원화장실을 이용하는 학생에게 별점을 부과하지 않도록 시정할 것
38. 공영형 사립학교 사업 추진이 미진한 사유를 검토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39. 교육청은 유희교실이 학생의 학습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40. 학업중단 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시행할 것
41. 지역의 부족한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학교 운동장 야간 개방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검토할 것
42. 적극행정 담당 부서를 감사과가 아닌 기획조정실로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43. 방역지침에 맞춰 재택근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44. 공간 확보를 비롯해 고교학점제 시행 준비를 철저히 할 것
45. 코로나19 백신접종을 거부하는 교직원의 접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
46. 코로나19로 인한 학력격차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학습지원 방안을 강구할 것
47. 학교 급식실 내 조리실 환기시설, 조리종사원 휴게 공간 등이 충분히 구축될 수 있도록 할 것
48. 학생의 교직원화장실 사용 시 별점을 부과하는 일부 학교의 학칙을 조속히 개정할 것
49. 학교 선생님의 부장 보직 기피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것
50. 수능을 감독하는 교사와 행정직원 간 수당의 차이가 크므로 개선 방안을 모색할 것
51. 각 급 학교로 교부된 수업 환경 및 근무여건 개선 사업 예산 사용에 있어 비품 구입을 예산의 30% 범위 내로 제한한 규정을 완화할 수 있는지 검토할 것
52. 감질신고센터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 기준을 재정립할 것
53. 시의회의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이 형식적으로만 수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의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
54. 교육후견인제 사업 참여 기관 직원들의 성범죄 등 범죄전력을 사전 조회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
55. 지역기반형 교육복지협력사업 참여 기관 선정 시 해당 지역에 연고가 있는 기관으로 구성할 것

56.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정책자문위원회를 정비할 것
57. 장애학생 대상 범죄 등의 중범죄를 저지른 교원이 피해학생의 탄원서를 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징계경감을 받지 않도록 개선할 것
58. 징계 처분을 받은 교원에게 성과상여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
59. 서울시 내 고등학교에서 재시험이 매 학기마다 100회 이상 발생하고 있으므로 교육청 차원에서 재시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60. 성적을 기숙사 입소 기준으로 하거나 이성교제 시 퇴사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는 일부 학교의 기숙사 운영 규정은 학생 인권 침해 우려가 있으므로 즉시 시정할 것
61. 교내 골프연습장을 교원 전용으로 운영하고 있는 학교 현황을 조사하여 시설 활용 방안을 개선할 것
62. 50인 이하 반일제 이상 유아대상학원 또는 직영 급식을 시행하는 학원도 급식 관리가 철저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 건의를 검토할 것
63. 신규 도서관 건립 시 교육청 도서관이 없는 자치구를 중심으로 조성 계획을 수립할 것
64. 장애인 도서관 건립을 검토할 것
65. 교육청 차원에서 소관 부서를 명확히 하여 학교 내 아리수 음수대에 대한 관리 대책을 수립할 것
66. 교육청 소관 공유재산(토지)을 무단으로 점유한 자에게 부과된 변상금에 대한 징수율을 제고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67. 2024년으로 시행 시기가 조정된 금북초등학교의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 추진 계획과 이에 따른 통학구역 조정안을 전면 재검토할 것
68.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관련 근조 화환을 이용한 집회·시위에 있어 교육청과 일선 학교가 강경하게 대응할 것
69. 교육청 전산센터 통합 구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검토할 것
70.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기준을 명확히 할 것
71. 특성화고 활성화와 이미지 개선을 위해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할 것
72. 과정중심평가로 학력평가 관련 사교육이 확대되고 있으므로 학력에 대한 학부모 우려가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
73. 사립유치원에 영양교사 배치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고, 장기적으로 「학교급

식법」 개정 노력을 지속 전개할 것

74. 영월학생캠핑장의 낮은 활용도와 지지부진한 연수원 건립 사업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모색할 것
75. 장서보관 공간 부족 해소를 위해 공동보존서고 조성을 적극 검토할 것
76. 우천연결통로, 차양, 캐노피와 같이 학교 건축물과 접속되는 각종 시설물의 가연재가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보고할 것
77. 감사관 공익제보센터에서 학교안전공제회를 감사하는 것이 적법한지에 대한 법률자문을 받고, 관련 사항을 보고할 것
78. 학교 옥상방수 진행 시 노출시트공법 외에 다양한 공법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것
79. 예산 절감을 위해 권역별로 전자철판 구입·설치 사업을 통합 발주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
80. 감사관 차원에서 위장전입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81. 교육감 공약 이행률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
82. 교원 대상 학생의 성범죄 근절 대책을 마련할 것
83. 직업계고(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출신 학생의 취업률 감소, 입학생 수 감소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
84. 수요자 중심의 식단 구성, 학생 대상 교육 등을 통해 각 급 학교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것
85. 교육청은 교육청이 운영하는 전자도서관 애플리케이션(SEE)의 오류 개선, 콘텐츠 확충 등을 위해 지속 노력할 것
86. 기존 유치원·어린이집의 정원이 충분한 상황에서 국공립유치원이 확충되고 있으므로 매입유치원 확대, 폐원 예정 유치원의 도시계획시설 전환, 사립유치원 특수학급 증설 등을 통해 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출구전략을 모색할 것
87.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학버스 이용률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
88. 대전시교육청 사례를 참고하여 행정실무사·교육복지조정자 등의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89. 교육청은 고용부담금 납부를 줄일 수 있도록 장애인 의무고용률 제고 방안을 모색할 것
90. 퇴직 공무원이 사학재단에 재취업하는 사례를 근절할 것

91. 시험시간 중 화장실 출입을 금지하는 교육공무원 채용 시험 규정을 수정할 것
92. 원로교사 제도의 내실화 방안을 마련할 것
93. 유치원 자율평가 시 아동학대 발생 여부를 반영하고, 유치원 평가의 변별력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94. 공립유치원의 보건교사 배치를 확대하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비롯한 대체인력 배치 방안을 검토할 것
95. 원아 수 100인 이하 사립유치원의 영양교사 배치 및 급식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96. 학교 급식실 내 환기시설 설치와 질병·사고발생 현황을 파악하고, 급식실 노동자 안전 보장 위해 주기적 전수조사 등의 대책을 강구할 것
97. 교육청은 다문화학생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나 상급학교 진학률이 감소하고 있으므로, 다문화학생의 중도탈락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여 대응책을 마련할 것
98. 특성화고 실험실의 안전시설은 미흡하고 사고건수는 증가하고 있으므로, 특성화고 실험실의 안전관리시스템을 개선할 것
99. 현원 대비 내국인 비율이 지나치게 높거나 내국인 입학비율 학년별 정원 30% 이하 규정을 위반한 외국인학교에 대한 제재방안을 강구할 것
100. 교육청은 직원 간 성추행 관련 학교안전공제회 대상 교육청 공익제보센터의 민원감사 결과에 대해 당사자가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만큼 법적 근거와 감사의 적절성 여부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
101.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 제고를 위해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및 사학기관 경영평가 반영과 연계한 법정부담금 관리 방안을 모색할 것
102. 학교 시설 개방이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
103. 교육청은 원장의 허위 보고로 아동 학대 가해 교사가 징계를 받지 않은 채 유치원을 퇴직한 사안에 대해 진행사항 파악 후 적절한 조치 방안을 강구할 것
104. 학교 일제잔재 청산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105.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 수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학교 밖 청소년 현황 파악 등 학업중단 학생 관리방안을 모색할 것
106. 예산 지원이 비인가 대안학교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인가된 대안학교에 대한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
107. 300명 미만 소규모 학교의 우유급식 확대와 급식의 양과 질 개선을 위한 지

원방안을 검토할 것

108. 대방초등학교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교사 수급 및 학급 증설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
109. 방과후강사, 돌봄 인력 등 학교 구성원 모두의 행복도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110. 홍보물 제작에 있어 다둥이 가정 등 이해관계인을 배려할 수 있도록 할 것
111. 학교운영위원회 정당한 배제 조항이 모든 학칙에서 삭제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112. 장애인 시설 설치·운영이 형식적으로 이뤄지지 않도록 실태 파악 후 조치할 것
113. 답변 내실화로 '교육감에게 바란다' 게시판의 활용도를 높일 것
114. 각종 수당 및 출장비 부당수령 사항에 대해 파악하여 조치할 것
115. 장기간 미해결 및 검토 중인 타 기관 이첩 민원에 대해 빠르게 조치하고, 현황을 파악할 것
116. 교육부가 발표한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방안'에 따른 후속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시간제 돌봄전담사 처우개선 위해 노력할 것
117. 특수학교 학급 증설 및 시설 개선 시 일반학교와 동일한 금액을 지원하는 지침 개정에 대해 검토할 것
118. 영어회화전문강사의 고용 안정과 맞춤형복지비를 포함한 처우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119. 타 시도의 초등돌봄전담사 전일제 전환 진행 사항을 파악하여 검토할 것
120.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답변서가 내실 있게 작성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121. 방과후학교위탁운영 관련 설문조사 시 '전문업체 위탁' 등 편파적 용어 사용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할 것
122. 신규교사 또는 3년 미만 교사의 학교폭력 전담 책임교사 배정을 지양할 것
123. 최근 2년 동안 교육지원청별로 발주하는 설계용역을 3곳의 건축사무소가 1인수의계약의 형태로 독점적으로 계약하고 있으므로 계약 현황, 업체의 규모와 업무수행능력 등에 대해 점검할 것
124. 학교 석면관리자 교육 프로그램과 강의안의 오류를 수정할 것
125. 공항 주변 학교가 항공기 소음으로 학습권을 침해받지 않도록 대책을 모색할 것
126. 신도림초등학교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교실 증설과 교원 충원을 조속히 완료할 것
127. 수영장 추가 건립 검토로 인해 지연되고 있는 구일초등학교 복합시설 건립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

128. 서울시의 2022년도 예산 삭감으로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129. 교육청은 시기능 훈련 사업 시행에 대해 검토할 것
130. 원격수업의 장기화로 학생들 간 학력·돌봄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
131.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대상 소규모학교의 회생을 위해 행·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
132. 현재 학사운영 파행을 겪고 있는 서라벌고등학교에 대한 정상화 대책을 마련할 것
133. 타 직렬 대비 시설관리직 공무원들의 비위·비리 발생 빈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시설관리직들의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
134. 고등학생 자살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교육청 차원에서 적극적인 자살예방 대책을 마련할 것
135. 퇴직 공무원의 비리사학 재취업 근절 및 현직 공무원과의 사적 접촉을 차단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136. 사학비리 근절 차원에서 시정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사립학교에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검토할 것
137. 정원이 작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대상학교의 시설환경개선이 시급하므로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
138. 학교 석면의 완전 제거를 조기에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139. 교육청은 학부모와 교직원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 차질 없이 초등학교 무상과 일간식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 계획을 철저히 수립할 것
140. 학교급식에 따른 음식물쓰레기 처리 비용이 과도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처리비용 감소를 위한 정액제 운영 학교의 종량제 전환, 급식 식단 개선 등의 방안을 적극 모색할 것

교육지원청

1. 동부교육지원청은 서울어린이창작영화제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

직속기관

1. 교육연구정보원은 공공데이터포털에 교육청 공공데이터와 오픈 API 제공을 확대할 것
2. 교육연구정보원은 일반 시민에게 학교 홈페이지의 정보공개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것
3. 교육연구정보원은 연구관·연구사가 행정업무 처리가 아닌 연구기능을 강화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4. 과학전시관은 미래융합교육관 건립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
5. 학생교육원이 진행한 11건의 수의계약 중 6건이 특정 업체와 진행되었으므로 해당 계약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살펴볼 것
6. 유아교육진흥원은 유치원평가, 정책연구 기능 등을 교육연구정보원으로 이관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7. 학교보건진흥원은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공산품의 납품 단가가 적정하게 산정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
8. 학교보건진흥원은 학교급식 시 교직원과 학생 급식 간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
9. 학교보건진흥원은 현장 점검을 통해 학교 급식실 환기시설 및 조리종사원 휴게시설 개선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조치할 것
10. 학교보건진흥원은 친환경 무상급식 식재료 단가가 지나치게 높으므로 가격 인하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11. 학교보건진흥원은 친환경 농산물의 가격이 높아 학교의 친환경 급식 비율이 감소하고 있으므로, 적정 단가 모색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12. 학교보건진흥원은 학교 급식 후 남은 음식을 복지관에 기부하여 식자재를 남기지 않는 방안을 검토할 것
13. 학생체육관은 학생체육관과 학생수영장 이전 추진에 있어 무상이관, 지상권 존속 기한 명시, 국제공인 수준의 시설 구축 등을 비롯한 현안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진행할 것
14. 학생체육관은 신축 이전 예정인 수영장 등에 효과적인 시설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것

15. 학생체육관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있어 형식에 그치지 않고 이용자 중심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내용을 제보한 제보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조치할 것
16. 교육시설관리본부는 사립학교에서 오폐수가 정화조를 거치지 않고 무단 또는 초과 방류되지 않도록 관리방식 전반을 점검할 것
17. 교육시설관리본부는 학교 공기질 개선을 위해 교육청에서는 살수용 세척 차량을 이용하여 학교 유리창 먼지를 제거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할 것

도서관 · 평생학습관

1. 직원의 민원 응대 관련 민원이 지속 제기되고 있으므로 응대 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
2.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업무보고자료는 단권으로 통합하여 제출할 것

학교안전공제회

1. 학교안전공제회는 임원의 잦은 퇴직과 감사관의 감사 여부에 대한 논란 등 공제회 조직의 불안정성이 확인되고 있는 만큼,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조례 제정 등의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2. 학교안전공제회는 민원감사를 통해 확인된 사무국장과 직원 간의 갈등,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사안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조직 관리를 강화할 것
3. 학교안전공제회는 교육청 공익제보센터에서 학교안전공제회를 감사하는 행위가 적법한지에 대해 법률자문을 받을 것
4. 학교안전공제회는 불법적인 직원 채용과 관련한 문제를 파악하여 조치할 것
5. 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 교육활동과의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워 공제급 지급을 받지 못하거나 소송까지 진행되는 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시장 비서실 · 정무부시장실 : 2건

1. 정무부시장실의 정원 11명을 시장 비서실로 옮겼는데, 조직개편안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이동이므로 문제가 있음. 정무 기능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 시장 비서실로 인원을 옮겼다고 하나,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는 더 악화되고 있음. 의회와의 소통과 협력 관계 강화를 위해 노력하기 바람
2. 코로나19 상황으로 의료 인력이 매우 부족함에도 서울의료원, 서부병원, 은평병원 등 서울시 시립병원의 인력 정원이 채워지지 못하고 있음. 시립병원과 외부병원 간의 임금차이로 인한 것이므로,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기 바람

□ 시의회사무처 : 4건

1. 언론홍보실에서 매년 실시하는 시민 여론조사가 홍보가 제대로 되고, 의정 활동에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2. 사무처에서 사전 법률 검토 없이 공약 관리 지원 사업을 담당하는 공약 전담 인력을 채용한 후 공직선거법 저촉으로 운영위원회에 보고도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중단한 사례가 있음. 예산 낭비가 없도록 사업 시행시 사전에 철저한 법률 검토 바람
3. 내년 정책지원관 도입과 관련하여 현재 입법지원관들에게 인센티브 주는 방안 등 현 지원관의 고용에 관하여 고민해주기 바람
4. 시의회와 서울시가 체결한 업무협약이 선언적인 의미에 그치는 허울뿐인 협약이 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기 바람

□ 비상기획관 : 없음

□ 스마트도시정책관(서울디지털재단 포함) : 5건

1. 메타버스 구현을 위해서는 인프라(5G·데이터센터·클라우드컴퓨팅,) 플랫폼(게임·SNS 기반), 콘텐츠(엔터테인먼트), 디바이스(VR·AR 기기) 등의 필수 요소가 필요함. 아직 민간에서도 시작단계이며 기술적인 발전의 단계에 연동하며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음. 메타버스 활용 시정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차분히 사업의 준비가 필요해 보임. 그렇지 않고서는 VR·AR이 들어가 신규 비대면 홈페이지 구축 밖에 안 됨. 이상적인 공급 모델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유행 타듯이 급하게 추진하기보다는 기술적 판단을 선행하여 면밀한 준비단계를 거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2. S-Net 사업은 공공와이파이 외에 스마트폴, IoT도 연결되는 사업임. 단순하게 데이터 사용량이 적다고해서 철거해야한다고 보지는 않음.
3. 5개 자치구에 보급된 '디지털 격차 해소 교육 로봇 리쿠'가 어린이집 구연동화 교육에 활용되고 있음. 로봇 리쿠의 장·노년층 디지털 격차 해소교육 활용 방안 검토 필요.
4. 디지털재단은 조직개편을 통해 메타버스티eam을 신설했는데 메타버스사업에 대한 설계나 계획에 대해 아는 것도, 하는 것도 없음. 스마트도시정책관에서 결정되면 사업만 수행하게 되는데, 재단의 설립 초기부터 안고 있던 스마트도시정책관의 일부사업수행 기관이라는 비판에 다시 직면함. 외부용역, 행사관련 SNS활동, 성과보도, 행사안내 영상 등 외부로 이미지를 쌓는 일에만 열중하지 말고 연구실적으로 서울시민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본연의 역할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자성이 필요함. 언론과 행정감사 때마다 지적받는 부분들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를 진단하여 내실화를 기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보고하기 바람.
5. 스마트서울 CCTV 안전센터 관제관에 시각이 일반인보다 빠르고 예민한 청각장애 인들을 채용하는 방안을 건의함.

□ 민생사법경찰단 : 없음

□ 미래청년기획단 : 없음

□ 행정국(서울시 자원봉사센터 포함) : 7건

1. 서울시가 주기적으로 주민자치회 보조금 점검을 했어야함에도 제 역할을 다하지 않은 채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사업단에게 책임과 잘못을 전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집행점검을 이유로 2020년에 이미 통과된 예산을 교부중지 하거나 주민자치회 활동을 저해해서는 안 됨.
2. 사회 초년생이라 생활이 어려운 신규직원이 많다고 하므로 신규직원 거주실태를 파악하여 지원책을 세울 필요가 있음. 전세자금 융자지원 등 무주택 공무원 지원을 확대하고, 선발 배점 기준도 신규직원, 다자녀 공무원의 배점을 더 반영할 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기 바람.
3. 찾동 사회복지직렬 대량 선발에 의한 인사적체 문제 심각하니 해소 방법을 빠른 시일 내 마련하기 바람.
4. 전문관제도 관련 주요의견이 부정적인데, 객관적 평가에 의한 것인가 내부적으로 형평성 안 맞는다는 불만 때문인지 서울시만이 아닌 전국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격무기피부서 중심으로 배정되는데 인센티브와 가산점을 받는 것에 대한 불만은 제도를 운영하는 취지와 모순됨. 전국적으로 같은 평가로 운영된다면 중앙정부에 개선을 요구할 필요가 있을 것임. 인사·승진문제는 어떤 제도를 운영해도 공정하게 느끼기가 쉽지 않고 불만이 있을 수 있음. 제도의 취지를 살려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5. 자원봉사 운영관련해서 코로나19, 기후변화위기 등 새로운 상황에 맞는 봉사 프로그램이 필요함. 다양한 자원봉사활동 발굴에 힘써주기 바람.
6. 통장협의회 입회비는 통장협의회회비로 진입장벽이 될 수 있고, 투명성차원에서 보면 적절하지 않음. 또한 통장협의회별 입회비가 20~50만원으로 차이가 커 계도가 필요해보임. 적극적으로 현황을 파악하고 계도 차원에서의 대응 요망함.
7. 한 업체가 서울기록원, 정보공개정책과와 13번, 65억원을 계약함. 영상제작, 조사연구 용역, 특별전시회 등 다른 업무임에도 한 업체와 계속해서 계약을 하고 타 건적이 모두 동일.

□ 재무국 : 17건

1. 지방세 체납 결산서의 가독성이 떨어지게 계상되고 있으니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체납 규모를 한 곳에 모아 결산서에 계상해줄 것.
2. 재무국 직원들의 초과근무 실태를 분석해본 결과, 일반 주무관보다 팀장급 초과 근무시간이 더 많음. 직원들의 눈치 보기 야근이 우려되는 바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팀장급부터 솔선수범해 줄 것.
3. 최고 1조 3천억 원에 달하던 지방세 체납액이 현재 6천억 원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 체납세금의 징수실적이 아닌 결손 처분에 따른 것으로, 결손처분은 신중히 하기 바람.
4. 사유지의 연간 매도계획을 마련하여 세입·세출 추계 시 정확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하기 바라고, 무단점유 변상금 및 사용료에 대한 체납률이 높으므로 징수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5. 수익계약 공개견적 시스템 사용에 부서에서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직원들의 업무부담을 줄이면서 사용빈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람.
6. 자의적 조세행정은 기초자단체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는 것이고, 자치구 세입으로 재정자립 재원도 충당하지 못하는 일부 자치구에서 임의적으로 세금을 감면하는 것은, 서울시 세입의 감소 뿐 아니라 교부세의 증가를 수반하게 되는 것이므로, 감면 결정전에 미리 협의를 전제하는 제도를 마련하기 바람.
7. 시세징수 효율성 향상을 위한 노력 필요, 이에 대한 연구 및 대책 마련 필요.
8. 39억원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최00 전 회장의 압류 예술품과 관련하여 배우자가 소유권을 주장하고 체납자는 적극 대응하지 않아 압류 물품을 반환할지도 모르는 상황에 놓인 것을 언급하며 사회저명인사의 체납액 징수는 상징성이 큰 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반드시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
9. 서울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지방세 체납건수, 체납금액이 모두 늘어나고 있는데, 징수액은 제자리 걸음으로 외국인의 지방세 체납액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고, 성실 납부 문화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방안이 필요함. 외국인에 대한 체납세액 특별정리기간 등 서울시 체납행정을 강화하기 바람.
10. 서울시 지방세 체납 징수율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현저히 낮아 서울시가 지방세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구조적인 문제 해결과 체납 징수를 하는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 승진 등 사기진작을 위한 방안을 건의함.

11. 탈루된 지방세를 시민이 신고할 수 있도록 운영 중인 '은닉재산 시민제보센터'의 실적에 대하여 지난 5년간 시민 제보로 징수한 금액이 6억 3천만 원 수준으로 부진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 규모는 5천만 원 수준에 그치는 것은 적극적인 시민 제보 유인책으로 부족함.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국제 수준의 포상금 지급률 인상을 통해 제도를 활성화할 것이 필요함.
12. 매년 평균 15% 수준의 지방세 초과 세입 발생으로 2조 원 이상 잉여금이 발생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지나치게 보수적인 세입 운영은 시민을 위한 필요사업에 적기 재정을 투입하지 못하게 하는 비효율적 재정운영일 뿐 아니라, 그만큼 필요 이상의 세입을 시민으로부터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시민의 세부담 완화를 위한 서울시 차원의 노력이 필요함.
13.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위해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이나 징수유예 등에 대한 지원대상과 지원기간 확대 검토 필요.
14. 전국적 체납의 공동사무 수행을 명분으로 추진 중인 행정안전부의 지방세조합 설립 계획에 대하여, 이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조합 설립은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어야함에도 행정안전부에서는 의원입법 수단을 통해 지방세기본법에 설치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법령체계에 전혀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속내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 행정안전부 조직 이기주의를 추구하는 행정안전부의 고질적인 행태임. 지방세 체납을 담당하고 있는 재무국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지방자치권 침해 관련 지방의회의 협조가 필요하면 돕겠음.
15. '82년도에 한강 재정비 사업으로 설치된 한강둑 부지가 도로부지로 되어있지만 현재 도로기능을 못하고 있어 이 부지에 '20년도에 정부지원사업인 생활SOC 사업을 추진하여 현재 예산도 확보하고 중앙투자심사도 통과하는 등 진행 중임. 다만 이 부지의 일부(1,718㎡)는 사유지로서 자치구에서 매입이 어려워 공유 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에 따라 무상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람.
16. 영등포구 종합시장 토지는 민간 소유이고 건물의 일부(공유지분: 계단, 복도)는 서울시 소유이므로 주민들이 일일이 소송하여 정리하고 있어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서울시의 조치가 필요함.
17. 계약심사과와 같은 민원인의 내방이 많은 부서는 사무실 공간을 넓게 재배치하는 것을 건의함.

□ 평생교육국(서울장학재단, 평생교육진흥원 포함) : 9건

1. 고교-대학연계 인재육성 사업은 참여자 만족도를 살펴보면 만족도가 높고 학생과 시민들의 다양한 평생교육 욕구가 커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이런 점에서 고교-대학연계 인재육성 사업은 예산 삭감이 아니라 증액이 필요해 보임. 또한 고교-대학연계 인재육성은 현장에 직접 가서 대면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서울형 교육플랫폼과는 분명 다르다고 할 것임. 서울형 교육플랫폼과 고교-대학연계가 일부 중복되어 예산을 삭감했다는 부분은 검토가 필요해 보임.
2. 화장실 만들기 사업은 종료되나, 아직도 변기가 부족함. 학생 수 감소, 증설 가능 여부 등 교육현실을 감안하여 부족한 화장실이 개선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함께 위생도기 증설 수요조사 시행하고, 교육청과 적극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바람.
3. 장학재단은 왜 공무원 기준과 다르게 토, 일요일에 4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하는지, 학생대상 행사가 주말에 있다 하더라도 주말 4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음. 학생의 경우도 방과 후 장학금수여식 등 행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없지 않음. 서울시 직원에 비해서 초과근무 수당도 적지 않음. 관련근거 규정을 확인하여 초과근무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책을 마련하여 초과근무 제도를 투명하게 운영하기 바람.
4. 청소년 활동 기록시스템 구축사업은 청소년시설을 이용하면서 프로그램, 동아리, 봉사 활동 참여 등 모든 활동 기록을 수록하여 향후 본인의 필요에 의해 사용될 중요한 사업으로,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5. 2024년 완공 예정이었던 종로청소년센터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등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 바람.
6. 수유영어마을 인재개발원 이전과 시민명상프로그램의 추진을 점검하며, 코로나 19 시대에 오갈 곳 없는 청소년들의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청소년 전용프로그램(요일제, 시간제) 예산삭감은 걱정하지 않음.
7. 세계보건기구총회에서 '게임중독 또는 게임이용장애'라는 새로운 질병으로 분류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대응하는 선제적 기본방향과 정책과제 발굴 필요. 청소년 인터넷 중독예방 상담센터의 상담이 지속적으로 늘어가는 상황에서 '22년 사업비 20%를 삭감한 것을 볼 때 그 준비에 신뢰가 어려우니 이에 대한 조치 필요.
8. 자치구별 평생교육 격차에 대한 정확한 원인분석과 프로그램 질적인 문제에 대한 고민으로 만족도 제고를 위한 근본적인 프로그램 지원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9. 학생 수가 많고 교문이 3개인 길음초에 대해 학교보안관 추가 지원을 요구함.

□ 시민협력국 : 1건

1. 2021년 4월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에서 발간한 서울시 예산정책 분석 통권 제39호에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서로 비교가 불가능한 설문조사 결과를 비교하여 분석결과가 오염됨. 이후 해당 보고서를 인용하여 마을공동체 사업이 낙제점이라는 언론보도가 쇄도, 잘못된 보고서로 인해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활동가 분들에게 상처와 피해를 준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함. 향후 사업에 대한 평가보고서 작성 시 정확한 근거자료를 기반으로 추진 하기 바람.

□ 인권담당관 : 1건

1. 인권담당관과 각종 위원회들(예: 갈등조정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 성희롱성폭력 위원회 등)과의 유사한 역할과 기능의 중복문제에 대해 시민협력국과 협의를 통해 조정 및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기 바람.

□ 인재개발원 : 2건

1. 향후 플랫폼 구축 및 사용을 다른 자치단체나 정부 기관과 협력하여 중복되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앞으로 비대면 원격강의가 일상화될 텐데 스마트도시정책관의 서로온 시스템을 활용하여 대응하기 바람.
2. 인재개발원 청사이전 추진절차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도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기 바람.

□ 감사위원회 : 7건

1. 감사원에서의 교육 참여실적이 저조하니, 감사원 교육 활용 등 감사위원회 인력의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람.
2. 투자출연기관이 서울시의 관리·감독에 대한 무시가 도를 넘음. 투출기관에 대한 기강 확립에 철저하기 바람.
3. (신) 청렴감사 이야기 시스템 개발·유지관리 비용 1억5천6백만원 소요했는데 이용실적 저조로 폐기되었음. 시스템 폐기사항을 확인하고 점검하기 바람.

4. 공익제보·민원 등의 창구로 감사위원회가 인식될 수 있도록 채널을 활성화하기 바람.
5. 위 수탁 관련 조례 위반 사항이 있으니 감사를 요청.
6.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철저한 감사 필요.
7. 청렴도 향상방안 노력 당부(칭찬, 모범사례 등).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 4건

1.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홈페이지의 시민 접근성이 좋지 않음. 시민들이 쉽게 제보를 할 수 있게 홈페이지를 정비해주시기 바람.
2. 위원회 예산 및 조직 보강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3.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감사 청구 연령 기준이 낮아지는 등 주민감사 청구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따른 조직 강화 등 대비하기 바람.
4.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이 의회의 기능과 매우 유사한데 위원회가 현재 집행부 산하에 있지만, 입법기관에 두는 방안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음.

□ 자치경찰위원회 : 10건

1. 지역주민들의 의견 및 민원을 적극 수렴하여 범위에 더 취약한 장소들을 적극 순찰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범죄 예방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람.
2.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사무국장 모두 경찰 출신이지만 민생에 밀접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위원회인 만큼 독립성을 가지고 전문성을 보장할 수 있단 점을 장점으로 살려주시기 바람.
3. 17개 시도에서 복지후생비 천차만별 통일적인 적용이 필요하며, 법적 검토 정비 필요함.
4. 교통법규위반 단속업무의 자치경찰 이관에 따른 범칙금, 과태료 부과와 수입의 이전도 함께 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 건의와 안정적인 자치경찰의 운영을 위한 재정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하기 바람.
5. 아동학대 예방활동 강화 방안을 시민참여, 구나 동 단위 업무와 연계 공유하여 마련하기 바람.
6. 경찰사무의 이관으로 인해 노후장비 교체 등 예산확보의 어려움 문제가 발생하

고 있음. 적극적인 국비 요청 등 관련규정 개정 전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경찰청, 정부와 협의하여 세입확보방안 모색하기 바람.

7. 자치경찰사무와 민생사법경찰단 업무와 연관 또는 협력 사항 있는지 살피고 장기적으로 업무영역이 넓어질 수 있으니 대비하기 바람.
8. 자치경찰위원회 정체성 문제와 관련하여 아직은 초창기로 정체성과 특성이 경찰에 더 가까울 것 같음. 자치경찰위원회라는 위상을 마련해나가주기 바람.
9. 자치경찰 예산에 대한 편성 책임을 확고히 해주기 바람.
10. 자치경찰사무에 좀 더 강한 지휘. 감독권의 개선방안 마련과 법령, 제도 개선을 위한 자치경찰 위원회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

① 기획조정실 : 14건

1. 행정안전부의 서울시 산하 투자기관 경영평가지 각 기관의 실적 개선이나 기관의 규모를 고려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 조속히 행정안전부 경영평가 체계의 개선을 요구하기 바람.
2. 사전심사 심의제도에도 불구하고 중앙투자심사에서 서울시 사업에 대해서 재검토 의견이 빈번하게 내려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실효성 제고 방안도 함께 생각하고 강구해야 함.
3. 서울 시민들이 인용재결을 받았을 때 지원을 받는 것에 대한 사실들을 시민들이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음. 홍보에 대한 고민 필요
4. 재결기간이 길어지면 민원인들의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질 수가 있기에 처리절차와 기간을 간소화 및 대폭단축해서 시민들의 손실 최소화를 위해 노력바람.
5. 규제개혁에 대해서 중앙부처와 어떤 점이 입장차가 있는지 우리가 검토를 해보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함.
6. 올해 중앙정부 건의과제 113건 중 미회신이 99건 임.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자영업자나 국민들의 삶을 돌보는 규제개혁이나 여러 개의 미회신 되는 지점들을 잘 살피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7. 특별회계 관련해서 작년 행감에도 특정한 목적사업 관리를 위한 개선사항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꼭 바쁜 시기인 10월 달에 분석이나 개선방향을 마련하고 있음. 시기 조정 필요
8. 마을변호사가 불친절·불성실한 상담이 없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람.
9. 법률상담 예약 시 전문분야 변호사를 선택할 수 있는 매뉴얼 마련, 시스템 보완할 필요가 있음
10. 향후 서울시의 국제경쟁력 평가 순위를 참고하거나 인용할 때, 특정 지수만 활용하거나 자칫 어떤 의도를 가지고 비교 평가하는 것처럼 해석되는 일이 없도록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경쟁력 지수를 다양하게 활용, 제시해 주시기를 당부드림
11. 서울시의 자치구에 대한 시비보조금 축소로 자치구의 재정 부담 발생 예상됨. 시 사업과 자치구 사업에 대한 구분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12. 주민자치회, 주민자치단 등이 향후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기 바람.
13. 서울시의 인구정책을 추진 시 인구 유출입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고 수립, 추진하시기 바람.
14. 국가균형발전과 서울의 장기적 미래비전, 도시 인구정책으로 인한 도시 문제에 대해 근본적이고 깊이 있는 성찰을 토대로 인구정책의 방향을 모색하길 바람.

② 경제정책실(시립과학관, 농업기술센터, 기술교육원 포함) : 15건

1. 경제정책실장이 소관기관인 기술교육원을 폄하하는 발언은 문제가 있음.
원이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위해 노력바람.
2. 공간의 문제라며 조성이 힘들다는 이유는 개선의 의지가 약해보임. 조성 사업을 위한 적극적인 장소 물색을 바람.
3. 건물을 짓는데 있어, 공간이 없고 시간이 많이 걸리면 업무가 유사한 중복된 기능을 가진 곳과 기능을 확장해서 개편하는 방향을 고려하기 바람.
4. 교육원 성과지표 객관성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음. 관련된 분들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여 개선책을 찾기 바람.
5. 남부기술교육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외국인 과정 사업에 대한 인원감축과 예산 삭감을 통해 국가 간의 신뢰가 깨지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김.
적극적인 검토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6. 2002년 설립된 상암 DMC 홍보관이 18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DMC 홍보를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효율적 관리 운영 방안을 검토 바람
7. 마곡광장 상가 공실의 명확한 원인을 분석해 조속히 상가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8. 서울경제전문가, 기업인 등 위기대응에 고민과 대안을 마련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음. 위드코로나로 정책방향으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민생경제 대책반이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되는 정책들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길 바람.

9. 여성기업의 특징을 고려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을 조속히 마무리 짓고, 효과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하여 여성기업이 적극적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길 바람.
10. 남부기술교육원의 외국인사업에 대한 예산심사 시 정확하고 상세한 검토를 바람.
11. 기술교육원의 SNS를 통한 접수율이 높아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홍보에 관심을 두길 바람.
12. 산업 간 기술특화 캠퍼스가 청년취업사관학교로 발전하면서 브랜드를 꼭 필수적으로 했었어야 했는지(SeSAC). 로고가 크게 바뀐 것도 아니고, 예산이 들어가는 거니 불필요한 일을 진행하지 않았으면 함.
13. 도시청년 지역상생 일자리 참여기업마다 복리후생 지원이 상이함. 청년들이 지역 내 정착·자립할 수 있는 유인책이 필요함.
14. 마포 농수산물시장의 향후 운영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시장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15. 전세계적 트렌드를 반영하여 서울시에서 AI 산업 육성을 전략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발빠르게 대응할 필요가 있음.

③ 노동·공정·상생정책관(서울노동권익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조합지원센터 포함) : 9건

1. “간이 이동노동자 쉼터” 이용실적이 저조하고, 접근편의성, 실수요자, 운영 시간, 홍보 등의 문제가 있음. 실질적인 간이쉼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기 바람.
2.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은 국비매칭사업으로 매년 예산확정시기와 공모일정이 달라, 예산 추정 편성으로 하고 있음. 시와 자치구의 예산이 안정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정부에 공모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제안 바람.
3.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의 집행과정과 사후관리도 신경써주기를 바람.
4. 서울사랑상품권은 지역적 제한이 있으며, 상품권의 ‘관내이용제한’에 대한 불편하다는 의견이 55.9%임. 사용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주시기 바람.
5. 카드충전식과 종이(지류) 상품권 발행을 바란다는 의견이 78.2%임. 60대 이상은 아무래도 모바일 방식에 대한 접근성이나 활용도가 떨어질 수 밖에 없고, 실제 통계에서도 카드충전식과 종이 상품권 발행에 대한 요구가 많은 편인데 발행방식을 고민 해 보기 바람.
6. 사회적경제기업의 가치를 담은 브랜드를 함께누리몰 안에서 어떻게 개발 하고 또 어떻게 보여야 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7. 함께누리몰 회원 수가 줄어드는 부분들에 대해 고민하며, 더 많은 회원을 유치하고 MZ세대들이 더 다가갈 수 있는 몰이 되도록 노력바람.
8. 지속적인 경쟁성장 노동소득의 공정한 배분 사회통합을 함께 이룰 수 있는 포용적인 혁신 성장과 시민연대에 의해서 다각화하고 잘 고쳐서 쓰자는 의미에서 사회적 경제를 잘 살펴봐줄 것을 부탁함.
9. 전통시장 상인연합회의 보조금 부정 집행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기 바람.

4 남북협력추진단 : 7건

1. 남북 이산가족 실태조사 등 이산가족 관련 자료 축적이 필요하고 정책수립에 적극적 관심을 가지고 추진 바람
2. 이산가족은 점점 고령화되고 생존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기에 정확한 실태 조사가 매우 중요함. 또한, 아직까지도 본인이 이산가족인지 모르고 지내는 분들이 꽤 많음. 이런 분들을 위해 데이터를 수집해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통일부에서 주관하는 이산가족 실태조사를 적극 협조하길 바람.
3. 사업들이 시기에 따라 유연하게 변화해야 하고, 타 지자체 사업들을 보고 벤치마킹이 필요해 보임.
4. 시민들과의 온라인 회의를 넘어서 온라인 플랫폼, 메타버스를 만들어서 시민들도 간접 체험할 수 있게 시도하는 방안도 고려 바람.
5. 2021년 北 취약계층 사업(영양개선, 보건의료, 식수위생) 예산집행이 저조한데 불용되지 않도록 노력 해주기 바람.
6. 남북경협편람 400부 추가 배포와 관련하여 도서관 등에서 많이 시민들이 접할 수 있도록 등록여부 확인 등 사후관리 바람.
7. 일반회계와 기금을 활용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각 회계의 목적에 맞게 추진하기 바람.

5 1인가구 특별대책추진단 : 5건

1. 1인가구 추진단에서 하려는 사업이 자치구 공모 사업으로 결국 시행은 자치구에서 하는 것임. 서울시의 정책 방향과 맞는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해 주기 바람.
2. 스마트 보안등 사업은 이미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LED 교체사업)으로 중복되지 않도록 추진 바람.
3. 1인가구는 서울 전체의 약35% 차지함. 특히 대학가에 굉장히 많은 비중 차지. 우리 서울시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1인가구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1인가구 사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포괄적이고 중첩된 부분도 많이 있어 신중하게 검토 추진바람.
4.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관련 11월 1일부터 시작인데, 당초 계획에는 이용료가 중위소득 85% 이하의 사람들은 무료고 그 외 사람은 시간당 5천원이라고 했는데 시간당 5,000원으로 계획이 또 변경됐음, 계획변경으로 소외받는 사람이 없도록 관심 바람.
5. 추진단이 종합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다른 부서들도 유사한 사업을 위해 예산을 확장하고 있음. 1인가구는 컨트롤타워로서 다른 부서에 산발돼 있는 1인가구 관련 정책들에 대한 조사들이 기본적으로 돼야 하고 업무협약은 아니어도 다른 부서와 업무를 어떻게 할 지 논의 필요

⑥ 서울시립대학교 : 5건

1. 서울시립대 전략적인 차원에서 지역사회에도 공헌하고 참여하는 학생의 경력에도 도움이 되고 중·장기적으로는 지속할 수 있는 과제들을 많이 발굴해서 서울시립대의 브랜드가 될 수 있는 사회공헌활동을 적극적으로 개발해 주시기 바람.
2. 사회공헌활동의 의지를 격려하고 시립대 차원에서 성과화 될 수 있도록 우수자한테는 포상하는 등 외부에서 시립대하면 적극적으로 사회공헌활동 모습을 떠올릴 수 있게 노력바람.
3. 시립대 학교 경쟁률 강화를 위해 교원과 학생들의 연구과제, 그리고 연구과제 수행을 통해서 경쟁력을 향상하는 고민을 해주길 바람.
4. 교내 연구 지원 사업을 보완하고 확대하는 것들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함. 함께 고민해서 학교 발전 성과로 창출되길 바람.
5. 2022년도 입학전형에서 철저한 방역관리계획을 마련하여 준수하기 바람.

7 서울농수산물공사(서울농수산물시장관리(주), 서울농수산물교매시장정산(주) 포함) : 9건

1. 중앙도매시장에는 시장도매인 제도의 도입을 거부하는 문제들이 상당히 크다고 봄. 시장도매인제 도입 등 거래제도 다양화를 위해 노력 바람.
2. 현 사장님도 경매제로 농산물이 거래되는 가락시장에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하려고 무던하게 애썼고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루었으나, 이를 실현시키지 못한 채 퇴직하게 되어 안타까움. 퇴직하기까지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람.
3. 이 제도를 반대하는 시장 아래 새로운 사장님이 시장도매인제를 멈추지 않고 제도에 대한 성과를 볼 수 있을지 우려가 됨. 추후 후임사장 취임 후에도 많은 지원 바람.
4. 시장관리운영위원회가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농안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소비자와 생산자 보호에 유념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5. e몰 사업을 잘 준비해야 하고, 해외 수출을 위해 SBA와도 함께 논의해야 함. 사회적인 책임을 이행하고 있는 부분인 만큼 소홀함 없이 진행 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6. 법인들은 동종업계에 비해서 많은 이익을 받고 있음. 거래가 높은 시세 차익을 갖고 거래를 이루어지는 자체가 독점적인 이익을 보장받는 구조가 된다는 것인데 시장이라는 자체가 공공재를 기반으로 조성된 것인데 이익이라는 측면에서 적절한 수준에서 공공에 환수되는 것이 마땅함. 법인의 영업이익률은 동종업계의 6배 정도(16%)로 이러한 법인들이 공익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큰 숙제임.
7. 중도매인들의 상거래 질서를 위한 교육이 필요함
8. 양곡도매시장이 고령화 상태임. 유통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음
9. 양곡도매시장의 현 주소를 냉철히 분석하기 바람.

8 서울연구원 : 4건

1. 빅데이터 분석 인사이트리포트 발간 등 새로운 시도를 통해 연구성과 관리와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서비스 이용자 관점에서 달라진 점과 개선된 점을 파악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음.
2. 도시정보실에서 비대면 시대의 학술대회 성과들에 대해 성과분석지표를 개발하고 더 많은 사업들을 연구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람.
3. 작년에 연구원 내 인권침해 사건이 제보가 있었음. 경각심을 갖고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
4. 인권침해 관련하여 연구원장이 피해자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피해자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상당시간 방치를 했음. 문제의식을 반드시 가져야 함.

9 서울산업진흥원 : 6건

1. e스타디움 경기장 운영 중단, 현재 임대 관련 공모절차 진행 중임. 국내 e스포츠 산업 확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스타디움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람.
2. 하이서울기업 페스티벌은 외국대사관과 상공회의소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만큼 코로나19 확진자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의 위상에 맞게 방역 대책에 만전을 기여해주시기 바람.
3. 코로나19로 중소기업의 고충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망 중소기업인 하이서울기업에 대한 판로지원 사업을 확대·집중하는 것은 인증제도의 활성화와 기업 성장의 두가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
4. sba 손실보상 관련, 투자가 6개월도 안 됐는데 이런저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음. 2018년에 처리가 되었어야 했는데 누락된 경우가 있는데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담당부서에 한 직원들이 오래 일하는 경우가 있어서 다른 직원들이 모르는 경우가 있어서임. 조직문화의 문제이니 반드시 체크하길 바람.
5. 하이서울기업 2021년에는 모집을 하지 않았음. 2022년 상반기 공개모집에 훌륭한 중소기업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
6. 마곡산업단지관리단 관리업무를 서울시로부터 수탁받아 SH와 SBA가 공동으로 운영 중임. 마곡산업단지 조성예 SBA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음.

10 서울신용보증재단 : 6건

1. 브릿지보증은 당초 150건, 25억 지원 계획이었으나, 현재 30건, 7억 지원으로 이용실적이 저조하고 활용도가 낮음.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많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 개인(브릿지) 보증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바람.
2. 4無 안심금융 보증지원이 자치구별 형평성 있게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3. 소상공인 정책연구센터의 골목상권 활성화 관련 연구결과를 시의회와 적극 공유하기 바람.
4. 코로나19 관련 보증 접수 건수에서 신청인 자진반려, 담당자 오류입력으로 인한 반송 비율이 높음. 재단은 신청인의 자진반려, 담당자 오류입력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5. 보증 반송 및 거절 시 소상공인에게 충분한 안내를 통해, 민원을 예방하도록 노력하기 바람.
6. 업무보고에서 서울글로벌바이오메디컬 신성장동력투자펀드에서 수익률이 높음. 이런 수익을 냈으면 수익에 대한 정당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 담당부서와 협의하기 바람.

기후환경본부 -20건

1. 최근 실시된 음식물류폐기물 관리 용역 관련, 기존의 사료화, 퇴비화 등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정책, 투자대비 효율성, 세부사업 평가 등이 포함된 심도 있는 추가 연구 수행을 검토하기 바람
2. 싱크대 탈수기 보급 시범사업을 검토하기 바람
3. RFID 종량기 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및 중장기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4. 자치구별로 다른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 기준에 대해 통일된 기준을 검토하기 바람
5.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에 전기차 충전시설, 1종 보일러 의무설치, 친환경 건설기계사용 의무화 기준 등의 상향 조정된 기준에 대한 적용을 철저히 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개발사업 초기부터 강화된 평가기준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기 바람
6. 광역자원회수시설 대상지 선정은 해당 지역주민의 민원 발생가능성이 높은 만큼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기 바람

7. 전기차 보급 정책은 보조금 지급보다 충전인프라 확대에 중점을 두고 서울시에서 추진하기 바람
8. 전기버스 차량의 시동이 꺼지는 등 시민들의 안전과 관련하여 성능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9. 서울시가 '제로웨이스트 서울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 다회용품 보급 실적도 중요하지만 이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과 모니터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10. 실효성 있는 오존 관리 대책 마련하기 바람
11. 휘발성유기화합물(VOC)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또는 방지시설 설치비 지원 등의 소극적 대책을 넘어 좀 더 적극적인 관리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12. 매달 열리던 메타거버넌스 회의가 지난 7월부터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음. 메타거버넌스가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13.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의 일몰 사유로 제시한 저효율, 민원발생, 폐업업체 발생, 신기술 고효율 정책 등은 명분이 매우 약하며 상당 부분 사실과 다르며, 서울시의 관리부실 문제는 간과되어 있음. 책임 소재를 좀 더 명확히 하고 태양광 사업에 대해 제대로 된 평가를 수행하기 바람

14. 태양광 발전 이외의 연료전지, 지열, 수열, 소수력 등의 신재생에너지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 만큼 정책입안자의 기호에 따라 한 종류의 에너지를 집중적으로 보급하기 보다는 다양한 신재생에너지를 다각도로 검토하기 바람
15.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과태료 부과 후 취소/환급과 관련하여 정확한 법률자문을 받기 바람
16. 기후예산제 시행 관련, 4개 유형별로 예산 대비 효과를 분석하여 정책에 반영하기 바람
17. 휘발유엔진 낙엽송풍기는 VOCs(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므로 전기식 송풍기로 교체하기 바람
18. 전기차 구매자에게 차량 출고가 늦어지는 문제가 있으므로 시에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19. 현대자동차 등 전기자동차 제조사에는 제작완료된 전기차가 많으나, 구매자와 연계가 되지 않아 출고되지 못하고 있음. 이를 확인 판매자와 구매자가 연계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20. 미니태양광 사업을 중단하더라도 공공주택 경비실 미니태양광 보급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바람

푸른도시국 - 29건

[푸른도시국] - 19건

1. 민관협력 사업 추진 시 가급적 기부심사를 받아 견적 등 근거를 토대로 추진하길 바람
2. 시민, 정원사, 작가가 함께 공유하고 만들어가는 정원박람회 사업추진을 해주기 바람
3. 정원 조성 후 기간이 지난 후에 식물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서 당초 조성 취지를 지켜나가는 방법을 강구하기 바람
4. 작품에 작가와 정원사들을 함께 표시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5. 시공원 내 책쉼터(숲속도서관) 관리가 부실하여 시설보완이 필요한 곳은 푸른도시국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하기 바람.
6. 서울로 유지관리의 근본적인 책임은 서울시에 있으므로 향후 관리주체 변동에 따른 시설 유지관리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길 바람
7. 인권담당관 시정권고 사항에 대한 대응이 적절하지 않아 추가 가해가 발생했으므로 재발 방지를 위한 방법을 마련하길 바람
8. 삼천만그루 나무 심기 사업의 가로수 식재 실적과 가로수 자체 증감

통계가 일치하지 않아 전체 통계관리에 유의하기 바람

9. 노원구에서 가로수가 크게 감소하였는데, 원인을 파악하여 가로수 식재 계획을 세워서 향후 복구하기 바람
10. 공공조경가 자문활동을 하면서 기관 사업에 계약을 체결하는 이해충돌 관계를 규정하고, 예방하는 내부 지침을 마련하길 바람
11. 양재고개 단절된녹지축 사업에서 계획과 달리 예산집행이 되지 않아 사업계획과 예산계획에 체계를 갖추길 바람
12.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매뉴얼에 따라 양재고개 녹지축 사업이 투자 심사 재심사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명확히 파악하길 바람(총 사업비 증가, 중앙심사 재심사 대상, 지방채 발행계획변경,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등)
13. 산림복지전문업 채용 시, 공고문에서 채용분야를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관련분야 자격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바람
14. 한남근린공원의 공원화 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민간의 개발을 고려할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 종상향 등의 용도지역변경으로, 난개발을 조장하는 것은 지양해야 함.
15. 높은 종합성과평가 점수를 유지하던 서울숲과 서울로 7017의 민간위탁에서 직영으로의 전환은 운영개선과 예산절감 만으로 그 사유가 미약함. 서울로 인건비 과다 지출 등 직영전환 근거 대부분은 서울시의 관리 소홀에 기인하므로 이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16. 서울숲의 인권 및 회계문제는 종합성과평가 부분에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음. 평가체계의 개선이 요구 됨.
17. 난지도 매립지 매립가스 포집 및 처리시설 위탁은 한국지역난방공사가 2002년부터 단독으로 위탁받고 있어, 최소한의 경쟁 체계를 갖추어야 함. 낮은 가동률로 인한 매립가스누출로 지역주민 건강이 우려되므로 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람
18. 도시공원대장 시스템 입력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19. 염창근린공원 내 훼손지 슬럼화로 주민민원이 있으므로 푸른도시국에서 공원조성을 위해 노력해 주기 바람

[서울대공원] - 10건

1. 양서류, 파충류, 곤충 등 동물종들의 자료 현황이 홈페이지 정보와 달라서 군집수 등을 고려해 체계를 세워 관리하기 바람
2. 홈페이지상에 동일종에 대한 명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돼 있어 통일시켜 주기 바람
3. 주차비가 2배 올라 시민에게 부담을 주고 있으니 재검토해 주기 바람

4. 위치정보 빅데이터 기업에 개인정보를 넘기게 되었는데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5. 코로나19로 인해 전체 이용객이 줄었는데, 음식물 쓰레기는 더 늘어나고 있어 그 원인을 파악하여 개선하기 바람
6. 주차장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보면 업체의 반독점 행위를 묵과하는 행위가 될 수 있어 잘 검토하기 바람
7. 주차요금 인상 등 시민부담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의회와 충분한 소통이 없었으므로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바람
8. 동물사육 관리는 동물복지 차원에서 관리경험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하여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바람
9. 돌고래(태지) 방류 또는 사육에 대한 문제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기 바람
10. 코로나19 상황에서 야구장 운영이 가능했던 사유에 대해 현황 파악하여, 코로나19 상황에 맞게 운영하기 바람

상수도사업본부 - 17건

1. 비굴착공법 시행 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를 시행하기 바람

2. 비굴착공법 정비사업이 사전절차 지연 등으로 인한 사고이월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대상지 선정, 설계, 예산확보 등의 사전 계획을 통해 추진하기 바람
3. 서울시가 현재 운영 중인 액화염소시설을 차염 설비로 대체하는 것과 현재 추진 중인 2040수도정비계획에도 포함하는 것을 검토하기 바람
4. 종합건설업의 전문분야 업무영역 진출을 허용하는 내용의 건산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상수도공사 특수성을 고려하여 전문건설업으로 제한하고 있는 연간단가사업에 대해 시범적으로 종합건설업에게도 허용하는 것을 검토하기 바람
5. 서울물연구원에서는 가정 내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필터의 변색 원인에 대해 분석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기 바람
6. 녹물 및 스케일 방지 기술 등에 대해 국내외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선도적으로 적용가능성을 검토하기 바람
7. 마포구 성산 시영아파트 온수 폐놀 검출 관련 사항은 옥내 급수문제로 인해(지자체나 상수도사업본부의 소관 사항이 아님) 제도적으로 설치 및 관리 등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므로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공동주택과와 협의하여 대책을 수립하기 바람
8. 일반 건물 저수조에서 소형생물 발생 원인이 정수 과정이 아닌 외부요인, 주로 저수조 위생관리 소홀에 따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저수조 위생관리에 대한 감독이 체계적으로 철저히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9. 서울시 우수율 상향 및 개선을 위해 비교적 우수율이 저조(90% 미만)한 중부수도사업소 지역 등에 대한 정밀조사(학술용역) 수행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10. 기후변화와 물 사용과의 관계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물 절약 방안과 함께, 상수도분야의 기후변화 대응 전략까지 강구하기 바람
11. 수열에너지 민간분야 보급 대상사업을 찾지 못하는 등 기대치에 많이 못 미치지만 너무 서둘러서 앞서 가는 것도 적절치 않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람
12. 소수력발전 추진시 경제적 가치(효용가치), 상수원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무리한 사업추진에 따른 매몰비용(사업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13. 정수슬러지 처리 및 재활용과 관련하여 이전 처리 업체와의 갈등문제 해결, 슬러지 재활용 활성화 방안 등을 검토하기 바람
14. 정수센터 순환정비 추진을 위한 순환정비용 정수센터 건설 후보지(서측) 선정 과정에서 인근 주민의 설득과 공론화 등 숙의적 절차가 필요하며, 해당 지자체와 사전에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충분한 공감대 형성을 통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15. 수도 조례 위반 과태료 현황을 보면 대부분이 수도계량기 무단철거

및 이설임. 이에 대해 재건축, 재개발 지역의 철거과정에서 해당 주민들 간의 분쟁으로 인해 계량기 무단철거나 이설 문제가 일어나고 있지만 상수도사업본부의 뚜렷한 해법이나 대책이 없는 바, 제도, 단속 등을 통해 철저한 지도 감독하기 바람

16.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내의 침전지 보호 벽체 설치에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예산 및 수질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기 바람

17. 동파예방 목적으로 폴리케톤 수도 계량기를 금년에 다량 구입했으나, 동파 예방에 효과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에 대한 조치 계획과 향후 동파예방 계량기 구입 시 철저한 사전절차(성능시험 등)를 통해 안전한 수도계량기를 구매하기 바람

한강사업본부 - 13건

1. 자전거도로 옆 보행자들을 위하여 횡단보도 인근 자전거도로에는 자전거 이용자들이 자연스럽게 속도를 낮출 수 있는 방지턱과 감속을 요청하는 안내판 설치를 검토하기 바람

2. 시간선택임기제 겸직근무 위반사항을 재확인하기 바람

3. 근태관리와 작업결과 확인 등 보다 철저히 인력관리를 하기 바람

4. 여자화장실 뿐만이 아닌 남성화장실 내 비상벨 의무 설치에 관해서 검토하기 바람

5. 채용, 근태 관리 등 표준화된 한강사업본부 인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바람
6. 한강공원 내 외래생태종에 대한 데이터 수집 및 대처 방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바람
7. 공공성 확보사업 중 하나인 세빛섬 블로그 운영이 세빛섬에 입주한 소수의 업체 홍보 수단이 아닌 모든 시민에게 유익한 정보의 창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최신 트렌드에 맞는 블로그 운영 방안 마련도 검토하기 바람
8. 서해벚길 재추진 관련 언론보도는 계속되고 있지만, 이미 10년 전 서해벚길 사업은 한강르네상스사업 특혜 및 비리규명을 위한 행정사 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사업성이 없다는 평가를 받은 사업임. 재추진에 대한 설부른 접근은 예산의 낭비 등 같은 문제점을 반복하여 드러낼 것 임. 한강사업본부도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람
9. 신규 설립 검토 중인 한강공원 통합관제센터와 S-Plex와의 통합운영을 검토하기 바람
10. 장기간 체납된 사용·수익 허가시설의 사용료에 대해 적극적으로 징수하기 바람
11. 기존 무궁화 100그루 기부 단체에서 5천주 추가 기부를 희망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해 한강공원 내 무궁화길 조성에 힘써주길 바람

12. 한강 변사사고 관련 CCTV 설치 외 사고 예방 대책을 추진하기 바람
13. 서울시가 한강공원 내 자전거 도로의 실질적 관리, 단속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상위법령 개정과 관련하여 행안부에 적극적으로 건의 하기 바람.

서울에너지공사 - 10건

1. 태양광 발전사업은 내년 업무보고 시 세부추진계획과 함께 중장기 계획을 보고하기 바람
2. 태양광 설치는 대학 등을 포함하여 대규모 시설에 더 효과적일 수 있으므로 사업 확대를 위해 다양한 대상지 발굴에 적극 노력하기 바람
3. 열병합발전소 철회 요구 등 다양한 민원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 자료를 확보하여 민원인에게 설명, 이해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4. 4차 산업시대와 맞는 신기술 등을 접목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바람
5. 우수한 인재를 영입하여 사업 추진의 동력을 마련하기 바람
6. 태양광사업 확대를 위해 권역에너지센터에서 시민홍보 등을 담당했는

데, 향후에도 사업검토를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바람

7. 수원 에너지클러스터 조성 사례를 검토하여 서울에너지공사에서 서울시 신재생에너지 토탈스테이션과 같은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기 바람
8. 임원 인사규정 내 감사의 직무에 대해 어떤 직무를 수행했는지 다음 회기에 입증하기 바람
9. 사내복지기금 운영 및 관리에 대해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람
10. 타당성 검토용역 시행 사업 중 촉구단 창단을 시행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 검토하기 바람

□ 대변인 : 2건

1. 업무추진비 집행 및 결재시 규정을 준수하여 처리해주시기 바람.
2. 전임시장 사업 무조건 반대하지 말고 타협점을 찾아 협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함.(유용 의원)

□ 시민소통기획관 : 2건

1. 국장급 이상이 TBS와 회의한 내역이 전무한 실정임. 산하 재단 모두와 소통하기 바람.
2. 정책 수출 사업단이 SH공사 내에 구성되어 있을 필요가 없어 보임. 사업 효율과 성과를 낼 수 있는 조직에 사업단 이관 필요.

□ 문화본부 : 8건

1. 한양도성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철저한 대책마련과 이에 따른 담당부서 간 역할 분담 그리고 긴밀한 협의 필요함.
2. ‘공공미술 프로젝트’의 목적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예술가들을 돕기 위한 것이라면 직접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을 더 확대하거나, 각자 원하는 작품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모사업 예산을 늘리는 방안 마련을 검토해 주시기 바람.
3. 시민소통기획관의 공공언어 바로쓰기 사업 등에 맞추어 유니버설 디자인 명칭을 “모두의 디자인”으로 바꾸는 것을 건의함.
4. 본부장은 재단대표들과의 적극적인 소통 및 협업에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5. 서울시는 건립중인 창작연극지원센터가 지역과 유기적으로 발전하기 위해 성북구 및 성북문화재단과 지속적인 협의를 해주길 요청드립니다.
6. 코로나19시대, 서울도서관은 장기적인 디지털 정보 서비스 계획을 마련해야할 것임.
7. 서울시 예산이 지원되는 민간위탁 사업 참여자들의 공개적인 정치 활동은 지양하도록 바람.

8. 코로나19와 상관없는 사업임에도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이 많으므로 연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 **관광체육국 : 5건**

1. 잠실 주경기장 리모델링 사업에 관광체육국의 적극적인 의견 반영
2. 미식 페스타 추진 등 행정사무감사 시기와 맞물린 주요 행사는 예산 심의 전까지 중간 보고 바람
3. 서울시 직장운동경기부 관련
 - 다이빙 선수의 경우 다이빙외 다른 수영종목도 출전할 수 있기에 다른 종목보다 경제적이므로 해당 종목 창단 검토 요청
 - 컬링의 경우 남녀(믹스더블) 출전 가능한데 서울시에는 남자팀밖에 없어 해당 경기 출전이 불가능함으로 여자팀 창단 검토 요청
4. 관광특구 지정과 관련하여 강북구를 역사특구로 조속히 지정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5. 강남구 지역 관광 관련 다양한 사업 진행 중인데(수서역세권 개발, GBC 건립, 영동대로 복합개발 등) 인근 국기원, 봉은사, 강남역 등 아우르는 관광상품 개발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기 바람.

□ **서울역사박물관 : 8건**

1. 메타버스나 제페토 사업은 목표를 단기 목표, 중장기 목표 이렇게 나눠서 접근을 하는 방식으로 신중히 재검토하고 추진해야할 것임.
2. 국립고궁박물관, 대한민국 역사박물관등 주변 박물관 미술관과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박물관 홍보 및 방문객수 증가에 힘써주기 바람.
3. 홍보 마케팅에 대한 전문성을 키워 많은 시민이 찾는 박물관으로 거듭나기 바람.
4. 최근 인사동에서 출토된 한글 금속활자 유물 등이 서울에서 발굴되었는데 서울과 관련된 유물이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전시가 이루어지는 방안 요청.
5. 서울 역사를 연구하는 서울역사편찬원과 연구 기획과 연구자료 활용에 있어 연구의 중복을 방지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 기관 간 협업이 필요.

6. 홈페이지에 e-북 등 아카이브 자료가 잘 구축되어 있는데 활용을 잘 못하고 있으므로 홍보 강화가 필요함
7. 서울생활사박물관은 주차장이 협소하므로 대중교통 이용 방문 안내 홍보를 강화하고, 박물관 조성에 많은 예산이 투입된 만큼 이용객 증대를 위해 노력해 주기 바람
8. 학술대회 논문집 '뮤지엄리뷰'가 연구로만 그치지 말고 시민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서울시립미술관 : 10건

1. 시민들 대상으로 실시한 전시회 만족도 조사 결과 중 높은 점수를 받은 전시회의 특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향후 전시 프로그램 기획 시 반영할 것.
2. 시민큐레이터에 대한 수강생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활발하게 소통하여 줄 것을 요청.
3. 사업 및 예산 관련해 시의회와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노력해 주기 바람.
4. 신진미술인 전시지원 프로그램의 지원 자격 상한선을 설정하여 실질적으로 전시지원이 필요한 청년 미술인이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재구조화 요청.
5. 비엔날레 예산이 줄어 작품의 질을 높이기 어려웠을 것 같은데 작품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신경 써 주기 바람
6. 기관 아카이브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데, 예산을 확보 하지 못한 것이 아쉽고 앞으로 기관 아카이브 구축을 위해 노력해 주기 바람
7. 비엔날레 전담팀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 주기 바람.
8. 미술관도 메타버스 사업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바람.
9. 비엔날레 폐막 후 의원들에게 결과보고를 해 주기 바람.
10. 서소문본관은 일제 강점기 때 경성재판소로 사용되던 건물로 문화재로 등록되어 서울시 청사를 건축하지 못하고 있는데, 과연 이 건물이 문화재로서 가치가 있는지 생각해 보기 바람

세종문화회관 : 3건

1. (주) 광화문아띠의 미납금을 반드시 회수하기 바람.

2. 삼청각 위탁종료 관련 삼청각 근무직원들이 향후 고용에 있어 노동조합 면담 등을 통해 직원 고용 안정을 위해 노력하기 바람
3. 후원협찬 사업의 적극적인 목표 설정 등 자체 수입 확대를 위해 노력하기 바람

서울시립교향악단 : 7건

1. 매년 예산 편성시 협찬수입을 23억원 정도로 설정하고 있는데, 이는 서울시향이 현재까지 달성한 최고 협찬수입 기준임.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국내외 공연연계가 어렵고, 내홍을 겪은 서울시향으로서는 달성하지 못할 수입 예산을 계속적으로 과대 추계하는 것은 문제임. 2022년부터는 현실적인 추계를 반영하기 바람.
2. 서울시향과 관련한 내부 정책결정, 소송, 노조관계 등 당면한 문제가 많은데 신임대표가 이러한 문제들을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파악에 만전을 기할 것.
3. 신임 이사장이 개인SNS를 통해 특정정당 대통령 후보를 비난·조롱하는 등 부적절한 정치적 발언을 지속하고 있음. 서울시향 운영에 누가 되지 않도록 자제시켜 주시기 바람.
4. 코로나19 지속으로 인해 공연문화의 패러다임이 세계적으로 변경되고 있는 바, 서울시향이 관객과 더욱 소통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온라인 프로그램 마련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겠음.
5. 월간지 외 다른 물품이나 기자재 구매에 있어서 희망기업 및 사회적 기업 등을 더욱 활용하여 서울시립교향악단이 사회적 가치를 증대하는 역할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할 것.
6. 하부직급부터 직원과의 소통을 철저히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근무태만 등 내부 직원들 관리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람.
7. 코로나 시대에는 영상이 중요함. 곡의 배경지식 등을 추가하는 등의 차별성으로 경쟁력을 갖추기 바람.

서울문화재단 : 4건

1. <예술로 플러스> 및 <예술로 함께> 사업관련 만족도 조사에서 응답률이 저조함. 참여자들의 간담회 및 의견수렴 등을 통해 2019년 대비 2020년 만족도가 급감한 사유를 파악하고 향후 사업에 참여자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2. 메세나 사업의 개별 사업들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추진돼 시민들

의 기부문화 확산에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3. 지역형 예술교육 활성화 사업 가능하면 각 자치구가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야할 것.
4. 예비비 사용 시 사전에 의회 보고하고, 예산편성을 보면 예비비는 늘고 사업비는 많이 줄었는데 사업비예산 확보에 노력 바랍니다.

□ 서울디자인재단 : 5건

1. 서울라이트사업 3년간 51일이고 22년도에도 57일 정도밖에 가동하지 않으면서 수익 창출을 위한 임대사업은 장비 훼손 우려 등으로 하지 않는 점과 장비 활용 방안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2. 패션사업 이관 관련 서울패션위크 사업 다시 재단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 해주시기 바랍니다.
3. S-돌봄디자인 관련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필요한 사업으로, 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4. 서울디자인창업센터 일반시민과 창업자의 필요한 요구는 다르므로, 각각의 니즈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의 운영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임.
 - 올해 운영성과 결과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사업 대상을 검토 바랍니다.
5. DDP디자인스토어 관련 대표 상품을 개발하여 DDP에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 서울관광재단 : 4건

1. 서울관광 할인패스 이용실적을 집계하여 사업성과 분석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2. 다누림 관광센터를 장애인 위주로 운영하지 말고 관광약자 전체를 위한 사업으로 추진하기 바랍니다.
3. 관광재단이 관광사업자를 위한 경영지원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 일자리 센터, 관광사업자 민원 창구 등 현장에서 필요한 지원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 해주시길 바랍니다.
4. 서울관광재단의 기획경영본부장, 국제관광·MICE본부장이 공석인데 업무공백

없도록 적절한 인선을 해주시길 바람.

□ 미디어재단티비에스 : 7건

1. TBS는 유지비용, 인건비 등 예산을 더 과감하게 공격적으로 해야됨. 민관이 함께 상업광고에 힘써야 하며, 시민소통도 마찬가지로 주체인 TBS가 제일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임.
2. 민형사 소송건에 대하여는 잘 대처하여 시민의 공영방송사의 가치와 명예를 지키기 바람. 다만, 소송에 있어 적절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함.
3. 방송 공영성 제고를 위한 세미나 및 공정성 확보 연구용역 이후 후속 조치가 미흡. 공영성 제고를 위한 재단의 역할 및 방안에 대한 정리가 필요해 보임.
4. 시청자 민원 처리가 빠르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5. TV방송 프로그램 중 유튜브나 다른 채널을 통해 수익을 내는 프로그램은 극히 일부에 불과함. 뉴미디어채널에 업로드 하기 위한 영상만 제작하는 것이 예산 절감 및 조회수 증가를 통한 수익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6. MOU 통한 업무개선 및 성과반영하여 급변하는 방송 환경에 뒤쳐지지 않는 사업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람.
7. TBS 전체 프로그램에 대한 청취율과 시청률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방면에서 노력해주길 요청.

□ 120 다산콜재단 : 4건

1. 장기적으로 재택근무 확대와 같은 변화를 시스템으로 끌어가려면 많은 고민이 필요하며, 역량 및 응대수준에 부정적 영향이 가지 않도록 해야 함.
2. 악강성 민원 피해자에 대한 내부적인 사후조치를 더 면밀히 해 주기 바람.
3. 부동산·세무 등 전문지식이 필요한 상담도 자체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길러 소화하는 방안 검토 요망.
4. 감염병 위험 사업장인 120다산콜재단 사업장의 감염도 저감 및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청사 업무 공간 개선 요청.

◆ 여성가족정책실 - 8건

1. 공유어린이집, 다함께어린이집, 생태친화어린이집과 같이 기능이 중복된 특화어린이집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방안 적극 검토할 것
2.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학대아동 개개인에 대한 사례관리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바뀌더라도 해당 아동의 모든 히스토리를 한 눈에 보고 사례관리를 계속 이어 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할 것
3. 서울여성공예센터 더아리움의 정체성이 이제 시대에 맞지 않음. 동북권에 여성을 통합할 수 있는 시설 필요하니, 향후 더아리움을 어떻게 개선·활용할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보고할 것
4. 어린이집 급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5. 아동학대 신고접수가 꾸준히 늘며 사회문제로 자리 잡음. 단발성의 부모교육에 그치는 것이 아닌 실효성 있는 부모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
6. 저출생 해소를 위해 다른 국가의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으며, 저출생 종합계획 수립에 있어 깊은 고민 필요
7. 보육 부담 해소와 세대 간 소통 증진을 위해 아이들과 어르신 사이의 교류 사업 확대를 고민할 것
8. 스페이스살림은 기존 동부·남부·북부 발전센터의 창업지원 사업과 큰 차별점 보이지 않으며, 다른 일자리 기관과 적극적인 네트워킹과 및 허브 역할에 있어서도 아직까지 별다른 성과 보이지 못하고 있음. 스페이스살림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여성가족재단은 여성능력개발원을 위탁운영하다 올해 재위탁을 받지 못하는 등 일자리 기관 운영에 대한 미흡함과 전문성 부족을 드러낸 바 있음. 이로 인해 향후 여성가족재단의 스페이스살림 운영에 대한 우려가 있음. 서울시의 여성일자리사업이 여러 기관에서 소모적이며 분절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실정임. 보다 극대화된 효과를 위해서는 서울시 여성일자리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해 보임. 현재 일자리 전문기관인 여성능력개발원을 주축으로 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세심한 다각도의 서울시 고민과 대책을 요구함

◆ 여성가족재단 - 1건

1. 정보시스템 통합운영 관련 유지보수 비용으로 매년 6~7억의 과도한 예산이 소요됨. 약 200명 정도의 한정된 내부직원을 위해 매년 6~7억원의 유지비용을 들여 사내용 ERP를 별도 구축·운영하지 않고 기성품 사용하여 예산절감 가능한지 점검할 것

◆ 여성, 아동, 외국인주민 관련 시설 - 5건

(여성능력개발원, 동부여성발전센터, 서울여성공예센터 더아리움, 서울특별시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 여성긴급전화1366 서울센터, 십대여성건강센터, 서울상상나라, 시립꿈나무마을 초록꿈터, 시립꿈나무마을 파란꿈터, 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 서울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 제1호 노원·도봉권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서울글로벌센터(외국인주민 생활지원 사업))

〈시립꿈나무마을 초록꿈터, 시립꿈나무마을 파란꿈터〉

1. 재원아동의 학습저하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2. 성장하는 아이들이 있는 만큼 급식 운영에 있어 영양학적으로 균형있는 식단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3. 기관 내에서 아동폭력 등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할 것

〈서울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

1. 학대아동 개개인에 대한 사례관리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바뀌더라도 해당 아동의 모든 히스토리를 한 눈에 보고 사례관리를 계속 이어 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할 것

〈서울글로벌센터(외국인주민 생활지원 사업)〉

1. 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도 서울글로벌센터를 통해 외국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홍보 확대할 것

◆ 복지정책실 - 4건

1. 후천적 장애 발생으로 수어를 활용하지 못하는 청각장애인이 상당히 많음. 현재 수어와 관련한 지원 정책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장애를 겪는 분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이 어떤 것인지 고민할 것을 당부함
2. 복지정책 수립에 있어서 선진국의 사례를 서울시의 실정에 맞춰 수립할 필요가 있음. 미국, 일본 등 고령 친화 정책에 있어 참고할 만한 외국 사례가 많아 정책 발전에 힘쓸 것을 당부
3. 송파실버케어센터 건립 백지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치매노인을 위한 보호 시설 설치 시 지역 내 인센티브 고려할 것
4. 돌봄종사자 마스크 지원했는데, 자치구별로 지급 사실을 몰랐거나, 지급이 누락된 경우가 있음. 정확히 체크해서 빈틈이 없도록 제도 보완할 것

◆ 서울시복지재단,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 4건

〈서울시복지재단〉

1. 복지재단의 행사 대부분이 대행업체 발주로 진행되고 있음. 역량을 키워 자체 수행 비중을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1. 50플러스재단의 주 목적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임. 그러나 강동50플러스센터의 경우 여가선용이 1순위인 것처럼 목적이 변질되고 있다고 생각됨. 50플러스재단이 다른 세대와 차별된 일자리 창출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2. 50플러스 중장년 1인 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연구 진행 중인데, 50플러스재단의 목적성에 맞게 잘할 수 있는 것에 더 주목하고, 특히 창업과 관련된 시스템 구축은 다른 쪽에 맡겨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검토할 것
3. 1급·2급은 정원이 모두 채워져 있으나, 중간직급인 4급·5급은 비어 있음에도 채워지지 않고 있음. 역량 있는 내부 진급대상자들이 적기에 승진할 수 있도록 할 것

◆ 복지 관련 시설 - 3건

(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 시립강북노인종합복지관,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
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 시립중계노인전문요양원,
서울시어르신돌봄중사자종합지원센터, 서남 어르신돌봄중사자 지원센터,
서울시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남부장래인복지관, 서울곰두리체육센터,
서대문농아인복지관, 커리어플러스센터, 번동코이노니아 장애인보호작업시설,
서울시동남보조기기센터, 서울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브릿지종합지원센터, 양평쉼터, 비전트레이닝센터,
따스한채움터, 돈의동쪽방상담소, 서울역쪽방상담소, 영등포쪽방상담소)

〈남부장래인복지관〉

1. 발달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지체장애인 외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수 부족함. 또한 발달장애인복지관, 가족지원센터, 평생학습교육지원센터 등 발달장애인을 위한 시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중복되는 프로그램 많음. 타 기관과의 중복 프로그램을 지양하고 장애인종합복지관으로서 발달장애인 외 다른 유형의 모든 장애인을 포용할 수 있는 각각의 장애유형에 맞는 장애특화사업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발달장애인 뿐만 아니라 모든 장애인이 고르게 복지혜택을 받기 위한 종합 복지 필요하여 이를 더 배려해주시기 바람
2. 겨울철 새벽 운동하는 지역 주민이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 건의

〈커리어플러스센터〉

1. 지원인력 양성을 통한 현장훈련 인턴사업 중요한 사업임. 이 사업에 좀 더 집중하고 불용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 예산을 홍보비보다 사업비에 써 주길 바람

◆ 시민건강국 - 4건

1. 서울시의 의사·한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약사협회 등 각 협회 사이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대시민 사업 내용 중 2개 이상 협회가 협업으로 진행한 사업이 최근 5년 동안 0건임. 근본적인 대책 강구 바람
2. 난임치료는 양의학 단독이 아니라 한방 병행 지원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3. 서울의료원 가임클리닉의 경우 「지방의료원법」 위반, 「지방재정법」 위반 등 각종 문제를 안고 출발했는데 그 동안의 실적을 보면 난임 관련 시술 별로 없고 일반 산부인과에서 하는 것들을 주로 한 것으로 확인됨. 공공병원에서의 가임센터에 대한 정체성 만들어 나가는 노력할 것
4. EMR 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개인정보는 각 병원별로 보호하되, 시스템 유지보수는 병원들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해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안 모색할 것

◆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 1건

1. 시립병원의 의료진을 소개하는 홍보물과 관련하여 홍보담당자를 확대하고 내용을 충실히 해 많은 시민에게 시립병원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도록 할 것

◆ 서울의료원, 직영병원, 위탁병원 - 3건

(서울의료원, 어린이병원, 은평병원, 서북병원, 보라매병원, 동부병원, 북부병원, 서남병원, 장애인치과병원, 백암정신병원, 축령정신병원, 고양정신병원)

〈전체 병원〉

1. 온실가스 감축계획 수립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내용이 없음. 관련 계획 및 예산 구체적으로 수립할 것

<보라매병원>

1. 정신응급의료센터 시범사업 시행 2년 경과함. 전국 최초로 시행된 사업인 만큼 효과성 분석과 보완사항 등 점검하여 정신응급환자 대응 시스템의 선도적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할 것

<백암정신병원, 축령정신병원, 고양정신병원>

1. 병원 내 장기입원환자가 많은 것으로 확인됨. 환자를 지역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안전총괄실 · 도로사업소] — 9 건

1. 최근에 실시한 동작대교 보수결과는 시민들에게 만족스럽게 조치된 것으로 여겨지며, 향후 다른 한강상 교량 보수에도 만전을 기할 것.
2. 최근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가연성 외장재 고층건물에 대해 주택건축국, 소방재난본부 등 관련 부서와 긴밀하게 협의해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3. 은평구 시도상 미끄럼방지 포장사업은 시인성 개선 효과가 컸다고 판단됨. 서울시내 전체 어린이보호구역에 확대 검토 바람.
4. 주거 취약세대에 대한 계량기 교체 등 동파방지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바람.
5. 아스팔트 포장공사 시 소음 저감대책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검토 바람.
6. 건설업 부적격업체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 바람.
7. 도시열섬 완화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쿨링로드 설치 확대 바람.

8. 자치구별 과속카메라 설치현황이 자치구 재정상황에 따라 편차가 크므로 재난관리기금에서 자치구 과속카메라 설치지원이 가능한지 검토 바람.

9. 한강교량에 대한 안전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

[물순환안전국] — 5건

1. 서울시 관내 빗물펌프장을 복합화하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자치구와 협의하여 추진 방안을 마련해주기 바람.

2. 스마트 물순환 도시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효과 대비 사업비 타당성 검토해주기 바람.

3. 요소수 부족현상과 관련하여 하수처리과정에서 사용되는 활성탄의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를 해주기 바람.

4. 물재생센터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5. 월류수에 따른 하천 오염이 우려되므로 이를 정화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조치해주기 바람.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 5 건

1. 기존 교량이나 고가도로에 이미 설치된 배수관 중 짧게 설치되어 시민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곳이 있는지 안전총괄실에 전수조사를 건의하여 시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기 바람.
2. 사업 계획부서에서 완료한 실시설계가 현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여 시공상의 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공사 중 다수의 설계변경이 반복하여 발생하는 바, 공사를 시행하는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실시설계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3. 공공공사 건설현장의 복리시설 및 휴게시설 설치 확대를 검토바람.
4. 성산대교의 보도개선과 함께 경관조명 등 미적인 부분 개선도 고려해 볼 것.
5. 첨단센서를 활용한 한강 교량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기술심사담당관] — 3 건

1. 기술용역 타당성심사를 실시함에 있어 단순한 서류검토만으로 타당성 심사가 이루어진다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보다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적 기반을 마련해주기 바람.

2. 예산절감 등의 효과성이 큰 기술용역타당성심사 실적이 감소하고 있으므로 이를 장려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람.
3. 공기적정성 심의 신설 이후 심의내역을 살펴보면, '조건부채택' 심의 결과에 대해 심의 지적사항을 모두 반영하였다고 하는데, 이를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주기 바람.

[서울물재생시설공단] — 2건

1. 요소수 부족현상과 관련하여 하수처리과정에서 사용되는 활성탄의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를 해주기 바람.
2. 물재생센터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주택정책실] — 11 건

1. 책임주체가 불분명한 사업들에 대해 모니터링 지속, 제도 개선, 민간 사업자에게 자료제출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필요
2.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시민참여형 행사에 반응이 좋았는데, 좀 더 많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할 것.
3. SH공사의 리츠사업 적자가 매년 늘어나는 만큼, 상세히 살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4. 공공재개발, 신속통합기획, 도시 정비형 사업 등 여러 사업들의 추진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됨. 주민들에게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안내하고 면밀히 준비하게 바람
5. 각종 주택정책 발표로 인해 사용되는 용어가 많고 복잡하여 체계적인 정리가 필요한데 특히, 공공재개발·신속통합기획·소규모 주택정비 사업 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
6. 정부와 서울시, 주민이 주택 재건축·재개발 추진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하는 만큼 정부와 주민들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할 것
7. 주택정책실 차원에서 주택 공급시기에 대하여 명확하게 예측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8. 최근, 민간재개발·재건축이 공공재개발·재건축보다 많이 강조되고 추진되는 경향이 있는데, 민간과 공공개발이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추진할 것
9.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과반 수

이상의 동의로 공공이 참여를 할 수 있는데, 사업 및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타당한 사업인지 사전에 면밀히 검토할 것

10. 서울의 주택 수요·공급에 대한 예측 가능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상시 모니터링 같은 시스템 구축을 마련할 것
11.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에 시장을 비롯한 주요 간부들의 참석률이 부족한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

[도시계획국] — 3 건

1. 전월세 갱신청구권에 많은 문제가 있으므로 주택정책실과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람
2.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동간격이 완화될 예정임. 2040 서울플랜에 35층 높이 규제 완화와 함께 규제 논의가 필요해 보임
3. 신속통합기획에 공공재개발이 밀려 홀대 받고 있는 실정임. 공공재개발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주시기 바람

[균형발전본부] — 5건

1.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추진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현대차 부지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건축 계획이 당초 원안인 105층 1개 동으로 초고층 랜드마크 건물로 추진되도록 할 것
2. 거점시설, 앵커시설들에 대한 활동이 미비하여 수시로 점검 및 시행하고, 서울시에서 자치구 등으로 이관하는 등 자립하는 시설이 되도록 추진할 것
3. 해방촌 신흥시장 현대화 사업과, 10분 동네 SOC사업 용산2가동 공영주차장 입체화 사업이 올해 안으로 반드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추진할 것
4. 마곡지구 2공구, 3공구 도시개발사업 사업 준공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

5. 김포공항 혁신지구·수색역세권 등을 랜드마크 공간으로 조성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할 내용들이(예 : 주거용·비주거용 건축물 외부 발코니 활성화 기준 등) 반영될 수 있도록 지구단위 계획 수립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제도 활용 등을 통해 제안할 수 있도록 할 것

[공공개발기획단] — 17 건

1. 사당관문 도시의 경제적, 재무적 타당성 조사의 현재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교통심의 현안 등 문제점을 해결하여 당초의 계획대로 잘 추진하여 마무리 할 것.
2. 성동구치소 부지에 대해 2017년 구치소 이전 후,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것. 아울러 이전예상 유희부지는 사전에 계획을 세워 대비하고, 공공주택 용지에 대해서도 방향을 정하여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 할 것.
3. 삼포레미콘 공장 철거 현황을 확인하여, 사업지연으로 인한 소음, 분진, 교통불편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 하고 차질없이 사업을 진행하도록, 4자협약 등을 통해 서울시가 적극적인 행정으로 협조 할 것.
4. 송현동 부지에 대한 법제처 법령 해석 결과(“지자체 토지에 국가가 미술관을 건립할 수 없다”)로 이건의 기증관 건립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대체부지로 용산을 검토하고 유치를 위해 노력해 줄 것.
5. 효창독립 100년 공원 조성사업 예산 집행률이 6%로 저조하므로, 사업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도록 노력 할 것.

6. 기반시설설치기금 조례가 2018 년 12 월에 존속기한이 만료되어 2020 년 3 월에 다시 제정했으나, 내년에 다시 폐지할 예정이므로 폐지 전까지는 공공개발기획단이 책임 있게 업무를 추진 할 것.
7. 삼포레미콘 부지 보상비 마련을 위해 주차장 부지의 용도지역 검토 진행이 지연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행정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위해서는 다소의 반대나 비판적 지적이 있더라도 기존대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8. 삼포레미콘 부지 보상비 마련을 위해 사전협상을 고려하겠다는 것은 공원 조성 이외에 다른 개발행위를 검토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공원조성을 통한 서울숲 완성의 대의명분이 흔들릴 수 있으므로 기존대로 추진할 것.
9. 공공개발기획단에서 각종 용역을 과다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검토하고, 대규모 개발정책의 TF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등 계획단계가 철저적으로 너무 복잡하므로 통합계획을 세워 사업기간을 줄이고 신속히 진행할 것.
9. 공공개발기획단에서 기획부터 실행까지 조직을 확대해서라도 사업을 마무리 할 방안을 강구해 볼 것.
10. 효창독립 100년 공원 조성사업의 국제설계공모와 설계를 병행하여 조속히 추진 될 수 있게 검토할 것.
11.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의원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하는 처리절차의 시스템을 마련 할 것.
12. 송현동 부지 교환, 성동구치소 주변 주민 민원 등 시민의 갈등이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 서울시 갈등관리제도를 활용하여 원만히 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검토 할 것.
13. 사전협상 과정이 전체적으로 지연되는 원인을 검토하기 바람. 특히, 사전협상을 인계받는 부서가 사전에 동참하여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가능한 5년 이내로 단축 할 것.

14. 서울의료원 부지 관련 강남구의 민원제기가 있으나, 송현동 부지와 교환을 당초 기획한 대로 매듭지을 수 있도록 할 것.
15. 사전협상 부지 중 장안동 동부화물터미널은 장기간 방치되어 있고 우범지역화 되어 있는 바, 신속한 주택공급이 이루어지도록 원활한 사전협상을 추진 할 것.
16.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사업 추진관련, 사전협상이 공공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는 제도인 만큼, 터미널 현대화 사업으로 임차인 피해가 없도록 하기 바람.
17. 서울숲 삼포레미콘 부지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확보 방안을 검토하고, 삼포레미콘 업체 고용인 문제, 부영호텔 일조권 문제 등도 고려하여, 현대제철과 삼포레미콘 등 양측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만히 협의 할 것.

[서울주택도시공사] — 11 건

1. 2020년도에 비해 2021년도 매입량 목표 달성이 어려워 보이는데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 전년도에 비해 매입량이 적은 이유가 무엇인지 보고할 것
2. 신내4구역 콤팩트시티 설계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전성을 위해 도로 위에 아파트 등 건물을 짓는 것보다, 남쪽의 그린벨트 지역에 짓는 방안을 검토할 것
3. 신내지구 콤팩트시티 공공주택 건립시 최저 면적이 20 m^2 인데, 면적을 더 넓힐 수 있도록 추진할 것
4. 주거복지센터 중 민간위탁으로 시행하는 곳을 당장 SH공사에서 2022년도부터 대행할 경우, 바로 시행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시행

하지 말아야 할 것

5. 임대주택 공가가 증가할 경우 공사의 손실 비용이 늘어날 수 있는 만큼, 공가 비율을 줄일 수 있도록 공실 관리를 강화할 것
6. 사장 후보자가 주장하고 있는 토지임대부 주택, 분양원가 공개 주장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재고할 수 있도록 할 것
7. 부모가 주택을 팔거나 자식에게 증여한 후 임대주택에 들어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을 해소하지 못하면 주택공급을 늘리는게 효율성이 매우 떨어지므로 대책을 마련할 것
8. 저소득층 가정의 대학 진학률이 매우 낮은 것으로 아는데, 공사 입주민 중 저소득층 비율이 많을 것이므로, 공사 차원에서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미성년자의 학업 성취도 등을 분석하고 연구하여 입주민을 위한 정책 방안을 마련할 것
9. 반지하 주택에서 지상층 이주에 대한 비용을 늘려서 실질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할 것
10. 주거복지센터 민간위탁 관리 부분을 공사로 넘기려 하는데 아직 준비가 안된 상황임. 주거복지 기능을 향상하고 시민들의 주거복지에 도움이 되도록 현 상황과 같이 민간과 공사의 적절한 경쟁 상태를 유지하도록 할 것
11. 공사 5대 혁신방안을 발표하기 전, 공사 내부에서도 자세한 사항을 알지 못하고 사전에 의회에 보고한 바가 없었음. 유사한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의회 보고체계를 확립하기 바람.

【도시교통실】 - 〈9건〉

1. 조속한 표준운송원가 산정 요청
2. DT 관련 교통분담금 등 제도 개발 건의
3. 현금 없는 버스관련 현금 낼 수 없는 상황에 계좌 입금시 환승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을 검토 요청
4. 법인택시회사와 협의하여 장애인 콜택시 증차 방안 검토
5. 지선망을 연결하는 경전철 구축 필요
6. 필요한 노선에만 공영제를 도입하고 수익노선에 대해서는 민간업체의 건전한 경쟁 유도 필요
7. 무인 교통환경 구축과 동시 기존 운송사업자, 운수종사자 대책 마련
8. 강력한 교통 수요관리 체계 만들어 차로 축소와 강력한 수요 관리 필요.
9. 택시기사 보호를 위해 영국처럼 보호막 설치하는 방안 제안

【도시기반시설본부】 - 〈1건〉

1.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변경사항 있을 시, 교통위원회에 최우선으로 보고 바람

【서울교통공사】 - 〈7건〉

1. 신정 지선 운행관련 기관사 노동조건 고려할 것
2. 승강기 유지보수 용역시 공사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도록 할 것
3. 잠실 환승센터 업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었는지 확인 바람
4. 무임수송 국가지원에 대해 적극 노력
5. 미세먼지 제거(에어맥스) 시범설치 건의
6. 지하철 내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승객 신발 먼지 제거 장치 시범 설치 건의
7. 몽골교통개발과 교류, 노후화된 전동차량 폐차 대신 몽골에서의 활용성 고려 건의

【서울시설공단】 - 〈3건〉

1. 도로 포장 예산 부족분을 확보하기 위한 서울시 협의 등 노력 촉구
2. 따릉이 휴대폰 거치대 설치 등 추가 개선방안 제시
3. 창의적인 아이디어 제안으로 코로나로 침체된 문화예술공연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선도 바람

서울특별시교육청

1. 교육청 영문 홈페이지 게시물을 현행화할 것
2. 교육청 다문화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 내 다국어 서비스 언어 선택란에 표기가 해당 국가 언어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할 것
3. 본청 직원의 4대 폭력 예방교육 이수율 제고 위해 노력할 것
4. 각 급 학교의 교직원 채용을 위한 서류 전형 시 방문접수(직접 제출)을 지양할 것
5. 사학재단 비리를 고발한 공익제보자에 대한 신분 보호를 철저히 할 것
6. 특성화고의 취업률 제고와 교육환경 등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강화할 것
7. 교육청은 강서도서관 분관 설립 관련 지역주민 간담회를 조속히 개최하고, 분관 설립 이후에도 사서직으로 도서관장을 선임하여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할 것
8. 향후 추진될 초중고고 체육관 무대 리프트 설치 사업에 있어 업체 선정의 공정성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9. 돌봄전담인력 전일제 전환에 대해 당사자와 적극적인 협의를 전개할 것
10. 학교 화장실 내 화변기가 양변기로 교체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11.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추진에 따라 설치되는 모듈러 교실에 대한 학부모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안전에 대한 학교 구성원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12. 종로구 소재 운현초등학교가 전교생 수에 비해 화장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므로 화장실 시설 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
13.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 문제에 있어 진전된 해소방안을 제시할 것
14. 교육청 재원으로 교구 및 시설개선 지원이 이뤄진 사립학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15. 서울시교육청 공공건축지원센터 민간전문가의 학교 공간 개선 과정 참여가 내실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

16. 서울시교육청 공공건축지원센터의 민간전문가 위촉(선발)에 있어 공정성 확보 방안을 모색할 것
17. 배움터지킴이를 비롯한 교육활동참여자의 역할에 대한 명확한 분석을 통해서 임금체계와 학교안전공제회 적용 여부 등에 대해 검토할 것
18. 전자철판 보급 사업이 학교급별 선호도와 학교별 상황을 고려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
19.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추진을 비롯한 교육정책 추진에 있어 학교 현장 및 학부모 등과의 긴밀한 소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
20. 교장·교감의 소통 능력과 리더십이 충분히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21. 학교 내 실내체육 공간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
22. 충분한 컨설팅과 사회적 합의를 거쳐 성교육과 성평등 교육의 내용이 구성될 수 있도록 할 것
23. 학교장의 교육철학 전달 과정에서 갈등 발생 시 적절히 조치될 수 있도록 대처할 것
24. 블렌디드 러닝 확대에 따른 다양화되는 홈페이지 접근성 개선을 위해 통합플랫폼을 마련할 것
25. 학교도서관 별 전자도서관 개관 및 학교도서관과 타 전자도서관과의 연계 강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26. 향후 희망급식 바우처 또는 유사 사업 추진을 위한 대상자 선별 시 가정통신문 등의 형태로 꿈나무카드 수혜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
27. 학교 서랍장을 비롯한 학교 비품이 적기에 교체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28. 직업계고 학과 개편이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사례가 있으므로, 산업수요에 맞게 개편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
29. 교육청은 지식재산교육이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을 통해 지속 전개될 수 있도록 할 것
30.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이 학업 포기하지 않도록 교육청 차원에서 더 분발할 것
31. 행정기구개편 관련 정원 증원이 능사가 아니므로 방만한 조직 구조에 대해 검토할 것
32. 입학준비금 사용제한품목을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33. 사립유치원 학급운영비가 타 시도 수준으로 증액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34. 특수학교 비데 설치 및 샤워실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
35. 연수원 건립 사업 추진이 미진하므로 코로나19로 인한 유희시설을 매입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36. 교육청의 교육정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것
37. 적극적인 우대 조치 등을 통해 적극행정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
38. 성과 분석과 공유 등을 통해 혁신학교에 대한 학부모 신뢰가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39. 시민과의 사전 소통을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교육정책 홍보 방안을 마련할 것
40. 자립형사립고의 일반고 전환 대책을 내실 있게 추진할 것
41. 혁신학교의 내실화 유도 및 성과 가시화 방안을 마련할 것
42. 기초학력책임지도제 예산지원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할 것
43. 사립유치원 학급운영비 지원 확대를 검토할 것
44. 학교급 별로 조리실 면적 기준이 차등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
45. 학교에 설치된 CCTV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자치구와 연계하여 CCTV 관제가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46. 성희롱, 성폭력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학생 인성교육을 강화할 것
47. 입찰로 진행된 시설 공사에 있어 하자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가 있으므로 사안별 상황을 고려하여 수의계약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것
48. 수능 감독 시 교사 급식 준비가 경쟁적으로 흘러가면서 일선 학교에서 부담이 되고 있으므로 개선방안을 모색할 것
49. 학교운동부 기숙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생 간 폭력이 예방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및 상담 프로그램 강화 등을 검토할 것
50. 본청 차원에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관련 일선 학교에서 발생하고 있는 갈등을 적극적으로 중재할 것
51. 자치구, 경찰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안심승하차존 설치 의사결정 과정에 교육청이 소외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
52. 향후 교육시설 건립 시 '베리어 프리(barrier free)'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
53. '녹색어머니회'란 명칭은 성평등 관점에서 맞지 않으므로 경찰청 측에 명칭 변경

경을 건의할 것

54. 소방서·자치구와의 협의를 통해 체험중심 안전교육이 내실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55. 중학교 1학년 대상 스마트기기 지급 사업의 시급성·필요성에 대해 재검토하고, 독서교육 위축 등에 대한 학부모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56. 일부 학교에서 교육회복사업 참여 퇴직교원과 학교 구성원 간 학생지도 및 수업 방식 등에 대한 갈등이 확인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것
57. 도서관 시설 개선 시 사용자 관점에서 공간별 활용 목적이 명확하게 인지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58. 일부 학원에서 영어유치원, 놀이학교 등의 용어를 사용하는 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반일제 이상 유아대상학원을 의미하는 용어 또는 명칭을 마련하는 방안 등에 대해 검토할 것
59. 「대안교육법」 시행으로 도시형 대안학교에 대한 관리책임이 교육청으로 이관되어 상담·대안교육팀의 업무량 증가가 예상되는만큼 조직 개편, 서울시와의 협의를 통한 예산 확보 등을 위해 노력할 것
60. 사회적가치교육 활성화 업무를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주관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61. 학교 내 무인경비용역 수행에 있어 중소기업 점유율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할 것
62. 지역별 유아수용률을 고려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공립유치원 확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
63. 교육청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것
64. AI교육 등 인공지능교육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65. 일선학교의 학생 교내 휴대폰 소지 금지 규제가 학생의 자율권이 보장되는 방안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66. 학교 주변 안전문제 해소를 위한 학교장과 지역사회 간의 소통, 협력을 강화할 것
67. 혁신학교, 통합운영학교(이음학교)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개선점을 모색할 것
68. 시설 예산(전자철관, 디지털 방송센터 구축 등) 집행 시 교육현장 의견 수렴과 부서 간 소통 및 협의를 강화할 것
69. 스마트도서관 구축, 평생교육기관 스마트패드 지원, 서울창의예술교육센터 등의 사업이 지속 및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70. 여러 도서관에 공통으로 제기된 민원에 대해 본청 차원에서 대응방안을 모색할 것
71. 특성화고 현장실습 안전 확보를 위해 평가 시 학생 참여를 확대하고, 학부모에게 평가결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72. 서울형 학생건강증진종합계획에 코로나 블루에 따른 학생 심리치유 방안이 포함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73. 학교안전공제회 사무국장 채용 방식 변경을 검토할 것
74. 교육연구시설을 기부체납을 받는 사업 진행 시 설계 단계부터 교육청 입장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75. 학교 여건에 맞춘 공법 선정으로 내진보강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
76. 건축심의위원회 구성의 다양성과 설계보상비율 판단의 적정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할 것
77. 시설사업 증가와 기술 고도화 등에 맞춰 교육시설안전과에 경력직이나 전문 인력을 채용할 것
78. 교육 정보화 업무를 수행하는 직렬에 대한 인사 배려 등을 검토할 것
79. 스포츠 분야 스쿨 미투에 대해 강력한 제재 수단을 강구할 것
80. 온라인이나 E-스포츠 기반 체육교육활동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
81. 특성화고 동문 기업 통합 취업박람회를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82. 휘경공고와의 통합으로 폐교 예정인 성수공고 부지에 정보화센터를 건립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할 것
83. 유아수용률 등을 고려하여 공립유치원 확대 정책을 제고할 것
84. 전 직원이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성실히 이수하도록 노력할 것
85. 자율형사립고의 일반고 전환에 대한 소송 및 관련 갈등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86. 학교폭력 방지를 위해 교원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87. 학교 급식 과정에서 발생한 음식물쓰레기 처리 시 정액제 방식으로 수수료를 부담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88. 특수학교 통학지원 관련 업무가 여러 부서로 분산되어 운영되고 있으므로 업무분장을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89. 장애 영역별로 특수학급을 개설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90. 학교 석면 제거 시 시공사 선정 기준과 자격요건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공사 과정에서 교육부 매뉴얼과 관계 법령을 철저히 준수할 것
91. 감사관 소속 직원에서 개방직 비중을 확대할 것
92. 시설 개방, 통학로 개선 등에 있어 학교장과 지역사회와의 소통·협력을 강화할 것
93. 교육경비보조금 확대 논의와 관련하여 서울시와 구성한 교육행정실무협의회가 형식적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할 것
94. 입학준비금 구매 가능 품목(사용 범위) 확대를 검토할 것
95. 교육복지 전문인력 임금 동결 문제와 월급제 학교행정실무사의 처우 개선에 대해 관심을 가질 것
96. 사회 구조 개혁과 동시에 교육 개혁 이뤄질 수 있도록 타 행정기관 및 각 부처와의 협의를 적극적으로 나설 것
97. 초등돌봄 확대에 있어 본청 차원에서 공간 및 인력부족 문제 해소 방안을 검토할 것
98. 교장, 교감 임기 만료 앞두고 출생연월을 정정하여 정년을 연장하는 행위에 대한 근절 방안을 모색할 것
99. 학교 내 교원 전용 골프연습장을 설치한 학교에 대한 철저한 조사 후 관련자 징계를 시행할 것
100.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듣기평가 시 잡음이나 끊김 현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 점검 등을 강화할 것
101. 국·공립유치원을 배정받더라도 통학버스나 종일반 운영 등의 여건이 맞지 않아 입학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취원을 제고 방안을 모색할 것
102. 과밀학급 해소와 중학교 학교군 배정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103. 지역 주민이 교직원이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는 학교 내 부설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104. 방역 지침 완화에 맞춰 지역주민 대상 학교 개방이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
105. 학교 도서관 진흥 정책이 시설 개선보다 전자도서관 구축에 중점을 두고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106. 교육청의 정책 사업이 복잡하므로 실효성 없는 사업은 정리할 것
107. 특목고, 외고 등이 부의 불평등에 기여하지 않도록 대응방안을 고민할 것

108. 구일초 사례에 비추어 학교 시설 사업 추진에 있어 사전에 학교구성원의 의견 수렴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109. 초등학교 교사 결원에 따른 기간제 교사 채용 시 임용고시 준비를 위해 중도 퇴직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110. 내실 있는 학생 자살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111. 별도 평가를 통해 담임업무가 적성에 맞지 않거나 사명감이 없는 담임교사의 보직을 변경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112.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
113. 돌봄교실 운영 및 돌봄전담사 처우 문제에 있어 학교 간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
114. 학생 자살률 감소와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학생 행복 조례」 시행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
115. 과밀학급 해소, 학교 교직원에게 적절한 수준의 업무분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
116. 친환경 무상급식과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에 있어 서울시와의 협의를 지속 전개하여 원활히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
117. 쾌적한 특수학교 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할 것
118. 특수교육대상자가 통학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강구할 것
119. 특수학교 또는 특수학급 시설 개선을 위한 T/F 운영에 대해 검토할 것
120. 모듈러교실에 고품질의 자재를 사용하여 학교 구성원 만족도를 제고할 것
121. 교육청은 학군 조정을 포함해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할 것
122. 구로도서관 복합화 사업 추진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123. 교육청이 관리하는 장학재단인 현송교육문화재단이 보유한 럭비구장 이전과 관련하여 주민 의견 수렴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조치할 것
124. 교육감 직무수행 지지도가 장기간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문제에 대한 원인과 함께 평가요소를 면밀히 분석한 후 개선방안을 도출할 것
125. 정년이 끝나가는 학교장은 학교장경영능력평가의 중임배제조치 등의 효과가 없으므로 평교사 강등을 비롯한 새로운 제재 방안을 모색할 것
126. 희망급식 바우처 시행 시 발생했던 문제와 민원사항을 검토하여 유사 사업의 재추진 시 면밀히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할 것

- 127. 학교 전자철관 보급 사업 추진에 있어 학교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것
- 128. 공영형 사립학교 사업에 지원한 사립학교가 부재하므로 참여율 제고를 위한 방안을 수립할 것
- 129.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결정과 적극적인 행정 집행으로 서울시교육청의 신뢰도 회복 및 민원 만족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

직속기관

- 1. 유아교육진흥원의 권역별 분관 신설을 위해 노력할 것
- 2. 학교보건진흥원은 공산품 가격정보웹 구축 후 공산품 납품업체, 시의원, 영양(교)사 등이 모두 참여하여 학교급식에서의 공산품 납품 관련 현안을 공유하는 공청회 개최를 검토할 것
- 3. 학교보건진흥원은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전면등교로 일부 학생의 우울감이 커질 수 있으므로 교육청 차원에서 학생의 심리정서 지원에 대해 종합 대책을 마련, 시행할 것
- 4. 학교보건진흥원은 학생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정서행동 특성검사 대상자 확대를 검토할 것
- 5. 학생체육관은 코로나19에 따른 이용객 감소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직원의 일탈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무기강을 확립할 것
- 6. 교육시설관리본부는 사립학교 교사동 마감재 중 치장벽돌, 드라이비트 등은 학생 안전을 고려해 전면 교체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도서관 · 평생학습관

1. 강서도서관은 도서관 진입로 변경 문제 등을 포함하여 주변 개발계획과 연계해 시설이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2. 마포평생학습관은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청소년을 고려하여 흡연부스 이전에 대해 검토할 것

기타(자료제출 등)

892건

■ 운영위원회

18건

□ 시장 비서실 · 정무부시장실 : 15건

1. 오세훈 시장 당선 이후 임명했던 신임기관장 인사 검증 서류 제출 요청
2. 시정질문에 대한 후속조치 미제출한 사람들 명단 제출 요청
3. 서울시바로세우기 예산 삭감 관련 평가담당관 평가보고서 제출 요청
4. 시장의 TBS 편향성 발언 관련 객관적 근거 자료 제출 요청
5. 태양광 발전 관련 감사 결과 보고서 제출 요청
6. 시민사회 민간위탁·마을공동체 관련 감사 진행 현황(감사집행현황, 감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면 그 사유) 제출 요청
7. 50+ 재단 이사장 인사 검증 서류(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50+ 재단 임원추천위원회 명단) 제출 요청
8. 민간위탁 관련 개정된 감사 지침 제출 요청
9. 시장비서실 전문임기제 및 보좌관 업무분장 서류 제출 요청
10. 서울시바로세우기 1조원의 근거, 오세훈 TV, 사회주택에 관한 자료 제출이 지연된 사유 등 관련 자료 제출 요청
11. 서울시 3년간 광고 집행내역(광고 중단 내역 포함) 제출 요청
12. 오세훈TV 관련 선관위 유권해석 공문 사본 제출 요청
13. 태양광, 사회주택, 청년활력공간 감사 결과 공문 사본 제출 요청
14. 현재 진행 중인 감사위원회 감사 사안 감사계획서 사본 제출 요청
15. 시장 비서실 전문임기제 및 별정직 공무원들 연봉이 상한액 내부 기준(최초 임용 시 하한액 기준 130% 범위 내)을 초과하는지 여부 자료 제출 요청

시의회사무처 : 3건

1. 예산정책위원회, 정책위원회, 편집위원회 하반기 시책추진비 사용 내역 제출 요청
2. 고용보험 미가입 문제 후속 조치 관련 자료 제출 요청
3. 임기제·별정직 고용보험 미가입자 명단 제출 요청

□ 비상기획관 : 없음

□ 스마트도시정책관(서울디지털재단 포함) : 16건

1. 재단 역대 이사장 약력
2. 어디나지원단 강사 개인별 지급내역 일체
3. 어디나지원단 교육장 대관임대료 지급내역
4. 어디나지원단 강사 지원서류
5. 공고 없이 계약직 연구원을 추천으로 채용, 활용한 내역
6. 2020년 자산관리대장 제출
7. 설립 후 현재까지 정년퇴직 외 퇴직자 현황
8. 최근 3년간 직원 채용 예산 집행내역
9. 최근 3년간 용역발주현황 및 관련서류
10. 개인정보보호 교육 등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추진대책
11. 사업추진 방식 변경에 따른 향후 공공와이파이 사업 추진계획
12. 공공와이파이 이용률 제고 방안
13. 정보소외계층을 위한 공공와이파이 설치 방안
14. 정보보안 교육 현황
15. 공공와이파이 사업 향후 추진계획
16. 에스플렉스센터 동파사고 후속조치 진행상황 및 서울산업진흥원에 손해배상 등 법적조치 여부

□ 민생사법경찰단 : 1건

1. 수사 매뉴얼 제출

□ 미래청년기획단 : 4건

1. 서울 전입 웰컴박스 관련 세부 사업 내역서(제품 내용 및 가격, lbox당 가격 책정 등)
2. 청년공간에 대한 이용현황 제출(신규 방문, 누적 인원 구분)

3. 청년활동지원센터 신규직원 채용 현황 경력 이력서 포함, 퇴직자 현황, 신규직원 심사위원 명단, 경력, 서약서 내용 포함
4. 청년활동지원센터장 임명 후 참석한 회의 일정 제출

□ 행정국(서울시 자원봉사센터 포함) : 19건

1. 시청어린이집 교직원 실제 연수 내역(예산 및 장소 포함)
2. 주민자치회 예산 집행률 자료
3. 현장위기 신속대응 광역컨설팅단 운영 구성 현황(프로필 등) 자료
4. 청사외벽 리모델링 계획 수립부터 현재까지 현황, 태양광 설치 등 사업현황 일체. 업체 선정 현황 자료
5. 생활치료센터 일별 도시락 폐기 건수
6. 시장 취임 이후 지시사항
7. 중기인력운영계획 관련
 - 2021년, 2022년 변화된 내역 및 조직과와 협의한 내용
8. 최근 3년간 특별조정교부금 신청, 교부 현황
 - 올해 자치구 신청내역 및 교부 내역
9. 정무수석 및 민생특보 채용절차와 관련 인사위 회의록
10. 서울형 주민자치회 사업개선을 위한 3차례 간담회에 대한 참석자 명단 및 회의록(5/4, 5/24, 6/15, 8/25)
11. 주민자치회 자치회관 위수탁 시범운영 사업결과보고서
12. 2022년 주민자치활성화 시범사업 자치구별 산출내역
13. 시장실에서 근무하는 서울시 공무원 전체 직원 현황
14.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최종 신청현황
 - 이의신청 심사기준 또는 규정
15. 주민자치위원회 일제 실태 점검
 - 6월부터 실시한 주민자치 실태점검보고서
16. 대선 및 국회의원 선거 관련 지방정부의 선거비용 전액 부담 근거 및 시비 과다 추계시 향후대책
17. 재난지원금 미신청 가구 의제 기부금액 처리 현황

18. 성희롱 성폭력 심의위원회 위원명단
19. 서울시 직원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관련

□ 재무국 : 7건

1. 직급별 재택근무 현황
2. 서울런 사업 관련 계약심의위원회 참석자 명단 및 회의록
3. 재무국 팀장이 주무관에 비해 초과근무를 더 많이 하는 사유(서면보고 요청)
4. 오세훈 시장 이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를 위한 용역을 하였음. 이 결과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만큼 진행사항이 있을 때는 행정자치위원회에도 보고해 주고 정부와 협의내용도 보고바람
5. 부동산 취득세 자문회의 수당지급 근거 및 상설 설치 관련 보고 요청
6. 최근 3년간 상위 30개 감정평가법인에 지급한 내역(금액순으로)
7. '22년도 지방소비세 추계자료

□ 평생교육국(서울장학재단, 평생교육진흥원 포함) : 12건

1. 하나고 장학금 최근 3년간 장학생 선정위원회 선정자 자료
2. 서울평화희망 장학금 지원 자격 및 최근 3년간 선발 현황
3. 고교-대학 연계 인재육성사업 프로그램 현황, 성과평가보고서
4.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전체 프로그램 목록
5. 서울런 추경예산 및 타부서 연계 예산 집행내역 및 용역계약서
6. 서울런 멘토 선발기준 및 모집내역, 멘토 선발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 여부, 학교별 멘토 명단
7. 초등학교 입학준비금 시-교육청-자치구 협의내용
8. 조례상 전출금관련 시-교육청 협의내용
9. 온라인 플랫폼 자문단 구성 및 회의록, 서울런 과업내용이 포함된 전체 계약서, KT-사교육 업체 간 계약서, 지면광고 및 TV광고 매체명
10.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관련 '22년 예산(안) 산출기초 조사서,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 중 방과 후 활동 등 기존 시 사업과 중복되는 사업내용
11. 학교보안관 3명 이상 배치 학교 현황 및 배치 기준
12. 서울시 평생교육 지역간 격차 원인과 해소방안

□ 시민협력국 : 16건

1. 최근 10년간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채무현황(발생내역, 발생사유 포함)
2. 2021년 11월 1일, '2022 서울시 예산안' 기자설명회 보도자료
3. 기초실에서 1차 70% 삭감해서 통보한 근거는 무엇인지, 애초에 시민협력국에서는 21년 대비 20%감액해서 요구했음. 최종 '22년 시민협력국 예산이 '21년 대비 30%이상 삭감됨. 사업을 축소, 확장할 때는 단계적인 추진이 필요한데, 한 번에 많은 금액을 삭감한 것은 계획성 있는 행정이라고 볼 수 없음.
4. 서울시마을공동체지원센터 2022년도 운영예산이 2021년 대비 70% 삭감된 것과 관련 기획조정실로 공유된 시민협력국의 의견 또는 계획 자료
5. 민간위탁관리지침 고용승계 규정 개정에 따른 갈등이 발생하고 있음. 사업 구조 조정을 위해 예산 삭감 방법을 선택했다고 하더라도 인원 감축 등 고용문제에 따른 갈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진행하기 바람
6. (사)마을 유관단체가 자치구 마을센터 9개소를 수탁했다는 증빙자료
7. 시민참여예산 관련 시민협력국의 개선 방안 자료 제출 요구
8. 2021 민간위탁 사무운영 개선계획
9. 2021 민간위탁관리지침 개정계획
10. 민간위탁사무 개선을 검토한 자문위원회 명단
11. 강북 마을자치센터-사단법인 마을 간의 유관성 근거
12. 수탁단체 출신이 서울시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제도나 규정을 위반한 사례
13.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2012년~2020년 법인카드 사용내역 중 연수개념으로 숙박비용을 지급한 사례(지침위반 여부 포함)
14.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2016년 교통카드 충전 예산 집행내역
15.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2016년 해외연구 개인별 보고서
16. 청년 중간지원조직이 유관단체에 용역을 발주한 내역

□ 인권담당관 : 3건

1. 2021년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기각, 각하 현황
2. 2021년 인권담당관 법정 의무교육 이수 현황

3. 2021년 투자·출연기관 대상 인권교육(용역업체) 실시 현황

인재개발원 : 없음

감사위원회 : 5건

1. 감사위원장(개방형) 공모관련 자료
2. 민간위탁기관 관련 자율감사 강화를 위한 시책 및 노력사항 자료 제출
3. 감사위원장 공무국외결과보고서 제출
4. 최근 마을공동체사업 등 점검자료
5.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 없음

① 기획조정실 : 77건

1. 코로나19이전,코로나 상황, 코로나 19 이후 변화된 사업 현황
2. '20~'21년 위원회 운영현황 (참석자, 회의수당, 대면회의여부)
3. 서울시 자치구별, 기관별 코로나19 집단발생 현황 및 서울시 대응 조치
4. '21년 학술용역 심의자료
5. 최근 5년간 사회주택, 노들섬, 사회적경제센터처럼 평가를 한 내역
6. 오세훈시장 취임 이후 수시평가 자료
7. 마을변호사, 법무사 상담실적(건수, 내용, 조치사항)
8. 법률상담 온라인시스템 2달간 실적
9. 최근 3년간 상생상회 성과
10. 온라인 학습지원 진행상황
11. 노동이사가 제기한 안전제출 및 반영여부 현황
12. 출자출현기관 경영평가
13. 우수정책 해외진출 현황
14. 생활 맞춤형 soc 진행현황
15. '21년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 운영평가위원회 및 거버넌스 개최 세부내역
16. 세출사업 구조조정 세부 내역
17. '21년 민간위탁 용역(종합성과평가) 내역 등 관련자료
18. 국정감사 제출자료 4건 (오영훈, 이종배, 박성민, 이현승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
19. 동대문 DDP '08년부터 현재까지 부서별 총 예산 현황
20. 대변인 임명 후 처음 낸 보도자료 및 대변인 임명시 조례(규칙 개정없이 채용절차를 진행해도 된다는 행안부 근거)

21. 시정연구 논문

- 최근3년간 수상자 논문 제출
- 최근3년간 연도별 추진계획(방침서), 결과보고
- 관련 수상논문을 통한 법령 및 제도, 사무관리 등의
- 서울시정 개선현황

22. 민간위탁 운영개선 지침 상세내용 (고용승계 관련 내용 등)

23. 서울비전 2030 사업 구체적 내용

24. 평가담당관 소관 평가의 지표 및 기준과 상반기와 달리 하반기에 평가지표 등이 달라진 사항이 있다면 설명

25. 오세훈 시장 취임 후 감사청구 목록 현황, 감사완료 결과보고서

26.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관련 평가보고서 최초 문서 생성일자

27. 시장요청평가사항 내역

28. 서울시 일상회복추진단 민간자문단 위원리스트 (성명, 소속, 주요경력)

29. 최근 5년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서울시 성적 및 인센티브 내역

30. 학술용역 표절검사시스템 도입개요 및 표절논란 사례

31. 최근 인구변화관련 서울시에서 실시한 연구 및 토론회 현황

32. 마을번호사 만족도 조사 세부내역 및 결과

33. 주요사업, 사전계약심사 세부내용

34. 대정부 건의사항 중 국무조정실 시도지사 협의회 등 다른 경로로 제출한 의견

35. 최근 3년간 행정심판 중 재결기간 경과한 사건현황과 사유

36. 최근 3년 행정심판 비용지원 내역

37. 서울지역 온라인학습 지원계획서

38. 투출기관 별 직원 복지 세부내역

39. 최근 3년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 명단 및 회의 목록
40. 집행 부진사업 1,270억, 중복사업 782억 목록
41. 최근 3년간 국선대리인 신청 및 지원내역
42. 태양광사업 관련 감사원에서 발표한 조사결과 중 민간위탁으로 에너지드림 센터로 운영중인데 민간위탁 관련 자료 및 서울 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사무 관련 일체 자료
43. 민간위탁 유형별 현황 및 표준협약서 사용여부(미사용일 경우 사유 포함)
44. '21년 국정감사에서 요구된 자료목록 및 지적사항 조치결과
45. 오세훈 시장 공약사항 및 이행계획, 추진실적
46. 투출기관 이사회 등 직에 따른 내부위원 참석 현황
47. 신임시장 당선 이후 민선7기 사업 중 중단되거나 변경된 공약사항
48.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민간위탁 관련 조치사항(예산, 전담인력 배치)
49. 종합성과평가결과 하위점을 받은 경우, 이를 수탁기관에 통보한 내역
50. 투출기관 규정정비 현황
51. 노동환경 개선 컨설팅 요약본(또는 원본) 및 조치사항
52. 서울시 바로세우기 관련 언론보도 해명자료
53. 최근 3년간 예산편성 운영기준 관련하여 해당부서에 배포되었던 책자 발행일, 배포일
54. 민간위탁 사무 중 취소, 정지, 시정요구 등을 통해 예산삭감된 위탁사무 중 조례상 서면으로 통보하거나 조정하였던 내용
55. 코로나19 치료병상 확보 내용 중 중증병상 확보 현황 (병원별) / 추가확보 내역 / 감염병병상별 284개 중 자체 병상, 행정명령상 병상 구분
56. 민간위탁 관리지침 개정('21.2월,10월) 변경내용 및 근거
57. 수탁기관 책임성 및 투명성 강화대책('19.5.) 추진현황, 이후 추가대책 유무
58. 규모가 큰 12개 특별회계 전수조사 진행 현황

59. 최근 5년간('17~'21) 특별회계 규모, 증가율, 서울시 전체예산 대비 특별회계 비율(본예산기준)
60. 최근 3년간('19~'21) 특별회계 계정별 지방채 규모, 타회계 전입금 규모
61. 2개 이상 실국에 편성된 특별회계현황
62. 최근 5년간('17~'21) 특별회계 집행률, 잔액률, 이월율(결산기준)
63. 투출기관 장애인 법정 의무 고용 관련 최신 현황
64. 최근 5년간 종합성과평가 실시를 이유로 특정감사 유예된 사례
65. 장애인 고용 후퇴 주요 사유 및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현재까지의 노력과 향후 계획
66. 최근 5년간 기금 신규사업 및 폐지사업 내역
67. 서울시 바로세우기 관련 1조원 집행내역, 점검내역(분야별 표기)
68. 2030 시민위원명단
69. 15년간 국제기구 도시경쟁력 모니터링 및 서울시 입장 (보도자료)
70. 투출기관 노동이사 근무부서
71. 투자출연기관 규정정비 관련 기관별 추진실적
72. 10년간 민간위탁 받은 단체 종합평가서 및 지원내역
73. 중간지원조직 목록
74. 서울시 본청에서 운영 중인 법률상담서비스 현황
75. 자치구별 경상보조금 내용 중 자치회관 운영 및 주민자치 활성화에 대한 내용
76. 자치구별 경상보조금 내용 중 동단위 계획형 지원사업/자치구마을생태계 사업에 대한 내용 상세히 제출
77. 최근 5년간 SH공사에서 공급한 주택 중 현재 공사 진행사업 및 계획(전월세여부, 예산, 세대수, 전월세 구분하여 자치구별 제출)

② 경제정책실(시립과학관, 농업기술센터, 기술교육원 포함) : 79건

○ 경제정책실(시립과학관, 농업기술센터 포함) (60건)

1. 코로나 전후 변화된 사업, 코로나 극복, 위드코로나 대비 계획 사업
2. 탄소중립, 기후변화와 관련된 사업 현황
3. 농업공화국 조성사업 추진현황(완료시점 포함)
4. 기술교육원 통합관련 추진현황(문제점 포함)
5. 서울의 곤충산업 현황
6. 뉴딜일자리 (최근 3년간)
 - 요청기관, 조건, 배정된 인원과 근무기간, 사유, 배정 중단, 미배정 사유 등 일체
7. 안심일자리, 희망일자리 관련
 - 자치구 배정 인원, 배정기관, 배정 기준과 결과
8. 해외 정부기관 및 협력을 통한 해외실증 추진경과 및 추진현황, 향후계획
9. 스마트앵커시설
 - 민간위탁 모집 공고, 추진경과, 근무 직원 등
10. 애니타운(애니메이션센터 재건축) 관련 추진경과 및 현황
11. 국감시 국회의원 요구자료
 - 박재호(시장도매인), 양기대(일자리), 오영환(청년일자리, 농수산식품공사), 이해식 의원
12. 캠퍼스타운 지역활성화협의회 (지역협의회 구성 일자, 구성원 등)
13. 경제정책실 전체 2022년 예산 관련
 - 삭감된 예산 목록 전체 현황
 - 증액된 예산 목록 전체 현황
 - 신규 편성 예산 목록 전체
14. BT-IT 센터 입주기업 21개사 현황 (기업명, 주요사업, 상주인원 등 기업 정보)

15. 서울형 강소기업 관련

- 신청 회사 목록, 선정된 회사 주요 업무, 선정기준, 선정된 회사에 대한 지원 내용

16.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교육과정 및 예산현황, 향후 운영 계획)

17. 서울비전 2030 핵심과제

- 청년취업사관학교, 세계뷰티산업허브, 서울투자청 관련 추진근거 및 추진현황
- '22년도 추진계획(사업계획서) 및 예산 반영내역, 사전절차 이행 여부 (투자심사, 공유재산심의 등)

18. 도시농업 실태조사 관련 전년도 및 금년도 추진계획, 조사내용, 실행계획

19. 도시농업과의 기후변화 관련 자료, 사업 반영 계획 여부, 탄소중립 관련 도시농업 실천 사례

20. 서울도시농업국제컨퍼런스 사업계획 일체

21. 마곡 광장 내 4차 산업혁명 체험센터 방침서 및 공유재산 심의자료

22. 마곡광장 관련 공유재산심의 내역

23. 경제정책실 3년간 공유재산관리계획 상정내역(2019-2021)

24. 최근 3년간 공유재산시스템 미등재 재산 세입내역(2019-2021)

25. 최근 5년간 영상산업(게임/미디어 산업 포함) 지원 내역

- 전체 규모 및 세부 사업 내용, 세부사업별 예산 규모, 주요 성과

26. 뉴딜일자리 추진방식 별 3년간

- 시 직접 추진, 자치구 사업, 투자출연기관, 민간공모 등 모집인원, 참여 인원, 취업률 우수사업 수 및 비율, 미흡사업 수 및 비율

27. 뉴딜일자리 교육 및 취창업 용역사별 현황 (용역기관 역할, 분야, 규모, 평가 결과)

28. 뉴딜일자리 교육 기관 목록

29. 뉴딜일자리 민간 맞춤형 사업 교육기관 모집 공고, 공모, 계약 내용 일체

30. 신성장산업기획관 팀별 추진사업, 예정 사업, 사업별 예산규모, 내용
31. 디지털금융산업 11월 수립예정 기본계획 내용, 정부에 법률, 법령, 제도 등 개선 건의 사항
32. 아시아금융중심도시 도약 위한 대정부 건의 내용, 정부에 법률, 법령, 제도 등 개선 건의 사항
33. 글로벌 투자유치 위한 대정부 법령, 제도 개선 건의사항
34. 서울시립과학관 메타버스 활용 프로그램, 구축 내용 및 플랫폼(홈페이지, 유튜브 채널)
35. 기후환경 뉴딜, 탄소중립에 대한 프로그램
36. 시립과학관에 2021년 설치된 전시물 목록 및 전시물 설치시기
37. 이동과학버스 프로그램 추진현황, 예산, 실적
38. 마포농수산물시장 관련
 - 현황 및 개설 경위, 市 직영화 타당성 연구용역, 시설보수비 지원 내역, 향후 관리·운영계획
39. 농업기술센터 시설 및 실습부지 임차료 납부현황
40. 청년취업사관학교 영등포캠퍼스
 - 과정별 지원자 수, 과정별 수료 인원 등 운영 현황
41. 가락시장, 강서시장의 도매시장법인 재지정 조건 개선내용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 청원 등
42. 서울시 교육청과 협력요청 내용과 결과(농업기술센터, 서울시립과학관)
43.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
 - 교육기관별 위탁받은 인원과 교육내용, 교육(직무별) 기자재 확보 현황
44. 뉴딜일자리 교육위탁 업체 별 위탁인원, 위탁교육 분야, 기자재 확보 현황
45. 서울형 강소기업 퇴사자 현황
 - '20~'21년 근무환경개선금 지급 기준 퇴사자 명단, 지급액, 입사일, 퇴사일, 근속기간, 퇴사 사유

46. 경제정책실 임기제 현황

- 정현원, 담당업무 및 임기연장 여부, 임기제공무원 퇴직 내역 및 임기만료 통보방법, 임기제공무원 소속팀 폐지내역, 인사규정, 채용공고, 임기제 공무원 관련 민원 및 신고 내역

47. 청년취업사관학교 브랜드 싹에서 새싹으로 변경한 사유 및 브랜드 개발 예산

48. 뷰티산업 육성 관련 추진경과 및 방침서

49. 가락시장 관련

- 법인 개별 최초 설립 과정 및 현재 운영현황, 회사 형태, 대표 임명 현황, 최근 법인 품목별 현황, 수익, 탄소중립 정책, 친환경 유기농 농산물 매입 및 경매 현황

50. 캠퍼스타운 지역활성화협의회 구성 후 회의 현황, 대학별 구성일, 회의일

51. 서울경제 동향분석 및 경기예측 보고서

52. 개발진흥지구 사업현황(최근 3년간 심의 운영내용 일체)

53. 서울 금융중심지 활성화 지원 사업 현황

54. 시·구 상향적 협력적 일자리 창출 추진현황 및 관계기관(자치구) 협의사항 일체

55. 서남권 경제거점벨트 2.0 구축 현황

56. 서남권 대학과 연계한 캠퍼스타운 창업밸리 조성 현황

57. 서울형 기업규제개혁 추진현황

58. 로봇과학관 설계변경이 설계 지침을 준수한 것인지 확인·검증한 자료 제출

59. 대한인쇄연구소 감사결과에 따른 기본재산 원상회복 등 현황자료

60. 서울인쇄센터 관련 자료 일체

○ 기술교육원(19건)

61. 코로나19로 인한 종강현황 및 대체훈련 현황
62. 훈련생 연령현황, 취업률 현황
63. 교직원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현황
64. 최근 3년간 학과개편 현황(교수 재배치, 임용, 계약해지 현황 포함)
65. 최근 3년 신설학과 예산 배치 현황 (장비 구입 등)
66. 지역사회 MOU 체결 현황
67. 수탁법인 연계 현황(산학협력 내용, 법인전입금 사용내역, 일자리연계 현황, 직원교류 현황)
68. 수탁법인 제안서
69. 최근 3년간 자치구별 훈련생 현황, 연령별 훈련생 현황·청년 비율·학과별 재입학 현황 ·중도탈락 현황·교육생 지원 경로
70. 준고령자 취업인원 및 교육과정
71. 주간1년 과정 운영 현황
72. 교직원 역량강화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운영 현황
73. 산업기사과정 운영 현황
74. 최근 3년간 MOU 현황(현장실습, 훈련약정 체결, 협약 기업으로의 취업률 등)
75. 취·창업 지원, 사후지도 관리 담당부서 및 인원
76. 기술교육원 발전을 위한 내·외부 회의 내용
77. 최근 3년간 학과개편 현황, 개편학과의 입학정원, 지원인원, 수료인원, 자격취득인원, 취업인원, 창업인원 현황
78. 기술교육원 통합 관련 서울시와 기술교육원에서 회의한 자료(참석자, 개최일자, 회의내용 등)
79. 만족도조사 자료(조사지)

③ **노동·공정·상생정책관**(서울노동권익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조합지원센터 포함) : 49건

1. 전통시장 최근3년 간 보조금 부정사용내역
2. 올해 대비 내년 예산 삭감된 내역
3. 우리동네 아트테리어 최근3년 간 자치구별 현황
4. 오세훈 시장 취임이후 보도자료 제출내 목록 현황
5. DDP(풍물시장 관련) 육성계획 방침서, 활성화 계획 방침서, 위수탁 협약 체결 협약서, 조성시부터 점포상인수 변동 현황, 최초 조성부터 유지관리비, 보수비용, 건축물 용도변경 현황, '21~'22년 위탁비, 시정질문 이후 활동이나 달라진 방향들(내년예산 포함)
6.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정규직 가이드라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부 지침, 서울시 노동존중특별시 방침서, 콜센터 상담원 정규직화 협의내역, 정규직화 대상 현황, 민간위탁기관 정규직화 진행 계획
7. 상가임대차 상담 관련 전문상담위원 명단 경력사항 사례집 배포현황 배포부수 포함
8. 2021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편성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국민지원금 감액 부분 활용 세출 관련부서 협의 내용
9. 2022년 올해 대비 20%예산삭감 내역
10. 제로페이 서포터즈 부정수령 관련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11.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시민문의사항 질의내용
12. 골목형 상점가 관련 25개 자치구 조례제정 현황, 골목형 상점가 지정현황 등
13. 서울 특성화 시장 관련 시장별 육성 사업 현황

14. 함께누리몰 개편관련 전후실적, 자치구 홍보현황
15. 배달라이더 상해보험 관련 산출내역 및 협상내역
16.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최근2년간 정현원 변동현황
17. 노동자복지관 국제설계공모심사 심사위원명단 절차
18. 간이노동자 설치사업 추가 공모계획 및 결과자료
19. 배달라이더 관련 유찰 및 재공고 내역 등
20. 사회적경제담당관 주요사업 예산 감액 사유
21.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지원현황 시설현대화 실태조사
22.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확대를 위한 지침서, 협의서, 향후계획 등(최근 3년간)
 - 중장기계획서, 교육계획, 홍보계획 등
 - 구매계획 수립하여 홈페이지 게시내역
23. 계약기간 만료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재계약 갱신거절의 위법성(법률자문 검토 원본)
24. 전통시장 상인만족도 조사결과 요약본 제출 및 조사결과를 반영한 사업계획 변동 내역
25. 플랫폼노동자 1차 추정 사업내용 변경 계약 및 지연 사유, 협상보장내용 보장액
26. 노동인지예산 연구용역 완료 요약본
27. 중대재해법 가이드라인 초안, 스케줄(언제까지 완료 예정인지)
28. 중대재해법 관련 정부기관 협의 내용
29.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정부기관 협의 내용 및 내년 준비사항
30. 안심디자인사업 개요 방침서 진행사항
31.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개척 중 디지털 역량강화에 대한 사업내용

32. 빅데이터기반 불공정거래분석 결과에 따른 실행계획
33. 직장내 괴롭힘 관련 자료(인권과 협조)
 - 조례제정 이후 2020년 이후 신고된 내용, 조치내용, 사건처리 매뉴얼, 교육내용
34.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지역사회 통합돌봄지원사업 진행사항 및 타 기관 협의 내용
35.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용역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자료
36. 생활임금위원회 명단, 회의록
37. 제로배달 유니온 참여사 현황 및 앱 가맹점 수, 앱 별 소비자 가입자 수, 월간 주문자수
38.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수탁사업자 및 개관시기
39. 플랫폼배달라이더 상해보험 사업자 선정 서류, 계약서류
40. 생활임금제 자치구 통합안 내용
41. 노동인권센터 필수노동자 지원방안 연구 보고서
42. 노동권익센터 권리구제 법률상담 주요 사례
43. 프리랜서 종합지원대책 실태조사 용역 준공자료
44. 직장내괴롭힘 실태조사 용역 준공자료
45. 재난지원금 지급 인식만족도 조사
46. 노동복지관 확충 관련 추진현황 (상세 설계 내역)
47. 사회적경제 활성화 공간 공모절차
48.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공간지원 사업관련 입주기업 현황 및 공간운영 실적
49.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 지원, 정부에 건의한 사항 정부협의사항(20~21)

④ 남북협력추진단 : 해당 없음

⑤ 1인가구 특별대책추진단 : 11건

1. 1인가구 추진단 추진 사업 자치구별 성과/실적
2. 안심마을보안관 업무 매뉴얼
3. 1인가구 지원 기본계획 상 세부 사업계획
 - 공동체주택, 중장년 커뮤니티 운영, 고독사 예방, 한지붕세대공감, 고시원 거주자 지원, 여성 1인가구 안전지원
4. 1인가구지원센터 운영 계획(2019년)
5. 1인가구 추진단 기획 당시 각 실·국 부서별 사업목록과 현재 사업목록(관련 자료)
6. 안심마을보안관 최초 방침서, 위탁업체 선정과정 자료 일체
7. 자치구별 1인가구 전담부서 현황
8. 1인가구지원센터 업무 개편(독립형, 통합형) 관련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9. 1인가구 인식개선 관련 홍보물 제작계획
10. 안전도어지킴이 업무 협약체결 내용, 자치구별 설치 현황
11. 1인가구 정책 시민아이디어 공모전 접수 및 2차 선정내역

6 서울시립대학교 : 13건

1. 코로나 이전~팬데믹시대 수업방식 변화, 대면수업 증가에 따른 2학기 수업 운영현황, 내년 대비 대책
2. 학생들의 '직업'과 관련, 시립대 내 직업 관련 기관 혹은 기구, 해당 기관의 역할 및 현재까지의 실적, 향후 변화 노력
3. (요구자료 2번 관련) 직업 및 진로 관련 교과과정 개편 논의
4. 캠퍼스타운 활성화 관련, 동대문구의 제안 내용
5. 시립대 산학협력의 운영 형태, 업무
6. 최근 3년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개최 현황
7. 최근 3년간 시립대-자치구 간 업무협약 현황
8. 공공의대 추진 현황
9. 교수임용쿼터제 관련 현재 단과대별 기준, 개선계획
10. 공공의대 설립 관련 회의자료, 현황
11. 시간강사들의 처우 개선 관련 추진내용(강의료 수준 현황, 방학 중 임금 및 퇴직금 지급현황, 교육부와 연계 어떠한 노력을 진행 중인지)
12. 최근 3년간 서울시립대 출강 시간강사/겸임교수 중 서울시 직원 현황 관련 기제출자료에 대한 보강 요구(오류수정 및 보완)
13. 서울시립대학교 총장후보자 추천에 관한 규정 1994년 제정 이후 개정 사항

7 서울농수산물공사(서울농수산시장관리(주), 서울농수산물교매장정산(주) 포함) : 13건

1. 도매시장법인 과거 지정조건(이행점검지표 포함)과 현재 지정조건 관련 자료
2. 도매시장법인 심사위원회 및 시장관리운영위원회 명단
3. 요수수 대란 관련
 - 공사 차량 현황(차량별 휘발유, 디젤, LPG 연료 구분 표시, 차종 및 톤수, 운영목적 표시)
 - 요수수 대란 관련 전국적 화물차량 운행 제한 대비방안
 - 농수산물식품 유통을 위해 1일/월/연간 방문 화물차 현황
 - 화물차량 운행 제한에 따른 물류대란 시 1일 평균 피해 예상액
 - 공사 요수수 및 차량용품 등 비축현황
4. 가락, 강사, 친환경유통센터 임대상인에 대한 임대조건, 임대료, 코로나19 관련 임대료 감면 내역, 임대료 체납 현황
 - 스마트마켓 연구용역 개요
5. 제7대 시장관리운영위원회 회의록
6. 스마트마켓 구축 관련
 - 스마트마켓 연구용역 개요
 - 스마트마켓 SK와 MOU 체결 관련 사항
 - 스마트마켓 이행 로드맵 주요 내용
 - 스마트마켓 IT 거버넌스 관련 사항
 - 스마트마켓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 스마트마켓 도입 관련 직원 교육현황
 - 스마트마켓 구축 관련 협의 내용
 - 스마트마켓 추진 예산 관련 사항

7. 도매시장법인 공공기여 현황, 공공성 기여에 대한 평가제도
8. 시설현대화사업 관련
 - 도매권 1공구 최초 계획에 따른 진행상황, 향후 추진일정
 - 도매권 2공구 최초 계획에 따른 진행상황, 향후 추진일정
9. 불공정거래신고센터 운영·접수 현황 및 처리결과
10. 최근 3년간 경매비리 방지를 위한 공정거래 탐지시스템 적용 결과, 행정조치 내역
11. 공정경매 관련 도매법인 소송 판결문
12. 시장 내 자회사(서울시농수산물시장관리) 직원 현장근무 시 이용자와의 분쟁 시 해결 방법
13. 양곡 도매시장에서 취급하고 있는 국내산 양곡과 수입산 양곡 취급 비율

8 서울연구원 : 7건

1. 1인 가구 연구관련 주거심층 조사 전문업체 관련
2.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서울시 연구용역 목록
3. 서울비전 2030 관련 서울연구원에서 수행한 자료
4. 청사이전 관련 서울연구원 예산사용 현황
5. 최근 3년간 연구기간 연장 발생한 내역 및 사유
6. 1인가구 관련연구 착수보고, 실무협의 자료
7. 구정연구단 파견연구원 연구수행 실적

9 서울산업진흥원 : 21건

1. 위탁사업 관련 위탁기간, 사업 위탁 지속여부
2. 부서별 홍보수단(SNS , 유튜브) 등 및 구독자 수
3. 추진체계 사업별 예산집행률 및 예산 집행 미진사유
4. 글로벌 SNS 마케팅, 뉴미디어 플랫폼 마케팅 세부자료
5. 애니타운 조성(소공로48) 관련 계약서, 방문자 현황(주말과 평일 비교), 방문자 민원
6. 중소기업 판로지원 온서울마켓 시즌 1, 2 실적, 데이터 홈쇼핑 관련 쇼핑몰별 실적
7. 서울메이드브랜드 활성화 관련 MZ세대 이색 프로모션 세부내역
8. SETEC 운영 관련 강남구, 서울시 수신-발신 공문서 일체
9. 마곡산업단지 기업 입주 현황자료
10. 하이서울쇼룸 지도 점검결과
11. 분기별 민원모니터링 결과보고, 대표이사 보고 및 조치사항
12. 서울창업허브M+ 입주기업 모집현황 평가심의 기준, 재심사 관련 기업현황
13. 전체 예산 항목 사업외수익 목록, 시설운영수입 목록, 고유사업수입 목록
14. 서남권기술특화캠퍼스 첫 졸업생들의 취업현황
 - 취업대상 기업, 기업과 계약한 조건(연봉, 비정규직 여부 등)
15. DX활성화팀 인원, 주요사업
16. 펀드 관련 표준 협약서
17. 하이서울브랜드 운영위원회 위원내역, 회의내용(시기, 주요내용, 횟수)
18. 마곡일반산업단지 관리업무 이관 관련 SH 담당부서 등
19. 진흥원 고졸 채용 근무부서 및 직급 현황
20. 하이서울기업협회 대상 및 교육 일반
21. 최근 3년간 시설서비스직 채용현황의 연령

10 서울신용보증재단 : 10건

1. 4無 안심금융 지원 현황 (각 자치구별 비율, 소상공인 추정 비율)
2. 서울시 경제민주화와 사회적 경제 정책 평가 및 발전 전략에 관한 관련 연구 자료
3. 자치구별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 사업 현황
4. 개인(브릿지) 보증 지원사업 지원현황
5.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현황 및 실적
6. 특수채권 관련 추심 불가능한 경우 구분 표시 (파산, 면책 등)
7. 외부 추심 위임 기관 현황
8. 4無 안심금융 3천억원 추가지원 위한 출연금 관련 서울시와 재단 협의 현황
9. 2021년 금융회사 특별출연금 조성 현황 및 계획
10. 최근 3개년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지원사업 수행기관별 예산지원 현황 및 지원 실적

기후환경본부 - 17건

1. 민간위탁별 2018~2020년 지도점검, 회계감사 실시 현황
2. 민간위탁 종합성과 평가기관 선정 방식 및 진행 경과, 유형별 평가지표 선정 방법
3. 햇빛발전협동조합 태양광 설치사업(7차) 추진현황 및 감사결과 자료
4. 강동권역 광역자원회수시설 기반 확보계획
5. 전기차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 관련 상세 자료
6. 베란다 태양광 폐업 업체 현황
7. 최근 5년간 정기점검 미실시 업체(14개) 상대 고발, 소송 등의 조치 현황 등
8. 태양광 폐업업체 일시 파악
9. 서울시 온실가스 인벤토리 월별 현황 (2019~2020)
10. 2021년도 탄소중립예산 분야별로 집행현황
11. 2021년도 메타거버넌스 회의결과 보고서
12. 최근 5년간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온실가스 배출 현황
13. 2012년 이후 전력 자급률 연도별 현황
14. 로웨이스트 추진실적, 참여업체 현황
15. 기후예산제 시범사업 실제 구체적인 내용
16. 운행제한 과태료 부과 취소 관련 법률자문 결과

17.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4~5종) 관련 자료요구(2019년~현재)

-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 현황
-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추진실적

푸른도시국 - 14건

[푸른도시국] - 9건

1. 서울로7017, 서울숲을 직영하기로 한 타당성 및 관련 자료(예산안 보고 전까지 별도보고)
2. 푸른도시국 각종 위원회 명단 2008년~현재
3. 공공조경가 1~5기 전체 명단
4. 푸른도시국(사업소 포함) 및 서울대공원 2018년~현재, 계약건수, 계약금액, 공고문 일체(4개 업체)
5. 한빛미디어파크 움직이는 공원 공고문
6. 동부공원녹지사업소에서 그린트러스트로 보낸 공문(인권담당관 시정권고 결정 관련 조치요청)
7. '2017 테마가 있는 공원조성' 공공조경가 자문비(1차) 회의 관련 지급결의서, 위원참석수당, 위원 참석부
8. 단절된 녹지축 연결 관련(양재고개) 현재사업비 산출근거, 최초사업 산출근거, 토지보상비 최초 산정근거, 감정평가 결과서
9. 유아숲지도사 자격증 번호 미확인된 부분 및 용역계약 서류에 자격증 관련 내용 자체가 빠진 부분 제출

[서울대공원] - 5건

1. 조경업체와 '18~21년 계약 현황(4곳)

2. 주차장 입찰공고문 사용수익허가조건(요금관련)
3. 대형주차장 협약에서 사용수익허가증을 제외한 계약서류
4. 대형주차장 입찰업체와 주고받은 공문서 일체
5. 야구장 여성동호회 참여실적('20~21년)

상수도사업본부 - 9건

1. 2012년 이후 비굴착 공법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2. 원격검침의 친환경계량기에 대한 구매계획 및 구매 자료
3. 필터 착색 성분에 대한 조사 자료
4. 상수도관 전기부식 방지사업 추진 물량(실적, 향후 계획)
5. 최근 3년간 음수대 유지관리에 참가한 업체 리스트, 음수대 유지관리 용역 현황(업체, 용역 금액, 지역별)
6. 기계식·디지털 방식 검침의 현 시점에서 사업 경제성 비교 자료(사업비, 디지털계량기 구매비, 단말기 구매비, 시스템 유지관리비, 통신비, 인건비 등 포함)
7. 계량기 구매 방식(조달, 협상에 의한 계약) 중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한 사유
8. 원격검침 성능시험 결과(성능시험 일자, 계약일자, 납품일자)
9. 침전지 벽체 미설치 경우 수돗물의 안전관리에 대한 검토 보고서(의사결정 과정 보고서)

한강사업본부 - 18건

1. 서울마리나 관련 입주시설 재배치, 변경조건 계획, 임대차, 사용료 등 현황 및 변경현황

2. 서울마리나 하천점용료 부과·납부·체납현황, 부과근거 및 내역
3. 마리나 주차장 관련 아마노코리아, 아이스링크 관련 권OO과 계약관계, 클럽하우스 2~4층 계약 전반 관련 서류
4. 잠실 선착장 주차장 서울국토지방관리청 협의공문 등
5. 잠실 선착장 주차장 현황, 현장점검, 조치결과
6. 현장관리 인력 불일치 사유
7. 단속전담 공무원 채용공고(주·야간 근무교대)와 실근무(야간 근무) 차이, 직원 동의 여부
8. 어린이놀이터 코르크 포장 관련 내구연한 도래 전 동일소재 재공사 사유
9. 한강공원 화장실 안전관리 시설 설치현황
10. 단속전담 공무원 운영 및 채용 관련 세부계획
11. 코로나19 심야 음주 단속 근무 중 공무원 음주 관련 조사 결과 및 징계 수위
12. 기관운영 감사 관련 지적사항 중 인사 관련 3건(공무직/임기제 채용, 응시원서 파기) 조치결과
13. 최근 5년 간 질서위반 과태료 독촉, 압류 등 현황
14. 최근 3년 간 내부 감사내용 및 결과
15. 한강공원 선상카페(선스톤시핑) 방역지침 위반 관련 조치 현황
16. 수상택시 승객수, 유지 필요성 검토내역, 관련 회의 등 현황
17. 한강공원 주차장 출구차로 개선 계획
18. 뚝섬 윈드서핑장 하천점용료 코로나19 감면 관련 신청부터 감면까지 업체, 국토부, 한강사업본부와 주고 받은 공문일체

서울에너지공사 - 26건

1. 서남 집단에너지시설 건설 공사비 산정 세부내역, 변경 공사비, 타당성 검토 결과, 당초 계획대비 추진일정 변동내역
2. 공사 창립 이후 채용된 경력직 근로자 중 퇴직자 현황
3. 실·처장급 이상 보직 제외자 현황
4. 일반직 직원 직급별·연령별 인력 현황
5. 공사 일근직과 교대직 인건비 차이 발생 원인
6.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서울시 출자 세부내역
7. 교대근무자 대직근무 세부내역
8. 공사 창립 후 열원시설 점검 및 보수실적 세부내역
9. 2건 이상 동일업체 수의계약 현황
10. 최근 3년간 직원복무관리(병가, 청원, 출산전후 휴가 등) 관련자료
11. 최근 서울에너지공사 임금협약서
12. 무재해 격려금 관련 상품권 지급내역 및 할인율 근거 자료
13.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사업 관련 연도별 참여업체 및 폐업업체 현황
14. 노후 열사용시설 개체사업 평가 결과보고 자료(2021년말 완료시 보고)
15. 공사 발전소 내구연한 30년 기준에 대한 근거(준공, 열공급개시)
16. 공사 열원시설 개체 관련 향후 계획(로드맵)
17. 최근 3년간 감사실 내부감사 결과 세부실적
18. 최근 3년간 특정감사, 일상감사 등 감사 세부내용 및 조치결과
19. 태양광 실증단지 대행인건비 및 대행수수료 세부내역

20. 중장기 재정운용계획 및 차입금 상환 계획
21. 베란다형 태양광 성과평가 자료 제출
22. 태양광 사업 관련 감사 결과 보고서 제출
23. 전체 사업별 예산액 및 집행내역
24. 2021년말 태양광 발전사업 집행예정 금액
25. 롯데마트 태양광 발전사업 세부내역, 타당성 검토보고서(요약)
26. 공사 2월 업무보고 기준 주요 사업별 변경내역, 변경사유

대변인 : 3건

1. 대변인 공모과정에서 선정위원회 위원 명단과 면접 점수
2. 「미디어오늘」에 보도된 한겨레 광고 관련 내용 확인
3. 서울시 각 실국의 광고비 집행 내역 일체

 시민소통기획관 : 2건

1. 서울영상크리에이터 사업 관련 조회수 자료(유튜브 / 인스타그램 구분)
2. MCN기반구축 사업 관련 자료

 문화본부 : 4건

1. 전문예술법인 등록 현황
2. 성과지표 관련 자료
3. 노들섬 감사결과보고서
4. 예산 집행률 30% 미만 사업 현황(부진사유 포함)

 관광체육국 : 6건

1. 축구, 배구, 수영 종목 대상 시 보조금 지원내역(2019~2021)
2. 잠실종합운동장 리모델링 관련, 시 직장운동경기부 훈련장 등 반영 현황
3. 서울 뷰티폴 10선 사업 발굴과정 및 선정결과
4. 최근 3년 관광특구 평가 결과 보고
5. 동대문패션타운 특구와 잠실(송파)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계획서
6.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예산 내역

 서울역사박물관 : 1건

1. 3개년 홍보비 예산 내역

 서울시립미술관 : 5건

1.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관련
 - 2019부터 2021년까지의 비엔날레 예산 내역
 - 제1회부터 현재까지 비엔날레 예산
(프리비엔날레 예산 포함)
2. 창작대가비 중 작품제작지원비 정산 생략 근거
3. 미술관 홈페이지 재구축 사업 관련
 - 착수보고회 회의록, 중간보고회 회의록 및 2차 중간보고 자료
4. 미술관 서소문본관 주차장 사용수익허가 관련
 - 계약금액이 감액된 이유 및 4년 연장 이유
5. 수장고에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작품 관련
 - 최근 3년간 서울시립미술관 소장품 활용 현황

서울시립교향악단 : 3건

1. 근무시간(9시에서 6시)에 강의 등 겸직을 신청 현황자료
2. 김울프(김정욱) 관련 지출결의 및 증빙자료
3. 메이드바이 업체 계약 관련 지출결의 및 증빙자료

서울문화재단 : 2건

1. 예술청 공동운영단 집행내역
2. 예술창작활동지원사업 사례비 지급기준

서울관광재단 : 5건

1. 2020년~2021년 관광안내센터 운영실적
2. 서울관광할인패스 업체 지원내역
 - '쥬스컴퍼니,' '서울시관광협회'
3. 서울관광할인패스의 여행자보험 지원 관련 내용
4. 관광MICE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 상담 및 컨설팅 비용 지급 기준 및 내역
5. '20년도 유니버설 관광환경 접근성 개선사업 세부 지출 내역(공사비 포함)

미디어재단티비에스 : 1건

1. 시간외 근무를 하지 않은 45명에 대한 자료

120 다산콜재단 : 4건

1. 감정노동자 관리·치유 프로그램 현황, 참여자 현황, 참여자 피드백 자료
2. 직무분석 및 조직진단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3. 코로나19 백신 관련 공가, 병가 등 휴가 사용 기준
4. 근무평정 제도 개선안



◆ 여성가족정책실 - 10건

1. 업무보고 책자 p5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여성인력개발기관 등 (총 32개 기관) 주요임무 및 기능, 근무 인원, 2021년 예산, 주요성과 및 실적 포함
2. 강남드림빌 아동학대 사건 현재까지 진행상황
3. 여성가족정책실 어린이집 통학차량 현황(자치구별, 어린이집명, 유형(민간/가정/국공립 구분)
 - 전체 어린이집 수, 통학차량 보유대수(차종, 연료(경유(반드시 표기)/휘발유/LPG/수소/전기 구분)
4. 아동학대 3년간 57건 사건내용, 경위, 처리결과
5.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처분관련 내용
 - 채용시 부적격자 유무, 부정수급 조치 내용
6. 최근 5년간 위수탁기관 변경시 종사자 고용승계 현황
 - 시설명, 전/후 수탁기관명, 고용승계인원, 수탁 변경 6개월 이후 고용 유지 인원
7. 어린이집 코로나 이후 관련
 - 교사/아동/직원 구분하여 코로나 감염 현황
 - 어린이집 마스크 교부
 - 교사 마스크 지급 현황(입모양이 보이는 마스크 지급됐는지)
8. 돌봄 지원 기본계획
9. 여성가족정책실 2019~2021년 각종 수당, 보조금 등 부정수급 사건 6건
 - 세부내역 제출
10. (최근 3년간) 아동보호전문기관 자치구별, 연도별 아동학대신고건수, 신고자 구분(본인/부모/시설종사자), 학대현장(집/시설/기타)

◆ 여성가족재단 - 6건

1. 2019~2021년 모든 정책과제별 집행 세부 내역
 - 회의비, 조사 및 평가비, 기간제근로자 보수
2. 2019~2021년 연구 결과
 - (2019) 서울시 사회서비스원(보육분야) 효율적 운영 방안
 - (2019)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보육분야 운영모델 개발 연구
 - (2019)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보육분야 교육콘텐츠 개발(서울시)
 - (2020) 서울시 국공립 어린이집 서비스질 향상 지원 방안 연구(서울시)
 - (2021) 아이돌봄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 연구
3. 여성가족재단 사회서비스원 든든 어린이집과 업무 협조내역
4. 스페이스살림 준공 이후 하자 보수 완료 내역과 향후 하자 보수 예정 세부 내역
5. 보육사업팀 양육자 성인지 역량강화 교육 교재 폐기 내용, 폐기 사유, 폐기일시
6. 업무보고 책자 p21 스페이스 살림 운영 활성화 관련 세부 실적 제출

◆ 여성, 아동, 외국인주민 관련 시설 - 30건

(여성능력개발원, 동부여성발전센터, 서울여성공예센터 더아리움,
서울특별시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 여성긴급전화1366 서울센터,
십대여성건강센터, 서울상상나라, 시립꿈나무마을 초록꿈터,
시립꿈나무마을 파란꿈터, 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 서울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 제1호 노원·도봉권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서울글로벌센터(외국인주민 생활지원 사업))

〈여성, 아동, 외국인주민 관련 시설 전체〉

1. 최근 3년간 시설 소방안전점검 계약업체 현황

〈동부여성발전센터〉

1. 생활체육강사 강사료 지급내역, 강사 채용현황(최근 3년간)

〈서울여성공예센터 더아리움〉

1. 감고당길 공예마켓 2020년 운영 결과보고서 및 용역비 산출내역서
2. 최근 3년 채용 심사 절차 및 심사위원회 구성 현황
3. 최근 3년 직원현황(정·현원 임금 현황, 업무분장, 퇴사 현황)
4. 서울여성공예센터 입주기업 연장평가 기준 및 현황
5. 위원회 구성 규정 및 내용(운영위원회, 인사위원회, 입주심사위원회)
6. (최근 3년간) 노동자 의무교육
 - 교육일자, 참여내용, 감정노동종사자 보호조치 관련 시행 내용
7. 일일 업무보고 및 시간외근무 신청양식
8. (최근 3년간, 월별) 직원별 연장근무시간

〈여성긴급전화1366 서울센터〉

1. 3년간 후원사업 내역

〈서울상상나라〉

1. 서울상상나라 2021 행사 도우미 알바 채용 공고 자료 일체
 - 구인광고 몇 회인지, 모집현황, 모집공고 내역 일체, 구인 모집 경로 포함(예:알바몬 등)

〈시립꿈나무마을 초록꿈터, 시립꿈나무마을 파란꿈터〉

1. 최근 3년간 급여 세부산출내역
2. 최근 3년간 대학진학아동 및 진로상담 현황
3. 최근 6개월간 급식 식단내역
4. 최근 5년간 아동 폭행 처리 현황
5. 아동학대 예방 및 발생시 매뉴얼

〈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

1. 아동 입소부터 퇴소까지 모든 개입내용
2. 365일 이상 장기입소아동 대상 프로그램
3. 최근 2년간 아동 퇴소 후 재입소 현황

〈서울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

〈이영실 위원장님〉

1. 사례관리 대상자 서비스 제공 내역

〈서울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1. 최근 5년간 입사자/퇴사자 현황(근무기간, 업무분장) 및 현 근무자 현황
2. 최근 3년간 학대피해아동보호 사업 실적

〈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

1. 최근 5년간 직원 입·퇴사자 현황

〈1호 노원·도봉권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1. 노원환경재단 연계를 통한 ‘찾아가는 기후 환경교실’, 여름방학 맞이 시민 아동 대상 4차 산업(3D프린터)체험활동, 메이커스 체험활동 실적 내역
2. 창의예술문화활동 프로그램 현황자료
3. 돌봄자원인프라 유관 협력 기관과의 간담회 실시 내역
4. 긴급·일시 돌봄 이용률
5. 종사자 및 아동육구 수요조사 결과

〈서울글로벌센터(외국인주민 생활지원 사업)〉

1. 최근 3년간(2019~2021년) 서울글로벌센터 언어권별 상담실적

◆ 복지정책실 - 17건

1. 광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 자활근로사업 지원, 자활사업 참여자, 자활장려금 관련
 - 각 기관별 주요 임무 및 기능, 근무 인원, '21년 예산, 사업별 주요 성과 및 실적
2.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영양사 배치·미배치 현황 및 미배치 사유
3. 담당부서별 소관 시설 현황
 - 근무인원, 예산, 주요 임무 및 기능, 주요 실적, 시설명, 설립연도
4. 따스한 채움터 관련
 - 2016년 이후 지도·점검 결과보고서 및 '21년 10월 말 기준 주요 지적사항 진행현황
 - 2016년 이후 연도별 종사자·일자리 참여자 피복 및 피복비 지급 세부내역
5. '여성 노숙인 일시보호시설 디딤센터 운영 가능 법인 타진'과 관련한 세부 자료
6.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상담조사 2팀장 결원 관련 내용과 현황, 향후 채용계획
7. '18년~'21년 거리노숙인, 시설 노숙인<유형별> 실태조사, 탈노숙, 탈시설 성공 이후 지원 정책 현황, 탈노숙, 탈시설 성공 사례
8. '18년~'21년 쪽방촌별 실태조사, 탈쪽방 성공 이후 지원정책 현황 및 대표 사례
9. 2021년 9월 기준 서울시 노숙인 시설 종사자 현황
 - 시설유형, 시설명, 입소자(이용자) 수, 종사자수, 종사자 1인당 입소자(이용자) 수
10. 장애인 복지관 관련 자치구별, 유형별 현황('18년~'21년)
 - 장애유형별 프로그램 이용률
 - 장애유형별 심리상담 프로그램 이용자 현황
 - 장애인부모자조모임 이용자 현황
 - 부모교육 프로그램 이용자 현황
 - 가족문화체육 프로그램 이용자 현황
11. 발달장애인복지관 관련
 - 발달장애인 심리상담 프로그램(최근 3년, 자치구별 예산액, 이용건수, 사업명)
 - 가족심리상담 이용현황
 - 부모교육 프로그램 이용현황

- 자조모임 프로그램 이용현황
- 가족문화 체육프로그램 이용현황

12.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관련

- 자치구별 장애유형별 서비스 이용률
- 장애인가족 휴식지원 사업, 방침서, 사업계획서, 장애유형별 지원내역
- 장애인가족 문화체육사업 이용자 명단, 사업현황

13. 발달장애인가족 휴식지원사업

- 자치구별 최근 3년간 이용현황
- 자치구별 최근 5년간 이용자 명단(이름 실명)

14. 탈시설 지원 인원, 탈시설 후 거주공간 유형별 이용수('18~'21년)

15. 탈시설 민간협의체 구성 회의일시, 회의록('20~'21)

16. 노숙인 임시 주거 지원사업 지원 개월, 인원

17. 서울시 고독사 관련 사업명, 소관부서 예산('20~'21)

◆ 서울시복지재단,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 40건

〈전체 복지 관련 재단〉

1. 최근 3년간 징계 내역

〈서울시복지재단〉

1. 사회복지 시설 평가 실적(2020~2021) 및 법인 인증 실적(2020~2021)
2. 돌봄 SOS센터 운영지원 관련 상세 내역
3. 복지재단에서 발주한 외부기관 행사 용역 내용 및 금액
4. 금융복지상담센터 상담관 채용 자격
5. 복지재단 정관
6.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지역센터별 상담 실적(최근 3년)

7. 복지재단 홈페이지 유지 보수 예산, 홈페이지와 공유복지 홈페이지가 각각 다른 업체로 운영되는 이유
8. 안심소득 시범사업 성과평가 연구
 - 실험설계, 참여자 표집틀
9. 돌봄SOS센터 운영실적관리 1~9월 실적 및 5대 서비스 내용 이용 건수 등 상세 실적
10. 육아휴직, 출산휴가, 대체인력 채용 현황(최근 3년)
11. (서울비전2030위원회 기초 논의자료로 활용된) 서울형 복지모델 연구
12.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사업의 예산액, 집행률
13. 주민관계망 형성사업, 이웃살피미 사업
 - 2020년, 2021년 참여동, 동별 참여인원, 진행된 사업내용, 고독사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세부내역
14. 서울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아사업 평가체계 연구
 - 5월 수행기관 실태파악 자료, 평가지표 초안, 모의적용 시범기관 관련 내용 및 결과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1. 상임이사 채용 관련 서류, 지원현황, 자격요건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1. 7개 국공립 어린이집 식단표, 식자재, 구매내역, 원산지 등 표시
2. 7개 어린이집 원장 이력서
3. 어린이집 원장 최초 임용일, 종사 기간, 교육내용, 교육자 등
4. 서대문어린이집 오픈한 지 몇 개월 안 돼서 사건 발생함. 어린이집 모니터링 내역, 징계 프로세스, 징계위원회 회의자료, 징계 내역
5.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관련
 - 요양보호사 치매전문교육, 소속기관별 자체 직무교육 및 기본소양 교육 관련 자료
 - 외부강사 강사료 예산
6. 공개모집 공고 필요서류 중 직무수행계획서, 모집공고 지원현황

7. 종합재가센터 이용자 확보방안
8. 종합재가센터 매칭 근무시간
9. 23차 이사회 의사록,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명단 및 경력
10. 1차 임원추천위원회 관련
 - 공모심사 결과 및 상세 내용
11. 긴급돌봄지원단 사업방침서
12. 긴급돌봄서비스 단기계약직 1차~4차 차수별 채용인원, 채용 시 계약기관, 단기인력 자격증 종류
13. 2021년 신규직원채용 대행용역 10차 및 긴급돌봄지원단 계약 관련 자료, 계약내용
14. 단기인력 긴급돌봄 4차례 교육
 - 수행기관, 차수별 참여자(요양/활동 구분)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1. 50플러스 일자리 사업 내용 및 교육 실적(실제 일자리 연계 및 활동자 현황, 실제 이행한 내용 위주)
 - 2019 디지털 미디어 크리에이터, 50+도시여행 해설가, 프로보노 양성과정, 노인교구 강사 양성과정, 온라인 모델교실, 50+작은도서관 활동가 양성과정, 부모사랑호도를 이용한 AI전문가 양성과정, 웨딩쇼퍼되기 과정, 시니어금융전문가 양성과정, 50+ 문화기획자 양성과정, 사회적기업 창업 양성과정, 여행비즈니스 기획자, 평화답사 기획자 양성과정, 양성돌봄 전문가 입문, 커뮤니티 케어 플래너 양성, 방송활동가 양성, 반려견 교감활동가 양성, 치매예방 강사 입문, 시니어비즈니스 적합인력 양성과정, 등산마스터되기(1,2기)
2. 대표이사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3. 공개모집공고 필요서류 중 직무수행계획서, 모집공고 현황
4. 상임이사 직무수행계획서, 경력기술서, 재상등록현황
5. 공공형 일자리 세부사업 구체적 사업내용 및 연도별 참여인원('19~'21년)
6. 취약계층지원 사회공헌단 사업목록 및 연도별 참여인원('19~'21년)

7. 중장년 1인 커뮤니티 및 50플러스 적합일자리 세부 현황('19~'21년)
8. 사회서비스원 대표이사 입사 지원 당시 제출한 경력증명서, 해당 경력 관련 건강보험·고용보험 납부내역, 자격득실 확인서
9. 50플러스재단 대표이사 입사 지원 당시 제출한 경력증명서, 해당 경력 관련 건강보험·고용보험 납부내역, 자격득실 확인서
10. 50플러스센터 동남캠퍼스
 - 운영방향, 운영목표, 조직체계, 프로그램, 차별화 전략, 7월 말에 끝난 연구추진 결과, 기본계획

◆ 복지 관련 시설 - 29건

(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 시립강북노인종합복지관,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 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 시립중계노인전문요양원, 서울시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 서남 어르신돌봄종사자 지원센터, 서울시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남부장래인복지관, 서울곰두리체육센터, 서대문농아인복지관, 커리어플러스센터, 번동코이노니아 장애인보호작업시설, 서울시동남보조기기센터, 서울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브릿지종합지원센터, 양평쉼터, 비전트레이닝센터, 따스한채움터, 돈의동쪽방상담소, 서울역쪽방상담소, 영등포쪽방상담소)

〈종합사회복지관 및 전체 노인·장애인 관련 시설〉

1. '20~'21년 방역물품, 건강 관련된 단가 100만원 이상 물품 구입 내역

〈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 시립강북노인종합복지관,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 시립남부장래인복지관,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1. 최근 3년간 공모사업명, 사업내용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

1. 농장체험 프로그램 수확물 판매 수익금 파악 제출

〈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 시립중계노인전문요양원〉

1. 간호사-조무사 인원 구별, 전문간호사 역할, 업무

〈서울시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

1. 연구 용역별 수석연구원 인원, 보조연구원 인원과 연구인력의 이력 제출
2. 2019~2021년 9월말까지 자체연구, 위탁연구에 대한 예산 편성 및 집행 세부내역, 지출 서류 일체
3. 행감자료 p825 자문회의비 관련, 지급일자, 지급대상, 성명, 소속, 자문 내용
4. 2020년 2차 개인돌봄 가족휴가제 관련 모집결과 보고서, 선발 대상자 명단, 휴가비 지급 대상자 명단, 힐링키드 지급 대상자 명단, 힐링키드 구입 관련 자료 일체
5. 노동권 지원사업 관련, 노동상담 최근 3년간 추진 실적, 사업방침, 노무사 상담비 지급 내역, 노무법인명, 상담횟수, 결과, 상담내용 및 성과
6. 돌봄노동 아카데미 관련, 최근 3년간 추진 실적, 사업방침, 강사명, 소속, 강사료 지급 내역, 수업 방식, 참가자 명단, 강좌명, 주요내용 요약, 강사 발표자료 포함
7. 노동권익향상 관련, 최근 3년간 추진 실적, 사업방침, 강사명, 소속, 강사료 지급 내역, 수업 방식, 참가자 명단, 강좌명, 주요내용 요약, 강사 발표자료 포함
8. 노동권 정보제공 관련 카드뉴스 발간 내역, 내용, 발행비용 전체(인건비 포함)
9. 돌봄지원센터 지원 관련, 팀장 이상급 종사자, 연구원, 노무자 포함 주요 경력, 학력, 관련 자격
10. 수탁법인의 관계자가 법인의 용역을 수주한 다른 법인 사례 제출
11. 시간제 근로자 류인양에게 지급한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등 지급 내역
12. 2019~2021년 9월말까지 자체연구, 위탁연구에 대한 예산 편성 및 집행 세부내역, 지출 서류 일체
13. 2019~2021년 센터 근무 연구원, 노무사 근로기록부, 출장부, 휴가대장 제출
14. 돌봄가족지원사업 성과평가용역 2019년, 2020년 결과
15. 휴가제 운영 방침서나 사업계획서

- 16. 돌봄가족 심리상담사업 효과성 성과평가 결과
- 17. 2021년도 장기요양요원 실태조사 보고서

〈서울시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 1. 주요 기능, 어르신학대사건 조사 관련 업무, 데이케어 센터 등 인권침해 인권침해 접수현황 및 처리결과, 종사자 처리결과, 시설 확인에 따른 자치구 행정처분현황, 전문기관 조사결과에 대한 종사자 및 피해 당사자 이의제기 현황

〈남부장애회복지관〉

- 1. 발달장애 외 다른 장애 유형 프로그램 이용률 관련 자료
- 2. 시설별 프로그램 진행 상세내역(18~20년)
 - 프로그램 진행 현황, 사업총괄표
 - 프로그램 중에서 총 16개 프로그램에 대한 이용자현황, 이용자의 장애유형 (이용자가 부모인 경우 자녀의 장애유형)
 - 평생교육 상세프로그램, 발달장애인가족휴식 프로그램, 돌봄 가족 휴가제 상세내역
 - 2021년 세부사업 운영현황, 프로그램명, 이용대상 구분

〈서울곰두리체육센터〉

- 1.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석면조사 관련 조사 결과와 그 이후 조치 결과

〈커리어플러스센터〉

- 1. 현장중심 직업훈련 단계별 기간, 단계별 사업내용, 파견 직무지도원 근무조건
- 2. 2021년 직업훈련 관련해서 개발된 사업체, 취업한 업체와 취업기간

〈서울시동남보조기기센터〉

- 1. 홈페이지 내 의료기기 판매 현황 및 관리방안
- 2. '20~'21년도 장애인별, 장애 정도에 따라 구비한 보조용품 분류

◆ 시민건강국 - 27건

1. 스마트밴드 관련 제품 사양, 납품 가격, 납품업체
2. 스마트헬스케어 관련
 - 물품검수내역, 배포내역
 - 참여자들에게 제공하는 매뉴얼
 - 응찰한 업체 내역(재무제표, 사업계획서)
 - 낙찰자 결정 방법
 - 어플, 홈페이지 화면 캡처 자료
3. 치매안심센터 관련(총괄표로 작성)
 - 25개 자치구별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 현황(남녀 비율 포함)
 - 21년 9월말 기준 치매안심센터, 보건소 등을 통해서 치매 검사를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자치구별 65세 이상 어르신 현황
4. 영등포 쪽방촌에 위치한 요셉의원 관련 시민건강국 내 담당부서명과 21년 지원 현황, 향후 지원 계획
5. 서울시 각 협회별(서울시 의사협회, 한의사협회, 간호사협회, 간호조무사협회, 약사협회) 관련 주요 사업 현황과 예산 지원 현황
6. 2021년도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사업 실적
7. 코로나19 백신 관련, 백신 종류별 접종 대상자(연령별, 직종별 등)
8. 코로나19 백신 종류별 이상반응 현황
9. 2020~2021년도 보건소 백신 폐기 현황자료
 - 백신 이름, 수량 표기
10. 관악구 성북구 약수터 수질검사 내용
11. 지난 5년 간 자치구별 a형 간염b형 간염 장티푸스 백신 구매 내역
12. 지난 5년 간 자치구별 a형 간염b형 간염 장티푸스 발병 환자 현황
13. 지난 3년간 HIV 검사 현황
14. 시립병원 전공별 정현원(현재)
15. 올해 사업하였으나 내년에 30%이상 예산 삭감된 사업
 - 올해 집행 현황 포함하여 작성

16. 스마트헬스케어 사업진행상황
 - 시민들이게 공지된 주의사항, 스마트밴드 배부현황
17. 백신 별 돌파감염 현황
18. 2019 ~ 2021년도 난임부부 지원사업 관련
 - 난임시술 건수 및 성공률
 - 난임시술 방식(부부 같이 받는지?)
19. 시립병원별 적자 대책에 대한 서울시의 지원 방안
20.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관련 현황 및 목표설정 기준, 결과관리 체계 등
21. 3개 직영병원 의사 인력 충원 현황 및 결원 현황
22. 「시립병원 코로나19 전담 간호사 인력배치 연구」 관련 중간보고, 용역진행현황
(서울시, 재단 각각제출)
23. 예방접종 완료 후 코로나19 돌파감염까지의 소요기간
24. 서울시 자살예방 센터, 광역 정신건강복지 센터, 자치구별 정신건강 복지센터
 - 정신위기개입건수(평일, 야간, 주말, 공휴일 구분)
 - 자살위기 개입건수(평일, 야간, 주말, 공휴일 구분)
 - ※ 21년 월별로 구분하여 제출
25. 코로나19 재택치료 관련 업무매뉴얼, 사업방침서
26. 서울의료원 가임클리닉 수익실적 관련 자료
 - 산부인과 수익내역
 - 가임클리닉 수익구조
27. 온실가스 감축 실행계획 관련 시립병원(전체) 계획 여부 및 계획서 등

◆ 보건환경연구원 - 4건

1.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설치 장소 목록
2. 석면 건축 공기질 검사 현황
 - 검출량 및 기준치 초과 표기

3. 반려동물사료검정기관 관련해서 농림수산식품부와 주고받은 내용
4. 미세플라스틱 자체검사 관련 진행상황

◆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 5건

1. 공공보건의료재단 수행 용역에 대한 상세 집행 내역
 - 기 제출한 용역자료에 대한 상세 집행 내역
 - 연구원, 연구비, 자문비, 인쇄비 등
2. 공공보건의료재단 집행률 50%이하 사업 목록 및 사유
3. 「시립병원 코로나19 전담 간호사 인력배치 연구」 관련 중간보고, 용역진행현황 (서울시, 재단 각각제출)
4. 시립병원 코로나19 전담간호사 인력배치 관련 연구 검토참여자 명단, 비용, 연구 참고 자료
5. 공공보건의료재단 정신질환자 일자리 발굴 및 기초조사 월별 추진 실적

◆ 서울의료원, 직영병원, 위탁병원 - 22건

(서울의료원, 어린이병원, 은평병원, 서북병원, 보라매병원, 동부병원, 북부병원, 서남병원, 장애인치과병원, 백암정신병원, 축령정신병원, 고양정신병원)

〈전체 병원〉

1. 2021년 10말 기준 시립병원별 의료장비 설치 완료 현황
2. 시립병원별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자료
 - 연령별 3년이상 고용이 지속된 인원
3. 직원 만족도 평가 설문 누락 보완
4. 직원 만족도 설문내용 바탕으로 정책개선 또는 사업 추진한 내역
5. 시립병원 간호사 이직 현황(코로나19 전담병원)

〈서울의료원, 보라매병원, 동부병원, 북부병원, 서남병원, 장애인치과병원〉

1. 각 병원별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방식 및 이수자 현황(간부 별도 표기)

〈서울의료원, 보라매병원, 동부병원, 북부병원, 서남병원〉

1. 최근 3년간(2019~2021년) 병원별 적자 및 흑자 상태, 부채액, 부채비율, 적자 및 부채에 대한 세부대책

〈서울의료원, 보라매병원〉

1. 서울의료원, 보라매병원, 병동 팀별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현황(21.9.30. 기준) 및 기준

〈서울의료원〉

1. 교대근로 간호사 3.5.7년차에게 1개월간 무급휴가 제공 및 무급휴가 제공을 위한 인력충원 관련
2. 가임클리닉 관련(기간 : 2019.5월~2021.10월)
 - 근무자별, 월별 지급액
 - 월별 수익내역, 난자 채취수, 냉동이식 수, 시술 수, 성공 수(착상 후 임신자 수)
 - 2019.5월~2021.10월까지 월별, 항목별 투입 예산(인테리어 등 공사비, 기자재와 설비 구입 등 일체)
3. 안정적인 간호인력 수급대책 마련 관련
 - 직원돌봄 프로그램 운영 내역 및 운영 프로그램 내용
 - 업무 중 애로사항 의견 청취를 위한 부서별 간담회 실시 현황 및 간담회 내용과 그 결과 반영된 구체적인 내용
 - 교육전담간호사, 간호지원전담팀의 역할 및 운영 현황
 - 최근 5년간 년도별, 월별, 병동별(특수부서 포함) 간호사 정원, 입사자 및 사직 현황
 - 2019년 간호인력 충원어려움에 따른 일시적 병상 가동률저조로 손실 발생액이 37억이라고 답한 구체적인 근거
 - 2019년 병동가동률 저조 구체적인 시기와 가동률 저조 병동
 - 간호사 사직 사유

4. 강남분원 이동병상 운영사업

- 직종별 운영인원 및 정규직과 비정규직 현황

5. 서울의료원 응급의료센터 추진 현황 관련

- 권역응급센터 공모에 참여한 병원
- 이전 전 응급센터 공간 사용 계획

6. 서울의료원 예산전용 관련

- 사무 공간 활용을 위한 상가 임대 관련, 사용 내역(관리비,보증금,월세)
- 임대사무실 면적 및 사용부서 및 부서원 현황

7. 생활임금 관련

- 2018~2020년 생활임금 지급내역(지급시기, 직종별 대상인원 및 개인별 지급 금액)
- 2021년 생활임금 지급 대상 및 지급내역

8. 서울의료원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이용실태

- 검진 항목별 이용내역
- 검진기기 설치 항목
- 검사비 지원 내역
- 검사 인원

〈어린이병원, 은평병원, 서북병원〉

1. 총 구매액 및 용역계약 금액(공사비 제외)
2. 2021년도 3개 직영병원 의사 인력 충원 현황 및 21년 10월 현재 결원 현황

〈보라매병원〉

1. 정신응급의료센터 관련

- 시범사업 계획서
- (사업 시작~현재) 예산 및 세부 집행 내역
- 인건비 세부 산출 내역

- 시설 현황(규모, 병상, 의료장비 등 상세 현황)
 - 인력 현황(정신의학과 전문의 성별, 연령, 주요 학력 및 경력)
 - 중간평가서
 - (사업 시작~현재까지) 사업실적
 - ※ 직접 내원, 5개 경찰서별(영등포, 동작, 구로, 관악, 금천) 연계건수 구분
 - (사업 시작~현재까지) 내원 환자 유형 및 처리 현황(응급처치 후 퇴원, 입원, 타 병원 또는 그 밖의 시설 연계 등)
2. 보호병동(2월 개소) 추진 배경 및 사업개요, 시설 및 인력현황
3. 보라매병원 보건복지부 시범사업 관련
- 인력 현황
 - 진행경과
 - 21년도 82병동, 92병동 간호조무사 월별 근무표

〈동부병원〉

1. EMR시스템 개발(통합의료정보관리시스템) 관련
- 사업개요(최초사업계획 승인부터 현재까지) 및 의회, 병원 이사회 등 절차 진행과정 전반
 - 예산 관련 최초 승인시점부터 현재까지 진행 상황
(시점별로, 절차 이행 단계별로)
 - 프로그램 개발관련 개발자 입찰 과정 일체
(구체적으로) 입찰과정 및 계약서 일체
 - 계약서에 따른 년 간 결과물 보고 및 추가 계약내용
 - 10월 30일 현재 진행상황
 - 개발지연에 따른 지연배상금 현황

◆ 건강 관련 시설 - 4건

(시립은혜로운집, 서울시자살예방센터,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시립은혜로운집〉

1. 최근 3년간 시립 은혜로운 집 생활인 연간 병원 방문진료 현황
 - 연도별 총괄표, 병원비 발생 내역, 정신의 전문의, 촉탁의 현황 등 작성

〈서울시자살예방센터〉

1. 민간단체 협력을 통한 자살예방환경조성사업 상세 집행내역
2. 맞춤형 자살예방 홍보 콘텐츠 사업 세부 집행내역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1. 광역치매지원센터 관련
 - 최근 5년간 서울시 치매환자 현황
 - 최근 3년간 공공후견사업 대상 현황
 - 최근 3년간 예산 및 세부 집행 현황(국비매칭 비율 기재)
 - 공공후견인 선발 기준
 - 최근 3년간 공공후견인 후보자 양성 수
 - 공공후견인 치매환자 매칭 인원 및 비율
 - 공공후견인 보수교육 내용, 시간, 방법 등
 - 공공후견인 보수교육 수료자 수 첨부

[안전총괄실 · 도로사업소] — 6 건

1. 신월여의지하도로 미납통행 시 발송하는 지로용지 견본.
2. 신월여의지하도로 터널 환기방식 설명자료 및 개통이후 터널 내 공기질 측정데이터.
3. 도로사업소별 유색포장 관련 2021년 예산 및 세부집행내역.
4.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 월드컵대교 남단 공기지연 원인 관련한 안전총괄실 답변자료.
5. 2021년 도로공간 개편·구조개선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사업 중 “사당로 주변 도로체계 개선 기본구상”, “상도터널 상부 도로 구조개선 및 복합화 타당성조사”, “장승배기로 주변 도로 구조 개선 타당성조사”사업에 대해 사업설명자료.
6. 신월여의지하도로 및 서부간선지하도로의 미세먼지 및 소음 관련 내·외부 측정자료.

[물순환안전국] — 6건

1. 서남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 사업에 따른 지하시설물 공기질 현황.
2. 최근 10년간 토양오염 실태조사 결과 정화조치를 받았으나 2년간 이행되지 않아 정화 조치가 연장된 현황 및 연장 근거.
3. '워터서울 2021'에 따른 청년 채용 현황.
4. 동작구 신대방동 빗물마을 조성사업 추진현황.
5. 지천르네상스 사업과 관련하여 물순환안전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예산 편성 내역 및 사업 현황.
6. 물재생센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차아염소수산나트륨 및 소독제의 안전성 검증 자료.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 7 건

1. 월드컵대교 부실설계 관련 구상권 청구 준비사항에 대해 제출.
2. 월드컵대교 벌점심의 결과 설명자료 제출.
3. 벌점심의위원회 참여위원들 소속 자료 제출.

4. 건설공사장 근로자 편의시설 체크리스트 작성에 따른 인센티브 반영여부를 보고할 것.
5. 성산대교 성능개선공사 중 소음측정 결과 제출.
6. 성산대교 준공 시 설계도면 제출.
7. 서울시 인프라 중장기 관리 매뉴얼 제출.

[기술심사담당관] — 2 건

1.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과정 및 내역.
2. '20년~'21년 실시된 설계경제성(VE) 전문가 교육 내역.

[물재생시설공단] — 4건

1. 물재생센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차아염소수산화트롬 및 소독제의 안전성 검증 자료.
2. 물재생시설공단 설립 시 설명회에서 다룬 임금관련 내역 및 자료.
3. 물재생시설공단 설립 전·후 직원별 임금 증감 내역 및 사유.
4. 2019년 9월부터 실시한 서남물재생센터의 종합시운전 중 하수 처리시설의 설계목표치 대비 실내공기질 측정 내역.

[주택정책실] — 25 건

1. 용역 결과내용 제출, 미완료시 진행 상황
(SH공사 인사노무제도 고도화, 임대주택 관리 혁신방안 마련, 서울시 주거실태조사, 정비사업 유형별 관리처분계획 실태조사 및 재도개선,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 실태조사 및 분석, 성수전략정비구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2. 신속통합기획첫 공모 후 재개발 후보지 102곳 현황
3. 주거복지센터 성과보고서
4.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주거복지센터 평가위원회 구성 위원 명단
5.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 (장소별 추진 목표, 추진사항)
6. 오세훈 시장 취임 후 서울시 부동산 대책 발표 내용 및 추진사항
7. 역세권 청년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현황, 위원장 선정자격 및 규정
8. 2021년 초 임대주택 유형별 공급계획과 감사일 현재 유형별 임대주택 공급계획비교 자료
9. 장기전세주택 7만호 공급계획에 따른 SH공사 적자 예상규모 및 관리 방안
10. 2021년도에 서울시가 SH공사에 보낸 장기전세주택 관련 공문 사본
11. 사회주택 같이 책임주체가 불분명한 사업에 대해 성과평가가 필요한 사업 내역, 사업자가 자료 제출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만들 수 있는 방안
12. 전자총회 시스템 구축관련 서울시 현황 및 필요 예산

13.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과 민간재개발·민간재건축 가구 수 규모에 관한 근거자료
14. 마곡지구 공항동 군부대 이전 관련 진행 상황
15. 소규모 재건축사업 추진시 주택 기금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 공공에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지 진행 상황
16. 경실련이 청구한 분양원가공개 관련 정보공개청구 내역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
17. 향후 5년간 장기전세주택 공급 계획 (준공, 입주일 기준)
18. 금년도 장기전세주택 물량 근거 및 공적임대주택 24만호에서 중복된 물량이 있는지 여부
19. 숙의예산 민관협의회를 통해 사회주택 예산이 495억원으로 결정되었는데, 최종 예산안 제출시 24억원으로 결정된 사유
20. 2021년도 주거복지센터 운영관련 추경예산 편성 이후 계획 수립 내용 및 상임위에서 증액한 예산에 대한 집행내역
21. 2021년부터 2025년 까지 2.4대책, 8.4대책 등에 따른 서울시 주택 공급량 추계 내용
22. 11월 4일 '8만호 물량 공급절차 정상화' 보도자료 관련 신임 시장 취임이전 구역 지정된 현황 자료
23. 11월 9일 SH공사 5대 혁신방안 발표관련 보도자료 내용
24. 주택정책실과 SH공사가 주거복지센터 위탁과 관련하여 금년도 회의를 실시한 내용(회의일시 포함) 및 결과 등 자료 일체
25. SH공사와 TF운영을 하였다는 방침서 및 TF 운영계획, TF에서 생성한 회의 및 결과 등 관련 자료 일체

[도시계획국] — 5 건

1. 신속통합기획에서 도시계획국과 주택정책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역할분담 내용
2. 신속통합기획 지역별 특성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한다는 데 어느 정도 유연한 것인지, 절차간소화 구체적인 수치
3. 신속통합기획의 행정적 절차 등에 관한 입법계획
4. 최근 3년간 일조, 통풍, 채광 등에 대하여 재·개정 사항
5. 높이 관리가 필요한 곳 2종 7층 지역 현황 및 도면 자료

[균형발전본부] — 17 건

1. 2021년 4 ~ 5월 광화문광장 조성사업 감사관련 결과보고서 및 처분요구사항 및 조치 결과
2. 서울시장 취임 이후, 도시재생 관련 현황보고자료 일체
3. 균형발전본부장 부임 이후 시장보고자료 일체
4.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 서울시 보도자료 관련 균형발전본부 소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내용 일체
5.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점검·평가’ 및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용역’ 등을 수의계약한 업체에 대한 자료 제출
6. 기존 도시재생 사업을 보존관리 중심 위주의 사업이라고 판단하는 근거 내용
7. 세운상가의 해제구역, 연장구역, 연장되지 않은 구역 등 현황에 대한 상세보고
8. 빈집현황 실태관련 현황 자료(감정평가단가, 실태조사등급 등)

9. 2021년 41필지 빈집매입 실태조사 중 등급 산정된 필지가 저조한 사유
10. 빈집 매입 자문위원회에 감정평가 업체 대표와 건축사업가가 포함되어야 하는 사유
11. 신임 시장 취임 이후, 도시재생 사업 중 사업 일수 증가나 예산이 축소된 경우 사업수립 변경과정에서 절차를 이행하였는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평가 지표 및 사업 추진 결과 등)
12. 지난 5년간 용역 관련 보충자료 제출 (입찰공고일, 마감일 및 수의계약 사유 등)
13. 백사마을 주거지보존사업 관련 전체 가구 수 및 이주 현황 등 자료
14. 2021년 수행하고 있는 용역 중 사업비 없이 기간 연장된 12건에 대한 사유
15. 도시재생사업들 예산들이 삭감이 아닌 미세조정이라 주장하는 근거 자료
16. 도시재생 거점시설 경영 컨설팅 결과, 거점시설 조성 운영 가이드라인 수립결과, 개선계획, 관리방안 등 자료
17. 도시재생 재구조화에 대한 구체적인 연차별 계획수립 내용

[공공개발기획단] — 7건

1. 최근 2년간 포괄 예산비 예산과목 및 집행내역 등 세부사업명을 명기해서 제출 할 것.
2. 송현동 부지 내 이건희 기념관 유치와 관련하여 서울시문화본부와 문체부와의 협의 중인 상황을 파악하여 법제처의 법령 해석 결과 자료 제출.

3. 효창 시민홍보단 모집·운영 및 홍보 효과에 대해 별도 보고 할 것.
4. 사전협상 부지에 대해 단계별로 진행상황과 사전협상 이후 추진방향에 대해 정리하여 제출 할 것.
5. 종합감사 전까지 사전협상 제도의 협상절차를 신속 추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보고 할 것.
6. 강서구 어울림플라자 추진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현황에 대해 별도 보고 할 것.
7. 삼포레미콘 이전 철거를 위한 현대제철, 삼포레미콘, 서울시간의 협의 결과 별도 보고 할 것.

[서울주택도시공사] — 22건

1. SH공사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공통) p.134 관련 징계위원회 징계현황 관련 세부자료
2. SH공사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공통) p.173 자료 중 12호, 17호, 81호 방침서
3. 2022년도 주거복지센터 운영 계획
4.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SH공사에서 공동주택 이외 매입주택 등 주거약자용 주택에 대한 현황 자료
5. 민간사업자 공모시 내용 공개관련 개선방안에 대한 용역 내용
6. 민간사업자 공모 사업관련 평가 점수결과 및 채점표 미제출 및 비공개사유
7. 외벽 저층부 마감재로 사용되고 있는 석재를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마감자재 사용에 대한 대안 및 소요 예산
8. 마곡산업단지 2단계 준공 관련 추진사항 보고
9. 세빛섬 활성화 및 사업개선 컨설팅 용역, 한강사업본부와 협의한 내용에 대한 자료

10. 서울시와 SH에서 매입임대비용을 분담하는데 분담비용을 서울시에서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음. 연차별로 지급하는 내용에 대한 명확한 확답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
11. 마곡지구 유보지 활용 관련 향후 진행사항
12.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월패드 하자 판정을 받은 강동리버스트4단지 아파트에 대한 조치사항
13. 강동리버스트4단지 발생하는 수돗물 이물질, 실외기 불량 설치에 대한 관련 처리결과
14. 강일리버파크 8단지, 11단지 내 전기충전소 불량 충전 문제에 대한 조치결과
15. 망월천 종합 정비계획 관련 추진 현황
16. 강동버스공영차고지 지하화 사업관련 쟁점사항 및 추진 계획
17. 사장 후보자 2차 면접심사 결과 내용(열람)
18. 사장 후보자와 공사 본부장 면담관련 일정, 참석자 명단, 비용지출 증명서
19. 사장 후보자를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심사한 개인 심사표 등 자료
20. 금년도 8월부터 진행한 공사 혁신 추진단의 구성원 및 회의 진행 횟수, 서울시에 제출한 자료
21. 2021년 11월 5일 구조조정안 내용관련 자료
22. SH공사에서 주택정책실로 파견되어 있는 3분에 대한 출장, 파견 등 관련 서류 일체.

【도시교통실】 - 〈15건〉

1. 예타 대상사업 선정 후 추가 변경 유사사례
 - 난곡선-금천구청역 연결 민원, 용역비 산정
2. 전기충전소 설치현황
3. 도로점용료 상시/일시 차이
4. 최근5년간 65개 시내버스 서비스 평가자료
 - 사업자별 성과위원 지급금액
 - 2021년 버스회사 구입한 405대 전기 마을, 시내버스 제조사, 구입금액, 지원액
5. 마을버스 운전자보수교육 이수실적
6. 우이신설선 사업재구조화 관련 검토서
7. 시내버스조합-미세먼지 필터 장착 업체 계약서
8. 스마트쉘터 시공업체 계약서/협약서
9. 시내버스 회사 평가매뉴얼(2020년도)
 - 기본평가지표 4개분야/6개항목/가점항목
10. 시내버스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안자료
11. 코로나19 확산방지 관련 운수업체에 보낸 공문
12. 스마트쉘터 수정한 협약서(안) 자료제출 요구
13. 9호선 지원 관련 금리인상 등 추가 리스크 부담 부분에 대해 합의서
14. 카카오모빌리티, 초창기 슬로건 등을 담은 책자 자료요구
15. 교통유발부담금 시설소유자에게 부과할 경우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비율 22%인 근거 자료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 〈6건〉

1. 별내선 신호보안설비공사, 전차선 공사 등 감리 관련 자료
2. 최근 5년간 변전소 정류기 등 6개 입찰 관련 자료
3. 조달청 입찰 의뢰 공문 일체
4. 각 사업별 신인도 평가기준 및 낙찰자 선정기준
5. 참여업체 현황 및 평가결과표
6. 변전소 등 질의 했던 내용 관련 입찰 참여현황 요구

【서울교통공사】 - 〈18건〉

1. 7호선 부천종합운동장역 부역장 감사 및 감사결과
2. 차량기지, 승무사업소 여자화장실 및 엘리베이터 설치현황
3. 승강기유지관련 적격심사 관련
 - 행안부 회신문서에 합리적 기준에 따르지않음 조건 문구관련 행안부 회신문서 정리
4. 도봉차량기지 주공장 여자화장실 및 엘리베이터가 없는데 설치 비용
5. 전동차관련
 - 납품사가 제안서 제품하고 최종 선정된 제품 항목별
 - 승인된 주요부품, 인버터, 대차, 제동장치, TCMS, 계약 업체별로 명단 제출
 - 부품별 동종 부품에 대한 가격 비교표
6. 양방향집진기 설치역사의 설치 전후 전력량 비교자료
7. 승강기유지보수 용역에 대한 행안부에서 받은 공문서
8. 그린환경 통합정보시스템 및 고도화 사업 입찰관련 서류 일체
9. 역무본부 통합 급지 선정 결과
10. 역사 설치 대용량 공기청정기 위탁계약 자료 일체
11. 신조전동차 고장 및 하자조치 관련
 - 신조전동차 및 노후전동차 운행장애 현황 비교표
 - 신조전동차 A/S 내역 및 하자조치 기간
 - 신조전동차 반입 후 원청업체가A/S, 하자 및 고장조치 등 보수 실적과 공사 대응노력
 - 공사 차량직원 및 원청업체 업무비교표
 - 중국산 등 저품질 제품 적용에 따른 성능 미흡 후 리콜조치 사항 및 관련문서
12. 5대 법정 의무교육관련 공사 규정
13. 18~21년도 그린환경 안전사고내역, 사고처리현황
14. 김포골드라인 '24년 까지 적자 해소 방안
15. 수송계획서 배부알림 및 역별 수송수입목표 조정 알림 문서('18~'21년)
16. 도시철도ENG 사업목록
17. 취득세 감면 관련 추진현황, 심판청구 3건 결정문
18. 교통공사 사당별관에 대한 서초소방서 처분 관련

【서울시설공단】 - 〈13건〉

1. 공영주차장 환승주차장 중 다래파크텍 관제기기 설치 현황
2. 공영주차장 주차관제 시스템 현황, 환승주차장 계약별 업체 및 협상에 의한 계약 현황과 사유
3. 동소문로 상업시설 상수도 사용 검침량 미변동 사유
4. 서울월드컵경기장 하이브리드 잔디 위탁관리 용역업체 점검자료 일체
5. 자동차전용도로 유지보수 차량 및 요소수 현황과 확보대책
6. 공단 전체 차량현황 및 요소수 현황과 확보대책
7. 공영차고지 CNG충전소 관련 공시지가 감정평가 결과
8. 공공자전거 새싹따릉이 미성년자 가입에 따른 부모동의 관련 자료
9. 공공자전거 따릉이 보험 관련 컨소시엄 선정 4개 보험사 계약자료
10. 따릉이 대여소 설치 관련 보행불편 발생 현황
11. 승강편의시설 유지보수 업체 관리대수 현황 자료요구
12. 장애인콜택시 연료별 차량현황 자료요구
13. 「시설물안전법」 제9조의4에 따라 안전상태를 사실과 다르게 진단한 안전진단전문기관 처분 결과

서울특별시교육청

1. 2022년 사학재단 교사 채용 계획안을 제출할 것
2. (사립)특성화고 교사 채용 시 정규직과 기간제 비율 현황을 제출할 것
3. 교육청에서 시행 중인 BTL 사업 현황(그린스마트스쿨 선정 학교 대상 BTL 사업의 사업자 선정 내역 등을 포함)을 제출할 것
4. 특수학교 돌봄 교실 참여 학생 현황을 제출할 것
5. 특성화고 정규 교원 및 기간제 교원 현황(기간제교원 비율 및 임기를 포함)하여 제출할 것
6. 카드 단말기 또는 현금으로 입학금, 원비 등을 수납 받고 있는 유치원 현황 자료를 제출할 것
7. 그린스마트 미래학교(9개 학교) 안전진단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
8. 장애인교원 의무 고용률 달성을 위한 대책을 정리하여 제출할 것
9. 학교통합지원센터 만족도 조사, 성과평가 결과를 제출할 것
10. 잔여 임기가 1~2년으로 짧은 교장 발령 후 충분한 임기를 가진 후임 교장 선생님을 발령한 학교 현황을 제출할 것
11. 지역공공건축센터 현황 일체와 센터가 위촉한 민간전문가 구성 절차, 프로필 등 상세내역을 제출할 것
12. 서울시교육청 지역공공건축센터 민간전문가가 학교 시설 개선에 대해 어떠한 업무 실적을 냈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할 것
13. 서울시교육청 공공건축지원센터 운영 실적과 관련한 상세 자료(공공건축심의 위원회 운영(회의자료 포함), 공공건축 용역 추진 및 사업계획 사전검토, 설계공모심사위원회 및 설계공모안 기술 검토에 대한 상세 내역)을 제출할 것
14. 사물함 학교별 지원현황을 제출할 것
15.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에 대한 2022년도 사업 시행계획을 제출할 것
16. 학교별 교원 백신접종 현황을 조사하여 제출할 것
17. 학교 아리수 음수대 관리 주체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할 것

18.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의 시행시기를 연기한 학교의 명단 및 현황을 제출할 것
19. 최근 3년 간 교육청의 장기국외훈련 현황 자료를 제출할 것
20. 교육감과 협의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관련 사항 일체를 제출할 것
21. 2021년 국정감사 지적 분야, 시정, 권고 조치(종합 자료)를 제출할 것
22. 인공지능(AI)교육 선도학교 및 AI-IOT 시범학교 등 인공지능교육과정 연계학교 현황(지원 학교 수 및 예산 포함)을 제출할 것
23. 교육청이 파악한 전자철판의 종류와 옵션 사항을 제출할 것
24.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시설 현황(시설별 면적, 소유구분, 증개축 여부 및 추진 방향 등)을 제출할 것
25. 학교에서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학교폭력 사안 심의가 이관된 전후로의 학교폭력 사안 심의 현황에 대해 제출할 것
26. 원아 수 100인 이하 유치원에 대한 급식시설 개선 등의 증장기 지원방안을 제출할 것
27. 감사관의 학교안전공제회 감사 경과 및 감사 근거를 제출할 것
28. 초등 담임교사 정·현원 현황 및 기간제 교사 담임 현황을 제출할 것
29. 특수학교와 일반학교 학급 증설 예산이 차이가 없는 이유를 제출할 것
30. 혁신교육지구 및 혁신학교 관련 서울시·자치구와의 협약서 내역 일체를 제출할 것
31. 학교 내 화변기 및 분필철판에 대한 개선 계획을 제출할 것
32. 최근 2년 간 집중적으로 교육지원청의 시설설계용역 수의계약을 진행한 3개 업체와의 최근 5년 간 수의계약 내역과 업체 현황(직원 수, 등기부등본 등) 및 최근 1년 간 3개 업체와 계약한 용역의 비교견적을 제출할 것
33. 금년에 진행된 국정감사 제출자료 중 화변기 선호도 관련 답변서를 제출할 것
34. 사학비리와 관련하여 교육청과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학교 내역을 제출할 것
35. 석면 해체가 필요한 초·중·고등학교 목록과 향후 석면해체·제거 계획을 제출할 것
36. 교육환경개선 대상사업 우선순위 공개 목록(책자)를 제출할 것
37. 사학기관 특별관리대상 학교 현황을 제출할 것

교육지원청

1. 강남서초교육지원청 내 과밀학급 해당학교 현황을 제출할 것

직속기관

1. 교육연수원은 2021년 집합연수 세부내역(지난해까지 진행했으나 폐지된 연수현황 및 2021년 신규로 시행된 연수 현황을 포함)을 제출할 것
2. 경성건축과 진행한 수의계약 시에 제출된 비교견적 자료를 제출할 것
3. 일부 학교에서 발생한 교직원과 학생 급식 간의 차별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정리하여 제출할 것
4. 학생정서행동 특성검사 결과를 제출할 것
5. 학생수영장 이전 추진 관련 서울시와의 협의 진행사항을 제출할 것

학교안전공제회

1. 최근 3년간 공제회의 인건비 지출 상세내역(사무직과 소방담당인력을 포함한 기술직 등의 퇴직금을 포함한 인건비 지출내역 전체)을 제출할 것